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연구 8

2010 통일의식조사

박명규 · 김병로 · 강원택 · 이상신 · 박정란 · 정은미

통일평화연구소
서울대학교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연구 8

2010 통일의식조사

박명규 · 김병로 · 강원택 · 이상신 · 박정란 · 정은미

IPUS 통일평화연구소
서울대학교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연구 8

2010 **통일의식**조사

인 쇄 2010. 12. 31
발 행 2010. 12. 31

발행처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발행인 박명규
저 자 박명규·김병로·강원택·이상신·박정란·정은미

등 록 119-82-67975(2006.7.7)
주 소 151-742 서울 관악구 관악로 599
전 화 02) 880-4052-4, 874-7304
팩 스 02) 874-7305
홈페이지 http://tongil.snu.ac.kr

디자인·인쇄 (주)늘품플러스 (070-7090-1177)

가 격 10,000원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사도서목록(CIP)
(2010) 통일의식조사 / 저자: 박명규, 김병로, 강원택, 이상신, 박정란, 정은미. -- 서울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2011 p. ; cm. --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연구 ; 8)
ISBN 978-89-959656-7-2 93330 : ₩10000
통일 의식 조사[統一意識調査]
340.911-KDC5 320.9519-DDC21 CIP2011000130

서울대통일평화연구소 통일학연구 8

2010 **통일의식**조사

목차

IPUS

표목차

그림목차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서 장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서 장

이 연구보고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가 2010년도 통일의식을 조사한 결과를 분석,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소는 2007년부터 매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 대북정책 등에 대한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평가와 생각, 지향이 어떠한지를 확인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전국적인 의식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상세하게 분석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발간해오고 있다[1]. 이 연구는 거의 동일한 항목으로 엄격한 조사방법에 입각한 종합적 조사자료를 얻음으로써 국민들의 인식과 태도, 지향이 매년 어떻게 달라져오고 있는지 그 추세와 경향, 흐름을 포착하는데 일차적 목적이 있다. 이런 실증적 자료는 급변하는 상황에서 유의미한 정책을 구상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내는 현실적 유용성 못지않게 유동적인 현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패턴을 확인하는 이론적 작업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가치와 제도, 개인과 공동체, 민족과 세계, 정치와 경제 등 우리 사회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지향들의 결합양상, 심층적 가치체계와 집단정서를 확인하는 종합적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 2010년과 남북관계

2010년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 휴전 이후 가장 위태로운 상황을 맞았다고 할 정도로 특별하고도 심각한 위기를 겪은 해다. 그동안 지속적으로 악화되던 관계 속에서나마 조심스레 논의되던 남북간 정치적 대화 재개나 북한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2010년을 지나면서 현저하

---

1. 2007년부터 매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에서 간행된 박명규, 김병로 외, [2007 통일의식조사], [2008 통일의식조사], [2009 통일의식조사]를 참조할 것.

게 약해졌다. 한국사회 내의 대북정책을 둘러싼 대립과 갈등은 여전하면서도 전반적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과 강경한 원칙론이 힘을 얻어가는 형세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관계 역시 한,미,일의 강고한 연대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과의 불일치와 상호불신이 전례없이 커지고 있다.

이처럼 2010년을 유별난 해로 만든 것은 올 한 해에 벌어진 몇 가지 사건 때문이다. 그 첫 사건은 두말할 것 없이 2010년 3월 26일 대한민국 구축함 천안함이 피격, 침몰되고 46명의 장병이 산화하는 비극적 참변이었다. 이 사건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한국정부는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본부를 발족시켰고 한달 여에 걸친 조사 끝에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피격, 침몰'이라는 결론을 발표했다. 이 조사와 동시에 천안함 장병에 대한 대대적인 추념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판이 사회적으로 확산되었고 국제사회에 대북압박과 경제제재를 강화할 것을 요구하는 주장들이 쏟아졌다. 북한 책임을 입증하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자 이에 발맞추어 정부의 5..24 조치가 발표되었는데 이 조치는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 '패러다임 변화'가 불가피함 강조하고 북한과의 교류와 대북지원을 엄격하게 통제하는 내용이었다. 한때의 위기론을 넘어 안정국면으로 접어드는 듯했던 개성공단의 미래에 다시금 먹구름이 끼게 된 것도 이 천안함 피격사건과 5.24조치 이후의 일이다.

2010년의 또 하나 중대한 사건은 천안함 피침과 관련한 정부발표 얼마후 실시된 6.2 지방선거였다. 대부분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여당의 압승을 예상했던 이 선거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정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전국적으로, 또 의회나 교육자치구 등에서 야당의 진출이 현저하게 증가하고 수도권에서도 여당이 패함으로써 이명박 정부의 정국 주도권이 흔들리게 된 것이다. 여당의 정국주도권 약화는 현안이었던 세종시 문제의 환원에 그치지 않고 대북정책의 엄정함과 강경함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비판과 유보를 불가피하게 했다. 천안함 사태를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것처럼 6.2 지방선거의 결과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기 때문에 흔히 언급하는 '민심'의 미묘함에 대한 경각심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천안함 정국과 6.2 지방선거의 여론 사이를 어떻게 연결시켜 이해할 수 있을 것인가는 매우 진지하고도 복합적인 분석력을 요구하는 문제다.

세 번째로 2010년은 한국정부가 적극적으로 통일론을 제기한 해로 기억될 만하다. 남북관계의 악화와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북정책에서 통일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각에서 제기되었고 8월 15일 이명박 대통령은 3대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하고 통일세의 공론화를 요청했다. 천안함 충격이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통일론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정부는 현상유지적 한반도 정책으로부터 좀더 적극적인 통일대비정책으로 전환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설명했다. 북한의 체제 변화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주장과 경색된 남북관계를 호도하려는 조치라는 폄하도 없지 않지만 그 정치적 동기와는 별도로 한동안 뜸했던 통일론이 다시금 주요한 정책적 의제이자 국가전략의 목표로 부각되는 변화를 보고 있다. 통일론에 대한 관심이 커지는 시점에서 남북 이산가족상봉행사가 두 차례 열리고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남북간 접촉과 교류의 계기가 이어지고 있었던 점은 특기할 일이다.

2010년의 또 하나 사건은 북한이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을 공식화했다는 점이다.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했던 바와 같이 김정은이 새로운 후계자로 등장하였지만 그 과정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진행되었다. 9월 북한이 당대표자회의 직후 김정은을 김정일과 함께 공식적으로 언급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아 김정은은 북한의 공식서열 최상위권에 포함될 정도로 급부상했다. 김정은의 후계자 부상은 그동안 추측으로만 논

의되던 북한의 권력이양 논란을 새로운 국면으로 가져가게 만들었다. 즉 20대의 김정은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는 북한체제를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것인가라는 점과 함께 사회주의체제 내 혈통적 세습제에 대한 본격적인 문제제기를 촉발시켰다. 일부에서 권력 이양은 전형적인 내정에 해당하고 북한의 체제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있지만 사회주의체제와 혈통세습론의 이질감에 대한 비판이 매우 강하게 대두했다. 북한의 3대 세습은 한국 정치권 내에 곧바로 파장을 일으켜 진보진영의 내부 분열에 기여하기도 했고 북한에 대한 대중적인 거부감을 증폭시키는데 일조했다. 어쨌든 김정은의 등장은 향후 남북관계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핵심적 변수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2010년을 마무리할 시점에서 발발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지난 반세기 남북관계 전반을 뒤흔들 정도로 강력하고 특별한 사건이었다. 북한은 11월 23일 서해 5도의 하나인 연평도에 불시 포탄 공격을 가하여 민가를 파괴하고 군인 2명과 민간인 2명이 죽고 수십명이 부상하는 도발을 자행했다. 한국의 연평도 앞바다 사격훈련을 비난하고 NLL을 무효화시키려는 명분을 내 걸었지만 한국전쟁 이래 대한민국 영토를 직접 공격하여 민간인을 사상시키고 민간인의 마을을 파괴한 예는 처음이었다. 천안함 정국이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벌어진 이 사건은 북한의 공격성과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대내외에 각인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천안함 사건이 그 주체와 성격에 대한 국내외의 의혹과 불신을 완전히 떨쳐버리지 못했던 것에 비하여 연평도 피격은 너무도 북한의 도발성이 뚜렷하기 때문에 한국사회 내부의 북한관련 반응이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경도되고 있다. 2010년은 향후 남북관계에 대한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한 해로 기록될 것이 분명해 보인다.

2. 2010년 조사시점과 그 의의

2010년을 특징짓는 이러한 사건들을 염두에 둘 때 그 한 중간이라 할 7월 12일부터 27일까지 실시된 이 의식조사가 2010년도 의식의 흐름을 모두 다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마도 8월 15일의 통일론 제안과 김정은으로의 3대세습, 11월 23일의 연평도 포격의 충격 등이 미친 영향은 내년의 통일의식조사에 반영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월의 시점에서 조사된 이 결과가 2010년도 상황의 핵심적 측면을 일정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천안함 정국과 6.2 지방선거의 양면이 지닌 복합성을 예민하게 반영하고 있으리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이 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가지 점을 특히 주목할 만하다. 첫째로 천안함 정국을 거치면서 북한 및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식은 어느 정도 질적 전환을 나타내는가를 작년도 조사결과와 비교하여 검토하는 작업이다. 2008년도 및 2009년도 통일의식조사에서 국민들의 의식에는 언뜻 보기에 모순적이거나 제멋대로인 듯한 반응의 밑바닥에 일정한 패턴, 손쉽게 바뀌지 않는 집합적 지향성이 존재함을 지적한 바 있다. 천안함 침몰은 십수년래 남북관계에서 가장 심각한 국면을 빚을 정도의 충격적 사건이었던 만큼 이것이 남북관계 전반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으리라고 보는 것은 매우 타당한 가정이다. 이런 가정이 실제 조사결과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한 목표이다.

둘째로 왜 6.2 지방선거의 결과가 나타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를 찾는 일이다. 일반적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과 관련한 정치적 논쟁은 일관된 형태로 진행되어왔고 그 바탕에는 북한을 대화의 파트너로 인정할 것인가, 비핵화를 비롯한 전제조건을 어디까지 강조할 것인가 등이 깔려있다고 지적된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비난과 강력한 안보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하면서도 이런 사태가 초래된 이유

를 북한의 호전성과 안보의 약화에서 찾는 보수층과 그보다는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제대로 유지시키지 못한 채 적대성을 키워온 정부정책의 잘못에서 찾는 진보층 사이의 대립은 항존한다. 지금도 햇볕정책이 이 모든 결과를 가져온 원인이라는 여권의 주장과 햇볕정책을 폐기하고 대북압박 일변도로 달린 현 정부의 정책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는 야권의 주장이 맞부딪치고 있다. 천안함 정국은 논리적으로 대북강경책의 불가피성을 주장한 여당에게 매우 유리한 정황을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 다른 결과를 낳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 조사결과로부터 추정해볼 수 있다.

셋째로 이런 분석을 통해 국민들의 북한관련 인식과 의식에 매우 강고하게 자리잡고 있는 패턴, 지향, 심성구조를 이론적으로 설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북한의 도발에 분노하면서도 전쟁의 위기로 치닫는 것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반응 속에는 양면적이면서도 모순적인 지향이 혼재한다. 단호한 대응과 응징을 약속하는 정부의 강경책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평가는 단일하거나 통합적이지 않다. 군사적 응징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군과 정부에 비난을 쏟아붇는 한편으로 이런 상황이 오지 않게 미연에 조치하는 정치적 노력이 부족함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진보와 보수가 서로 다른 이유로, 그러나 한 목소리로 정부의 애매한 정책과 무능한 대응에 비판의 화살을 쏘아댄다. 이런 양면성, 이중성을 단지 남남갈등 또는 이념적 대립으로 치부하는 것이 충분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반응 자체가 국민들의 의식 기저에 깔려있는 독특한 심성의 형식을 말해주는 것인가? 군사적 대립과 긴장 속에서 통일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이며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가치를 집단적으로 공유하고 있는가? 이런 물음들에 대한 종합적인 대답은 쉽지 않지만 진지하면서도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 분석과 토론을 통해서

이런 쟁점들을 확인해 가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3. 조사목적과 조사내용

이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목적은 전년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다음의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로,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를 확인함으로써 대북정책의 심층적 평가와 재정립에 도움을 주려는 뜻이 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2010년에 들어서 남북관계는 전면적인 경색과 긴장국면이 지속되고 한반도 전쟁가능성까지 우려되는 긴박한 상황을 맞고 있다. 어떤 대북정책을 선택할 것인가가 현재의 남북관계는 물론이고 향후 한국 정치와 경제, 사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단순한 정치권 내부의 정략이나 이해타산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목소리와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대북정책의 수준과 범위를 확립하는 것은 매우 긴요한 과제다. 2008년도 통일의식조사에서 뚜렷하게 발견했던 '정부교체효과'가 3년을 경과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과 미래준비에 대해 우리 국민들이 부여한 성적은 어떠한가를 확인하는 것도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민감한 대북인식, 통일의식, 대외인식 등은 더욱 그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어떤 변화가 나타났는지, 변화의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 또 그런 변화가 말해주는 정책적 함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적 조사는 앞으로도 그 의의가 계속 커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 조사연구가 보다 효율적이고 공감가능한 대북정책을 구현하고 추진하는데 실용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둘째로 이 조사를 통해 남북관계 및 한반도의 미래를 바라보는 우리 사회성원들의 의식의 흐름을 포착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남북관계에서 국민의 의식이나 사고는 단지 현실을 반영하는 부차적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현실을 정의하고 문제를 규정하며 미래를 창조적으로 구성해가는 결정적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로 북한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한 우리사회의 인식은 정책형성이나 평가를 위한 부수적 요소가 아니라 현재의 상황을 판단하고 장차 한반도의 미래를 구상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힘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문제는 한국사회의 자기정체성의 주요한 부분이고 한반도 통일은 지금까지의 정치경제적 질서를 크게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국민들의 정서와 생각은 그 자체로 독립변수로 작동할 개연성이 크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기간의 평면적 조사가 아닌, 종합적이면서도 시계열적인 조사와 분석이 필요하다. 매년 상당한 공을 들여 이 조사를 수행하는 목적의 하나는 매년 달라지는 환경들에 반응하면서도 그 심층에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의식구조를 발견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아직은 자료의 축적이 충분치 못하지만 지난 4년간의 자료를 비교하는 것만으로도 꽤 의미있는 변화와 흐름들이 확인된다. 앞으로 이 조사결과가 지속적으로 누적되고 비교됨으로써 일종의 한국인의 집합적 가치지향, 정체성의 동학, 집단정서와 민주주의의 관계 등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밝혀낼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셋째로 이 일련의 조사작업은 궁극적으로 한반도에 평화로운 통일한국을 실현하는데 의미 있는 종합적 비전을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한반도의 현 분단구조는 장기적으로 존속하기 어렵고 멀지 않은 장래에 새로운 질서가 창출될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런 역사적 전환이 반드시 평화로운 통일한국으로 연결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예기치 못한 갈등과 문제들이 확산될 수 있고 심지어 최근의 상황이 보여주듯 무력충돌의 위험과 전쟁의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분쟁을 막고 평화로운 가운데 통일한국을 이루어가지 위해

서는 주변국의 반응과 개입방식, 정치지도자의 비전과 역량, 남북관계의 특징 등 다양한 요소들이 작용할 것이지만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한 주민들의 생각과 판단, 집합적 의지일 것이다. 특히 남북관계의 미래에 대해 남북한 구성원들의 집합적 의지와 가치지향이 갖는 중요성은 그 어떤 변수보다도 크다.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이 가능한 시기와 추진속도, 통일과 관련된 사회적·개인적 이해관계,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 통일한국의 희망체제 등에 대하여 어떤 응답을 하는가를 시계열별로 추적하는 작업을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마음 속에 자리잡고 있는 의식의 패턴, 정서의 흐름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미래비전을 구축하는 작업을 수행할 필요가 절실하다. 이 조사는 일차적으로 실태조사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집합의식의 구조와 그 지향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준비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가능케 할 지적 인프라를 제공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연구보고서가 앞서 발간된 책자와 함께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창의적인 미래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4. 조사내용과 조사방법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는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 1회 실시되고 있다. 통일과 북한에 대한 인식 및 태도 변화를 통시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매해 통일의식조사의 내용에 일관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이에 따라 2010년 설문조사의 각 설문 문항도 기본적으로 2007년과 2008년 및 2009년의 문항을 변화시키지 않고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다만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몇몇 문항을 첨가

하거나 삭제하였으며, 이전 통일의식조사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문항의 경우엔 설문 문항의 내용이나 답지 구성 등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이번 통일의식조사의 내용도 크게 다섯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다섯 부문은 구체적으로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이다. 먼저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부문에서는 통일의 필요성과 그 이유,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는지와 개별 대북정책의 현실적 효과에 대한 태도, 남북 관계 현안들의 시급성, 통일이 남한 전체 혹은 응답자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지에 대한 평가, 통일이 남북한의 정치체제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설문 부문은 북한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질문을 비롯하여, 북한 정권의 통일에 대한 태도, 북한의 변화가능성 및 북한 정권이 얼마나 신뢰가능한 가 등에 대한 물음이 포함되어 있다. 또, 응답자가 북한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으며 남북한의 차이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어떻게 느끼고 있는 지 등도 조사되었다.

세 번째 부문은 남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이다. 우선 대북지원 정책과 북한과의 경제협력이 북한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지원 정책이 현 수준에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지에 대해 물었다. 또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기타 평가등에 대한 질문도 포함되었다. 개성공단, 대북지원의 북핵연계, 대북 삐라 살포문제, 북한 인권문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조치 등 구체적인 정책 사안에 대한 찬반 문항도 이 부문에 주요한 내용 중 하나이다. 네 번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 대한 내용은 이들에게 얼마나 친근감을 느끼는지

를 측정하였으며, 이 밖에도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이들이 남한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 지위와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견해 등을 물었다. 마지막 다섯 번째 부문은 국제관계에 대한 인식으로, 주로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질문이 포함되었다. 구체적으로 한반도 주변국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가 우리에게 갖고 있는 위상이 무엇이며 이들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묻는 문항들이 있다. 또 이들 주변 4대강국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에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지, 그리고 남한 정부는 통일을 위해 이 나라들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해야 하는 가에 대한 질문도 같이 들어 있다.

이상이 이 설문조사의 뼈대를 이루는 다섯 개 부분이다. 기초적 배경변수로는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소득수준, 거주 지역, 결혼 여부, 종교, 정치성향이 조사되어서 다양한 교차분석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통일의식과 관련지어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기타 변수를 포함했는데,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한 질문과 현재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한 질문들이 있다. 제 1부인 기초 분석에서는 위의 기본 다섯 설문부문에 대한 기초적 기술 통계를 소개하는 한편 지난 4년간의 변화 추이를 소개하였으며, 제 2부인 심층 분석에서는 이 의식조사 데이터를 사용하여 각종 다양한 통계 분석 기법을 동원하여 더욱 구체적인 쟁점에 대한 분석적 연구결과를 수록했다. 이 책의 마지막 단락인 부록에는 응답자 특성, 질문항별 조사결과 집계표, 설문지를 수록하여 연구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는 2010년의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과 요약 뿐만 아니라, 이전 의식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통일의식이 어떻게 변화하는 지에 대한 경향을 추적하기 위해 2007년 이래 4년간 조사결과를 활용하였다.

2010년 통일의식조사는 2010년 7월 12일부터 7월 27일까지 12일간

실시되었다. 조사의 모집단은 전국 16개 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광주, 울산, 경기도, 강원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제주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전체였다. 모두 1,200명을 유효표본으로 실시된 이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고 ±2.8% 이다. 표본추출은 다단층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이용하였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총조사에 의한 전국 인구현황을 기준으로 조사 표본을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배분하고 난 후, 각 지역별로 모집단 비율에 따라 층화하여 최종조사지점(통/반)을 추출하였으며, 조사된 표본의 수는 1,200명이었다. 조사는 한국 갤럽에 의뢰하여 이루어졌으며,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를 이용한 1대 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방식을 사용하였다. 면접 시행에 앞서 실사책임자(supervisor)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한국갤럽 소속 전문 면접원 중 적격자를 선발하였다. 이렇게 뽑힌 면접원들은 조사방법과 조사내용에 대해 두 시간의 오리엔테이션과 2회의 연습 면접을 받았다. 이 과정을 통해 조사 방법과 질문지 내용에 익숙하게 하고 문제점을 미리 발견, 지적함으로써 비표본오차(non-sampling error)를 최소화하고 또 면접과정의 표준화(standardization)를 꾀하였다. 또 면접원들은 면접 중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우발상황에 대한 대처법도 포괄적으로 교육받았다. 담당연구원 및 실사책임자는 매일 회수된 질문지에 대해서 면접원 입회하여 검토하였으며, 문제점 발견 즉시 면접원 교육을 행하는 품질 통제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면접원에 의한 오차를 줄이도록 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수집된 자료는 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완성된 질문지 중 30% 이상을 무작위 추출, 응답자에게 전화를 걸어 면접 내용을 검증하여 응답의 허위기재, 조작이 발견될 경우 해당 면접원이

조사한 질문지 전체를 무효로 하고 재조사를 실시하였다. 원자료는 편집(editing), 코딩(coding), 입력(punching) 과정을 거쳐 통계패키지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버전 12.0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 하였다. 질문항목별 기본빈도(frequence)는 이 책의 부록으로 포함되어 있으며, 성별, 연령, 교육수준, 직업, 가구소득수준, 지역, 정치적 성향 등의 배경 변수와의 교차 분석 자료를 포함하였다. 이외의 변수와의 교차분석은 지면 관계상 생략하였다.

제1부 기초분석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Ⅰ. 통일에 대한 인식

천안함 사건은 2010년 남북관계 역사에서 이정표가 될 만한 매우 중대한 사건이었다. 천안함 사건이 초래한 국내외적 파장과 영향력은 다시 한번 한반도의 분단 문제가 얼마나 중층적인 문제인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진보와 보수의 갈등, 국가와 시민사회의 갈등, 이념적 갈등 등 사회갈등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6.2 지방선거에서 야당의 승리라는 정치권의 판세를 뒤엎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천안함 사건의 파장은 국제무대로까지 확장되어 유엔안보리의 의장성명을 둘러싼 남북한 간의 외교경쟁 뿐만 아니라 신(新)냉전체제를 방불케하는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첨예한 외교적 힘겨루기는 G2 시대의 도래를 실감케 하였다. 더욱이 군사적 대응 차원에서 최근 서해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 합동훈련에 중국은 노골적으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북한은 '보복성전'을 운운하며 서해 NLL 지역에 백여발의 해

안포를 쏘는 등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시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계속 증대되고 있는 불안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속에서 다행히도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에 치닫지 않기를 바라는 자제력은 곳곳에서 발견된다. 먼저, 천안함 사건으로 남북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7월 북한당국은 2009년과 달리 황강댐 방류를 미리 우리 정부에 통보하였으며, 우리 정부의 강경한 5.24대북조치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의 조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 더욱 극심해진 식량난에 의해 고통받고 있는 북한주민들을 돕기 위한 대북NGO들의 인도적 지원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민여론 역시 천안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경한 대북응징보다는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을 원하는 쪽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8.15경축사에서 비핵화를 전제로 한 한반도평화공동체 구축과 포괄적인 남북한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북한의 경제발전과 남북한 경제통합을 준비하는 경제공동체의 건설, 그리고 민족공동체로 향해가는 3단계의 신(新)평화통일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통일 대비를 위한 통일세와 같은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을 둘러싼 국내외의 중층적 구조는 국민의 통일의식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07년에 처음 실시된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는 올해로 4년째를 맞고 있다. 2010년의 통일의식조사는 한일강제합병 100주년, 8.15광복 65주년, 6.25전쟁 60주년과 같은 상징적인 역사적 기념들이 즐비한 가운데 천안함 사건과 6.2지방선거 등의 굵직한 대내외적 환경의 변화 속에서 실시되었다*. 이러한 역사의 경험과 정세의 변화가 국민의 통일인

* 이 장에서 언급된 한반도를 둘러싼 최근 정세에는 11월 23일에 발발한 북한의

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2010년 통일의식조사의 분석에서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이장에서는 우선 2010년 통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통일시기의 기대와 추진속도, 통일사회에 대한 사회적·개인적 이해관계, 통일 이후 주요 사회문제들의 개선에 대한 기대감,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 마지막으로 통일한국의 희망체제에 대해 기초적인 분석을 한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 걸친 통일의식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시계열적으로 어떤 변화와 특징을 나타내는지 비교분석을 한다.

1. 통일의 필요성과 이유

1) 통일의 필요성… 통일에 적극적인 층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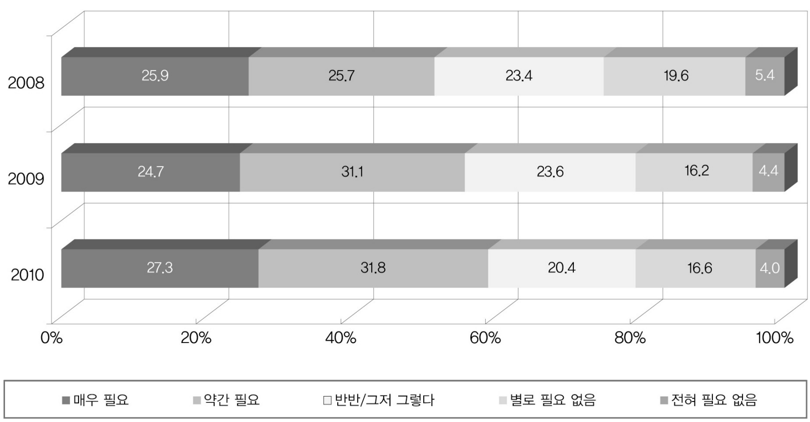
통일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통일이 매우 또는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은 전체 응답자의 59%를 차지해, 반반이라는 응답(20.4%)과 별로 또는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20.6%)보다 많았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2009년에서 나타난 55.8%보다 3.2% 상승한 것으로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특히 작년에 비해 올해는 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층이 많이 증가한 특징을 보인다.

2009년과 비교하여 올해는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24.7%에서 27.3%로 증가한 반면에, '전혀' 필요없다는 응답률은 4.4%에서 4.0%로 줄어들었다. 또한 '반반 또는 그저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작

연평도 포격사건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 장에서는 통일의식조사가 실시된 7월 전후의 정세만을 제한적으로 언급되었음을 미리 밝혀둔다.

년에 23.6%였던 데 반해 올해는 20.4%로 줄어 통일에 유보적 입장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입장으로 선회한 응답자가 많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는 층이 증가한 것은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자 안보 불안에 대한 반작용으로 평화적인 남북관계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그림 1-Ⅰ-1] 통일의 필요성

조사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성별 격차가 매우 심하게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남자는 65.6%인 반면에 여자는 52.4%에 불과해 여자가 남자보다 통일에 대해 더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의 보수화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났다.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20대는 48.8%, 30대는 55.4%로 전체 평

균 응답률보다 낮은 반면에, 40대는 65.2%, 50대 이상은 67.3%로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를 보면, 수도권(63.9%)과 호남권(66.4%)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나 통일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중부권(56.8%)과 영남권(50.1%), 강원(47.2%), 제주(54.8%)는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낮게 나타나 통일을 소극적으로 인식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통적으로 통일에 적극적이었던 호남권 응답자들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호남권 응답자들은 75.6%였던데 비해 올해는 66.4%로 크게 감소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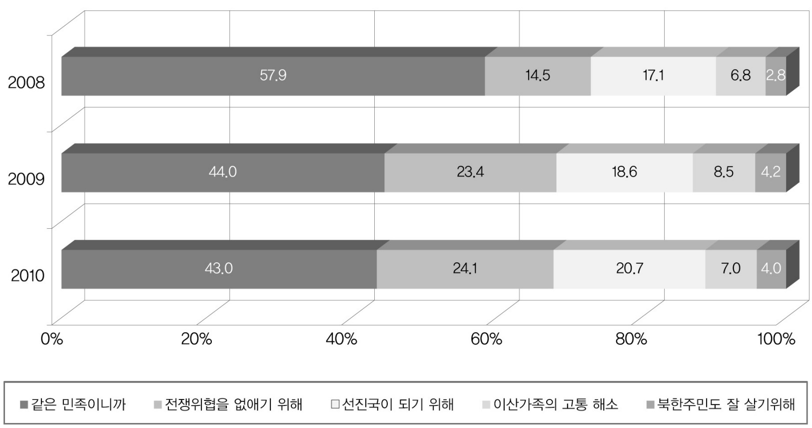
정치적 성향 별로 보면, 여전히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이 중도적,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모든 정치적 성향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진보적 성향은 64.5%에서 67.4%로, 중도적 성향은 52.9%에서 55%로, 보수적 성향은 52.9%에서 54.8%로 증가하였다.

2) 통일의 이유 …민족동질성보다 현실적인 이유의 비중 증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로 국민들은 '같은 민족이니까'(43%)를 꼽았다. 하지만 이 응답률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수치이다. 반면에, '남북한 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24.1%)와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20.7%)라는 이유의 응답률은 계속 증가하여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7%)와 '북한주민도 잘 살수 있도록'(4%)의 이유는 계속 줄어들어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이처럼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 중 민족동질성 차원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반면에 현실적인 차원의 비중은 점차 늘어나는 특징을 보인다. 이러한 변화는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한 간의 군사적 대립이 심해지고 '선진화' 및 경제성장 등을 강조하는 정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림 1-Ⅰ-2] 통일의 이유

연령별 변화를 보면, 50대 이상의 변화가 눈에 띈다. 50대 이상의 연령층은 전통적으로 통일이 되어야 하는 이유로 '같은 민족이니까'가 높았다. 그런데 올해는 지난해에 비해 민족동질적 차원의 응답률은 줄어들고 현실적 이유를 꼽은 응답률은 증가하였다. 50대의 경우 '같은 민족이니까'를 꼽은 응답률은 지난해 55%에서 올해 52.9%로 줄어든 대신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의 이유는 지난해 9.2%에서 올해 14.4%로 증가하였다.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통일의 이유로 '전쟁위협의 해소'의 응답률이 20대에서는 지난해 26.2%에서 30.7%로 증가하였고, 40대에서도 지난해 19.7%에서 올해 24.3%로 증가하였다.

지역별로 수도권과 제주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통일의 이유로 '전쟁위협을 해소하기 위해'라는 응답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중부권은 지난해 18.6%에서 올해 30.9%로, 호남권에서는 16.8%에서 24.4%로, 영남권은 21.9%에서 26.6%로, 강원지역은 22.2%에서 30.6%로 모두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천안함 사건의 발생 이후 안보불안감이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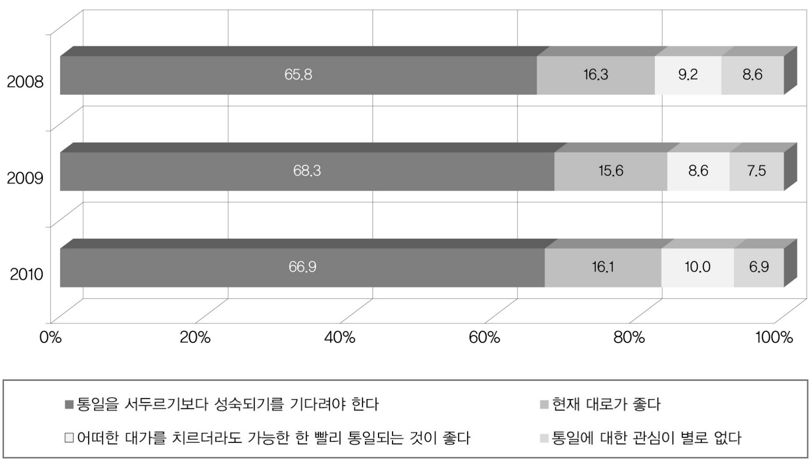
2. 통일의 추진 속도와 가능 시기

1) 통일의 추진 속도…점진적 통일은 감소하고 빠른 통일은 증가

국민들 대부분은 여전히 급속한 통일보다 점진적인 통일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09년과 비교해 점진적 통일을 원하는 응답자들은 줄어들고 빠른 통일을 원하는 응답자들이 많아졌으며, 또 통일에 무관심한 층도 줄어드는 특징을 나타냈다.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률은 66.9%로 2009년에 68.3%였던 것과 비교해 1.4%가 줄어들었다. 반면에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률은 10%로 작년에 8.6%였던 것과 비교해 1.4%가 늘었다. 특히, 가능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률은 200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또 '통일에 대해 관심이 없다'는 응답률은 6.9%로 2009년에 비해 소폭 줄어들었다.

이처럼 점진적 통일의 응답률은 줄어들고 빠른 통일을 원하는 응답률은 늘어난 것은 두 가지의 정치사회적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 또는 북한 붕괴론과 같은 논의들이 대두되고 통일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면서 빠른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난 사회적 분위기의 형성이다. 다른 하나는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이 극도로 높아지고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면서 안보 불안감에 대한 반작용으로 통일을 빨리 이뤄야 한다는 의식이 증가한 것이다.



[그림 1-Ⅰ-3] 통일의 추진속도

연령별로 보면, 20대와 30대는 지난해에 비해 점진적 통일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많아진 반면에, 40대와 50대 이상은 점진적 통일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줄어들었다.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는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20대는 지난해 61.6%에서 올해 65.7%로 증가하였고, 30대는 69.3%에서 70.2%로 소폭 늘어났다. 반면에, 40대는 74.4%에서 67.5%로 줄었고, 50대 이상도 67.7%에서 64%로 감소하였다. 특히, 20대의 경우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층이 지난해 10%에서 8.3%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고연령 층에서는 빠른 통일을 원하는 응답자들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늘었다. 50대 이상

에서는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고 응답한 층이 지난해 12.%에서 올해 17.7%로 증가하였다.

가구 소득별 응답률에서는 월 가구 소득수준이 200~299 만원인 중서민층의 변화가 눈에 띈다. 이 소득집단에서 점진적 통일을 원하는 응답률이 지난해 72%에서 59.6%로 크게 감소한 반면에, 현재로가 좋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15.8%에서 20.6%로 증가하였으며, 또 통일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률 역시 지난해 5.1%에서 올해 10.1%로 증가하여 통일에 대해 중서민층의 보수적 시각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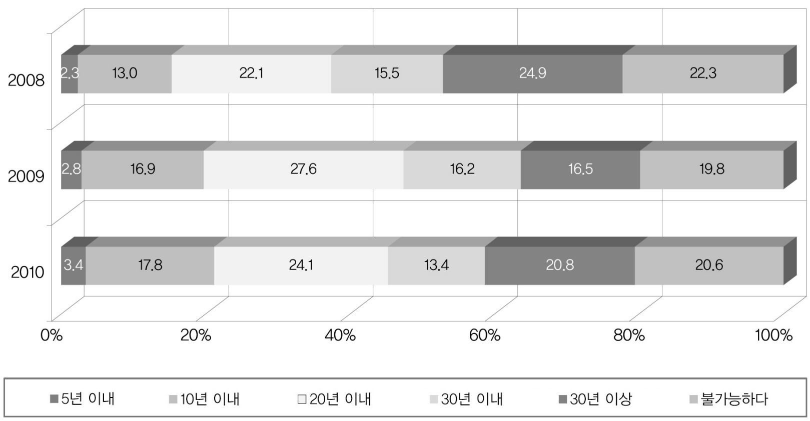
지역별로는 영남권과 강원 지역의 응답자들의 경우 점진적 통일을 원하는 응답률은 줄어들고, 대신 현재로가 좋다는 응답률과 가능한한 빨리 통일이 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지난해와 비교해 영남권에서는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응답률이 지난해 62.7%에서 올해 55.9%로 줄었으며, 대신 '현재 대로가 좋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21.6%에서 올해 26.8%로 증가하였다. 강원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점진적 통일을 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지난해 69.4%에서 올해 50%로 크게 줄은 반면에, 현재로가 좋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11%에서 올해 25%로 크게 늘었다. 중부권에서는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자 비율이 지난해 6.8%에서 올해 10.6%로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의 경우 지난해에 비해 현재로가 좋다는 응답률이 10.7%에서 13.9%로 늘어난 반면에,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의 경우는 현재로가 좋다는 응답률은 69.6%에서 60.5%로 줄어들고, 대신 점진적 통일 또는 빠른 통일을 원하는 응답률은 6.2%에서 11.5%로 변하여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에서 통일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다.

2) 통일의 가능 시기…비관적인 전망 눈에 띄게 증가

2010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통일이 가능한 시기에 대한 예측에서 양극화가 눈에 띄게 뚜렷해졌다. 통일의 시기를 20~30년 이내로 보는 중장기적인 전망은 크게 줄고, 반면에 5~10년 이내로 보는 단기적인 전망과 30년이상이나 불가능하다고 보는 비관적인 전망은 늘어났다. 통일이 '20년 이내'로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률과 '30년 이내'로 보는 응답률은 각각 24.1%와 13.4%로 2009년에 각각 27.6%와 16.2였던 것과 비교해 모두 줄어들었다. 반면에 통일이 '5년 이내'로 가능하다는 보는 응답률과 '10년 이내'로 보는 응답률은 각각 3.4%와 17.8%로 2009년에 각각 2.8%와 16.9%에 비교해 모두 소폭 늘어났다.

특히, 통일이 '30년 이상' 지나야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응답률과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응답률은 각각 20.8%와 20.6%로 2009년에 각각 16.5%와 19.8%였던 것과 비교해 모두 늘어났다. 통일의 필요성을 느끼는 응답률은 늘어난 반면에 통일 가능에 대한 기대감은 줄어들고 비관적인 전망이 늘어난 데는 두 가지의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하나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불안한 후계체제, 그리고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에 의한 북한의 고립과 경제난의 심화 등으로 인해 북한 급변사태 발생 및 김정일 사후의 쿠데타 가능성 등과 같은 북한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한 여론이 형성되면서 통일의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다. 다른 하나는 천안함 사건이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떻게 좌우지되는지를 목격하면서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한계가 있음을 인지한 것이다.



[그림 1-Ⅰ-4] 통일의 가능 시기

한편, 통일의 가능 시기에 대해 성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10년 이내'에 가능할 것으로 보는 남자는 22.7%인데 반해 여자는 12.7%에 불과했다. 또한 통일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남자는 17.3%인데 반해 여자는 23.9%인 것으로 나타나 남자에 비해 여자가 통일의 가능 시기에 대해 좀더 비관적인 전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젊은 층일수록 통일의 가능 시기를 먼 미래 또는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하는 반면에, 연령층이 높을수록 통일시기를 가까운 미래로 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대의 경우 통일이 5년~10년 이내로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응답률은 17.5%에 불과한 반면에, 30년 이상 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응답률은 52.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통일의 가능 시기를 비관적으로 보는 경향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20대에서 통일이 30년 이상 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응답률은 지난해 각각 22.8%, 19.5%였던 데 반해 올해는 27.1%와 25.7%로 늘었다. 반면에 50대 이상의 경우는 통일이 5년~10년 이내로 가능할 것으로 보는 응답률이 23.6%이고, 30년 이

상 또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는 응답률은 40%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에서 중도적 성향과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 가운데 지난해에 비해 통일이 먼 미래 또는 불가능한 것으로 보는 비관적인 전망이 늘었다. 중도적 성향의 응답자 가운데 통일이 30년 이상 또는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각각 지난해 17.4%, 19.8%에서 올해 25.3%, 21.1%로 늘어났다. 또한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 가운데에서도 통일이 불가능하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23.9%에서 올해 26.7%로 증가하였다. 반면,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 가운데는 통일이 '5년 이내'로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 응답률이 지난해 2.7%에서 올해 5%로 늘어났다는 점이 눈에 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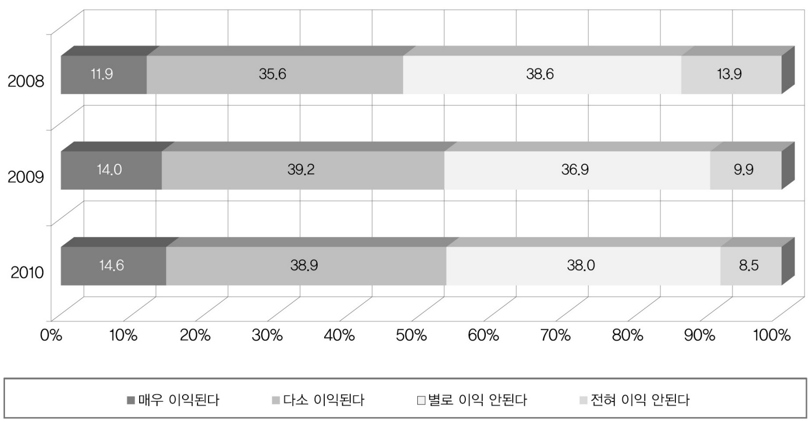
3. 통일에 대한 이해관계

1) 통일의 집합적 이익 기대감…통일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으로 동반 상승

통일이 남한 사회 전체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하는 질문에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53.5%로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 46.5%보다 높게 나타나 우리 국민은 통일이 가져다 줄 집합적·사회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올해 통일이 남한사회에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2008년에 47.5%, 2009년 53.2%였던 것과 비교했을 때 이명박 정부 들어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통일이 남한사회에 '매우'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한 반면에, '전혀' 이익이 안된다는 응답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매우'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은 2008년 11.9%→2009년

14.0%→2010년 14.6%로 증가세이고, '전혀' 이익이 안된다는 응답률은 2008년 13.9%→2009년 9.9%→2010년 8.5%로 감소세를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살펴 본 것처럼 통일의 필요성과 통일의 가능시기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태도가 통일 사회에 대한 기대감을 동반 상승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림 1-Ⅰ-5] 통일의 남한 전체 이익 기대감

조사결과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통일이 남한사회에 가져다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에 성별 격차가 크게 나타났다.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남자는 60.8%에 이르는데 반해 여자는 46.1%에 그쳐 남자에 비해 여자가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와 50대 이상의 연령층에서 통일이 남한에 줄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낮게 나타났고, 30대와 40대에서는 더 높게 나타났다.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는 20대는 51.5%, 50대 이상은 47.1%인데 반해, 30대는 56.7%, 40대는 58%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비해 20대에서 통일에 대한 실망감이 늘어난 것

으로 나타났다.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으로 보는 20대는 지난해 54.7%에서 올해 51.5%로 줄어들었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농수축산업과 화이트 칼라 종사자들에게서 통일이 남한에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자들 가운데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의 경우는 지난해 23.1%에서 올해 34.9%로, 화이트칼라 종사자들의 경우는 지난해 55.7%에서 올해 65.3%로 크게 증가하였다.

가구소득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중저소득층의 경우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낮았지만, 중고소득층은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월 가구소득이 400 만원 이상인 응답자 층에서는 60.3%가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지역별로는 중부권과 강원, 제주지역의 응답자들 가운데 통일의 이익 기대감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이 줄어들었다.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은 중부권의 경우 지난해 60.2%에서 올해 55.5%로, 강원은 지난해 55.6%에서 올해 36.1%로, 제주는 지난해 76.9%에서 올해 53.8%로 크게 감소하였다. 지난해에 비해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이 증가한 곳은 수도권이 56.3%에서 59.3%로 유일하다.

정치적 성향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진보적 성향의 경우 통일의 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줄어들고, 반대로 보수적 성향에서 기대감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고 보는 응답률은 진보적 성향의 경우 지난해 62.9%에서 올해 58.3%로 감소한 반면에, 보수적 성향은 지난해 41.9%로 올해 46%로 증가하였다.

2)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감…집합적 이익 기대감과 상반된 태도 뚜렷

통일이 가져다 줄 집합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은 다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통일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접근하고 인식하는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이며, 양자의 격차는 통일 및 대북정책의 영향에 대한 국가와 사회 간의 인식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을 때 찬반의 여론이 크게 나뉘었던 것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느끼면서도 '통일세'와 같이 개인의 경제생활과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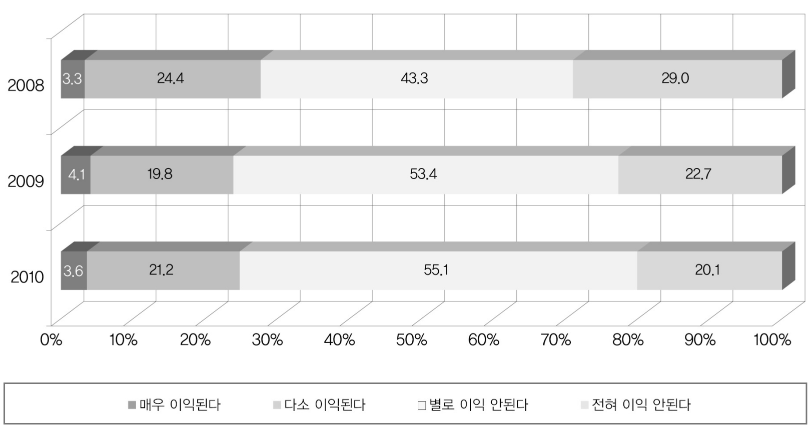
통일이 개인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는가라는 질문에 매우 또는 다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24.8%로, 별로 또는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경우 75.2%로 나타나 집합적 이익의 기대감 결과와 매우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결과적으로 개인적 차원에서는 통일이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태도가 더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이 통일을 개인의 필요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집단 또는 공동체의 필요성에 의해 달성해야 할 과제로 인식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올해 이익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은 2009년 23.9%에 비해 소폭 상승하였으며, 반대로 이익이 안될 것이라는 응답률은 2009년 75.1%에 비해 소폭 하락하였다. 특히, 이익이 '전혀' 안될 것이라는 적극적인 부정적 태도가 2008년 29.0%→2009년 22.7%→2010년 20.1%로 꾸준히 감소하는 특징을 보였다.

정책적 차원에서 통일의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 기대감의

격차를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양자의 격차가 크다는 것은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국가와 사회 간의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그만큼 클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통일세' 도입은 국가나 사회적 차원에서 막대한 통일비용이 국민들에게 주는 부담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조성하려는 목적에서 추진하려고 하지만, 국민들은 통일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당면해서는 자신의 경제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통일세의 즉각적인 도입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만약에 통일이 가져다 줄 집단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의 격차가 작을 때는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한 국가와 사회 간의 갈등은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격차가 매우 큰 상태에서 이와 같은 정책 추진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작년에 비해 올해는 양자의 격차가 29.3포인트에서 28.7포인트로 소폭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비교적 호의적 변화이지만 여전히 격차는 매우 크다.



[그림 1-Ⅰ-6] 통일의 개인적 이익 기대감

한편, 통일의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마찬가지로 개인적 이익 기대감에서 성별 격차는 크게 나타났다. 통일이 개인에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남자는 30.9%로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높은 반면에, 여자는 18.6%로 매우 낮았다.

연령별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높아졌다. 20대의 경우 지난해 23.1%에서 올해 25.1%로 기대감이 상승했고, 40대에서도 지난해 24.3%에서 올해 29.2%로 기대감이 높아졌다. 특히, 40대는 전 연령층 가운데 통일의 이익 기대감이 가장 높았다.

직업별로는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응답자들의 기대감이 증가하였다.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11.5%에서 올해 18.7%로 증가하였다.

지역별 분포는 좀더 복잡한 양상을 띤다. 집단적 이익 기대감의 결과와 달리 개인적 이익 기대감에서 중부권의 응답률은 지난해 21.2%에서 올해 31.4%로 크게 증가하였다. 호남권의 경우도 지난해 26.1%에서 올해 34.5%로 크게 증가하였다. 수도권의 경우는 집단적 이익 기대감과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지역별로 지난해에 비해 올해 집단적 이익 기대감이 유일하게 증가한 수도권의 경우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지난해 27%에서 25%로 줄어들었다.

4. 통일과 민주주의…통일에 대한 민주주의의 영향력 남한은 작아지고 북한은 커짐

1945년 8월 해방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남한과 북한 모두 통일과 민주주의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역사적·민족적·시대적 과제이다. 분단은 남북한 양측 모두의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발전을 가로막아 왔으며, 특히

민주주의 발전에 질곡으로 작용해왔다. 분단과 군사적 대치, 그리고 이념적 대립은 남북한의 권위주의 독재정권의 존재를 정당화하고,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데 동원의 도구로 오랫동안 기능해왔다.

반면에 민주화를 열망하는 사회운동 진영에서는 통일을 단순히 분단된 민족의 통합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실현 및 완성의 과정으로 간주하였다. 1987년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는 형식적 민주주의를 달성했지만 여전히 실질적 민주주의의 완성은 과제로 남아있다. 특히, 2008년 보수정부가 출범한 이후 사상과 표현의 자유, 결사와 집회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이 제약받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남북관계의 경색국면이 장기화되는 동시에 일부 시민단체의 활동에 대한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강화되는 등 민주주의의 후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북한 사회 역시 2009년 11월말 급진적인 화폐개혁에 의해 북한주민들의 생활은 더욱 피폐해지고 있으며, 영농물자 부족과 이상기후의 영향 등으로 만성적인 식량난에 아사(餓死) 현상이 다시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북한주민의 인권은 심각한 위기 상태에 놓여있다. 이러한 남북한의 사회적 변화 속에서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해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조사는 우리 국민이 통일과 민주주의 관계에 대해 남한과 북한을 비교하여 어떻게 다른 인식을 갖는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남한사회의 경우,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고 보는 응답자는 18%,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자는 29.9%로 나타났다. 이것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를 완성하는데 견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완성이 통일을 견인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인식하는 국민이 더 많음을 보여준다.

반면에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자는 51.9%로

압도적으로 많게 나타났다. 2009년 조사와 비교했을 때, 통일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응답률은 감소하였고, 반면에 둘 간의 관계가 없다고 보는 응답률은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2009년 조사와 상반된 추세로서 지난해에는 촛불집회의 효과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높아진 데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통일인식에도 영향을 미쳤던 데 반해, 올해는 그러한 사회적 사건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통일과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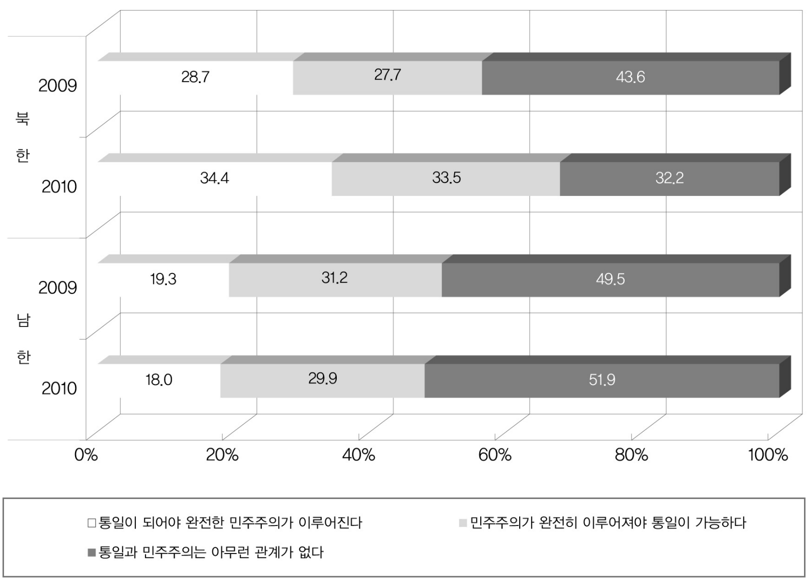
다음은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 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이 항목은 2009년에 새로 추가된 것으로 2년째 조사됨으로써 인식변화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더 심층적으로 파악하게 됨으로써 남북한 사회통합적 차원에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먼저, 북한의 경우는 남한의 경우와 달리 통일과 민주주의 간의 관계가 있다고 보는 응답률이 관계가 없다고 보는 응답률보다 훨씬 많게 나타났다. 또한 2009년과 비교했을 때, 통일과 민주주의가 관계가 있다는 응답률은 크게 증가하였고, 반면에 관계가 없다는 응답률은 크게 감소하였다.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뤄진다'는 응답이 34.4%로 가장 많았다. 2009년에 28.7%였던데 비해 5.7%가 증가하였다. 다음으로는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33.5%로 많게 나타났다. 2009년에 27.7%였던데 비해 5.8%가 증가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는 응답은 32.2%로, 2009년 43.6%에 비해 무려 11.4%가 줄어들었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 국민은 북한의 민주주의가 통일과 매우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북한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서는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으며 통일과 같은 외부의 변화에 의해 완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이와 관련하여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증가하면서 북한의 민주주의에 대한 우리 국민의 관심이 많아진 것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정부의 정책 강화는 북한의 민주주의를 신장시킬 수 있는 자극이 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림 1-Ⅰ-7] 통일과 남북한 민주주의 관계

한편, 연령별로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관계가 없다고 보는 응답률은 모든 연령층에서 늘어났다. 특히 20대와 30대의 응답률이 크게 증

가하였다.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관계가 없다는 응답률은 20대의 경우 지난해 46.9%에서 올해 50.8%로, 30대의 경우 지난해 48%에서 51.9%로 증가하였다. 나머지 40대와 50대 이상에서도 지난해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결과가 눈에 띈다. 수도권 경우,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응답률은 지난해 19.4%에서 올해 13.7%로 줄어들었고,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률 역시 지난해 37.4%에서 올해 29%로 크게 줄었다. 반면에,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보는 응답률은 지난해 43.2%에서 올해 56.9%로 크게 늘었다. 이러한 결과 분포는 중부권, 영남권, 강원 지역과 완전히 정반대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지난해에 비해 통일과 남한의 민주주의 간 관계가 있다고 보는 응답률은 모두 증가하였고, 반대로 관계가 없다는 응답률은 줄어들었다.

정치적 성향에서 진보적 성향의 변화가 주목할 만하다.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 가운데 통일과 남한의 민주주의가 관계가 있다는 응답률은 지난해에 비해 줄어든 반면에, 관계가 없다는 응답률은 늘었다.

다른 한편, 전 연령층에서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가 관계가 있다고 보는 응답률이 관계가 없다는 응답률보다 모두 높게 나타났다. 특히 30대의 응답률 변화가 두드러진다. 20대, 40대, 50대에서는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30대에서는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것은 30대가 통일운동의 전성기인 90년대에 주로 대학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다른 연령층에 비해 통일이 북한의 체제변화를 견인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로는 수도권과 호남권의 경우는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중부권, 영남권, 제주의 경우는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고 보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강원 지역만이 유일하게 통일과 북한의 민주주의가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적 성향에서는 진보와 보수 모두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를 견인할 수 있다는 응답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반면에 중도 성향은 북한의 민주주의 발전이 통일을 이루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는 응답률이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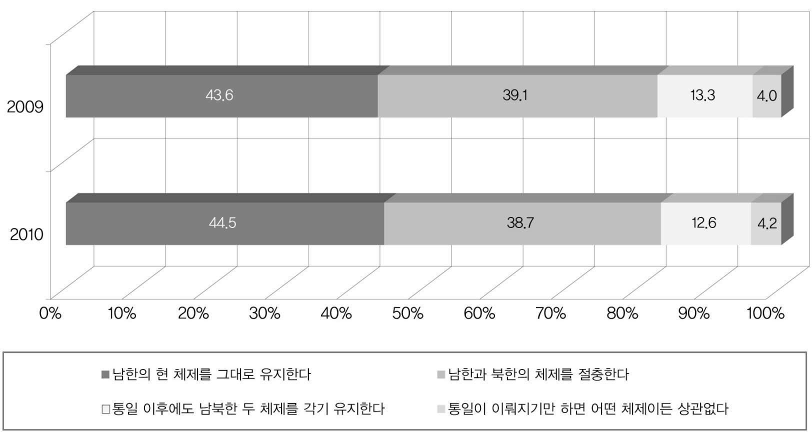
5.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절충형과 공존형은 줄어들고 남한의 현체제 희망은 증가

통일의식조사는 2007년과 2008년 조사에서 질문에 사용했던 남한='민주주의' 또는 북한='사회주의'와 같은 규범적 가치 개입이 내포되어 있는 용어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 2009년부터 '남한체제', '북한체제'와 같은 중립적 용어로 교체하여 질문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2009년에 매우 의미있는 변화를 나타났다. 남북한 체제의 절충형에 대한 응답은 크게 늘어나고 남한 체제에 대한 응답은 크게 줄어든 것이다. 2010년 조사는 작년에 이어 변경된 용어를 사용하여 실시되었다.

통일한국의 이념체제가 어떤 것이길 바라는가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수치는 2009년의 응답률(43.6%)에 비해 소폭 증가한 것이다. 다음으로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는 응답은

38.7%로 나타나 2009년 39.1%에 비해 소폭 감소하였다. 남북 연합제 또는 연방제와 관련있는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는 응답은 12.6%로 2009년 13.3%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다. 마지막으로,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응답은 4.2%로 2009년에 4.0%였던 것에 비해 소폭 증가하였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통일한국의 이념체제로 남한의 현 체제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늘어나고 남북한 체제의 절충형이나 공존형 등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감소한 현상은 우리 국민이 현실적으로 연합제 또는 연방제에 의한 통일보다는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는 최근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호전적 행위의 증가에 의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북한권력이 김정일 이후의 김정은으로의 3대 부자세습이 공식화되는데 따른 우리 국민의 실망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1-Ⅰ-8] 희망하는 통일한국의 체제

조사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응답률이 지난해에 비해 전 연령층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연령층과 비교하여 40대의 응답률이 지난해 38.6%에서 올해 42%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와 '통일 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는 절충형과 공존형의 경우는 지난해에 비해 전 연령층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절충형의 경우 특히 50대 이상에서의 감소가 두드러지고(2009년 37%→2010년 33.5%), 공존형의 경우는 20대와 40대에서 감소폭이 컸다(2009년 13.2%, 16.7%→2010년 9.6%, 12.8%).

직업별로는 농수축산업에 종사하는 응답자 가운데서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절충형의 경우는 지난해 46.2%에서 올해 28.1%로 크게 줄어든 반면에, 공존형의 경우는 지난해 7.7%에서 올해 18.7%로 크게 늘었다.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는 응답률 역시 지난해 3.8%에서 올해 12.5%로 크게 늘었다. 반면에 남한의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응답률은 지난해 42.3%에서 올해 40.7%로 줄었다. 이것은 최근 우리나라가 몇 년 사이에 여러 나라들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농수축산업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으면서 남한의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결과 분포를 보면,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항목에 대해 영남권의 응답률이 43.1%로 가장 높게 나타난 반면에 호남권은 29.4%로 가장 낮게 나타나 지역 간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흡수통일 방식에 대해 영남권은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호남권은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석할 수 있다. 절충형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결과를 보였는데, 호남권의 응답률(44.5%)이 가장 높고, 영남권의 응답률(27.7%)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공존형의 경우는 수도권의 응답률

(9.7%)이 가장 낮고, 호남권의 응답률(21.8%)이 가장 높았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중부권은 24.6%에서 11.4%로 크게 감소한 반면에, 호남권과 강원은 각각 14.3%에서 21.8%로, 11.1%에서 16.7% 크게 증가하였다. 이것은 남북연합제나 연방제 방식의 통일에 대해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은 반대할 가능성이, 호남권과 강원은 지지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성향별 분포는 매우 흥미로운 변화를 나타났다. 지난해 조사에서는 남한의 현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률이 보수>중도>진보 순서로 높았다. 하지만 올해 조사에서는 진보와 보수 모두 남한의 현 체제를 유지한다는 응답률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늘었다.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진보의 경우 38.2%에서 43.6%로, 보수의 경우 47.3%에서 52.9%로 모두 증가하였다. 반면에, 중도의 경우는 지난해 44.4%에서 올해 41%로 감소하였다. 절충형의 경우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진보와 보수의 경우는 줄어들고, 중도의 경우는 늘어났다. 절충형을 꼽은 진보와 보수의 응답자는 지난해에 비해 각각 44.8%에서 37.7%로, 33.3%에서 29%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중도의 경우는 지난해 38.4%에서 44.2%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천안함 사건과 북한권력의 3대 부자세습 등으로 인해 진보 성향에서 실망감이 커져 통일사회의 체제로 절충형과 공존형보다는 남한의 현 체제 유지를 원하는 응답자들이 늘어난 반면에, 중도적 성향에서는 정치상황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통일미래에 대해 상대적으로 유연하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6. 소결

2010년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에서 나타난 첫 번째 특징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감은 늘어났지만, 통일의 실현과정에서 현실주의적인 접근 태도를 보이는 이중적 또는 양면적 의식 구조가 나타났다. 올해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 역시 2008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난해에 비해 가능한 빠른 통일을 원하는 응답자들이 많아졌으며, 또 통일에 무관심한 층은 줄어들었다. 이처럼 통일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증가한 것은 통일환경의 조성 차원에서 매우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2010년 조사에서는 통일의 과정에 대한 현실주의적인 접근 태도가 뚜렷해졌다.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민족동질성보다는 전쟁위협의 해소나 경제적 이해와 같은 현실적 이유를 꼽은 응답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통일이 남한 전체에 이익이 된다는 응답률은 53.5%로 높은 반면에,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된다는 응답은 24.8%에 불과해, 통일이 가져다 줄 이익에 대한 집단과 개인의 인식 격차가 컸다.

두 번째 특징은 천안함 사건이 통일인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이다. 먼저, 천안함 사건은 통일이 필요한 이유로 '전쟁의 위협을 없애기 위해서'라는 응답률이 2008년 이후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증가와 전쟁발발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오히려 통일의 필요성과 가능한 빠른 통일에 대한 희망을 높이는데 반작용하여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천안함 사건이 국제사회에서, 특히 미국과 중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어떻게 좌우지되는지를 목격하면서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 문제가 남북한 당사자의 힘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복잡한 국제적 이슈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면서 통일의 가능시기를 '30년 이상' 또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비관적인 전망을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세 번째, 북한의 3대 세습과 체제 불안정은 빠른 통일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반면에 통일방식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갖게 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특징은 갖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과 함께 북한의 급변사태 또는 북한 붕괴론과 같은 논의들이 대두되고 통일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늘어나면서 빠른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늘어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것은 지난해에 비해 올해 통일을 가능한한 빨리 해야 한다는 응답률과 통일이 5~10년 이내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는 응답률이 증가한데서 엿볼 수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서 3대 세습이 유력해지면서 통일방식에서 북한체제와의 공존이나 절충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줄어들었다. 지난해에 비해 올해는 통일한국의 이념체제로 남한의 현 체제를 희망하는 응답자는 늘어나고 남북한 체제의 절충형이나 공존형 등을 희망하는 응답자는 감소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우리 국민이 현실적으로 연합제 또는 연방제에 의한 통일보다는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에 대한 가능성을 더 많이 생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의식의 변화에는 최근 천안함 사건 이후 북한의 호전적 행위의 증가에 의한 북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증가하고, 북한권력이 김정일 이후 김정은으로의 3대 부자세습이 확실시 되는데 따른 우리 국민의 실망감이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북한의 호전적 행위의 증가와 3대 부자 권력세습은 통일이 북한의 정치민주화를 이루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국민의식에 영향을 주고

있다. 우리 국민은 북한 스스로의 역량에 의해서는 민주주의가 완성될 수 없으며 통일이 북한에 민주주의를 가져다 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인식의 특징은 최근 이명박 정부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인권개선 문제에 보수층이나 일부 시민단체들이 적극적으로 호응을 하고 있는 이유와도 관련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의식조사는 8.15경축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지만 통일 및 대북 정책에 대한 국가와 국민(또는 사회)간의 인식의 격차를 줄이지 못했을 때 갈등을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통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집합적 이익 기대감과 개인적 이익 기대감은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만약에 통일이 가져다 줄 집단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에 대한 기대감의 격차가 작을 때는 통일 정책 추진에 대한 국가와 사회 간의 갈등은 크지 않을 수 있겠지만, 그 격차가 매우 큰 상태에서 어떤 특정한 정책은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8.15경축사에서 '통일세'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을 때 찬반의 여론이 크게 나뉘었던 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우리 국민은 통일의 필요성에 대해 크게 느끼면서도 '통일세'와 같이 개인의 경제생활과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대해서는 비교적 신중하거나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수 있다.

따라서 8.15경축사에서 언급된 것처럼 남북관계의 패러다임 전환은 필요하지만, 새로운 정책 추진에 앞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변화된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Ⅱ. 북한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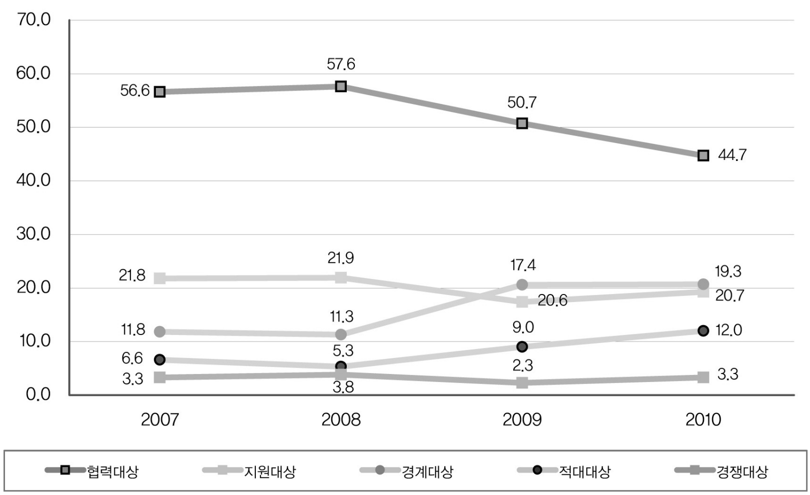
북한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 안에서 남남갈등을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다.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즉 북한을 적이나 위협적 존재로 느끼느냐, 아니면 대화와 협력의 파트너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태도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작년의 북한 핵실험에 이어 3월 천안함 사건 발생과 6.2지방선거가 대북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변화를 고려하면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인식을 배경변수별로 검토하고 2007년 이후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살펴본다.

1. 북한의 존재 인식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북한의 존재인식을 묻는 질문에 '협력대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응답자의 44.7%로 가장 많았고, 경계대상 20.7%, 지원대상 19.3%, 적대대상 12.0%, 경

쟁대상 3.3%로 각각 응답했다. [그림 1-Ⅱ-1]에서 볼 수 있듯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은 2008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2009년에 7%가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다시 6%가 감소하여 2년 연속 줄어들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은 2008년 5.3%를 최저점으로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9.0%, 12.0%로 상승하여 2년 연속 증가하였다.

이처럼 북한에 대해 비판적, 부정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은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과 이후 진행되는 남북간 대결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북한은 2010년 들어 '보복성전' 선언(10.1.15)에 이어 천안함 공격(10.3.26)을 감행했으며, 남한의 심리전 수단 설치 시 군사적 타격과 함께 서울 불바다 위협 발언(10.6.12)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대북인식이 악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대북인식의 악화는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남북관계의 경색에 따른 도발적 행동이 계속된데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1-Ⅱ-1] 북한의 존재 인식

응답결과를 연령별로 보면, 30~40대와 20대·50대이상이 서로 다른 두 집단을 형성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북한이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은 30대와 40대에서 각각 16.0%, 17.4%로 낮게 나온 반면, 20대와 50대이상에서는 각각 23.8%, 26.2%로 높게 나왔다. 지원대상이라는 응답은 30대가 40대로부터 분리되어 40대에서만 독특한 경향이 나타났다. 즉 20대와 30대, 50대이상에서는 각각 16.2%, 18.3%, 16.3%인데 비해, 40대는 26.2%로 높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2009년에는 북한의 존재인식에서 40대 이하와 50대 이상의 두 그룹으로 나누어졌으나, 2010년에는 20대가 50대이상 그룹 쪽으로 이동하였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집권 이후 약화되기 시작한 이른바 '20대의 보수화'가 2010년에 다시 강화되고 있는 것 같다. 2008~2009년에는 20대가 30~40대의 대북인식과 궤를 같이 했으나, 2010년에는 2007년까지 진행되었던 패턴으로 회귀하였다.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으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소위 '북한효과'에 20대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권의 의식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달랐다. 지원대상이라는 응답에서는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이 각각 19.7%, 17.8%, 16.9%인데 비해, 호남권은 27.7%로 매우 높았고, 경계대상이라는 응답도 수도권, 중부권, 영남권이 각각 15.1%, 25.4%, 32.8%인데 비해, 호남권은 10.1%로 매우 낮았다. 호남권의 지원대상 응답은 작년의 24.4%에서 올해 27.7%로 늘어나는 등 작년에 비해 호남권의 독특성이 더 강화되었다. 또 지역변수에서는 수도권과 중부권의 변화가 발견되었다.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에서는 호남권(51.3%)과 수도권(49.3%)이 높았고 영남권(34.6%)과 강원(30.6%)이 낮았으며, 중부권(43.2%)은 중간에 위치하였다. 작년과 비교하면, 수도권에서 대북 긍정인식이 높아진 반면, 중부

권에서는 줄어들었다. 2009년에는 중부권의 대북 긍정인식이 급상승하였는데 2010년에는 수도권의 대북 긍정인식이 높아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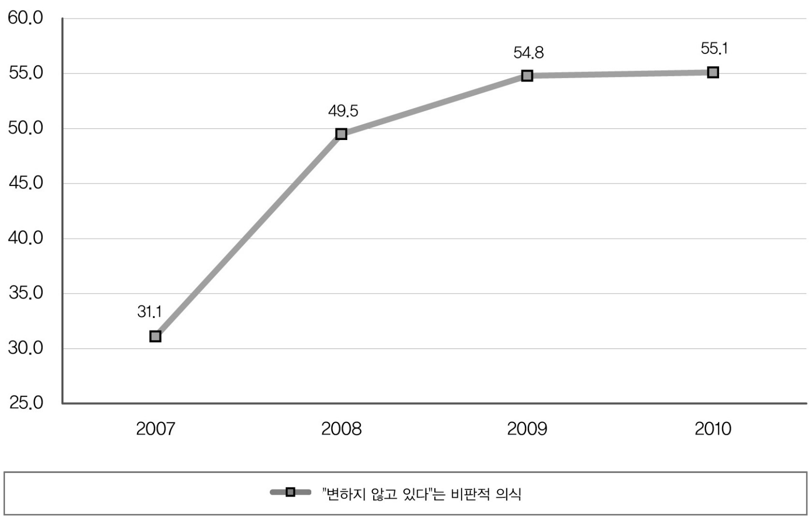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한 가지 뚜렷한 변화는 진보의 대북인식이 급격하에 부정적, 비판적으로 변했다는 점이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응답한 '진보'가 60.9%에서 49.4%로 줄었으며,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은 15.5%에서 18.6%로 늘어났다. 진보의 대북인식이 비판적, 부정적으로 변한데는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일련의 도발적 행동과 발언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중도의 경우에는 작년에 보였던 '중도의 보수화'가 부분적으로 발견되었으나, '진보화' 현상도 나타나 양극단으로의 변동이 심하였다. 예컨대, 지원대상이라는 응답에서는 중도(20.4%)>보수(19.2)>진보(17.9%)로 보수쪽으로 이동했으나,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에서는 보수(18.8%)>진보(11.1%)>중도(9.4%)로 진보쪽으로 이동했다.

종교별로 보면,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은 불교(22.8%)>기독교(17.0%)>천주교(12.8%) 순이며, 협력대상에서는 천주교(61.9%)>기독교(43.6%)>불교(39.2%)로 종교간 대북인식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2.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은 한국사회에서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핵심이슈가 되고 있다. 김대중·노무현 정부 집권 10년 동안 대북 포용정책을 통해 북한이 과연 변화했다고 보는가, 혹은 전혀 변하지 않았다고 보는가 하는 문제는 지난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는 핵심적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보면 "최근 몇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변하지 않고 있다"(55.1%)는 응답이 "변하고 있다"(44.9%)는 응답보다 많았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비판의식은 31.1%(07년)→49.5%

(08년)→54.9%(09년)→55.1%(10년)로 3년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림 1-Ⅱ-2] 북한의 변화 정도

연령별로 보면, 다른 연령층과 20대간의 차이가 발견된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 비판의식이 다른 연령층에서는 모두 53~54%였으나, 20대에서는 58.4%로 높았다. ‘20대의 보수화’ 명제가 다시 확인되는 순간이다. 지난 3년을 비교하면 이른바 386세대인 40대가 북한의 변화를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일관되게 나타났었으나, 올해에는 40대의 독자성이 약화되었으며 20대의 보수화 경향이 강화되었다.

지역별로는 호남권과 중부권이 우호적인 그룹을 형성하고 영남권이 가장 비판적이며 수도권이 중간에 위치하는 지형을 형성하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대북우호인식은 호남권(52.9%)과 중부권(52.5%)에서 높았으며, 영남권(37.0%)과 수도권(45.8%), 강원(47.2%)에서는 낮았다. 2009년과 비교하면 중부권과 수도권이 빠른 속도로 호남권과 같은 대북

우호의식을 형성해 가고 있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중도(60.1%)>보수(57.5%)>진보(46.7%)로 중도가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 비판의식이 가장 강했고 그 다음으로 보수와 진보가 뒤를 이었다. 이는 이념성향이 강한 사람들보다도 중도의 정치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북한에 대한 비판과 불만이 많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3.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도

1)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서 북한 정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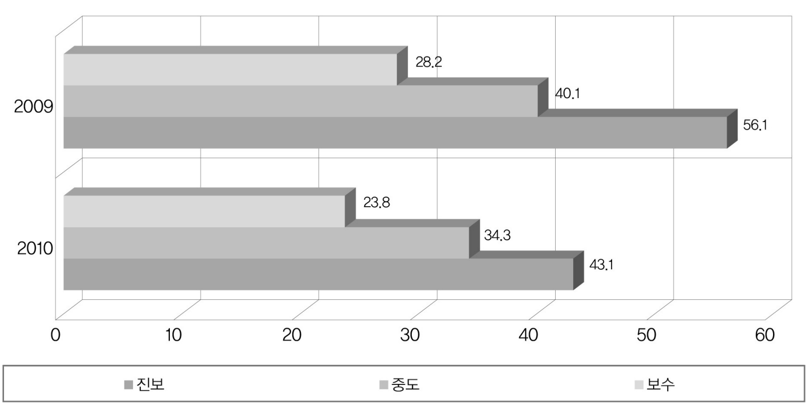
북한이라는 일반적 대상과는 별도로 '정권'이라는 정치적 실체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인식은 조금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측면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의견을 물어 보았다.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응답은 65.1%로 "가능하다"(34.9%)는 응답보다 약 2배가 많았다. 작년과 비교하면 "가능하지 않다"는 불신이 59.1%에서 65.1%로 6%가 커졌다.

세대별 인식에서는 30대와 40대에서 "가능하다"는 신뢰가 각각 38.5%, 38.4%로 높았으며, 20대는 34.3%로 조금 낮고 50대이상은 27.9%로 가장 낮았다. 대북 신뢰도 인식에서는 30~40대가 비슷하며, 50대이상이 가장 낮고 20대는 그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지역적 차이와 정치성향의 차이도 크게 나타났다. 지역적으로는 호남권에서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51.3%로 높았고 중부권, 수도권, 강원이 각각 40.7%, 36.3%, 33.3%로 중간을 차지했고, 영남권은 25.3%로 가장 낮았다. 또한 정치적 성향과는 매우 뚜렷한 관련성이 나타났다. "북한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진보(43.1%)>중도(34.3%)>보수(23.8%) 순으로 진보가 북한정권을 가장

신뢰하고 보수는 불신이 가장 크며 중도는 그 중간을 차지하고 있다.

작년과 비교할 때 지역적 차이와 정치성향의 차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으며, 최근 2년 사이에 대북 신뢰도와 관련하여 일정한 패턴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즉 호남권이 북한에 대해 가장 높은 신뢰를 하고 있고 중부권이 그 다음으로 높은 신뢰를 보이며, 수도권, 영남권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또한 진보는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보수는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패턴은 지속되었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북한정권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북한인식이 진보-보수를 가르는 유력한 기준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작년과 비교하면 보수나 중도에 비해 진보의 북한 신뢰도는 13%라는 큰 폭으로 낮아졌다.[2] 이는 진보가 북한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보수나 중도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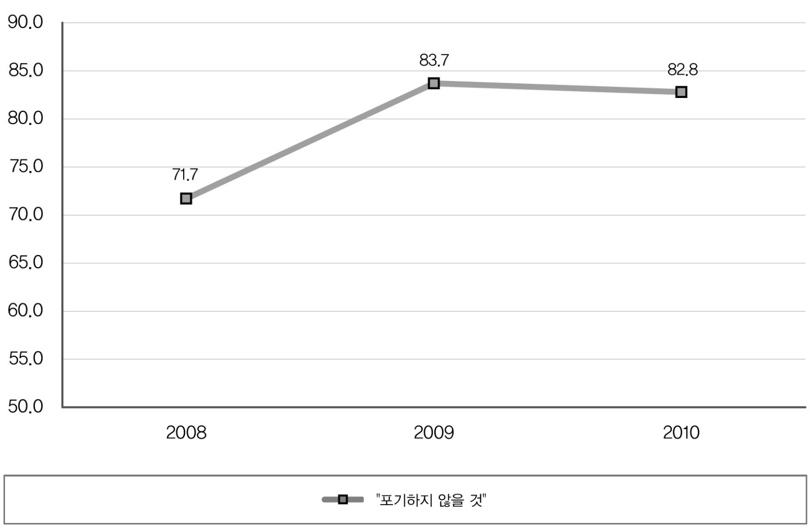


[그림 1-Ⅱ-3] 북한정권에 대한 신뢰도 (“가능하다”는 응답)

2– 2009년에는 진보 24.9%, 중도 48.3%, 보수 26.8%의 이념지형이 형성되었는데, 2010년에는 진보 33.1%, 중도 45.2%, 보수 21.7%로 보수의 위축, 진보의 확장으로 이념지형이 급격히 변하였다. 진보층이 8.2%나 확장된 상황에서 대북신뢰도가 13%나 급추락한 것은 그만큼 대북불신이 단순 수치로 나타난 것보다 훨씬 심각한 문제임을 말해준다.

2)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82.8%로 작년의 83.7%와 거의 비슷하였다. 국민들의 절대다수가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대북불신은 2008년의 71.7% 보다 11~12% 포인트나 늘어난 것이며, 이는 2009년 5월의 2차 핵실험과 2010년 3월의 천안함 사건을 감행함으로써 국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무기 포기에 대한 의견은 세대별이나 정치적 성향, 종교 등 여러 변수에 차이가 없었다. 다만, 호남권(66.4%)에서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의식이 다른 집단(영남권 86.5%, 중부권 88.1%, 수도권 82.7%, 강원 91.7%)보다 20% 정도 높게 나타났다. 호남권과 다른 지역간의 격차가 2009년에 5%였던 것에 비하면 2010년에 호남권의 차별성은 매우 뚜렷해진 것이다.



[그림 1-Ⅱ-4] 북한의 핵무기 포기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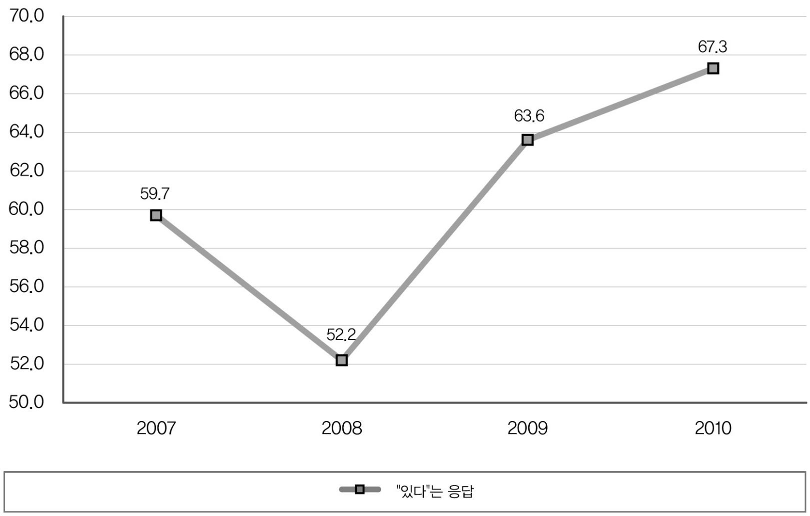
4. 북한위기의식

1) 북한 핵무기 보유의 위협의식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한 위협의식은 "매우 위협을 느낀다" 22.4%, "다소 위협을 느낀다" 51.4%로 전체적으로 위협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이 73.8%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4년의 추이를 보면, 북한 핵무기 보유에 대해 위협을 느낀다는 의견은 68.2%(07년)→61.3%(08년)→74.3%(09년)→73.8%(10년)로 작년에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고조된 위기의식이 금년에도 지속되었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는 세대, 교육, 소득수준, 지역, 이념, 종교 등 모든 변수에 차이가 없었으며, 다만 성별에 따른 차이만 발견되었다. 여성(79.6%)이 남성(68.0%)보다 10% 가량 더 높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북한으로 인한 불안의식과 위기의식은 북한이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함으로써 발생하는 위기와 불안감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67.3%)는 응답이 "없다"(32.5%)는 응답보다 두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조사를 진행한 지난 4년 중 가장 높은 수치로 국민들은 북한의 도발에 의한 전쟁 가능성을 매우 우려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3년을 비교하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59.7%(07년)→52.2%(08년)→63.6%(09년)→67.3%(10년)로 변화했다. 이는 작년에 북한의 2차 핵실험으로 11.4%가 높아졌던 전쟁 불안감이 2010년에 다시 3.6%가 높아져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림 1-Ⅱ-5]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연령별로 보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이 20대(74.6%)>30대(69.6%)>40대(63.3%)>50대이상(61.3%)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을 더 크게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층이 높아질수록 대립과 긴장이 반복되는 남북관계에 적응력이 생겼거나, 아니면 북한이 섣불리 대남 무력도발을 감행하지 못할 것이란 현실 판단력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러한 경향은 작년과 동일하여 지난 3년간 유사한 패턴을 유지하였다.

지역별로는 매우 특이한 현상이 관찰되었다. 영남권이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에 영남권은 58.6%로 응답하여 호남권(73.1%), 중부권(72.0%), 수도권(69.3%), 강원(75.0%), 제주(76.9%)에 비해 매우 낮았다. 즉 영남권은 다른 지역에 비해 안보불안을 덜 느낀다는 것이다. 작년에는 중부권이 영남권과 비슷한 경향을 보였는데, 2010년에는

중부권이 영남권에서 이탈하여 호남권과 수도권 등 다른 지역에 합류되었다. 영남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이라는 안보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안보불안의식은 정권의 지지와 깊은 관련성을 맺으며 변화하고 있다. 2008년에는 수도권(46.1%)이 영남권(51.2%)과 함께 다른 지역(중부 66.2%, 호남 65.1%, 강원 71.6%)에 비해 안보불안의식이 매우 낮았다. 그런데 2009년에는 수도권의 안보불안이 46.1%→68.7%로 커졌고, 2010년에는 중부권의 안보불안이 57.6%→72.0%로 급상승했다. 영남권의 안보불안의식이 낮은 것은 이명박 정부를 적극 지지하여 정권을 탄생시켰기 때문에 현 정부의 안보에 대한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 정부의 안보정책에 적극적 지지를 보냈던 수도권이 2009년에 이탈했고 2010년에는 중부권이 이탈함으로써 안보불안이 확대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변화의 근본원인은 핵실험과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있지만,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깔려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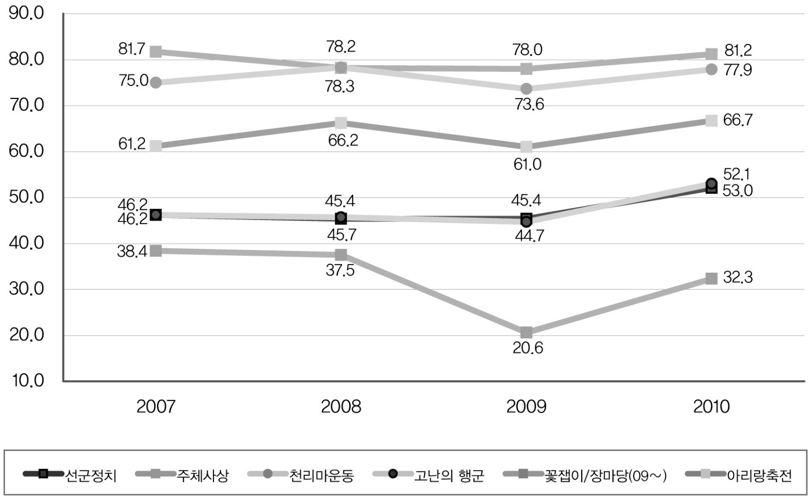
정치적 성향과 안보불안은 올해에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난 3년간의 변화를 꼼꼼히 따져보면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다. 즉 2007년에는 보수(64.7%)가 진보(54.5%)보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했으나, 2008년에는 반대로 진보(57.1%)가 보수(47.8%)보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더 높게 보았다. 이는 2008년에 보수가 지지하는 이명박 정부가 들어섬으로써 보수집단이 안보적 측면에서 안도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09년에는 2007년으로 회귀하여 다시 보수(67.9%)가 진보(63.5%)보다 안보불안을 더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핵실험 등 북한의 도발적 행동으로 인해 안보

불안이 커졌기 때문이다. 즉 ‘정권교체의 효과’보다 ‘북한효과’가 압도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2010년에 보수(66.7%)-진보(68.1%) 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은 양자가 단순히 수렴하고 있다기보다는 ‘정권지지효과’가 다시 작동하여 상호 반대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과정에서 나타난 일시적 균형이라고 해석해 볼 수 있다.

5. 북한사회에 대한 친숙성

1) 북한 사회 인지도

남한 국민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6가지 사건과 개념을 선정하여 질문했다. 2010년에는 작년보다 대체로 북한에 대한 국민들의 인지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적으로 지난 2년간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 줄어들었으나, [그림 1-Ⅱ-6]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에 상당한 폭으로 상승하였다. 2010년에 북한 인지도가 갑자기 상승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통일부가 통일교육 쪽으로 정책방향을 조정하면서 국민들의 통일에 대한 전반적인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 2009년 8월 클린턴 전 미국대통령 방북과 북한의 김대중 전대통령 조문단 파견을 계기로 남북화해 무드가 조성되었고 남북정상회담 논의가 2010년 초반까지 이어지면서 북한에 관한 소식이 언론에 자주 보도된 데에도 영향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1-Ⅱ-6] 북한사회 인지도

연령별로는 20대의 북한 인지도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가장 낮았고 30~50대는 대개 비슷한 지식수준을 갖고 있었다. 작년과 비교하면 지난 3년 동안 이른바 386세대로 불리는 4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북한 인지도가 월등히 높았으나 2010년에는 30대와 50대이상에서 북한 인지도가 상승함으로써 40대의 독자성은 다소 누그러졌다.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서 북한 인지도가 매우 높아진 것이 특징이다. 지난 3년간은 호남권의 북한관련 지식수준이 높았으며 수도권과 영남권은 가장 낮았다. 그런데 2010년에는 수도권의 북한지식 수준이 가장 높았다. 선군정치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인지도는 58.8%로 중부권(45.3%), 호남권(39.5%), 영남권(47.3%)에 비해 10% 이상 높았다. 장마당에 대한 인지도에서도 수도권은 40.0%로 다른 지역(중부 19.5%, 호남 21.0%, 영남 25.7%)에 비해 20% 가량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에서 정상회담 등의 논의로 첨예한 관심을 끌면서 수도

권이 북한관련 문제에 관심을 더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짐작된다.

정치적 성향별로 보면, '진보'가 '보수'나 '중도'보다 위에 제시한 6개의 북한사회 관련 개념과 용어를 더 많이 알고 있다고 대답했다. 작년과 비교할 때 이러한 경향은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일관된 패턴을 형성하고 있다. 즉 이념성향이 강한 사람일수록 북한문제에 관심을 더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북한관련 지식을 더 많이 습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 북한관련 경험과 남북한간 차이

지난 3년 동안 남북교류가 단절되고 인적 왕래가 어려워짐에 따라 북한관련 경험과 남북한간 차이에 대한 인식도 크게 달라졌다. 조사결과를 보면 북한방송이나 영화·소설을 접해본 사람들은 37.4%로 지난해의 46.2%에 비해 급격히 줄어들었다. 지난 3년 동안의 추이를 보면 40.8%(07)→31.2%(08)→46.2%(09)→37.4%(10)로 등락을 반복했다. 이는 남북왕래의 단절과 인터넷을 통한 북한관련 정보의 통제로 북한서적과 매체를 직접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적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금강산이나 개성 등 북한방문경험자가 지난 3년간 4.5%→3.5%→4.2%→3.8%로 등락을 거듭한 것이 이를 반증한다. 반면, 새터민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8.9%→9.3%→10.9%→13.8%로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국내에 새터민 입국이 늘어나면서 새터민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지원활동과 단체참여 경험자는 지난 3년간 2.8%→2.4%→1.4%→2.2%로 부침을 계속했으나, 2010년에는 늘어났다.

탈북자(새터민)을 만나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지역적 특색이 강했다. 중부권이 22.9%과 수도권이 18.1%로 높은 편이었고, 호남권과 영

남권은 각각 5.9%, 6.2%로 낮았다. 작년에도 중부권은 16.9%를 기록하여 호남권(17.6%)과 함께 높은 비율을 보였다. 중부권은 북한방송·영화·소설을 접촉한 경험도 47.5%로 다른 지역(호남권 40.3%, 수도권 36.4%, 영남권 32.5%)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수도권에서 탈북자 접촉경험이 많은 것은 탈북자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부권에서 새터민 및 북한관련 경험이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부분이다. 이에 대한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응답자들은 선거방식(93.8%), 생활수준(96.3%), 법률제도(88.7%), 언어사용(89.2%), 생활풍습(86.7%), 가치관(94.1%) 등 모든 분야에서 남북한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국민들의 남북동질성 인식은 각 영역에서 2009년에 큰 폭으로 낮아졌다가 2010년에 약간 상승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전반적으로 2010년에 북한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남북의 동질성 인식을 촉진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6. 소결

2010년 국민들의 대북 인지도는 작년에 비해 늘어났으나, 전반적인 대북인식은 지속적으로 악화되었다. 우선, 북한비판의식이 지속적으로 늘어나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은 2008년을 정점으로 2009년에 7%가 감소하였고 2010년에는 다시 6%가 감소하여 2년 연속 줄어들었다. 또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대북 비판의식이 31.1%(07년)→49.5%(08년)→54.9%(09년)→55.1%(10년)로 지난 3년간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였고, 북한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지 않다"는 불신도 59.1%에서 65.1%로 6%가 커졌다. 이는 연초부터 북한의 보복성전 발언과 천안함 공격에 이어 남한의 심리전 시설에 대한 군사적 타격, 서울 불바다 위협

발언 등 일련의 위협적 행동으로 인해 국민들의 대북인식이 나빠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금년에도 '북한효과'가 부정적 북한인식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둘째, 북한문제로 인한 불안의식은 최고로 높아졌다. 북한의 무력도발로 인한 안보불안의식은 59.7%(07년)→52.2%(08년)→63.6%(09년)→67.3%(10년)로 지난 2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했다. 지난 20년간의 경험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의 안보불안의식은 40～60% 사이를 왕래하였으며 60%를 넘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전쟁불안의식이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작년의 핵실험에 이어 올해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는 등 북한의 군사적 모험주의가 계속되면서 국민들의 안보불안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셋째, 대북인식에서 나타난 세대별 특징은 '20대의 보수화'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존재인식과 변화인식, 신뢰도, 위기의식 등 모든 영역에서 20대는 50대이상과 비슷한 의식을 보였다. 작년에는 20대가 30～40대와 유사한 의식을 보였는데 올해는 20대가 30～40대 집단에서 분리되어 독자적 경향을 보이거나 50대이상의 대북인식과 비슷한 의식성향을 보였다. 20대의 이러한 보수화 경향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등장 이후 잠시 주춤해지다가 2010년에 다시 강화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 초기 촛불시위 등의 사건으로 진보적·비판적 대북판단을 하였으나, 북한의 도발적 행동이 이어지면서 2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북한효과'에 훨씬 더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북한인식 가운데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하느냐, 안하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 집단 간 차이가 현격하게 드러났다. 일반적으로 한국사회의 이념갈등이 북한인식의 차이로부터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오는데, 북한인식에 대한 이념집단간의 차이를 보면 이러한 주장

이 상당한 신빙성이 있음을 증명해 준다.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즉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북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진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다섯째, 지역변수에서 호남권의 약진이 작년보다 강화되었고, 중부권과 수도권도 기존의 보수적 패턴에서 이탈하는 현상이 타나났다.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우호적 인식에서 중부권(52.5%)은 호남권(52.9%)과 같은 경향을 보였고,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72.0%로 호남권(73.1%)과 유사하며, 영남권(58.6%)에 비해서는 15%나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북한사회 인지도에서는 수도권이 다른 지역에 비해 10% 이상 높았으며,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하는 비율에서도 수도권이 호남권과 함께 높게 나타났다. 대북인식에서 중부권과 수도권의 변화가 나타난 것은 6.2 지방선거에서 볼 수 있었던 바와 같이 이명박 정부에 대한 정치적 입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종교변수가 대북인식의 모든 영역에서 뚜렷하게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몇 영역에서는 종교간 차이가 발견되었다. 북한이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에서 불교(22.8%)>기독교(17.0%)>천주교(12.8%) 순으로 나타났으며, 협력대상이라는 응답에서는 천주교(61.9%)>기독교(43.6%)>불교(39.2%) 순으로 종교간 차이가 확연하였다. 북한정권 신뢰도에서도 차이가 크지는 않지만 천주교(39.0%)>기독교 37.2%>불교(30.1%) 순으로 나타났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나 대북인지도, 새터민 경험 등에서도 종교간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향후 대북인식과 종교변수의 관련성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III.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북정책의 기조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2010년 천안함 사건이 발생했고 그것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지면서 이 사건이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여기서는 이전 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현 대북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1. 남북 교류의 통일 기여도

1) 남북교류 각 측면별 비교

이번 조사에서도 남북 교류가 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남북 교류 방식은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학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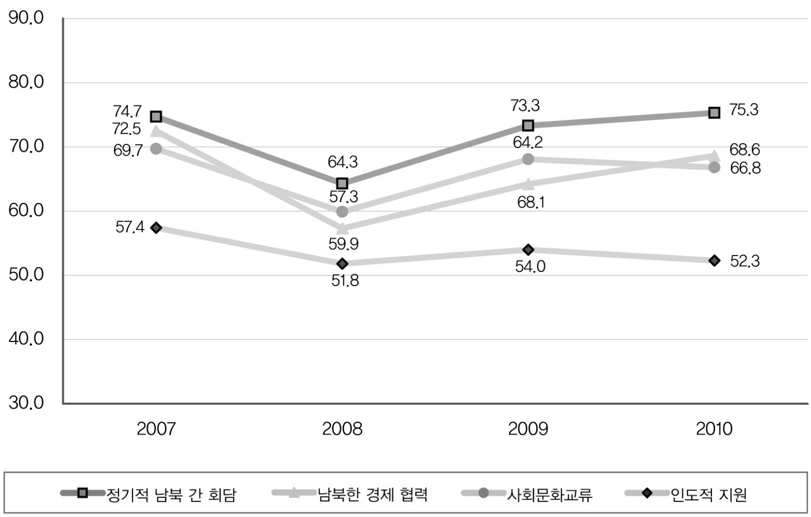
강산 개성 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정기적인 남북 간 회담' 등 네 가지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결과가 [그림 1-Ⅲ-1]에 정리되어 있다.

2010년 조사가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에 실시된 조사임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이전 조사와 커다란 변화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네 가지 남북교류 방식 모두가 통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점은 남북한 정부 간의 정기적인 회담과 같은 정치적 접촉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천안함 사건 같은 군사적 충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는 사실이다. 응답자 네 명 중 세 명이 '정기적 남북 간 회담'이 통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 문항은 2008년을 제외하면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남북한 경제 협력으로 68.6%가 이 방안이 통일에 도움을 줄 것으로 평가했다.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이 방안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커져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강산 관광 사업의 중단, 개성공단사업의 지지부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66.8%로 나타났다. 2009년 조사와 큰 차이는 아니지만 긍정의 응답이 조금 낮아졌다. 작년 조사에서는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보다 더 높았는데 이번 조사에서는 그 순위가 바뀌었다. 그러나 사회문화 교류와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대체로 유사한 형태로 볼 수 있다.

반면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52.3%로 다른

방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작년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률 54.0%와 큰 차이는 아니지만 오히려 낮아졌다. 다른 방안에 대한 응답 패턴과 비교할 때, 과거 '퍼주기' 논란을 불렀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유보적 태도는 대체로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표의 비율은 모두 [매우 도움 + 다소 도움]

[그림 1-Ⅲ-1] 남북 교류가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도

전체적으로 본다면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남북 교류가 통일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감은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오히려 2008년이나 2009년 조사와 비교한다면 그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더욱 높아졌다고도 할 수 있다.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추진된 상대적으로 활발한 남북 교류가 기대만큼의 가시적 성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2008년 조사에서 반영되었다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경색된 남북 관계에 대한 우려, 불만이 남북 교류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은 남북한 당국자 간의 정기적인 회담이나 남북한 경제 협력과 같이 정부가 직접 나서야 하는 교류 방식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높아진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제 각 교류 방식별로 나타난 응답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2) 정기적 남북 간 회담

정기적인 남북 간 회담이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은 75.3%,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은 24.7%로 나타났다. 남북한 정부 간 대화 단절과 군사적 긴장 관계 속에서도 대다수 국민들은 남북한 당국자 간의 정치적 교류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북한 정부 간의 정치적 교류 필요에 대한 높은 응답에도 불구하고, 그 패턴을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에 따라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차이가 확인된다. 우선 학력에 따른 응답의 차이가 발견된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정기적 남북 회담이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대재 이상 집단에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은 77.6%인데 비해, 고졸 집단은 74.7%, 중졸 이하 집단은 64.4%였다.

가구 소득별로는 소득 상승에 따른 일관된 패턴이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400 만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에서 남북한 간의 정기적 회담 개최가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82.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에 비해 300~399 만원 집단의 경우 73.2%, 200~299 만원 집단 70.2%, 200 만원 미만 집단 74.6%로 고소득 집단과 비교적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도 흥미로운 차이가 확인되었다. 호남권에서의 긍정적 응답이 가장 높았는데 그 비율은 무려 91.6%였다. 이런 응답율은 호남에서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김대중 정부의 대표적 정책이 햇볕정책이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 같다. 이에 비해 영남권에서의 긍정적 응답은

63.4%로 전체 평균보다 10% 이상 낮았다. 북한과의 정치적 교류를 바라보는 지역별 시각의 분명한 차이가 확인되고 있다.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있는 수도권과 중부권의 경우에는 각각 79.7%, 79.2%로 긍정적 기대감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남북한 간의 정기적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은 20대 72.9%, 30대 77.2%, 40대 75.7%, 50대 이상 75.3%로 나타났다. 20대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응답이 눈길을 끌기는 하지만 그 차이는 아주 큰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와 함께 남성과 여성 집단 간의 성별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적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념 성향에 따른 응답의 패턴이다. 예상과는 달리 이념 성향별 응답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진보 집단에서 긍정적 응답율은 76.1%, 중도 집단 74.7%, 보수 집단 75.6%로 나타났다. 이런 응답율은 2009년 조사의 결과와는 크게 다른 것이다. 2009년 조사에서는 진보(80.3%), 중도(73.2%), 보수(66.9%)로 이념 성향별 응답의 차이가 뚜렷했다. 작년과 비교하면 진보 집단의 비율이 다소 줄어든 반면 보수 집단의 긍정적 응답이 높아지면서 대체로 유사한 형태로 수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념적으로 매우 첨예한 대립을 보여 온 남북한 정부 간 정기 회담에 대한 이념 성향에 따른 입장의 차이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3) 남북한 경제협력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해서는 68.6%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반면 31.4%는 그렇지 않다고 응답했다.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별로 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특성이 확인된다. 우선 연령별로 볼 때 응답의 차이가

확인된다. 긍정의 응답은 29세 이하 집단에서 65.7%, 30대 65.4%인 반면, 40대 73.1%, 50대 이상은 70.5%로 나타났다. 30대 이상 젊은층에서 남북한 경제 협력의 통일 기여에 대한 평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낮았다. 40대 연령층에서 남북한 경제협력이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7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아마도 이 연령층이 경제적으로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교육 수준별로 보면 학력이 높아질수록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뚜렷이 높아지는 추세를 보인다. 중졸 이하 집단에서 경제협력이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율이 58.2%인데 비해, 고졸 집단은 68.8%, 그리고 대재 이상 집단은 70.2%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에 있어서도 400 만원 이상 고소득 집단에서 긍정적 평가가 59.5%였지만, 나머지 소득 집단에서의 응답율은 49~50% 수준이었다.

앞에서 본 남북 간 정기적 회담에 대한 응답과 유사하게 여기서도 지역별 반응의 편차가 확인되었다. 역시 호남 지역에서 높은 긍정적 반응이 확인되었는데 호남 지역 응답자의 80.7%가 경제협력이 통일에 기여할 것으로 보았다. 수도권에서도 74.1%로 비교적 높게 긍정적 반응이 확인되었다. 반면 영남권에서는 57.6%로 호남에 비해 상당히 낮았다.

이념에 따른 남북한 경제협력에 대한 태도의 차이는 여기서도 그다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보 성향 집단에서 긍정적 응답율은 71.3%로 가장 높았지만 보수 성향 집단에서도 그 비율은 69.0%로 나타나 그 차이는 예상만큼 크지 않았다. 중도 성향 집단에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66.5%로 가장 낮았지만 전반적으로 이념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일관되고 뚜렷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다.

4) 사회문화 교류

학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는 66.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연령별로는 그다지 분명한 패턴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19~29세 집단에서 긍정적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19~29세 집단에서 긍정적 평가의 비율은 61.1%로 나타났는데, 30대에서는 67.6%, 40대에서는 70.5%, 50대 이상 집단에서는 68.1%로 상대적으로 높은 긍정적 답변의 비율을 보였다. 성별에 있어서는 남녀 집단 간 별다른 차이가 없었다.

교육 수준별 인식의 차이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답변의 비율이 높았다. 중졸 이하 집단에서 긍정 응답의 비율이 56.7%였는데 비해, 고졸 집단에서는 65.2%, 대재 이상 집단에서는 69.7%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도 소득이 높아질수록 긍정 답변의 비율이 높아지는데 200 만원 미만 집단에서의 긍정 응답율은 60.7%, 200~299 만원 집단은 64.0%, 300~399 만원 집단은 65.4%, 그리고 400 만원 이상 집단은 74.0%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의 가장 높은 긍정 응답(82.4%)과 영남권에서의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응답(54.4%)의 패턴은 여기서도 발견되며 수도권은 71.4%, 중부권은 68.2%로 그 중간 정도의 응답율을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 집단의 경우 긍정적 응답이 69.5%로 나타났다. 보수 성향 집단은 65.2%, 중도 성향 집단은 65.6%로 진보 성향 집단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비율을 보였지만 그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5) 인도적 대북지원

쌀, 비료, 의약품 지원과 같은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냐는 질문에 대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은 52.3%로 다른 항목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연령별로는 일관된 패턴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유독 40대 집단에서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긍정적 응답이 높게 나왔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다른 연령층의 경우 대체로 49~52% 수준인데 비해서 40대 연령층의 경우에는 58%가 인도적 지원에 대해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는 작년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되는 결과로, 이른바 486 세대가 다른 세대에 비해서 대북지원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대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교육 수준별로는 역시 학력이 높아질수록 인도적 대북지원이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 집단에서의 긍정적 응답은 41.0%, 고졸 집단에서의 응답은 51.9% 그리고 대재 이상 집단에서의 응답은 54.4%였다. 가구 소득 수준에서는 400 만원 이상의 고소득 집단에서의 높은 긍정적 응답이 여기서도 다시 확인되었다. 다른 소득 집단에서의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50% 전후인데 비해서 400 만원 이상 집단에서의 긍정 응답은 59.5%로 대략 10%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지역별로도 호남에서의 높은 긍정적 응답(68.1%)과 영남에서의 낮은 응답(41.7%)은 다시 나타나고 있지만 다른 항목에 비해서 그 차이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그러나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분명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진보 성향 집단의 경우 56.3%가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중도 성향 집단은 51.1%, 보수 성향 집단은 48.7%로 나타나 진보>중도>보수의 순으로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정도가 달랐다. 이는 2009년 조사보다는 그 차이가 줄어든 것이지만, 이념

집단 간 인식의 차이가 반복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2007년과 2008년 조사에서 중도는 보수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6) 종합: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별로 본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

대북 정책의 네 가지 항목, 즉 정기적인 남북 간 회담, 금강산·개성관광,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그리고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에 대한 응답을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응답율에 있어서는 적지 않은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공통의 특성이 확인된다.

대북 정책의 구체적 방식과 무관하게 우선 학력별로 이러한 지원이 통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인식에 있어서 비교적 분명한 차이가 나타났다. 고학력 집단에서 대북 정책이 통일에 기여할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온 반면, 상대적으로 저학력 집단에서는 그러한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낮았다. 네 항목 모두에서 매우 일관된 패턴을 보였다. 상대적으로 많은 정보 획득이 가능한 고학력 집단에서 보다 전향적인 태도가 확인된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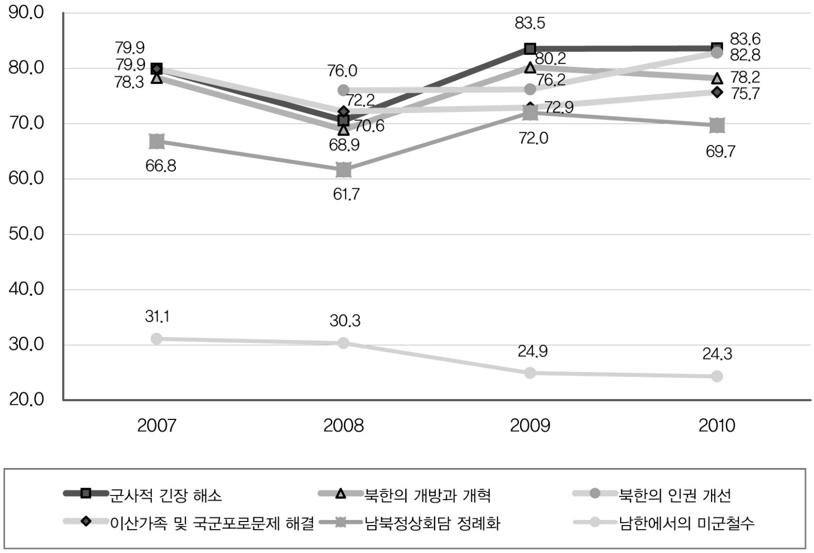
거주 지역별로도 분명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호남 지역에서 긍정적 비율이 높았던 반면 영남 지역에서의 긍정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호남은 네 항목 모두에서 가장 높은 긍정의 응답을 보였다. 지역별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 일관된 차이가 나타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 추진된 햇볕정책에 대한 지지가 지역별로 극명하게 갈렸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대북 정책 자체에 대한 지역별 태도가 다를 수도 있지만 이와 함께 특정 정치 세력 혹은 정치 지도자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가 이러

한 인식의 차이에 함께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서 다른 항목에 비해 지역 간 인식의 차이가 크지 않았던 것은 흥미롭다. ‘퍼주기 논란’의 영향이거나 계속된 지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를 이끌어 내지 못했다는 사실에 대한 실망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지역별 시각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념적 차이로 등치시키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이념적 입장 차이는 크지 않게 나타났다는 점은 흥미로운 발견이면서도 주목할 점으로 보인다. 인도적 대북 지원 정책을 제외하면 이념 성향에 따른 집단별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연령별로도 매우 뚜렷한 집단별 차이가 확인되지는 않았다. 다만 젊은층, 특히 20대 집단에서 각각의 대북정책이 통일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특기할 만한 점이다. 성별 차이는 전 항목에 걸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통일을 이루기 위해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정책 사안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각 정책 사안의 해결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지에 대해 조사했다. 질문한 각 정책 사안은 ‘남북정상 회담의 정례화’, ‘북한의 개방과 개혁’, ‘군사적 긴장 해소’,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북한의 인권 개선’ 등 모두 여섯 가지였다. 각 항목별로 얼마나 그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그림 1-Ⅲ-2]이다.



* 표의 비율은 모두 [매우 시급 + 다소 시급]

[그림 1-Ⅲ-2] 통일을 이루기 위해 시급히 이뤄져야 할 사항

2010년 조사에서는 군사적 긴장 해소가 시급하게 해결되어야 할 정책 사안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그런데 이러한 응답은 사실 2009년 조사 결과와 유사한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조사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조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 등에 영향을 받았다면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조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북한의 인권 개선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2.8%가 시급한 사안으로 생각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08년, 2009년 조사에 비해 뚜렷이 높아진 결과이다. 북한 인권 문제의 심각성이 거론된 것이 최근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0년 조사에서 그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의외의 결과이다. 세 번째로는 북한의 개방과 개혁으로 응답자의 78.2%가 이 사안이 시급하다고 평가했

다. 네 번째가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로 응답자의 75.7%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는 남북정상회담 정례화로 응답자의 69.7%, 그리고 남한에서의 미군철수는 응답자의 24.3%로 가장 낮았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시급함에 대한 응답이 다소 높아진 것을 예외로 한다면 전반적인 응답의 패턴은 작년과 대체로 유사하다.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작년과 대체로 유사한 응답이 나타난 것은 흥미롭다. 구체적으로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를 토대로 각 항목별 응답의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1) 군사적 긴장 해소

이번 조사가 천안함 사건 이후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 해소의 시급함에 대한 높은 응답은 예상할 수 있는 것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83.6%가 군사적 긴장 해소가 통일을 위해 시급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워낙 높은 응답율로 인해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다. 교육 수준별로 볼 때 학력이 높을수록 군사적 긴장 해소의 필요성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그 차이는 5% 정도였다. 이념 성향별로도 진보(86.1%), 보수(84.2%)의 입장 차이와 무관하게 군사적 긴장 해소의 시급함에 공감했다. 중도 성향 집단에서 그 비율이 81.6%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응답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흥미롭게도 영남권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80.5%의 응답율을 보였으며 호남은 89.1%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영남에서도 80% 이상이 군사적 긴장 해소의 시급함을 지적한 만큼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연령, 성별, 소득별로는 응답의 차이가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2) 북한의 인권 개선

북한의 인권 개선이 시급한 과제라는 응답은 82.8%였다. 이러한 응답은 과거 조사에 비해서 유독 높아진 것이다. 최근에 북한 인권 문제에 주목할 만한 커다란 사건이 발발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처럼 2010년 조사에서 응답율이 높아졌다는 점은 흥미롭다. 연령별로는 40대가 86.9%로 이에 대한 응답이 가장 높았던 반면 50대 이상 집단에서는 79.1%로 가장 낮았다. 교육 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함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중졸 이하 집단의 경우 78.6%, 고졸 집단은 81.6% 그리고 대재 이상 집단에서는 84.3%의 응답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영남 지역이 73.5%로 북한의 인권 개선에 대한 응답율이 가장 낮았지만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른 항목의 응답을 볼 때 대북 문제에 대해 '보수적'이라는 영남 지역에서 북한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응답이 낮게 나타난 것은 흥미롭다. 이념 성향별로도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보수 성향 집단과 진보 성향 집단에서 모두 84.6%의 동일한 비율이 나타났으며 오히려 중도 성향 집단은 80.6%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다.

3) 북한의 개방과 개혁

북한의 개방과 개혁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78.2%였다. 성별로는 남성 집단이 80.8%, 여성 집단은 75.6%로 남성의 응답율이 높았다. 다른 질문 항목에서 성별 응답의 차이가 거의 없었던 것과는 상이한 결과이다. 연령별로도 차이가 확인되는데 젊은 응답자들(19~29세 75.9%, 30대 76.3%)의 경우가 낮고 40대 이상 집단(40대 81.0%, 50대 이상 79.7%)

에서 상대적으로 북한의 개방, 개혁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교육 수준별로는 중졸 이하 집단(74.7%)에 비해 고졸 이상 집단(고졸 78.6%, 대재 이상 78.4%)에서 다소 높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는 일관된 패턴은 나타나지 않지만 400 만원 이상 고소득층에서 82.2%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특기할 만하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에서 69.5%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 대한 응답이 가장 낮았고 호남권에서 86.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 집단 84.3%, 보수 성향 집단 78.1%로 다소 차이를 보였지만 실제로 가장 낮은 응답은 흥미롭게도 중도 성향 집단으로 그 비율은 73.7%였다.

4) 이산가족 및 국군 포로 문제 해결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해결이 시급하다는 응답은 75.7%였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별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성별, 연령별, 교육 수준별, 가구소득별로 일관된 응답의 패턴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지역별로는 다른 질문 항목과 유사하게 영남권에서 59.9%로 가장 낮은 응답을 보였다는 점과 중부권에서 88.1%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이념 성향별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일관된 특성이 확인되는데 진보 성향 집단이 77.3%로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중도 성향 집단으로 75.2%, 그리고 보수 성향 집단이 74.2%로 가장 낮았다.

5)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69.7%였다. 연령별로는 19~29세 집단에서 66.7%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교육 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가 시급하다는 인식을 보였는데 중졸 이하 집단은 61.9%, 고졸 집

단 67.8% 그리고 대재 이상 집단은 72.4%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다른 소득집단의 응답율이 64~67% 수준임에 비해서 가장 고소득집단인 400 만원 이상 집단에서는 80.2%로 응답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를 나타냈다. 지역별 입장의 차이도 컸는데 영남은 56.8%인데 비해서 호남권은 83.2%로 대단히 높았다. 두 지역 간 응답율의 차이는 무려 26.4%에 달한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영남과 호남의 극명한 시각의 차이는 최초로 남북정상회담을 가졌던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두 지역의 상이한 지지도가 반영된 탓으로 보인다. 이념 성향별로도 차이가 확인되는데, 진보 성향 집단에서는 이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응답이 76.2%로 나타났는데, 이에 비해 보수 성향 집단(68.9%)과 중도 성향 집단(65.3%)의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6)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통일을 위해서는 남한에서 미군 철수가 시급하다는 응답은 24.3%로 이번 조사에서도 역시 매우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미군 철수의 시급성에 대한 응답율이 2007년 조사 이래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성별로는 남성 집단에서 22.2%, 여성 집단에서 26.5%로 남성 집단에서 응답율이 더욱 낮았다. 연령별로는 매우 뚜렷한 패턴은 보여주고 있는데 연령이 올라갈수록 미군 철수가 필요하다는 데 대한 응답이 낮아졌다. 19~29세 집단은 29.7%이지만, 30대 집단은 24.7%, 40대 집단은 23.9%, 그리고 50대 이상 집단은 18.6%로 가장 낮았다. 교육 수준별로는 대재 이상 집단은 28.2%인데 비해 고졸과 중졸 이하 집단은 20.1%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가구 소득별로도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났는데 가구 소득이 높을수록 미군 철수의 시급성에 대한 응답율이 낮아졌다. 200 만원 미만 집단의 경우 30.2%이

지만, 200~299 만원 집단은 24.8%, 300~399 만원 집단은 22.3%, 그리고 400 만원 이상 집단은 22.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컸는데 영남에서는 16.4%인 반면 호남에서는 33.6%로 영남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응답율을 보였다.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도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진보 성향 집단은 31.7%인데 비해, 중도 성향 집단은 21.8%, 그리고 보수 성향 집단은 18.4%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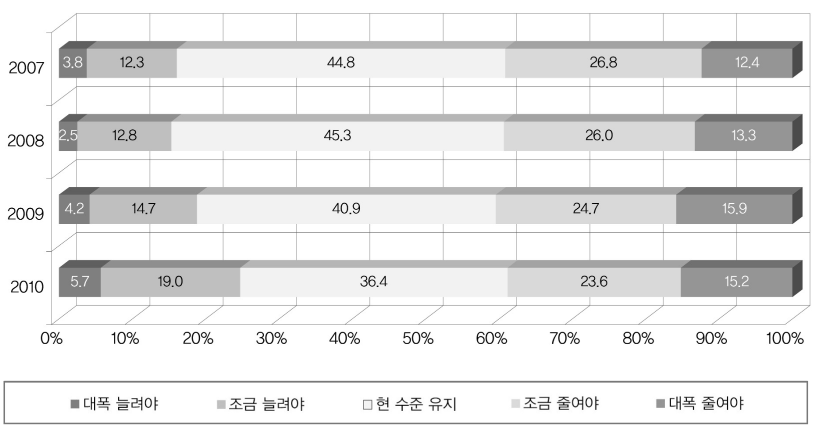
7) 종합: 대북 사안별 시급성에 대한 평가

전체적으로 볼 때 대북 정책의 각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평가는 사안의 성격마다 조금씩 다른 형태로 응답의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미군 철수나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와 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정치성향이나 지역과 같은 한국 정치의 갈등 구조에 따른 시각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영남, 보수층의 시각과 호남, 진보층의 시각이 분명하게 갈렸다. 그러나 그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보수, 진보와 같은 이념 성향에 따라 사안을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지역별로 보면 영남에서 일관되게 낮은 응답이 나타났고 호남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이 나타났다. 그러나 사안별로 보면 이러한 응답 패턴을 두고 대북 정책에 대해 호남이 진보적이고 영남이 보수적이라고 부르기 애매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예를 들면 북한 인권 개선, 북한의 개방과 개혁, 국군 포로 문제 해결과 같은 사안은 한국 사회의 보수층에서 주장해 왔던 것이지만 영남 지역에서 이러한 사안의 시급성에 대한 응답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았다. 따라서 영남에서의 낮은 응답이 보수적 시각만을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며 오히려 대북 정책에 대한 무관심이나 상대적으로 그 중요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을 가능하게 한다.

3. 대북 정책에 대한 평가

1) 대북 지원 수준의 적정성

대북 지원 규모의 적정성에 대해 조사 결과에 대해서 대체로 과거 조사 결과와 유사한 패턴을 보이지만, 이전 조사에 비해 대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다소 높아졌다. 2009년 조사에서 현재 수준보다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18.9%였던 것에 비해서, 금년 조사에서는 그 비율이 24.7%로 증가했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지원 규모를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더 높아진 것이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36.4%, 조금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23.6%, 그리고 대폭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15.2%로 작년과 비교할 때 조금씩 줄어들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대북 지원을 줄어야 한다는 응답이 38.9%로 가장 높았고, 현 수준 유지가 36.4%로 그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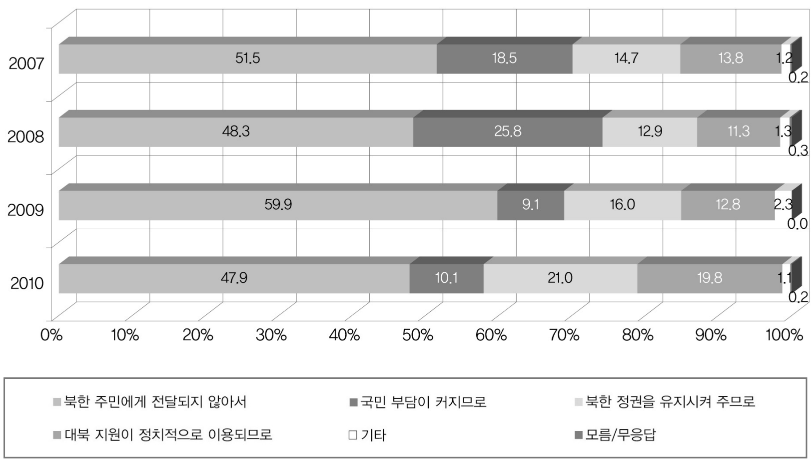
[그림 1-Ⅲ-3] 대북 지원 규모의 적정성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별로 살펴보면 흥미로운 특성이 확인된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30.0%가 대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여성 집단에서의 비율은 19.3%에 그쳤다.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남성 31.1%, 여성 41.9%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도 차이가 확인되는데 젊은 응답 집단(19~29세 20.5%), 30대(21.8%)의 경우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낮은 반면, 40대(29.2%), 50대 이상(27.6%)의 연령층에서는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반면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한다는 응답은 19~29세(41.6%), 30대(39.1%), 50대 이상(41.2%)에서 높았던 반면, 40대 집단에서는 33.8%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극명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된다. 대북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영남 15.2%, 강원 13.9%인 반면, 호남은 51.3%였다. 영호남 간의 응답율의 차이는 36.1%에 달한다. 이념 성향별로도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는데 진보 성향 집단에서는 36.0%가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응답한 반면, 중도 20.5%, 보수 16.1%의 상반된 응답 패턴을 보였다. 교육 수준별이나 가구 소득 수준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2) 대북 지원 축소의 주장 이유

대북 지원의 적정성에 대한 응답 가운데 지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에 대해 물었다. 과거와는 다소 다른 패턴의 응답이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제시한 이유는 대북 지원을 하더라도 그것이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47.9%에 달했다. 그러나 그 비율은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12%나 낮아진 것이다.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대북 지원이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주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21.0%였다. 이전에 비해 대체로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세

번째는 대북 지원이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응답율은 19.8%였다. 국내 정치적 이유를 거론한 응답 역시 이전 조사에 비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국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10.1%로 나타났는데, 2007년, 2008년 조사 결과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작년 조사와는 대체로 유사한 응답율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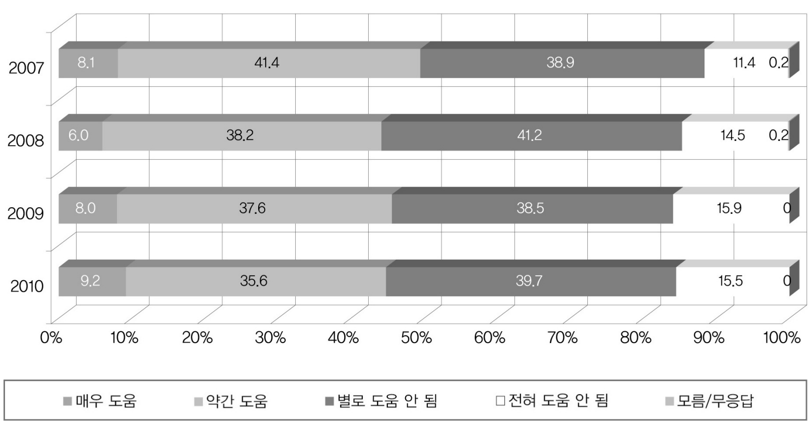
[그림 1-Ⅲ-4]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 중 우선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북 지원이 북한 정권을 유지해 주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 24.7%, 여성 17.2%, 국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남성 6.4%, 여성 13.8%로 각기 다른 응답율을 보였다. 정치 성향별로도 지원 축소를 주장하는 원인에 차이를 보이는데 지원된 물품이 국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보 48.2%, 중도 50.4%인 반면 보수 성향 집단은 42.8%로 차이를 보였으며, 국민 부담이 늘기 때문이라는 이유에 대해서는 진보 2.2%인 반면 중도 13.3%, 보수 13.4%

로 뚜렷한 입장의 차이를 보였다. 연령별, 교육수준별, 가구 소득 수준별로는 일관된 응답의 패턴이 확인되지 않았다.

3) 대북 지원의 효과성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해 물었다. 2010년 조사에서의 응답은 이전 조사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9.2%, 약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이 35.6%였으며, 이 두 항목을 합한 비율은 44.8%였다. 반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39.7% 그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15.5%로 이 둘을 합한 비율은 55.2%였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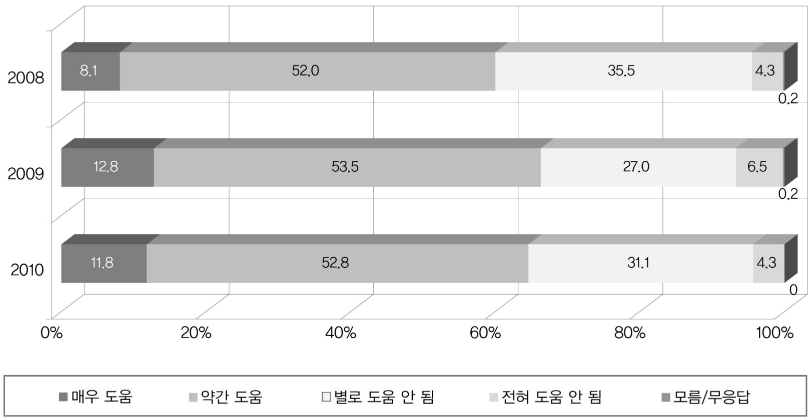


[그림 1-Ⅲ-5]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교육 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 집단 40.8%, 고졸 집단 42.3% 그리고 대재 이상 집단에서는 47.3%의 응답율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 62.2%로 가장 높은 긍정적 응답을 보였으며 영남은 35.2%로 가장 낮은 응답율을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 집단 51.1%, 중도 집단 43.6%, 그리고 보수 집단 37.6%로 나타나 이념 성향에 따른 상이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로는 일관된 패턴이 발견되지는 않지만, 40대 집단에서 49.8%가 가장 높게 긍정적 평가가 나온 반면 30대 집단에서 38.5%로 가장 낮은 응답율을 보인 것이 특기할 만하다.

4)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을 주는 정도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다. [그림 1-Ⅲ-6]에서 보듯이 매우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11.8%, 약간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52.8%로 이를 합하면 64.6%로, 전체 응답자 세 명 중 두 명은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응답은 31.1%, 그리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4.3%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다수의 응답자가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그 응답의 패턴은 2009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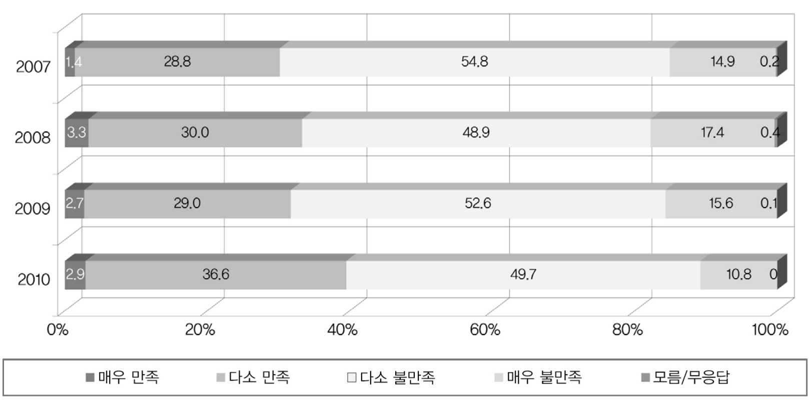
[그림 1-Ⅲ-6]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을 주는 정도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별로 살펴보면, 교육 수준별 인식의 차이가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났다. 중졸 이하 집단에서는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이 55.6%였지만, 고졸 집단에서는 63.1%, 그리고 대재 이상 집단에서는 67.2%로 높아졌다. 학력이 높을수록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높아졌다. 지역별로는 영남권에서 58.3%로 긍정적 비율이 낮았던 반면, 호남 지역은 77.3%로 가장 높은 긍정의 응답 비율을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도 차이가 확인되는데, 진보 성향 집단에서 긍정적 평가의 비율은 70.5%인 반면, 보수 성향 집단(63.2%), 중도 성향 집단(61.0%)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비율이 낮게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 집단(66.2%)에서 긍정의 비율이 여성 집단(62.7%)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그다지 크지 않았다. 연령별로는 19~29세(62.7%), 30대(63.8%) 등 젊은층에서 긍정적 평가가 낮은 반면, 40대(66.6%), 50대 이상(65.5%)에서는 그 크기가 크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4.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

1)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전 조사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는 견해가 2.9%에 불과했으며 다소 만족한다는 응답도 36.6%였다. 전체 응답자의 39.5%만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대체로 만족감을 표시한 것이다. 이에 비해 다소 불만족이라는 응답은 49.7%로 가장 높았고 매우 불만족이라는 응답도 10.8%였다. 응답자 중 60.5%가 정부의 대북 정책에 불만을 표시했다. 다만 2010년 조사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이전 조사에 비해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다소나마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2009년 조사와 비교할 때 금년 조사에서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모두 7.8% 늘어났다. 이러한 변화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남북한 간의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현 정부의 강경대응에 공감한 응답자가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체적인 패턴에서는 이전 조사와 커다란 변화를 보이지는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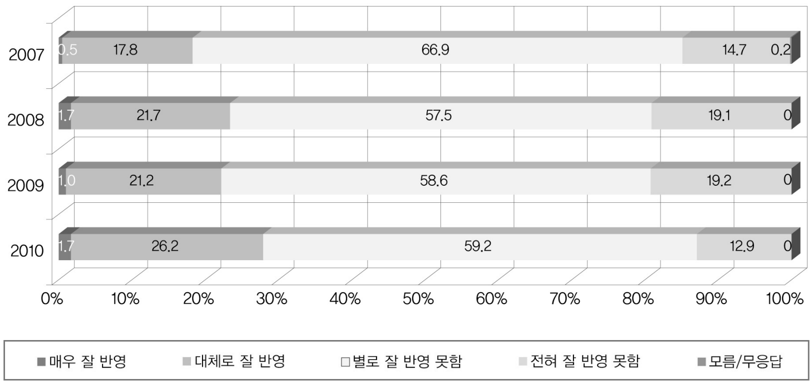
[그림 1-Ⅲ-7]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별로 보면, 남성(37.3%)에 비해 여성(41.7%)이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40대의 만족도는 36~38% 수준임에 비해서 50대 이상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47.2%였다. 연령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교육 수준별로 학력이 높을수록 만족도가 낮아졌는데, 중졸 이하 집단의 만족도는 46.3%, 고졸 41.5% 그리고 대재 이상은 36.9%로 나타났다. 소득별로는 399 만원 이하 집단이 대체로 40~42% 수준의 만족도를 보이는 반면 400 만원 이상 고소득 집단에서 정부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36.7%로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도 극명한 만족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영남에서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51.9%인 반면, 호남에서 그 비율은 18.5%였다. 특히 호남 지역에서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의 비율은 전무했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35.4%), 중도 성향(38.1%)의 만족도가 유사하게 낮은 편이었으며, 이와 대조적으로 보수 성향 집단의 만족도는 48.7%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2) 대북 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

대북 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는 대북 정책의 만족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림 1-Ⅲ-8]에서 보는 것처럼 현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율은 대단히 낮다. 국민의 의견을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1.7%였으며,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는 응답은 26.2%였다. 이 둘을 합쳐도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응답은 28%에 불과하다. 이에 비해 응답자의 72%는 국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전 조사에 비해서는 미미한 차이지만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의견이 2010년 조사에서는 높아졌다는 점은 지적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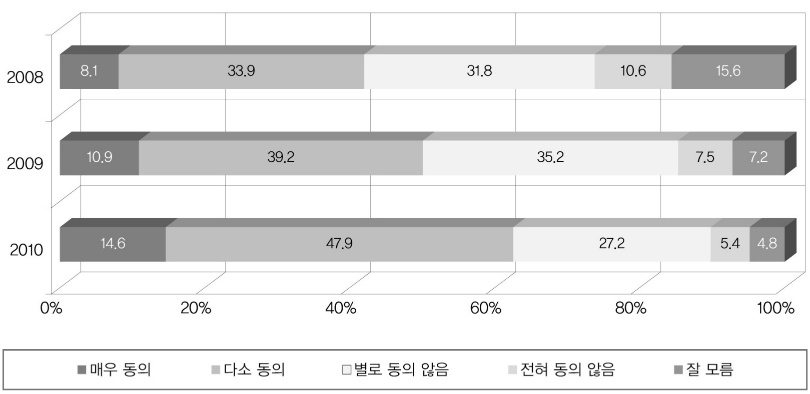


[그림 1-Ⅲ-8] 대북 정책에 국민 의견이 반영되는 정도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별로 보면, 연령별로는 20~40대에서는 대북 정책에 국민의 의견이 반영된다는 비율이 24~27% 수준인데 비해 50대 이상 집단에서는 그 비율이 34.8%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게 나타났다. 교육 수준별로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긍정적 응답의 비율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중졸 이하 집단에서 국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응답은 35.8%였는데, 고졸 집단에서는 29.5%로 낮아졌고 대재 이상 집단에서는 25.5%로 더욱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호남권에서 가장 낮은 긍정적 응답이 나타났는데 국민 의사를 반영한다는 응답율이 13.4%였지만 영남권에서는 35.8%로 매우 상반된 평가를 보였다. 이념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25.2%)과 중도 성향(25.5%) 집단이 유사하게 낮은 긍정적 평가를 내린 반면 보수 성향 집단은 37.2%로 긍정적 평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편, 남북한 간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

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그림 1-Ⅲ-9]에 정리되어 있다. 정부 교체에도 남북한 간 합의 사항이 준수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매우 동의한다는 비율은 14.6%, 다소 동의한다는 응답은 47.9%였다. 이 둘을 합하면 62.6%로 전체 응답자의 거의 2/3가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흥미로운 점은 남북한 간 합의 사항이 계승되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한 동의가 2008년 이후 꾸준히 그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2008년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42%였지만, 2009년에는 그 비율이 50.1%로 늘어났는데 2010년 조사에서는 62.6%로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났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군사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이 오히려 남북한 간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고조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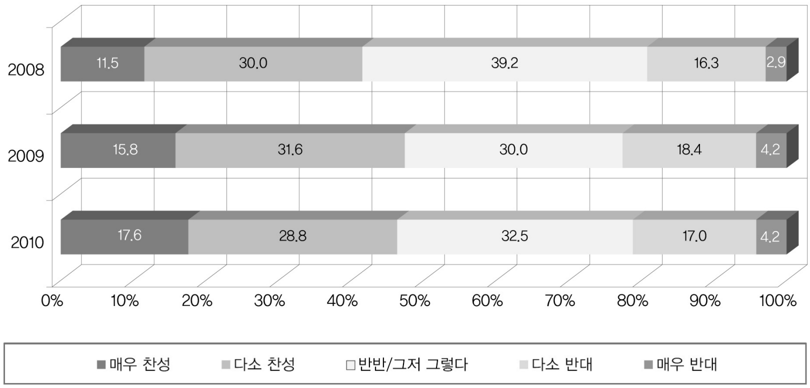
[그림 1-Ⅲ-9]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견해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별로 보면, 우선 연령별로는 젊은 세대에서의 낮은 동의의 비율이 눈길을 끈다. 30대 이상 연령 집단에서 합의 사항

계승에 동의한다는 비율은 64~66% 수준인데, 19~29세 집단에서 그 비율은 55.1%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정치 성향에 따른 차이도 확인되는데, 진보 성향 집단에서 합의 사항 계승에 동의하는 비율은 68.8%로 매우 높았는데 반면, 중도 성향 집단(58.5%)과 보수 성향 집단(61.6%)에서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그러나 어떤 하위집단의 경우라도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해 과반 이상의 긍정적 응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 지역별로 보면 호남에서 긍정적 응답은 68.1%인데, 영남에서 그 비율은 66.9%로 나타나 이 사안에 관한 한 지역별 편차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 성별, 가구 소득별로는 그다지 분명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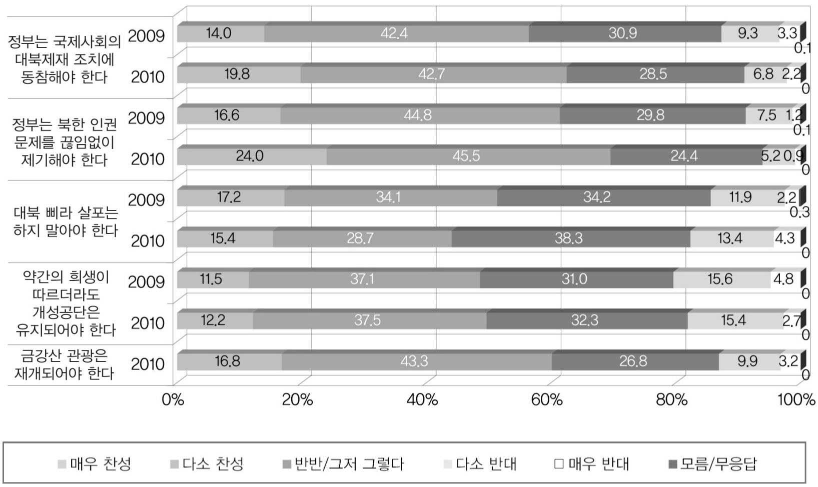
3)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한 응답은 2010년 조사의 경우에는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조사 시점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대북 제재 조치를 강구하는 등 남북한 관계가 더욱 경색되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1-Ⅲ-10]에서 보듯이 북핵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대북 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17.6%, 다소 찬성한다는 응답이 28.8%, 그리고 분명한 입장 표명을 유보한 응답이 32.5%, 다소 반대한다는 응답은 17.0%, 매우 반대한다는 응답은 4.2%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보면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 지원을 연계하는 것에 대한 응답이 46.4%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응답 패턴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있었던 2009년 조사 결과와 대체로 유사한 것이다.



[그림 1-Ⅲ-10]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 지원 연계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별로 보면, 여성 중에서 북핵 문제와 대북 지원 연계에 찬성하는 응답이 49.3%인데 비해 남성 집단에서 그 비율은 43.5%로 그러한 연계에 대한 찬성 비율이 낮았다. 교육 수준별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둘의 연계 정책에 대한 찬성 비율이 낮아지는 패턴을 보였다. 중졸 이하 집단에 연계 정책에 찬성하는 비율이 55.5%인데 비해, 고졸 집단에서 그 비율은 50.7%로 낮아지고 대재 이상 집단에서는 41.7%로 큰 폭으로 떨어졌다. 지역별로는 다른 지역이 대체로 유사한 응답율을 보이는데 비해 호남에서는 37.8%로 유독 낮은 찬성의 비율을 보였다. 정치 성향별로는 진보 성향(45.5%)과 중도 성향(45.2%) 집단에서 찬성의 비율이 낮은 반면, 보수 집단에서 그 비율은 50.2%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림 1-Ⅲ-11]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한 의견

한편, 향후 대북 정책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방안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결과가 [그림 1-Ⅲ-11]이다. 개성공단 유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12.2%는 매우 찬성한다고, 37.5%는 다소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전체 응답자의 49.7%가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 유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비해 개성공단 유지에 반대한다는 비율은 18.1%에 그쳤다. 다소 반대한다는 응답이 15.4%, 매우 반대한다는 의견이 2.7%였다. 그러나 유보적인 견해도 32.3%에 달해 상황적 요인이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전반적인 응답의 패턴은 2009년과 2010년 조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다.

2010년 조사에서는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 대해서도 처음으로 질문했다. 금강산 관광 재개에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16.8%, 다소 찬성한다는 의견이 43.3%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 중 61.1%가 금강산 관광 재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개성공단 유지보다 더 높은 찬성의

비율을 보였다. 이에 비해 금강산 관광 재개에 반대한다는 의견은 다소 반대 9.9%, 매우 반대 3.2%로 모두 13.1%였다. 금강산 관광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재개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이 남북 협력 사업의 속성을 갖는다면 [그림 1-Ⅲ-11]의 나머지 세 질문은 공세적인 대북 정책을 대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대북 삐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데 대해서는 15.4%가 매우 찬성한다고 했고 28.7%는 다소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 둘을 합하면 44.1%가 대북 삐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이에 반대하는 의견은 다소 반대가 13.4%, 절대 반대가 4.3%로 이를 합하면 17.7%가 된다. 대북 삐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는 견해가 우세하지만 유보적 견해가 38.3%에 달해 이 역시 상황적 요인이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조사와 비교하면 대북 삐라 살포를 막아야 한다는 견해가 51.3%였음을 감안할 때 이 사안에 대한 여론은 다소 유보적이거나 보수적인 형태로 변화했음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는 데 대한 견해를 살펴보았다. 이에 대해 매우 찬성한다는 의견이 24.0%, 다소 찬성한다는 의견이 45.5%로 전체적으로 69.5%의 응답자가 찬성의 의견을 밝혔다. 반대한다는 견해는 모두 6.1%에 불과했다. 그런데 2009년 조사에서 찬성의 비율이 61.4%였음을 감안할 때 2010년 조사 결과는 대북 인권 문제를 거론해야 한다는 데 대한 우리 국민의 견해가 보다 분명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매우 찬성'이라는 강한 응답이 2009년 16.6%에서 24.0%로 크게 늘어났다는 점이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앞의 [그림 1-Ⅲ-2]에서 본 대로 통일을 위해 북한 인권 개선이 시급하다는

응답이 2010년 조사에서 증가한 것과 유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부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 이에 매우 찬성한다는 응답이 19.8%, 다소 찬성한다는 응답이 42.7%로 나타났는데, 이를 합하면 모두 62.5%의 응답자가 찬성의 견해를 밝혔다. 이에 반대한다는 응답은 모두 합쳐 9%에 불과했다. 2009년 조사에서 대북 제재 조치 동참에 대한 찬성 의견이 56.4%였음을 고려할 때, 2010년 조사에서 찬성의 비율이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하면, 개성공단 사업 유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대북 삐라 살포, 북한 인권 문제 제기, 국제사회 대북 제재 조치 동참 등 공세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2009년 조사보다 늘어났다고 정리할 수 있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공세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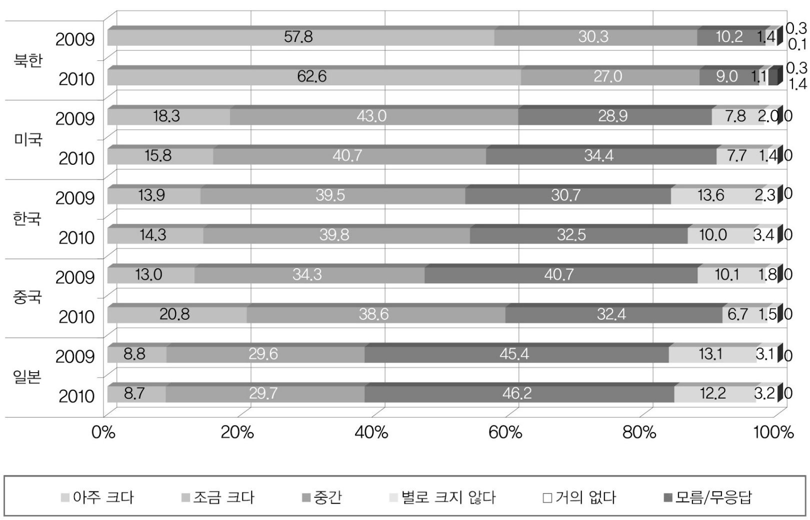
4)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남북한 관계는 조사 시점을 전후하여 크게 악화되었다. 그렇다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조사했다. 우선 북한에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모두 89.6%였다. 거의 대다수가 북한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북한의 책임이 '아주 크다'는 응답은 62.6%에 달했다. 반면 북한에 책임이 없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유보적 의견도 9% 정도였다. 2009년 조사보다 북한 책임을 지적한 응답의 비율이 조금 늘어났지만 전반적으로는 두 조사 결과에 커다란 차이는 없었다. 천안함 사건이 2010년에 터졌지만 2009년에도 핵실험 등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미국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모두 56.5%였다. 그 책임이 아주 크다는 응답이 15.8%, 조금 크다는 응답이 40.7%였다. 미국 측의 책임이 없다는 응답은 모두 합쳐 9.1%였다. 그러나 2009년과 비교하면, 미국의 책임을 지적한 비율이 61.3%에서 56.5%로 줄어들었고, 중간이라는 유보적 견해가 28.9%에서 34.4%로 늘어났다는 점이 특기할 만한 일이다.

한국이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모두 54.1%였다. 한국의 책임이 없다는 응답은 13.4%에 불과하며 유보적인 입장 표명이 32.5%였다. 2009년 조사와 비교할 때 큰 변화가 확인되지는 않는다.



[그림 1-Ⅲ-12]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이 중국에 있다는 응답은 모두 59.4%였다. 반면 중국의 책임이 없다는 응답은 8.2%였다. 흥미로운 것은 2009년 조사

와 비교할 때, 중국의 책임을 거론한 응답율이 크게 상승했다는 점이다. 2009년 조사에서 47.3%가 중국의 책임을 거론한 것과 비교하면 2010년 조사에서 그 비율이 크게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유보적 입장은 40.7%에서 32.4%로 줄었고, 책임이 없다는 응답도 11.9%에서 8.2%로 줄어들었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UN에서의 처리과정을 보면서 중국의 태도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응답은 모두 38.4%였다. 그러나 책임이 없다는 응답은 15.4%에 그쳤다. 절반에 가까운 46.2%가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러한 응답은 지금 전개되고 있는 남북한 간 관계 악화에 일본이 직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아니지만 언제라도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인 응답의 패턴은 2009년 조사와 대동소이하다.

전체적으로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을 거론한 비율을 국가별로 보면, 북한(89.6%)이 압도적으로 높고 그 다음이 중국(59.4%), 미국(56.5%), 한국(54.1%), 일본(38.4%)의 순이었다. 2009년 조사에서는 북한-미국-한국-중국-일본 순이었음을 고려하면 중국이 현재의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인식이 크게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별로 보면 북한의 책임을 거론한 비율은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더 높게 나타났지만 이념 성향에 따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의 책임을 거론한 비율은 이념 성향이 진보적일수록 높고 중도, 보수 성향 집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또한 학력이 높아질수록 한국의 책임을 거론한 비율이 높았다. 또한 한국의 책임에 대한 시각 차이는 영남과 호남 사이에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5. 소결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남북관계가 대단히 경색된 국면이었지만 국민들은 대북정책에 대해 비교적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우선 이번 조사가 천안함 사건과 같은 군사적 충돌과 뒤이은 긴장 고조의 상황을 경험한 이후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군사적 긴장 해소의 시급함에 대한 높은 응답이 확인되었다. 전체적으로 83.6%가 군사적 긴장 해소가 통일을 위해 시급한 일이라고 응답했다.

둘째, 군사적 긴장 고조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경제협력이나 대북지원, 남북 간 회담과 같은 교류 협력에 대한 필요성 또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 국민들은 여전히 남북한 경제 협력이 통일을 위해 긍정적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북 지원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이 작년 조사보다 높게 나타났다.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공단 유지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도 높았다.

셋째, 개성공단 사업 유지,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남북협력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대북 삐라 살포, 북한 인권 문제 제기, 국제사회 대북 제재 조치 동참 등 공세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필요성은 이전 조사보다 높아졌다.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공세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공감대가 커졌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금년 조사에서 크게 높아진 것이 특히 주목할 만하다. 특히 대북 정책에 상대적으로 호의적 태도를 보인 40대에서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도 특기할 만하다.

넷째, 천안함 사건과 뒤이은 정부 대응을 보면서 중국에 대한 불만이 커졌다는 사실도 이번 조사 결과 나타난 흥미로운 점이다. 중국이 남북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이 크다는 응답이 이전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이상에서 보듯이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긴장감이 대북 정책에 대한

국민의 평가에 영향을 미친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대북정책의 방향이 교류협력 중단이나 경색된 국면의 지속과 같은 강경한 대책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도 이번 조사에서 비교적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Ⅳ.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북한이탈주민 입국 2만 명 시대를 맞아 그들과 어떻게 더불어 살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 남북한 통합시대를 열어가야 하는 우리의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이 낯선 이주자로서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정착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만 머물 수 없게 한다. 북한에서 남한이라는 분단의 공간을 가로질러 우리 곁에 다가온 북한이탈주민의 경험은 남북한 통합과정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며, 어떠한 대비가 필요한지를 예견하기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논의가 그들의 현재적 정착과 남한 내 사회 통합을 넘어 남북한 통합과정까지를 포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글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인식의 함의도 현재 북한이탈주민이 직면하게 될 남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만으로 국한되지는 않을 것이다. 향후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더욱 늘어날 경우 더 많은 북한이탈주민이 경험할 남한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이기도 하

며, 나아가 남북한 통합과정에서의 북한 사람들의 경험이 되기도 할 것이다. 또한 남한 사람들에 대한 의식과 태도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날 북한 사람들의 의식과 태도를 추정할 수 있는 자료로써 기능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어떠한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변화와 지속을 보이고 있을까. 본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인식을 2010년 현재뿐 아니라 2007년도부터 시작된 국민의식조사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해 국민의식의 지속과 변화를 추적하고, 미래의 향방을 예측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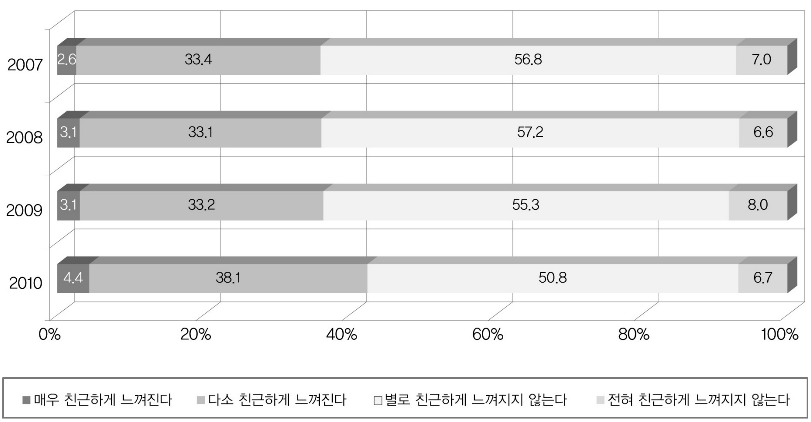
본 글에서 다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은 총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즉,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동네 이웃, 직장동료, 사업 동업자, 결혼상대자),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지원, 북한이탈주민(새터민)가 취업에 미치는 영향과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경쟁 등을 조사하였다.

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소폭의 상승세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57.5%로 나타났고, 친근하게 느껴진다는 응답은 42.5%였다. 이는 2007~2009년도와 비교할 때 약간씩 상승률을 보이는 것이다.

응답자별 응답 분포의 차이가 두드러지는 것은 지역과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것이다. 우선 지역별로는 친근하다는 응답이 제주, 수도권, 중부권에서 각기 53.8%, 47.3%, 47.5%였으나 영남권은 32.1%로 앞선 세 지

역 보다 20% 이상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도 응답 분포의 차이가 눈에 띄는데, 진보 성향의 응답자는 50.4%가 친근감을 느낀다고 하였으나 중도, 보수 성향의 응답자는 각기 38.1%, 39.6%로 진보 성향 응답자에 비해 약 10% 가량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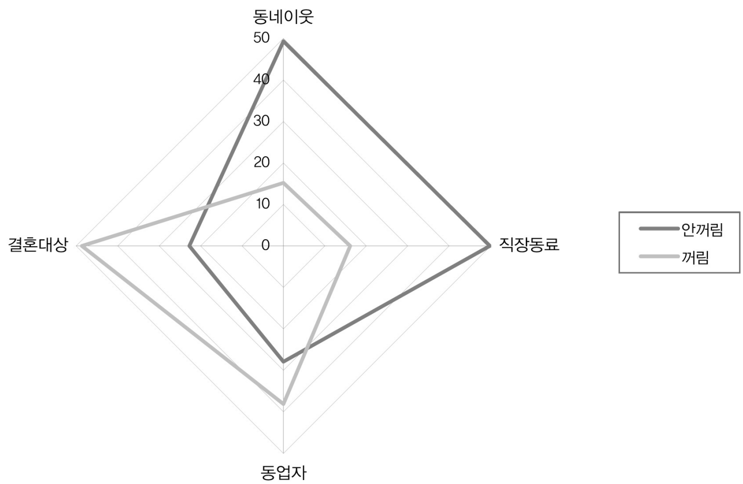


[그림 1-Ⅳ-1]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추이

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꺼리지 않는 '동네이웃, 직장동료' vs. 꺼리는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를 묻는 질문에서 동네이웃, 직장동료로서 관계가 꺼려진다는 응답이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월등히 많았다. 이에 반해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로서 관계 맺기는 꺼린다는 응답이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동네이웃, 직장동료로 관계 맺기에 대해서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과반수 가까이 차지하면서, 매년 상승세이나 사업동업자와 결혼상대자로서는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30%에 못 미치면서 매년 비슷한 인식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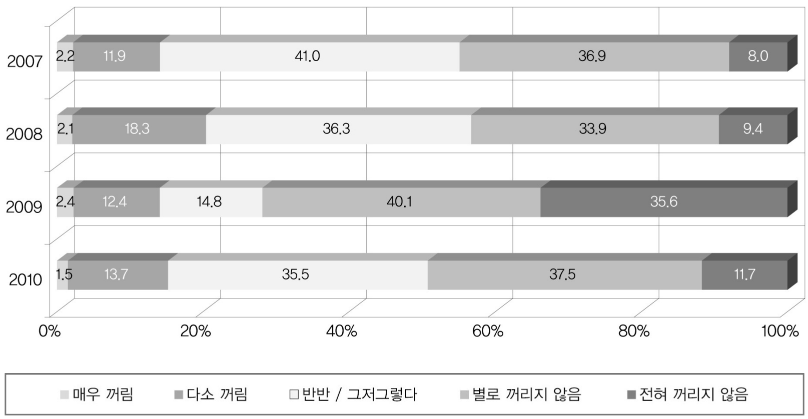
[그림 1-Ⅳ-2]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종합)

1) 동네 이웃

북한이탈주민들과 동네이웃으로서의 관계가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49.3%로 과반수 가까이 나타났으며, 꺼린다는 응답은 15.2%에 그쳤다. 그저 그렇다는 응답도 35.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별로는 교육, 직업, 가구소득수준, 지역에 따라 응답률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다. 특히, 직업과 지역별 차이가 두드러지는데, 교육 수준별로도 중졸 이하와 대재 이상의 응답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중졸 이하와 대재 이상의 응답 차이가 7%가량 나타나고 있는데, 중졸 이하의 경우 꺼린다는 응답이 20.9%, 대재 이상은 13.4%에 그쳤다. 직업별로는 꺼린다는 응답이 농수축산업 종사자에게서 가장 높게 나타

났다.(34.9%) 그 외에 자영업자, 블루칼라는 각기 10.3%, 11.9%로 농수축산업 종사자와 20% 이상의 응답률 차이를 보였다.



[그림 1-Ⅳ-3]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동네 이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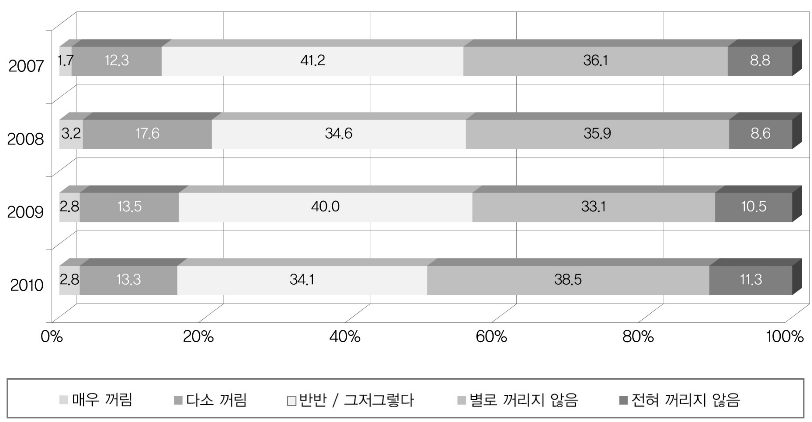
2) 직장 동료

북한이탈주민과 직장 동료로서의 관계가 꺼려지지 않는다는 응답이 49.8%로 과반수 가까이 이르렀으며, 꺼린다는 응답은 16.1%에 머물렀다. 이러한 결과는 2007년 이후 매년 조사결과에서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서의 관계에 대한 태도에서는 교육, 직업, 가구소득수준, 지역에 따른 견해차가 두드러졌다.

우선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가 꺼린다는 응답이 24.5%로 평균(16.1%)을 10% 가까이 상회하였으며, 대재 이상은 13.2%만이 꺼린다는 응답을 보여 평균치를 밑돌았다. 직업별로는 농수축산업 종사자가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서의 관계가 꺼려진다는 응답이 37.6%로 여타 직업 종사자들이 12~18% 사이의 응답률을 보인 것과 차이를 보였

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200 만원 미만과 400 만원 이상의 응답차가 눈에 띈다. 200 만원 미만 응답자의 경우 꺼린다는 응답이 22.6%인데, 400 만원 이상 응답자는 12.4%로 200 만원 미만 응답자들이 10% 가량 더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도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서 관계 맺기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두드러졌는데, 관계 맺기를 꺼린다는 응답이 영남, 강원에서 각각 25.5%, 27.8%로 여타 지역이 10% 내외의 응답률에 머문 것과 차이를 보였다.



[그림 1-Ⅳ-4]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직장동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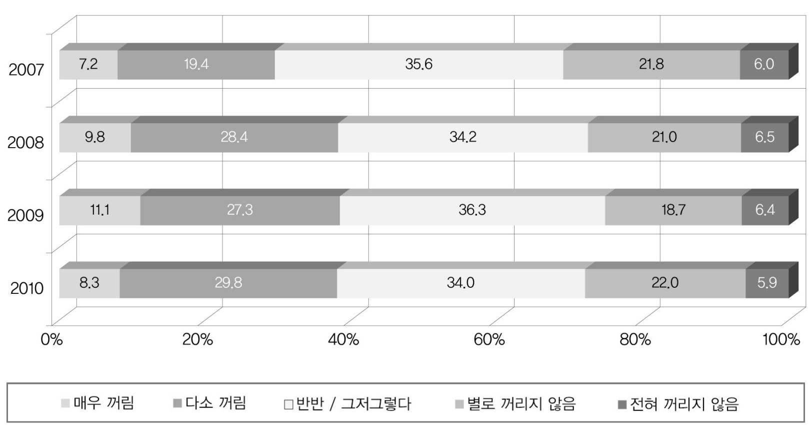
3) 사업 동업자

북한이탈주민과 사업동업자로서의 관계가 꺼려진다는 응답을 38.1%로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 27.9%에 비해 10%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앞서 보았던 동네 이웃, 직장 동료로서의 관계 맺기에서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이 꺼린다는 응답보다 높게 나타난 것과 대조적이다.

다음에서 살펴볼 결혼상대자로서의 관계 맺기에서도 사업동업자와의 관계 맺기에 대한 의견 분포와 유사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사업 동업자로서 관계 맺기를 꺼린다는 응답은 교육수준별, 직업별, 가구소득수준, 정치적 성향에 의한 차이가 두드러졌다. 교육수준별로는 중졸 이하와 대재 이상의 차이가, 직업별로는 농수축산업과 여타 직업 간 차이가 두드러졌다. 가구소득수준별 견해 차이는 앞서 보았던 동네 이웃, 직장동료로서의 관계 맺기를 꺼리는 응답이 200 만원 이하에서 가장 높았고, 400 만원 이상 소득 가구가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이는 것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200 만원 미만, 200~299 만원 사이의 소득자들은 사업동업자로서의 관계가 꺼려진다는 응답이 각각 42.2%, 42.8%이나 400 만원 이상의 경우 33.0%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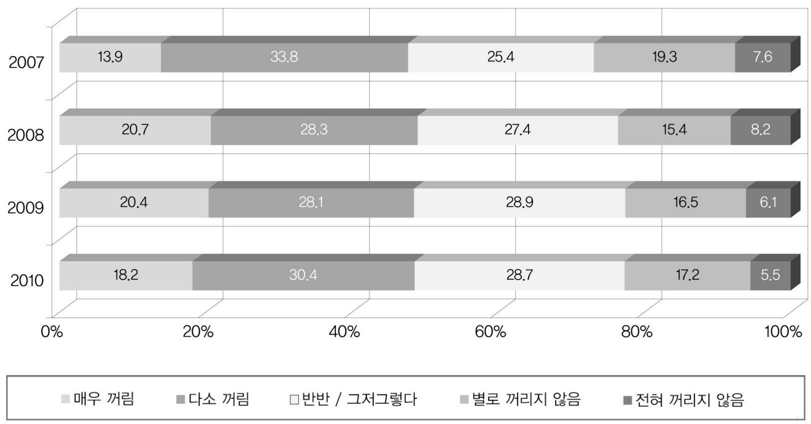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견해차이가 두드러진다는 점도 특징적인데, 보수 성향이라는 응답자가 사업동업자로서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를 꺼린다는 응답이 47%로 진보적 성향 응답자일 경우 32.6%에 머무는 것과 대비된다.



[그림 1-Ⅳ-5]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사업동업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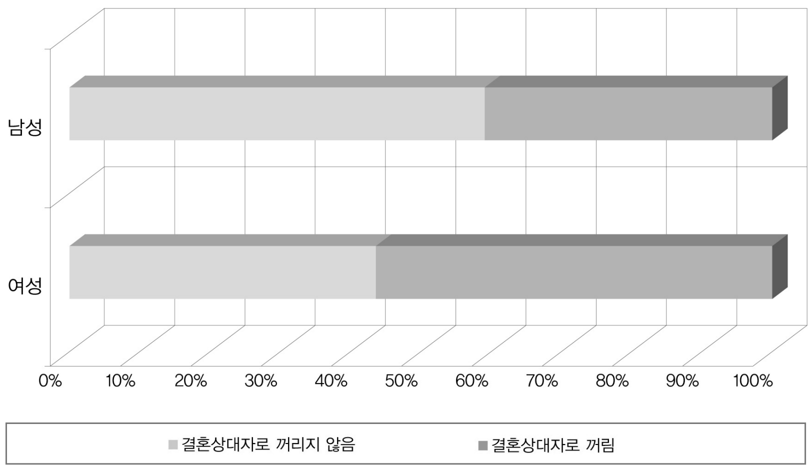
4) 결혼상대자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맺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꺼린다는 응답이 48.6%로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하였으며, 그저그렇다는 응답은 28.7%, 꺼리지 않는다는 응답은 22.7%였다.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맺기에 대한 견해는 2007~2009년도와 비교할 때 별다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그림 1-Ⅳ-6]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결혼상대자 (1)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 맺기에 대한 응답률 차이는 성별, 직업별, 연령대별 차이를 볼 수 있는데, 특히 성별 견해차가 두드러진다. 즉, 결혼상대자로 관계 맺는 것이 꺼려진다는 응답이 남성은 40.9%인 것에 비해 여성은 56.4%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을 꺼려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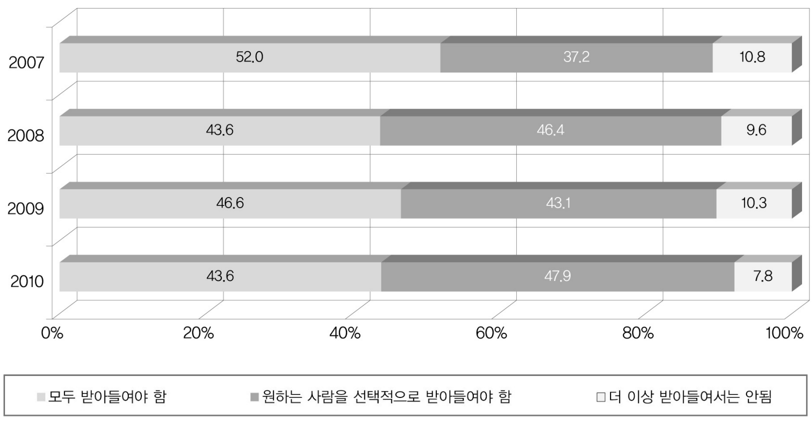


[그림 1-Ⅳ-7]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 – 결혼상대자 (2)

3.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모두' 수용에서 '선택적' 수용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북한이탈주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에서 '원하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47.9%로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 43.6%를 앞섰다. 이는 2007, 2009년 조사결과에서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선택적' 수용을 앞선 것에서 변화된 것이다. 즉,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해 2007년에는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견해가 52%로 원하는 사람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 37.2%를 10% 이상 앞섰으나 매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0년 조사결과에서는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43.6%)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응답(47.9%)을 추월하게 되었다. 매해

조사결과에서 양 견해의 응답률 폭이 줄어들면서 2010년에는 ‘선택적’ 수용이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앞서게 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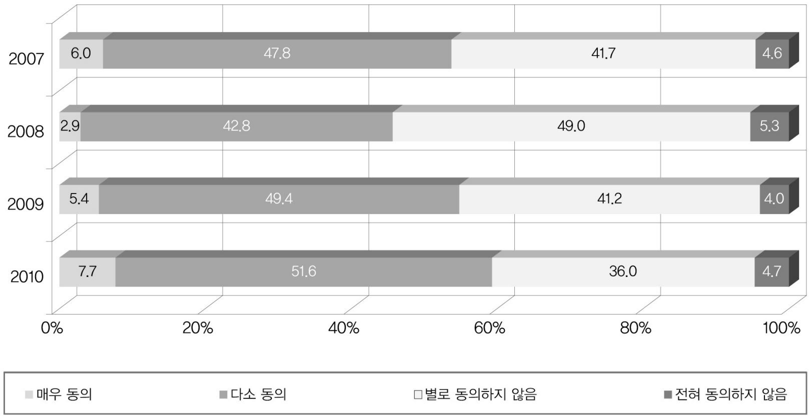


[그림 1-Ⅳ-8]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한 견해 추이

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 지위 및 정책에 대한 태도

1)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 응답자 성향에 따른 폭넓은 견해 차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 긍정적인 응답은 전체의 59.3%로 과반수를 차지하였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0.7%로 나타났다.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작년 조사결과에 비해 5% 가량 상승한 것으로 2007년 53.8%를 기록한 이래, 2008년 45.7%로 하강하다 2009년, 2010년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림 1-Ⅳ-9]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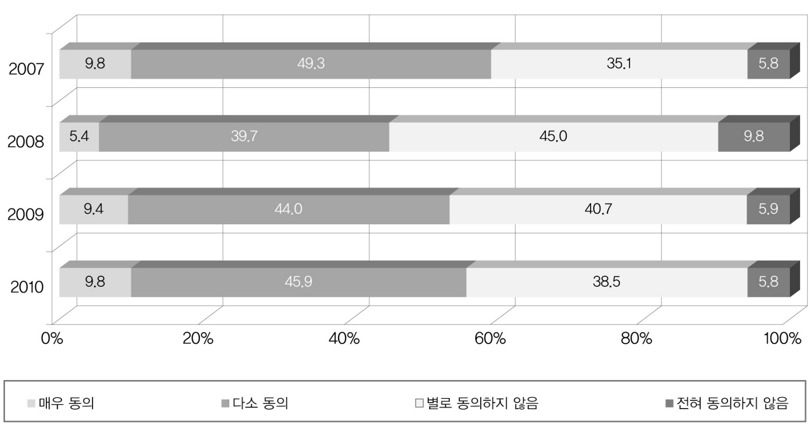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들이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데에는 교육수준별, 직업별, 지역별, 정치성향별 견해 차가 두드러진다. 북한이탈주민의 역할 인식에 대한 차이는 응답자의 정치사회적 성격에 따라 견해 차가 폭넓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교육수준별로는 대재 이상의 동의율이 62%로 다른 응답자에 비해 가장 높았고 중졸 이하는 48.1%에 머물렀다. 직업별로 보면 자영업, 블루칼라, 화이트 칼라는 동의한다는 비율이 각기 61%, 64%, 61.9%로 모두 60%대를 상회하였으나, 농수축산업, 전업주부는 각기 43.2%, 53.9%로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지역별로도 견해차가 컸는데,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제주가 각기 62.5%, 71.2%, 67.2%, 61.5%로 모두 60%대를 상회한 것과 대비해 영남권, 강원은 각각 46.9%, 52.8%에 머물렀다. 정치적 성향별로는 진보적이라는 응답자의 동의 비율이 69.4%로 중도 55.2%, 보수 52.5% 보다 10%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2) 정부의 북한이탈주민(새터민) 지원

정부가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데에는 전체의 55.7%가 동의하고 있어 반대 의견 44.3%에 비해서 10% 이상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작년에 비해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상승세를 보인 것으로 2008년도에 지원해야 한다는 응답이 2007년도 대비 10% 이상 낮아진 것에서 2009년 다시 반등, 2010년까지 상승세로 이어져온 것이다. 이와 같은 추세는 앞서 보았던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인가라는 질문과 같은 양상이다. 즉, 2007년 응답 수준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인데, 2008년도의 경우 북한이탈주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과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에 대해 동반 하락세를 보였으나 2009, 2010년 점차 상승세로 이어져 2007년도 수준에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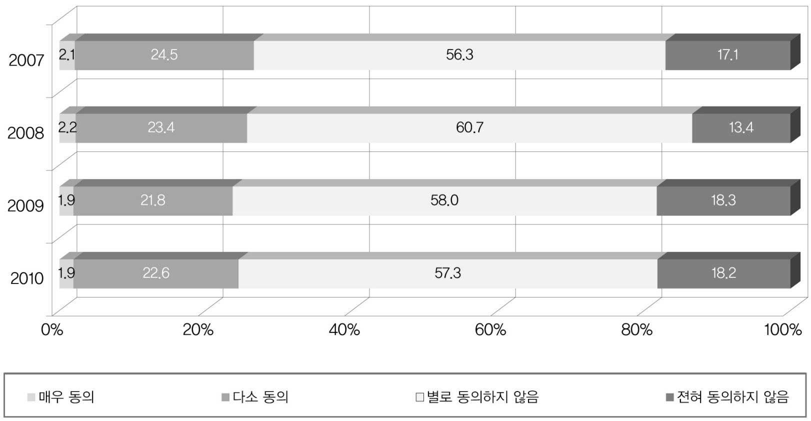
[그림 1-Ⅳ-10]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견해 추이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견해에서는 가구소득수준과 지역별, 정치적 성향에 따른 견해차를 눈여겨 볼만하다. 가구소득수준별로는 200 만원 이하와 400 만원 이상인 응답자가 200~299 만원, 300~399 만원이라는 응답자에 비해 동의 비율이 더 높았다. 오히려 저소득층이나 고소득층에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더 많았고, 중간소득층에서 지원의 필요성을 덜 공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으나 최근 중산층의 사회경제적 불안정성 확산이 반영된 결과로도 풀이될 수 있겠다.

지역별로는 지지원의 필요성 동의 비율이 영남, 강원이 각기 36.9%, 44.4%로 다른 지역 동의 비율이 60%대 이상인 것에 못미치고 있어, 영남, 강원 지역이 상대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치적 성향별로도 차이가 나타나는데, 진보적 성향일 경우 63.4%, 중도, 보수는 각각 51.8%, 52.5%로 동의 비율이 진보에 비해 10% 이상 낮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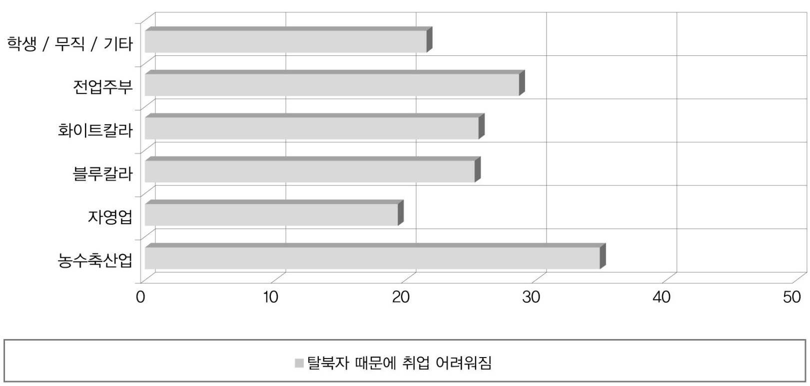
3)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영향 크지 않다는 견해 우세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데에 동의하는 견해는 전체의 24.5%였으며, 동의하지 않는 비율은 75.5%로 압도적 우위를 보였다. 이러한 추세는 2007년도 이후 별다른 변동폭 없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데에 동의하는 견해는 2007~2009년도와 비교할 때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1-Ⅳ-11]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취업 어려움 (1)

본 질문에 대해서는 지역별, 직업별 견해 차가 눈에 띈다. 직업별로는 북한이탈주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진다는 비율이 농수축산업 종사자가 34.9%로 가장 높았고, 다음이 전업주부 28.7%,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각각 25.6%, 25.3%였으며, 자영업자와 학생/무직/기타인 경우 각각 19.4%, 21.6%로 나타났다. 본 내용은 아래 그림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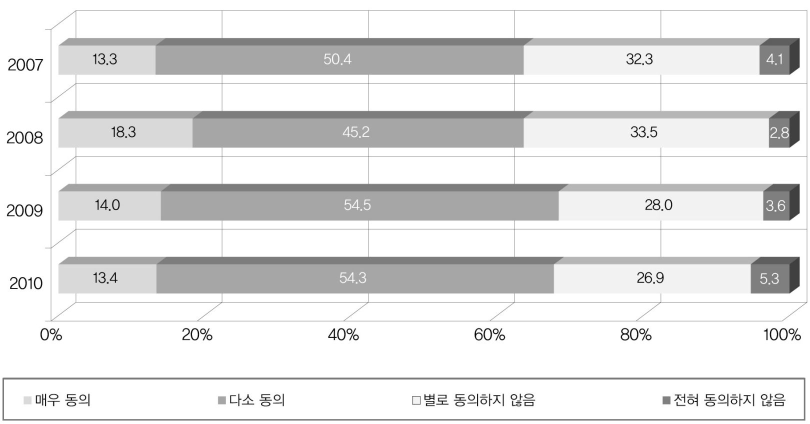


[그림 1-Ⅳ-12]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취업 어려움 (2)

지역별로는 강원, 영남권이 각각 30.6%, 26.9%로 다른 지역에 비해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이 높았고, 중부권, 제주, 수도권, 호남권이 각각 20.8%, 15.4%, 23.7%, 24.4%였다.

4) 북한이탈주민들의 경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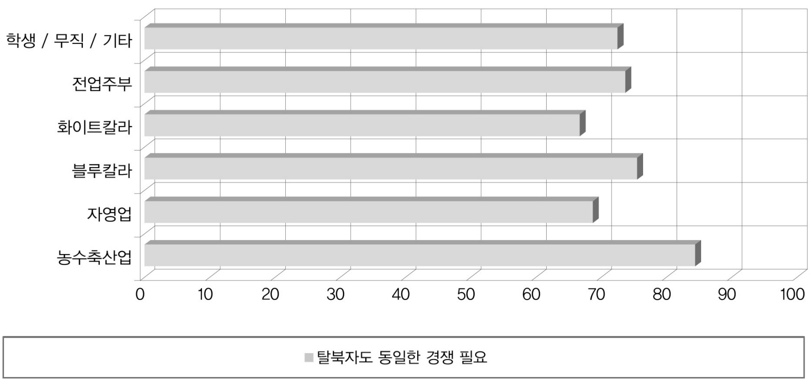
한국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데에 전체적으로 67.8%가 긍정적으로 답했으며,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2.2%에 그쳤다. 북한이탈주민들도 조직 내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는 견해는 2007~2009년도 응답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은 채 유지되고 있다.



[그림 1-Ⅳ-13] 북한이탈주민의 조직내 경쟁에 대한 견해 (1)

본 질문에 대해서는 직업별 견해 차가 가장 두드러진다고 볼 수 있는데, 북한이탈주민도 조직내에서 동일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데에 농수축산업 종사자 찬성률이 84.4%로 다른 직업 종사자에 비해 가장 많은

찬성률을 보였다. 그 외 직종은 60~70% 사이의 응답률 분포를 나타냈다.



[그림 1-Ⅳ-14] 북한이탈주민의 조직내 경쟁에 대한 견해 (2)

5. 소결

이상의 분석 결과를 우세한 응답률 분포 답항을 중심으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즉, '북한이탈주민이 친근하지 않으며, '동네이웃, 직장동료'로서는 꺼려지지 않으나,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로서는 꺼려진다. 북한이탈주민 수용은 '선택적'으로 해야 하되 아직까지 취업에 있어 경쟁자는 아니며,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 북한이탈주민들은 남북한간 이질화 해소에 기여하며, 조직내 동일한 경쟁을 해야 하나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세한 답항을 중심으로 국민의식을 몇문장으로 표현해 보는 것도 주된 의식의 흐름을 파악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매년 시계열적 의식의 변화와 지속을 점검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시계

열적 의식의 변화와 지속을 정리하는 것은 과거를 통해 미래의 불확실한 상황을 예측하게 하며, 대비할 수 있는 자료로써 기능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 때문이다.

우선, 매년 상승세를 보이는 응답을 살펴보기로 하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인식에 대해서 현재 친근하다는 응답 보다 친근하지 않다(57.5%)는 응답률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친근하다는 응답이 친근하지 않다는 응답에 비해 열세이나 친근하다는 응답이 매년 소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대해서는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가 '모두' 수용해야 한다는 견해에 비해 높은 응답률을 보였는데, 지난 조사들에서 '모두' 수용이 우세했다면, 2010년도에는 '선택적' 수용의 우세로 돌아서고 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 의견과 남북한간 이질화 해소에 북한이탈주민이 기여한다는 인식도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매년 비슷한 응답률로 고착화되는 답변을 보면,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유형별 태도에서 꺼려지지 않는 '동네이웃, 직장동료' vs. 꺼려지는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라는 인식이다. 또한, 북한이탈주민들이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하는 가에 대해서도 동의 비율이 70% 가까이 나타나고 있는데, 매년 비슷한 양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이상의 상승세, 고착화되는 문항별 응답률을 토대로 하면 다음과 같은 예측이 가능해진다. 즉, 북한이탈주민의 입국이 2만 명에 달하며, 매년 늘어나는 가운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우리 국민의 친근감은 더욱 커져 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모두' 수용에서 '선택적' 수용으로의 선회와 '사업동업자, 결혼상대자'로서 관계 형성에 대한 '거리두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즉, 북한이

탈주민에 대한 국민인식이 '친근감'에서 한층 나아간 거리 좁히기로 이어지기에 경계선이 뚜렷하다는 것이며, 쉽게 지워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지리적 분단이 사회심리적 분단으로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인식의 경계 극복이 주요한 과제가 될 것임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인식의 경계'는 국민의 다양한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약화되기도 더욱 강화되기도 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선호 내지 지원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집단은 성별로 보면 남성이며, 학력으로는 대재 이상, 가구소득은 400 만원 이상 가구, 정치적 성향으로는 진보 성향을 지닌 집단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고 지원에 부정적인 집단은 여성, 중졸 이하, 200~299 만원 소득 가구, 농수축산업 종사자, 영남·강원권 거주자, 보수적 이념 성향을 지닌 응답자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본 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응답자 특성별 견해차가 성별, 교육, 직업, 소득, 지역 등을 망라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남북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성별,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에 따라 폭넓은 대상별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저학력자와 저소득층, 농수축산업 종사자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역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들이 남북한 사회 통합과정에서 위기의식과 반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있어 200~299 만원 가구소득의 중간소득층이 다른 소득층에 비해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도 주의 깊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들이 체감하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드러난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커질 것으로 예

상되는 바, 이에 대해 가장 민감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구성원에 대한 파악과 대응 방안 모색이 더불어 요구된다.

Ⅴ. 주변국과의 관계인식

현실주의(realism)는 정치학에서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가장 고전적인 이론이다.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보는 국제 관계는 개별 국가들이 안보와 생존을 위해 힘을 추구하는 갈등의 무대이다. 그렇기 때문에 힘의 균형(balance of power)를 유지하여 공동의 적을 상대하기 위한 잠정적 동맹은 가능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는 신뢰와 협력이 아닌 불신과 갈등에 기초하고 있다고 본다. 끊임없는 외침과 외세의 극복으로 점철된 한반도의 근대사를 생각한다면 한국인들이 국제관계를 보는 시각이 이 냉정한 현실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 놀라운 일은 아니다.

2009년의 통일의식조사 분석은 한국인들이 주변국가와 우리의 관계를 실제로 현실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작년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들은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이해관계를 매우 잘 이해하고 있다. 또, 동맹의 중요성과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

서의 국제 공조가 필수적임을 인정하면서도 항상 동맹국에 대한 신중한 태도를 견지하는 매우 냉철한 자세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인의 현실주의는 따라서 시시각각 변화하는 한반도 주변의 정세를 매우 유연하게 반영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졌는데, 이에 따라 2009년 통일의식조사의 대외인식분석은 이러한 한국인들의 주변국에 대한 인식 태도를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라고 정의한 바 있다[1].

2010년 통일의식 조사는 2010년 3월 말에 발생한 천안함 사건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7월 중순에 이루어졌다. 이의 영향으로 2010년에 한국인들이 바라보는 주변국가들의 위상과 의미는 2009년 조사에 비해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이 차이는 유연한 현실주의의 결론을 수정한다기 보다는 오히려 재확인해주는 것이었다.

2010년 통일의식조사를 통해 바라본 한국인들의 대외인식은, 그들이 한반도를 둘러싼 열강들의 각축과 시시각각 변화하는 정세를 상당히 잘 이해하고 있으며, 놀라울 정도로 유연하게 변화하는 상황에 따라 인식과 시각을 수정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우선,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북한으로부터의 느끼는 위협이 대폭 증가하였다. 비록, 천안함이 북한 어뢰의 공격으로 침몰하였다는 남한 정부의 공식적 발표에 대한 의구심은 상당한 수준으로 남아 있지만[2], 동시에 북한에 대한 경계심 또한 대폭 상승하였음을 2010년 조사는 밝히고 있다.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증가한 것이 상당히 예측가능했던 것인 반면,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그 폭과 방향에서 매우 놀라운 점이 있었다. 2007년 통일의식조사가 시작된 이래 미국에 대한 우호적 인식은 계속 상승해왔는데, 2010년에도 그 추세가 계속되었다. 반면, 중국에

1– 박명규·김병로·김병조·박정란·정은미·이상신. 2009.『2009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 pp. 122-147.

2– 이 책의 2부 4장 “정부신뢰의 위기와 통일인식” 참조.

대한 인식 변화는 거의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국이 최근 남북관계 악화에 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대폭 증가하였으며, 또한 중국이 잠재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대답도 상당폭 증가하였다. 그리고 한반도 전쟁 발발시 중국이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대답도 지난 3년간의 조사결과에 비해 놀라울 정도의 증가폭을 보였다.

이렇듯 통일의식조사는 가까워지는 북중관계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을 보여준다. 또 중국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증가하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한국인들은 잘 인식하고 있었으며 미국과 힘을 겨룰 수 있는 새로운 슈퍼 파워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의 국제정치적 입지에 대해서도 그 이해도가 높았다.

이런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한반도의 남북한과 이를 둘러싼 주변국에 대한 기본적 인식 자체는 큰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 또 하나의 놀라운 발견이었다. 북한으로부터 위협이 증가했지만, 여전히 북한은 한국 국민들에게 지원과 협력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마찬가지로 북중관계가 가까워지고 있음에도, 중국에 대한 이미지 자체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여전히 남북관계 개선은 한미공조보다 중요한 훨씬 중요한 과제라고 인식되고 있었다. 따라서 지난 몇 년간 지속된 남북관계 악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근본적 인식 전환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1.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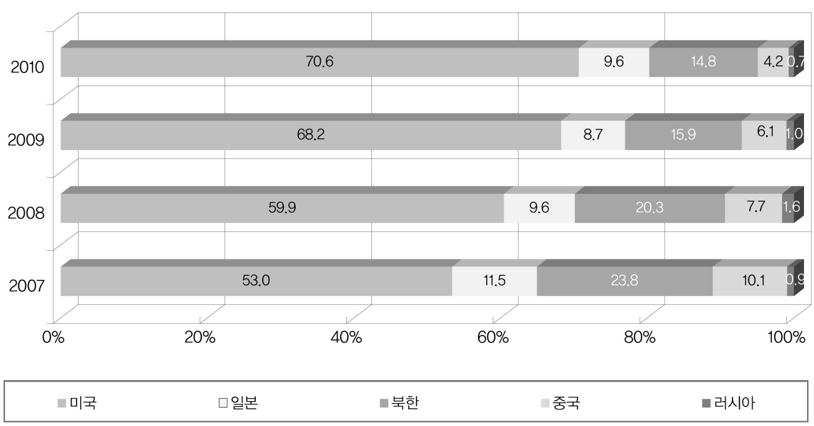
2009년 조사된 통일의식 조사에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 중 하나는 미국의 이미지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이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에 따른 효과로 생각되는 이 미국 이미지 제고현상은 한국에서만 관찰된 것이 아닌 전세계적 현상의 일부였다.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의 이미지는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주목할 만큼 좋아졌는데, 이것은 버락 오바마에 대한 전 세계적 신뢰를 반영하고 있다. 많은 나라에서 미국에 대한 견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인 약 10년 전의 긍정적인 수준으로 회복되었다.”[3]

2009년에 이어 2010년의 통일의식 조사에서도 미국의 이미지는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에 반해 중국의 이미지는 매우 급격하게 부정적으로 변했다. 그러나 미국의 이미지가 2010년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오바마 효과로 다시 설명하기는 힘들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도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건등의 여파로 취임 직후 70%까지 올라갔던 지지율이 현재는 40% 정도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과 중국의 이미지가 상반된 방향으로 움직인 것은 천안함 사건의 여파라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한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하며 천안함 사건이후 수습과 조사,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의 모든 단계에서 한국 정부와 보조를 맞춘 미국에 대해 한국인들이 더 많은 신뢰를 보내게 되었을 것이다.

미국의 이미지가 통일의식조사가 시작된 2007년 이후 계속 호전되고

3- The Pew Global Attitudes Project, 2009. “Confidence in Obama Lifts U.S. Image Around the World: Most Muslim Publics Not So Easily Moved.” In *25-Nation Pew Global Attitudes Survey*: Pew Research Center.

있는 반면, 중국의 이미지는 그동안 큰 변화 없이 지속되다가 올해 조사에서 큰 폭으로 부정적으로 바뀐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직접적으로는 역시 천안함 사건의 사후 수습과정에서 중국이 노골적으로 북한을 옹호한 점, 그리고 한미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여 천안함 문제가 남북문제에서 동북아 안보 문제로 확산되게 한 점 등이 원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증가는 현재까지는 근본적 태도 변화의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으며, 천안함 사건 등으로 인한 단기적 현상이라고 판단된다. 물론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장기화되면 중국의 이미지 자체에 변화를 가져와서 양국 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가능성 또한 없지는 않다.



[그림 1-V-1]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

한반도 주변 4대국과 북한 중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를 물었을 때, 미국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고 대답하는 비율은 200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그림 1-V-1]). 2007년 조사에서 미국을 가장 가까

운 나라라고 답한 비율이 절반을 약간 넘은 53%였는데 비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이 벌어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여 한미동맹의 복원을 선언한 2008년에는 59.9%로 늘어났었다.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한 2009년에는 미국 선호도가 8.3%나 증가하여 68.2%에 달했다. 2010년에는 미국 선호도가 70.6%까지 올라가서 작년에 비해 증가율은 크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계속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 이후 경색된 남북관계를 생각하면 북한을 가장 가깝다고 느끼는 비율이 2007년 23.8%에서 올해 14.8%로 9%나 줄어든 것이 사실 놀랍지 않다. 오히려 여전히 북한은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이나 중국, 러시아보다도 더 가깝게 느껴지는 나라라는 것이 더 의외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 호감도는 2009년 15.9%에서 불과 0.9% 줄어든 14.8%라는 것이 상당히 놀랍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중국에 대한 선호도 역시 그 감소 비율이 크지 않지만 2007년 이후 계속 하나의 추세로 자리잡은 것도 특기할 만하다. 2007년에 중국 선호도가 10.1%였는데 올해는 그 절반도 되지 않는 4.2%로 매년 조금씩이나마 중국이 가장 가까운 나라라는 응답자가 줄고 있다.

한편, 북한을 가장 가까운 국가라고 대답한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0대와 30대가 각각 17.2% 와 17.9% 였는데 비해, 40대와 50대 이상에선 12.8%와 11.1%로 급격히 떨어지고 있어서 젊은 층에서 북한에 대한 호감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역시 정치 이념에 있어서도 북한에 대한 우호감 차이가 존재했는데, 스스로를 진보적이라고 답한 사람의 18.1%가 북한이 가장 가까운 국가라고 답한 반면, 중도는 13.4%, 보수는 12.6% 만이 북한이 가장 가깝다고 답하는 차이가 있었다. 또 여기에는 교육 수준별 차이도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졸 이하의 저학력층에서는 8.6%만이 북한이 가장 가깝다고 한 반면, 고졸에

서는 13.2%, 대재 이상 고학력층에서는 17.0%로 학력에 따른 뚜렷한 격차가 드러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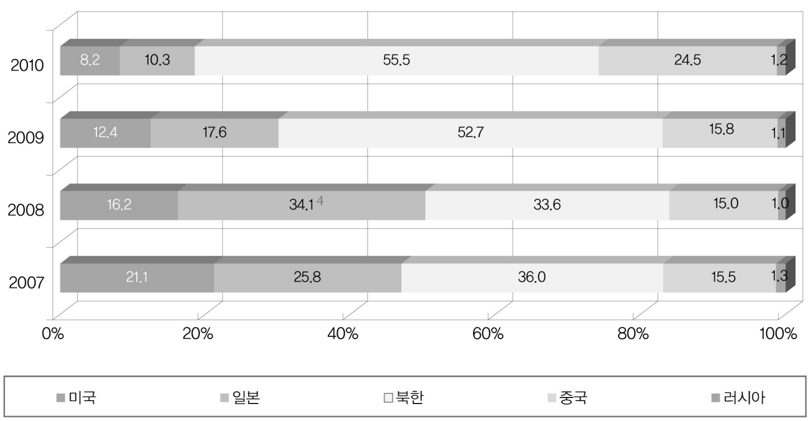
정리하면, 2010년 통일의식조사는 미국에 대한 우호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가 올해도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에 대한 긍정적 태도는 그 반면에 중국에 대한 호감 감소와 엮어진 현상이란 특징이 있었다. 또한,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을 가장 가깝게 느낀다는 응답자의 비율이 일정 수준을 유지한 것도 특기할 만한 현상이었다. 이는 유연한 현실주의적 태도가 상당히 안정적인 인식의 유지와 더불어 민감한 반응성까지 아울러 포괄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2.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그렇다면 한국인들이 가장 위협적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는 어디일까? 이 질문에 대한 응답률의 분포 역시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의 증가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의 증가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아래 [그림 1-Ⅴ-2]를 보면, 주변 4대국과 북한 중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이냐고 물었을 때 2007년에는 미국이 중국보다도 더 위협적인 국가라는 반응이 많았다(미국 21.1%, 중국 15.5%). 그러나 미국이 위협적이라는 답은 그 이후 계속 감소하여 올해는 러시아를 제외하면 미국이 한반도에 가장 덜 위협적인 국가로 평가되고 있다. 러시아는 기타 주변국들에 비해 한반도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듯 하다.

역시 한반도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는 북한을 꼽는 사람들이 제일 많았는데, 그 증가 비율을 보면 2차 핵실험이 실시되었던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거의 20%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2009년 북한 위협도가

52.7%였는데 비해 2010년에는 약 3% 증가한 55.5%로 다시 올라갔다. 그러나 사실 작년 북한의 핵실험이 확실히 한반도를 위기로 몰고 갔던 반면 남한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힌 것은 없었고, 올해 천안함 사건은 46명이라는 인명피해가 수반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 이 증가율은 거의 미미하다고 해도 좋은 수준이다. 이는 한국 국민들이 매우 냉정하게 천안함 사건에 대처하고 있다는 또 하나의 증거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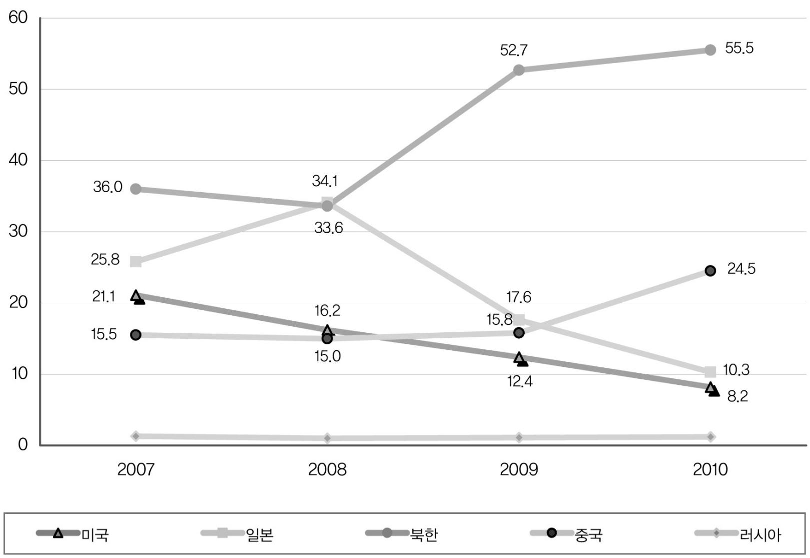


[그림 1-Ⅴ-2]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

2009년과 2010년 사이 위협도에서 가장 큰 변화를 보인 나라는 중국이었다. 2009년 중국의 위협도는 15.8%로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이었는데, 2010년에는 9%이상 증가하여 24.5%로 북한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2007년에서 2009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중국의 위협도는 거의 변화없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었다가 2010년에 갑자기 이렇게 큰 변화

4- 2008년 일본이 잠시 북한보다 높은 위협도를 기록한 것은 2008년 7월에 일본 문부과학성이 중등교과서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 영유권을 명기할 것을 발표한 사건에 영향 받은 것으로 보인다.

를 보인 것은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태도 이외의 변수로는 설명하기 힘들다.



[그림 1-Ⅴ-3]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

위의 표를 그래프로 표시해보면 변화의 심각성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2008년부터 북한이 가장 위험한 국가라는 답변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천안함 사건이 있었던 2009년과 2010년 사이를 보면 증가폭의 가파름에 있어선 중국의 위협이 북한의 위협을 오히려 능가하고 있다.

중국을 가장 위험한 국가라고 지목한 응답자들의 사회경제적 분포를 살펴보자. 우선 이념 성향별로 분류해보면, 진보층의 23.9%가 중국이 가장 위험하다고 답하였으며, 중도는 21.8%, 보수는 31.0%로 보수층의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더욱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연

령별 분포였다. 20대의 23.1%, 30대의 25.6%, 40대의 27.9%가 중국을 가장 위험한 국가라고 답하여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중국에 대한 경계심이 강화되는 추세가 보이는 듯 했지만, 50대 이상 계층에서는 그 비율이 21.2%로 낮아졌다. 그런데 2009년에는 이와 반대로 젊은층보다 50대 이상이 오히려 중국을 더욱 위협적으로 느끼는 비율이 높았다. 20대의 9.6%, 30대의 17.9%, 40대의 15.4%가 2009년 조사에서 중국을 가장 위험한 국가로 뽑은 반면, 50대 이상에서는 2010년과 비슷한 20.6%였다. 즉, 중국을 위험한 국가로 보는 비율이 젊은 층에서 급격히 증가한 반면, 노장년층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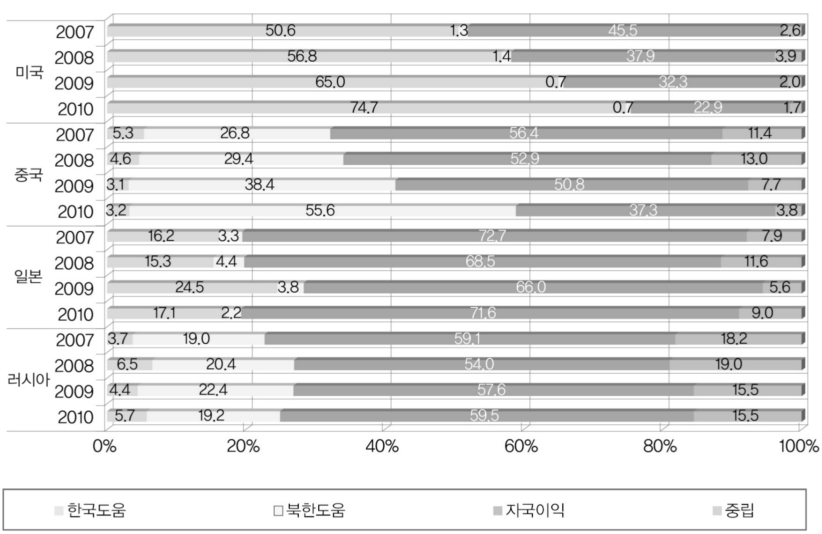
이는 노장년층에서 중국을 덜 위협적으로 느낀다기 보다는, 이들 연령층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기본적으로 북한의 위협 문제와 등치시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즉, 50대 이상 노장년층에서는 한반도 긴장 문제를 남북한 간의 문제로 단순화시켜 인식하는 반면, 그 이하 연령층, 특히 30대와 40대에서는 한반도 문제를 남북한을 포함하여 주변국들 간의 복잡한 국제문제의 일부로 파악한다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 중국에 대한 급격한 인식 변화의 이유는 2010년 천안함 사건에 관련한 중국의 북한 비호 때문이라는 것 외에는 다른 답을 찾기 힘들다. 이러한 추세가 그러나 2011년에도 계속 될 것인지는 아직 속단하긴 이르다고 판단된다. 급변하는 한반도 주변 정세를 둘러싸고 중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이에 한국인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조사가 요청된다.

3. 한반도 가상 전쟁과 주변국

이러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 변화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통일의식조사에서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주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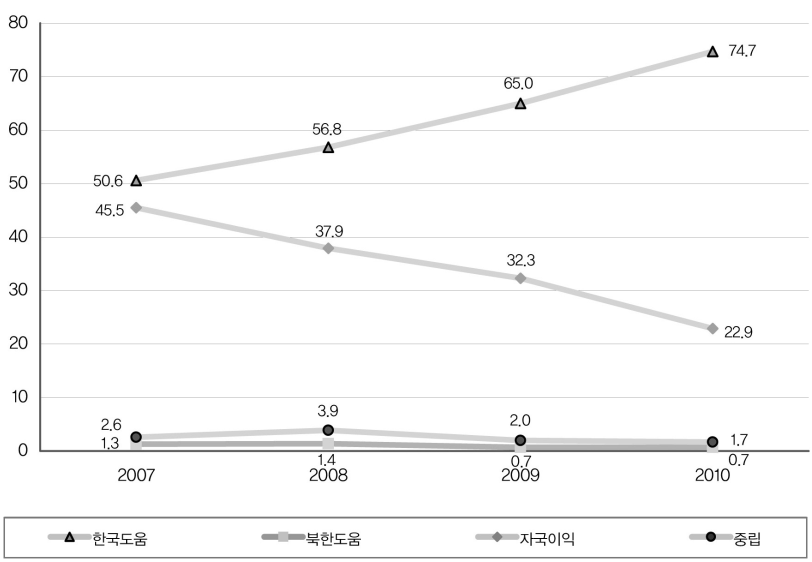
4대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이라고 예측하는 지를 물어보았다. [그림 1-Ⅴ-4]에 정리된 내용을 보면, 우선 미국은 전쟁 발발시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답변이 작년의 65%에서 크게 증가한 74.7%였다. 반면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챙길 것이라는 답변은 거의 같은 비율로 감소하여 22.9%에 머물렀다. 중국의 경우는 이 반대였다. 중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반면, 절반이 넘는 55.6%가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런데 2009년까지의 의식조사와 비교해보면 한반도 전쟁시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답한 사람보다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이 많아진 것은 올해가 처음이다. 한반도 전쟁 상황과 관련 일본과 러시아에 대한 인식 변화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편인데, 다만 일본의 경우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답이 좀 줄고 대신 자국이익을 도모할 것이라는 견해가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1-Ⅴ-4] 한반도 전쟁시 각국의 대처 행동 예상

위 표를 보면 2010년 이전까지 미국을 제외한 중국, 일본, 러시아는 한반도 문제에 있어 모두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할 것이라는 인식이 일반적이었다. 2010년에 처음으로 중국이 자국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는 예상보다 북한을 도울 것이라는 예상이 많아졌다는 것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적극성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즉, 이전 까지 한국 국민들은 한반도 문제에 중국이 약간은 소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예측했던 반면, 천안함 이후로는 중국을 한반도 문제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하는 당사자 중 하나로 인식하는 경향이 생겼다고 말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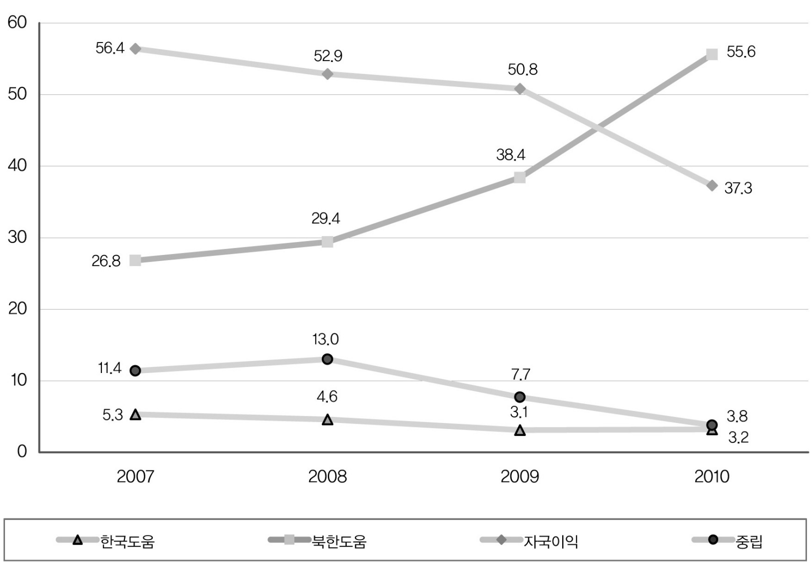
한반도 가상 전쟁에 있어서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이 극적으로 변한 것은 아래 두 그래프를 비교하면 좀 더 확연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 1-Ⅴ-5] 한반도 전쟁 발발시 미국의 행동 예상

위의 <그림 2> 그래프에서 보는 것처럼, 2007년 최초 조사시에는 전쟁 발발시 미국이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답변과 자국의 이익을 취할 것이라는 답변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남북관계의 긴장이 심화되고 이명박 정부가 한미동맹의 강화를 외교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천명하면서 미국이 한국의 동맹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위 그래프는 확실히 보여주고 있다. 2010년 천안함 사건 당시 미국과 한국이 공조하여 북한 제재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인식에 일조하였다고 추측되나, 이것은 비단 천안함 사건 때문만이 아니라 2007년 이후 지속되어온 추세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다음 <그림 3>의 그래프는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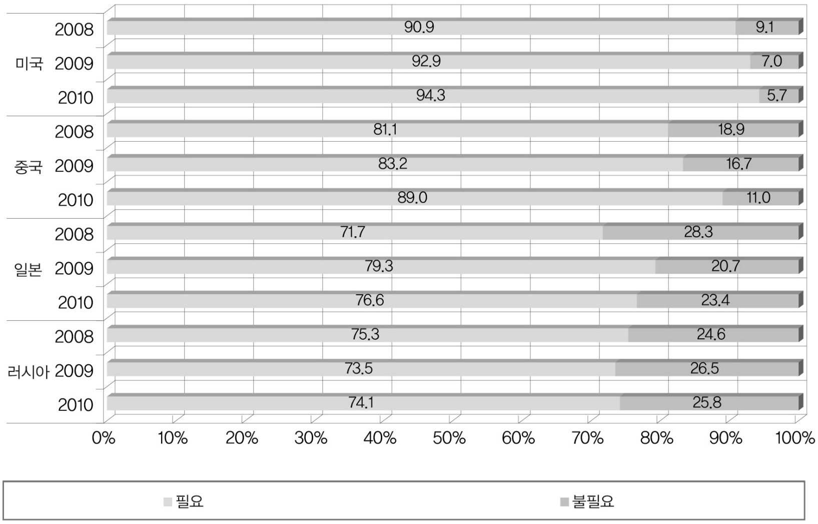


[그림 1-Ⅴ-6] 한반도 전쟁 발발시 중국의 행동 예상

미국과는 대조적으로, 2007년 첫 조사에서 중국은 과반수를 넘는 응답자가 한반도 전쟁 발발시 북한을 편들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을 챙길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두 답변의 차이는 그 후 꾸준히 줄어들다가 2010년에는 드디어 위치가 역전되고 말았다. 이제 절반이 넘는 응답자가 중국은 북한을 도울 것이라고 답하고 있으며 중립을 지킬 것이라던가 자국의 이익을 지킬 것이라는 응답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는 단지 가상 상황에서 중국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대한 예측이 달라지는 수준의 변화가 아니다. 오히려 2007년 무렵에는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라기 보다는 주변국 정도로 인식되던 중국이 2010년에는 확실하게 중요한 행위자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즉, 더 이상 중국은 수동적으로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반도에 개입하고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시켜나갈 실력과 이유가 있는 국가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한반도, 더 나아가 동북아 지역에서의 안보와 힘의 균형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아래 [그림 1-Ⅴ-7]에서도 다시 한 번 확인된다. 이 표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주변 4대국 각각의 협조가 어느 정도 필요한가라고 물은 결과를 요약해 놓은 것이다. 우선 미국을 보면, 한반도 통일에 미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거의 모든 응답자들이 동감을 표하고 있다. 이 밖에도 중국, 일본, 러시아의 협조 필요성도 모두 매우 높은 비율로 인정된다. 그런데 중국의 경우를 보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 협조필요성에 대한 인식 비율이 83.2%에서 89%로 거의 6% 가까이 상승하였다. 이는 동북아 지역에서 중국의 비중이 더욱 커져가고 있다고 한국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 4점 척도(매우 필요 / 필요 / 불필요 / 전혀 불필요) 변수를 2점 척도로 변환하여 요약하였음

[그림 1-Ⅴ-7] 통일을 위한 각국의 협조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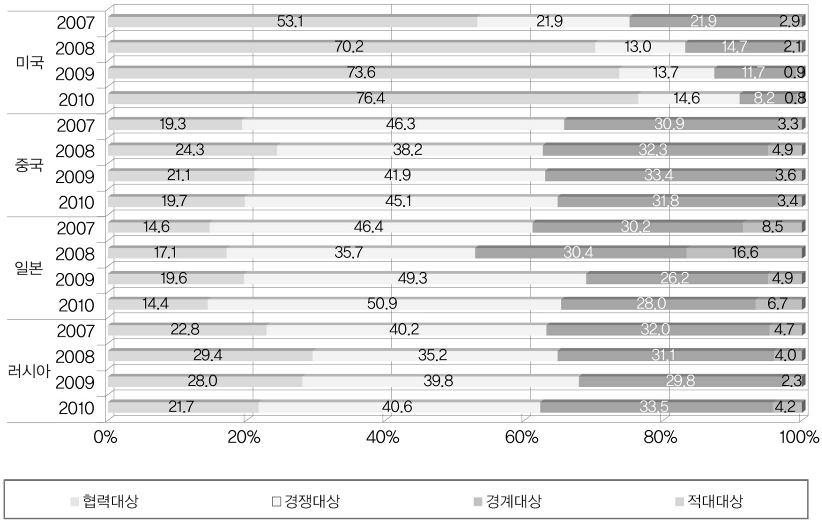
이런 변화는 천안함 사건에 한국 국민이 얼마나 냉정하게 대응하고 있는가를 다시 한 번 상기시켜 준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드러난 동북아의 세력 균형 재편 현상을 우리 국민들은 매우 예리하게 이해하고 있다. 새로운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중국이 지금까지의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던 태도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더욱 적극적으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런 예측은 그러나 중국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적대감으로 표출되기 보다는, 한반도 통일을 위해 중국의 협조 필요성을 인정하는 현실주의적 태도로 연결되고 있다.

4. 주변국과 북한의 이미지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2010년 조사에서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태도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관찰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아직까지는 좀 가변적이고 유동적인 성격을 띄고 있으며, 각국에 대한 근본적 인식 변화의 수준까지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변 4대국의 이미지를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으로 나누어 그 변화를 추적해보면 이러한 미국과 중국에 대한 태도 변화의 좀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아래 [그림 1-Ⅴ-8]는 2007년 이후 각국의 이미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 지를 국가별로 정리한 것이다. 우선 미국의 이미지 변화를 보면 2007년 이후 협력대상으로서의 이미지가 계속 큰 폭으로 상승해온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경계대상, 혹은 경쟁대상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는 이와 반대로 계속 하락하였다.

비록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중국에서 느끼는 위협도가 2010년에 큰 폭으로 상승하였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중국을 적대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2009년의 3.6%에서 2010년에는 3.4%로 거의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역시 경계대상으로서의 중국의 이미지 역시 큰 변화가 없었던 반면, 경쟁대상 이미지는 약 3% 정도 상승하였다. 2008년을 제외하면 2007년 이후 75% 이상의 응답자들은 중국을 경쟁 혹은 경계의 대상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 이미지 자체는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가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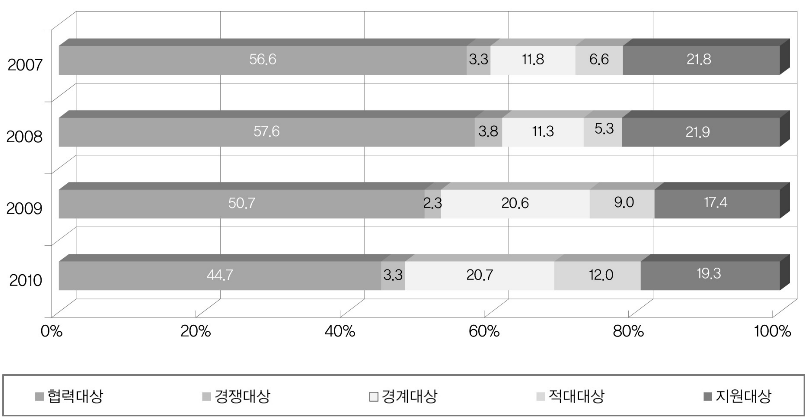


[그림 1-Ⅴ-8] 주변 4대국의 이미지 변화

결국 [그림 1-Ⅴ-8]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협력대상으로서의 미국의 이미지가 2007년 이후 급격한 변화를 보인 것을 제외하면 주변 4대국의 이미지는 큰 변화 없이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천안함 사건 이후 중국으로부터 느끼는 위협도가 상당히 증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이미지 자체는 변화했다고 말할 근거를 찾을 수 없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이고 있는 미국의 경우 역시, 경쟁대상 혹은 경계대상으로서의 인식 비율이 좀 달랐을 뿐 그 기본 이미지 자체는 2007년에도 여전히 협력대상이었기 때문에 기본 이미지가 계속 강화되고 있을 뿐 근본적인 기저 인식틀의 변화라고 보기는 힘들다.

마찬가지로,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이미지 또한 기대한 만큼의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림 1-Ⅴ-9]에서는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지에 대한 답변 결과를 요약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2007년

이후 북한의 이미지는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7년에 북한을 협력대상이라고 말한 응답자가 56.6%에 달한 반면, 이 비율은 올해 44.7%까지 떨어졌다. 반면 북한을 적대대상이라고 말한 비율은 2007년 이후 약 5.4% 정도 상승하였다. 마찬가지로 북한을 경계대상이라고 말한 비율은 2008년과 2009년 사이 제 2차 핵실험 이후 거의 9% 상승한 것이 올해도 큰 변화없이 이어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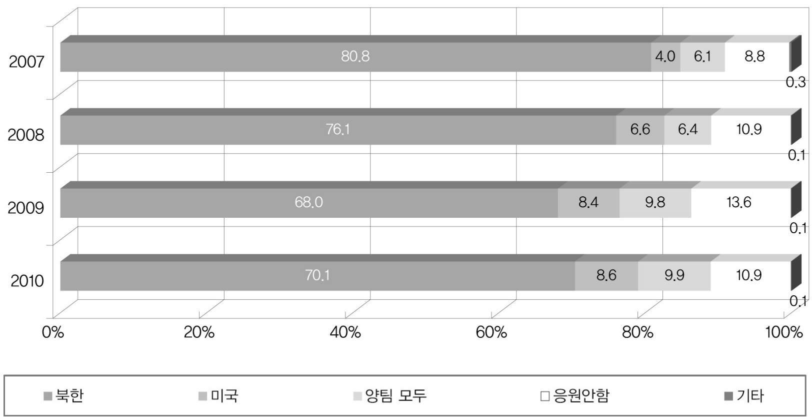


[그림 1-Ⅴ-9] 북한의 이미지 변화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비록 그 비율이 많이 줄기는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응답자가 가장 많다는 점이다. 오히려 작년에 비해서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답변은 약 2% 정도 높아졌다(17.4% → 19.3%). 즉, 북한에 대해 한국 국민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인식틀은 지금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만,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보아 북한은 협력 혹은 지원의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다.

천안함 이후 주변 4대국과 북한을 보는 시각에는 많은 변화가 있으면

서도 그 기저에 깔린 인식틀 자체는 상당히 안정되고 유지되고 있다. 인식틀의 안정성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증거가 아래 [그림 1-Ⅴ-10]에서 제시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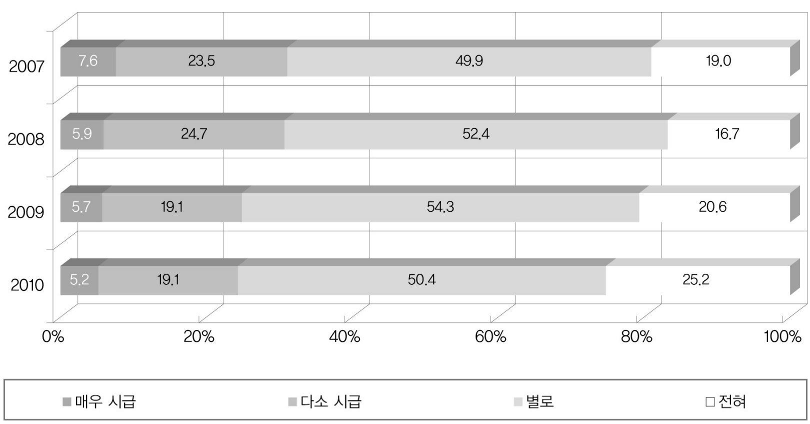
[그림 1-Ⅴ-10] 북한 對 미국 월드컵 경기에서 응원할 팀

북한과 미국의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 경기에서 만난다면 어느 쪽을 응원할 것인가를 물었을 때, 2010년 조사에서는 70.1%의 응답자들이 북한을 응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미국을 응원한다는 답변은 8.6%에 그쳤다. 2007년 부터의 변화를 보면 북한을 응원하겠다는 비율이 좀 줄긴 했지만 아직도 다수의 국민들은 비정치적 스포츠의 장에서라면 미국보다도 북한을 응원할 것이라고 답하고 있다.

물론 올해 개최된 남아공 월드컵에 북한팀이 실제로 출전했고 상당히 인상적인 경기를 보여준 것이 이 조사 결과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남한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과 같은 정치적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태도와 비정치적 부분에서의 태도를 분리시켜

북한에 대한 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또, 미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계속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긍정적 변화가 기본적 인식틀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또 다른 증거도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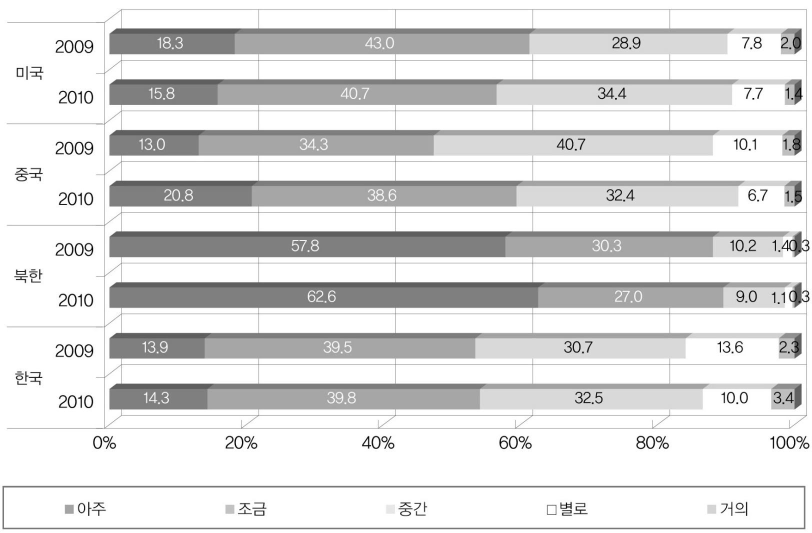
한반도를 둘러싼 대외관계의 인식틀 자체는 큰 변화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다른 하나의 증거가 아래 [그림 1-Ⅴ-11]에서 제시되고 있다. 응답자들에게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미군철수가 과연 시급한 사항이냐고 물은 것에 대한 답변의 분포이다. 이것을 보면 2008년과 2009년 사이에 미군철수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약 5.8% 감소하였다(30.6% → 24.8%). 그러나 천안함 사건 이후에 이 비율은 거의 변화없이 24.3%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1-Ⅴ-11] 미군철수의 시급함 여부

기본적 대외인식틀의 안정성은 최근 남북관계 악화가 어느 나라의 책임인지를 물어본 질문에서도 확인된다. 2008년 이후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통일의식조사에서는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을 2009년부터 묻고 있다. 한국과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 각각에 대해 이 질문을 던져본 결과, 아래 [그림 1-Ⅴ-12]와 같은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Ⅴ-12] 최근 남북관계 악화의 책임

이를 보면, 남북관계 악화는 물론 북한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 말한 응답자가 가장 많아서, 2009년과 2010년 모두 거의 90%에 육박하였다.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이 비율이 더 늘어나지 않은 것은 이미 2009년에 이미 거의 한계치에 달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흥미로운 것은 한국의 책임이 있다는 답변 또한 상당 수준이라는 점인데, 2009년에는 53.4%, 2010년에는 거의 비슷한 54.1%였다. 미국에 책임이 있다는

답변은 2010년에는 2009년보다 약간 줄어든 56.5%였지만 여전히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중국의 책임을 따지는 응답자의 비율이 2009년과 2010년 사이에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9년 47.3%가 중국의 책임을 인정한 반면 2010년에는 12%가량 증가하여 59.4%가 되었다.

[그림 1-Ⅴ-12]로 알 수 있는 것은, 중국의 경우 상당한 변화가 있기는 했지만, 한반도의 긴장 원인을 북한 뿐만 아니라 한국, 미국, 중국에서도 찾는 인식 구조 자체는 크게 변화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2008년의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2009년의 핵실험 및 2010년의 천안함 사태를 겪은 이후에도 북한을 제외한 한국 및 주변국의 책임을 인정하는 비율이 절반을 계속 넘고 있다는 것은 남북관계의 복잡성을 한국 국민들이 놀라울 정도로 잘 파악하고 있다는 사실의 확실한 증거일 것이다.

5. 소결 - “유연한 현실주의”

2010년의 통일의식조사는 천안함 사건의 여파로 작년에 비해 사뭇 달라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만, 여전히 2009년 조사에서 제시되었던 “유연한 현실주의”의 틀이 한국인들의 남북문제 및 주변국과의 관계 문제 인식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천안함 사건 이후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인식도 큰 변화를 보였다. 한미동맹이 강화된 것은 미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더욱 강고해 진 것에서도 그 증거를 찾을 수 있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중국에 대한 인식의 변화였다. 중국으로부터 위협을 느낀다는 응답이 많아졌고 호감도는 상대적으로 줄어든 것이 발견되었다. 또, 중국을 미국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와 동북아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능동적 행위자로 보는 시각이 대폭 늘어났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 주변국들의 행태를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으며 국제 관계의 이해도도 상당한 수준에 도달해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는 주변 4대국과 북한에 대한 근본적 인식틀 혹은 국가 이미지를 바꿀 수준까지는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협력 혹은 지원의 대상이며, 미국은 굳건한 동맹국, 중국은 경쟁과 경계의 대상이라는 한국인들의 각국에 대한 국가 이미지는 상당한 안정성을 가지고 지속되고 있다.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IPUS

제2부 심층분석

Ⅰ. '대북지원·인권·북한이탈주민': 의식 지형과 통일비용의 쟁점

2010년 8·15 경축사를 계기로 통일비용, 통일세 부담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어 가고 있다. 논의의 확산과정에서 더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은 '통일세'에 대한 논의가 현재의 비용 부담에 대한 현실적 고려와 더불어 사회심리적인 통일 비용, 통일론 등에 대한 논의와 연계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차원의 논의에 있어서 '통일세' 자체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가 당면한 대북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 등 실제 소요되고 있는 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통일세' 부담에 대한 국민의식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통일세'를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직접적 논의는 기존의 '과세부담'에 대한 투영효과로 인해 통일 '세금' 자체에 대해서는 그 당위성이나 타당성을 인식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거부감을 드러

낼 수도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북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국민들이 얼마나 탄력적으로 통일비용 부담을 충당하는 데 공감할 수 있을지 그 가능성을 보여주는 단초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본 글에서 다룰 '대북지원, 인권,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국민의식은 통일비용 부담에 대한 논의의 방향을 환기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즉, 경제적 통일비용 부담과 관련해 현재진행형의 비용 부담이라 할 수 있는 대북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국민의식을 파악하고자 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한 것일 뿐 아니라 남한사회의 안정과 나아가 통일미래에 대한 대비라는 점에서 통일 비용 부담으로서의 의미도 지닌다. 대북지원이 갖고 있는 인도적, 남북한의 상생 의미와 더불어 통일미래에 대한 대비라는 차원을 고려한다면 대북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국민의식을 파악하는 것은 통일비용에 대한 논의를 한층 깊게 해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대북지원이 분단의 벽에 막혀 눈앞에서 바로 볼 수 없고, 만날 수 없는 대상에 대한 지원이라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바로 현재, 한 지역에서 이웃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지원으로 현실적 이해관계의 반영과 미래에 남북한 사람들이 함께 살아갈 때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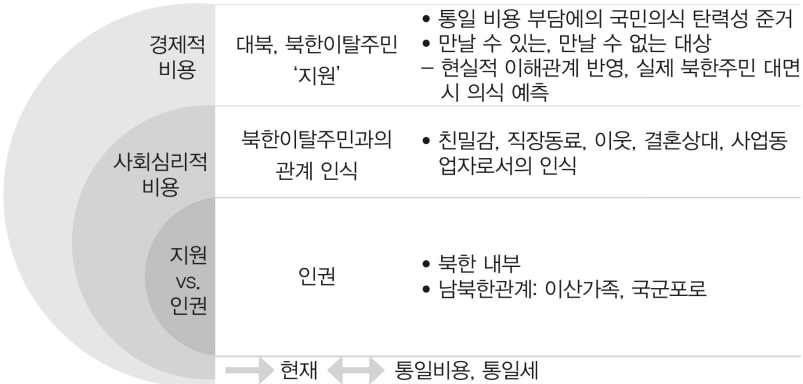
또한 본 글은 경제적 통일비용 부담 논의와 더불어 사회심리적 통일비용 부담으로 논의의 폭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은 현 시점에서 동서독이 경제적 통합과 통일비용 부담과 더불어 사회심리적인 통일의 중요성을 지금까지 절감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바이다. 남북한의 분단 역사를 돌이켜 보

면 이념적 대립과 경제발전 격차, 60여 년 간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한 사람들 간의 사회심리적 이질성을 고려한다면, 그로인한 난관이 결코 동서독의 그것과 비교해 가벼울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는 통일비용 논의가 경제적 차원의 논의와 대비 뿐 아니라 사회심리적인 논의로까지 이어져 대비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글에서 다룰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인식'은 북한이탈주민과의 친밀감, 직장동료, 이웃, 결혼상대자, 사업동업자로서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는 가 등을 파악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한 사회통합의 수준과 미래의 통합과정에서 나타날 사회심리적 통합 비용 부담을 예측하게 하는 단초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글은 '대북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더불어 '인권'에 대한 국민의식을 파악하게 될 것이다. 인권은 북한 내의 인권과 더불어 남북관계에서 파생된 인권이라 할 수 있는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를 포괄한다. 인권과 북한이탈주민·대북 '지원'에 대한 의식이 어떻게 함께 진행되고 있는 가를 파악하는 것은 인권 개선과 지원의 연계에 대한 우리사회 내부의 논의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양자에 대한 연계 논의가 UN, 국제금융기구, 개별 국가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행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국민의식의 연계적 분석은 시의성을 지닌다 하겠다.

본 글은 '대북지원, 인권, 북한이탈주민' 세 영역에 대한 국민의식을 분석하되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문제의식과 내용의 축을 바탕으로 분석을 시도하게 될 것이다. 그에 앞서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어떠한 의식 지형변화가 있는 가를 파악하여 쟁점 분석에 있어 심도를 제고하고자 한다.



1. '대북지원·인권·북한이탈주민' 의식 간 비교

1) 대북지원과 북한이탈주민지원에 대한 의식: '규모'의 차이와 '조건'제시의 공통성

대북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의식을 비교해 보면, 우선 차이점을 보이는 것이 지원 규모에 대한 것이다. 공통점을 드러내는 것은 양자 모두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우선 차이점이 나타나는 지원 규모에 대한 견해를 보기로 한다.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축소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대북지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매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현재 수준을 유지하거나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더 많은 것이다. 참고로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와 줄여야 한다는 견해는 각각 응답률이 감소하거나 고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의 남한 입국 수용에 대한 견해에서는 '선택적' 수용이 지배적 견해이나 일단

입국한 이후에는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줄여야 한다는 견해에 비해 더 많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대북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견해에서 공통점을 보이는 것은 '조건'을 전제로 한다는 점이다. 우선 대북지원은 '핵문제 해결과의 연계'라는 조건을 제시하는 견해가 연계하지 않아야 한다는 견해를 앞서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서는 남한에 입국하려는 북한이탈주민을 '모두' 수용하기 보다 '선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조건부 입국 기준 제시가 더 많은 응답률을 나타내고 있었다.

대북지원과 북핵 문제 해결을 연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북핵 문제 해결을 조건부로 한 대북지원 인식이 두드러지고 있다. 즉, 북핵 문제 해결과 대북지원을 연계해야 하는 가에 대해 연계해야한다는 견해가 46.4%로 연계하는 것을 반대하는 의견(21.1%)을 두 배 이상 앞서고 있는 것이다. 연계를 반대하는 견해는 2008년도 처음 조사 시기와 2009년도까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연계를 찬성하는 견해는 2008년 대비 2009년 상승세를 보이면서 2010년 까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2009년 북한의 핵실험과 2010년 천안함사건으로 인해 북한의 무력 수단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국민들이 의식한 결과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

2) 인권과 대북 지원 의식: 공통 지향과 분기점으로서의 '인도주의'

인권과 대북 지원 의식 모두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은 인도주의 가치 실현 지향성이 직·간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도주의적 가치는 인권과 대북 지원 의식의 공통 지향일 뿐 아니라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분기점이 되기도 한다.

즉, 인권과 북한이탈주민·대북지원 모두 인도주의 목적 지향성을 보

이고 있으며, 인도주의적 목적 지향에서 어긋날 경우 대북 인권 개선과 지원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의식 조사 결과에 나타난 북한 인권에 대한 견해는 북한 내부의 인권 개선이 시급하며, 정부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2010년 통일의식 조사에서 '인권'과 관련한 대표적 3문항[1] 모두에서 찬성 비율이 압도적이라는 점과 2007년도 첫 조사 이후 해마다 찬성 견해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문항에 대한 답변을 보면, 정부가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 없이 제기해야 하며(69.5%), 통일을 이루기 위해 '북한 인권 개선(82.8%)'과, '이산가족·국군포로'문제 해결이 시급(75.7%)하다는 것이다. 또한 3문항 모두 해마다 동의 비율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대북지원에 나타난 인도주의적 목적지향은 대북지원 축소 이유와 효과성에 대한 견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즉, 대북지원 수준을 축소해야 하는 이유로 '북한 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 가장 큰 이유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북 지원의 효과성에 대해 '북한 주민 생활 향상에는 도움이 안된다'는 견해가 과반수 이상을 차지 하며 대북지원이 인도주의적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한 우려를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향후 대북지원에 있어서 북한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인도주의 가치 지향을 명료화 하지 못할 경우 대북지원에 대한 규모 축소 견해는 더욱 커져갈 가능성도 예상된다.

1- 3문항 중 2문항이 북한 내부 인권, 1문항이 남북한 관계에서 발생한 인권으로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문제이다.

2. ‘대북지원·인권·북한이탈주민’ 의식의 응답자 분포와 특성

1) ANOVA,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개요

본 연구의 자료는 window용 SPSS/PC+ ver.17.0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다. ‘대북지원·인권·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국민 의식이 응답자 특성별로 어느정도의 차이를 나타내는 가를 알아보기 위해 집단 내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수준을 0.05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였다.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정치성향, 지역, 직업, 가구소득 등에 따른 인식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여 성별간 의견의 차이 정도는 독립표본 T검정, 나머지 특성별 의견 차이 정도는 F검정(ANOVA)을 통해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를 발견해 내고자 하였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북지원·인권·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문항 총 18개 문항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을 살펴보면, 지역에 의해 견해의 차이를 드러내는 문항이 가장 많았는데 15개 문항이 해당되었으며, 다음으로 교육수준에 의한 차이가 8개 문항에서 나타났다. 다음으로 직업이 5개 문항, 성별과 가구소득이 각기 4개 문항씩이었으며, 연령은 1개 문항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에 그쳤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 차를 나타내는 집단의 각기 내부에서는 어떠한 의식 지형을 보이고 있을지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표 2-Ⅰ-1 ANOVA와 독립표본 T 검정 결과 유의도 항목

구 분	내 용		성별	연령	교육수준	정치성향	지역	직업	가구소득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 대북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	–	.009	.004	.000	–	–
	○ 대북 사안별 시급성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	–	–	–	.000	.028	–
		㉳ 북한의 인권 개선	–	–	.009	.041	.000	–	–
대북 정책에 관한 생각	○ 현재 대북 지원의 실효성과 적절성 (줄여야 할 시 그 이유)	북한주민생활 도움정도	–	–	.019	.000	.000	–	–
		대북지원 수준 줄여야 할 시 그 이유	–	–	.001	–	.047	–	–
		대북지원수준 적절성	–	.038	.038	.000	.000	–	–
	○ 주요 쟁점 관련 대북 정책에 관한 의견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	–	.029	.001	–	–	–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	–	–	–	.000	–	.022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생각	○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	–	–	.000	.000	–	–
	○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동네 이웃	–	–	–	–	.000	–	–
		㉯ 직장 동료	–	–	–	–	.000	.036	.002
		㉰ 사업 동업자	.002	–	–	.003	.000	.049	.016
		㉱ 결혼상대자	.000	–	–	.012	.000	.000	–
	○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	–	–	–	–	–	–
	○ 탈북자관련 인식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	–	–	.001	.000	.000	–	–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003	–	.000	.000	.000	.003	.000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005	–	–	–	–	–	–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	–	–	–	.033	–	–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2) 응답자 분포 지형

대북지원에서 상대적으로 조건부적, 부정적 시각을 드러낸 집단은 여성, 30대, 저학력, 영남권 거주자로 압축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드러낸 집단은 다음과 같다. 즉, 남성, 40대, 고학력자, 호남권 거주자, 진보적 이념 성향을 드러낸 집단이다.

북한인권, 또는 남북관계에서 파생된 인권으로서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등의 해결에 상대적으로 적극적인 견해를 보인 집단은 남성, 40대 연령층, 대재 이상, 진보적 이념 성향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인권 관련 문제에 대해 상대적으로 시급성을 덜 인식하고 있는 집단은 여성, 50대 이상, 저학력, 영남권 거주자로 정리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선호 내지 지원에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집단은 상대적으로 남성, 대재 이상, 400 만원 이상 소득 가구, 진보적 이념 성향을 지닌 집단이었다. 반면, 상대적으로 선호도가 떨어지고 지원에 부정적인 집단은 여성, 중졸 이하, 200~299 만원 소득 가구, 농수축산업 종사자, 영남·강원권 거주자, 보수적 이념 성향을 지닌 응답자로 정리해 볼 수 있겠다.

이와 같이 각 영역별로 견해차를 보이는 응답 집단을 도출하였는 바, 각 영역별로 나타난 공통적 응답자 특성도 정리해 볼 수 있으며, 다른 영역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의식에서 두드러지는 응답자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즉, 전 영역에서 비교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응답 집단 특성은 남성이면서, 40대, 대재 이상, 진보적 이념성향을 지닌 경우 대북지원, 북한인권,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가장 호의적 의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호의도가 낮은 집단은 여성, 중졸이하, 영남권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림 2-Ⅰ-1] 영역별 응답자 분포 지형

3) 응답자 특성별 의식 지형

본 글에서는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라는 특성별로 어떠한 의식 지형을 그려볼 수 있을지 정리해 보고자 한다. 사회경제적 배경별 견해차가 나타난 문항이 많을수록 견해차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배경이라 할 수는 없으나 그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반대로 견해차가 드러난 문항이 적다고 해서 그 함의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오히려, 단 몇문항에 포함된 함의가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다음 각 배경별로 어떠한 견해 차를 보이고 있으며, 함의는 무엇인지 보다 구체적인 국민의식의 지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성별: 여성의 위기인식과 방어기제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문항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서였다.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인식에서 2문항,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의식과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한 취업의 어려움 인식에서 각각 1문항씩이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서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맺기가 꺼려진다는 인식이 남성에 비

해 여성이 통계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응답률 격차를 보였다.(0.000) 즉,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을 '결혼상대자'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인식을 뚜렷이 드러내고 있었다.

대북지원 관련 문항에서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대북지원과 대북지원을 연계해야 한다는 견해가 앞서고 있으며, 여성이 대북지원에 있어 북한주민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지를 남성에 비해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이 나타났다. 이에 비해 남성은 여성에 비해 대북지원이 '북한 정권 유지'로 오용되는 것을 더 우려하고 있었다.

또한, 대북지원, 인권에 대한 인식에서는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성별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간과하기 어려운 성별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북한의 무력도발에 대한 위기 인식을 더 크게 가지고 대북지원 등을 통해 제재해야한다는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으며, 대북지원에 있어 북한주민에게 얼마나 전달될 것인가라는 인도주의적 목적 관철을 중요시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남성은 대북지원이 '북한 정권 유지'라는 정치적 오남용으로 이어질 것에 대한 우려가 여성에 비해 크다 하겠다. 앞서 보았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에서 여성과 남성의 인식의 격차를 더불어 생각할 때 향후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성별에 따라 통합의 속도와 깊이가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하게 한다.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하다는 점, 범죄 노출을 비롯한 사회적 위험 부담을 크게 인식할 수 있다는 점 등은 여성들이 '지원'과 관련한 비용 발생에 남성에 비해 더 민감할 수 있으며, 남북한 사회 통합에 대한 두려움을 크게 느끼고 '거리두기'라는 일종의 방어기제를 내세울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통일비용, 통일세와 같은 경제적 비용 마련 뿐 아니라 사회심리적 통합 과정에서 성별에 따른 요구와 불만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하겠다.

표 2-Ⅰ-2 성별 주요 견해차 구도

응답자 특성	문항	주요 견해 차이 구도
성별	대북지원 축소 필요성 이유	북한 정권 유지: 여성 응답 < 남성 응답
		북한주민 전달 문제: 여성 응답 > 남성 응답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 지원 연계	여성 찬성 > 남성 찬성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	여성 찬성 > 남성 찬성
	북한이탈주민과 '사업동업자'로 관계 맺기	여성 거부감 > 남성 거부감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상대자'로 관계 맺기	여성 거부감 > 남성 거부감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운 정도	여성 인식 > 남성 인식

(2) 연령: 대북지원, 인권개선 요구가 가장 큰 40대

연령에 따른 견해차가 두드러지는 북한이탈주민·인권·대북지원 관련 문항 총 18개 중에서 1개 문항(대북지원 수준 적절성)에 불과해 여타 응답자 특성에 따른 견해 차 연령에 의한 견해차가 별다른 통계적 의미를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현재의대북지원 수준에서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를 묻는 질문에서 19세~30대와 40~50대의 견해차가 나타나고 있었다. 즉, 40~50대의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각기 29.2%, 27.6%로 30% 가까이 나타났으나, 19세~30대의 경우 각각 늘려야 한다는 견해가 20.5%, 21.8%에 머물렀다.

그럼에도 연령대별로 드러나는 인식의 차이를 읽을 수 있는 바, 대북지원과 관련해서는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 인도적지원이 통일에 기여하는 정도, 인권 개선의 시급성에 대한 견해에서 특히 40대와 여타 연령대의 견해 대립이 눈에 띈다는 점이다.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에서는 40대와 30대, 인도적지원이 통일에 기여하는 정도에서는 40대와 여타 연령대, 인권 개선의 시급성에서는 40대와 50대의 견해차가 두드러지는 것이다.

이른바 386세대인 40대의 견해는 여타 연령대 대비 상대적으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한다고 생각하며, 인도적 지원이 통일에 기여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또한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성을 가장 많이 요구하는 연령대이기도 하다.

표 2-Ⅰ-3 연령대별 주요 견해차 구도

응답자 특성	문항	주요 견해 차이 구도
연령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	40대·50대 수준 확대 > 20대·30대 수준 확대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	30대 긍정 < 40대 긍정
	인도적지원이 통일에 기여하는 정도	40대 > 20대·30대·50대 이상
	인권 개선의 시급성	40대 공감 최고, 50대 공감 최저

(3) 교육: 대재이상의 대북지원 효과성, 인권개선시급성 요구, 북핵과지원 연계반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긍정적 인식/ 중졸이하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관계 맺기 거부감

교육수준별로는 8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견해차를 드러내고 있다. 주목할만한 것은 학력이 높을수록 대북지원의 효과성을 크다

고 인지하고 있는 것이며, 대북지원을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조건부'로 이뤄져서는 안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학력이 높을수록 인권 개선의 시급성에 공감하고 있었다.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 '사업동업자'로서 관계 맺기에는 중졸 이하의 거부감이 가장 컸다. 또한, 중졸이하 학력자들이 고졸, 대졸 이상인 경우에 비해 북한이탈주민이 '남북 이질화 해소'라는 비교적 긍정적 역할을 한다는 인식에도 공감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정부가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해 교육 수준이 높을 수록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에 중졸이하가 45.3%, 고졸 50.4%, 대재 이상 61.3%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학력이 낮을수록 대북지원이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호의도가 적다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요인분석이 이뤄질 수 있으나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학력수준이 낮은 이들의 사회경제적 박탈감과 북한이탈주민과의 경쟁적 위기의식이 반영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 나아가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북한주민과의 노동 시장 내 경쟁상황을 가장 먼저, 가까이 느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현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쟁·대립의식을 나타내는 집단 특성을 파악하는 것은 남북한 통합 시 노동시장 형성 추이와 경쟁·대립구도를 보일 인력 구도를 예견하는 것과도 상통한다는 점에서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예견되는 집단 간 갈등 상황을 조정, 완화해 나가는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표 2-Ⅰ-4 교육수준별 주요 견해차 구도

응답자 특성	문항	주요 견해 차이 구도
교육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	학력 높을수록 긍정
	인도적지원이 통일에 기여하는 정도	학력 높을수록 긍정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 지원 연계	학력 높을수록 반대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성	학력 높을수록 공감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 관계 맺기	중졸 이하 거부감 > 대재 이상 거부감
	북한이탈주민과 '사업동업자'로 관계 맺기	중졸 이하 거부감 > 대재 이상 거부감
	북한이탈주민의 남북 이질화 해소 역할	중졸 이하 거부감 > 대재 이상 거부감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에 대한 견해	학력 높을 수록 동의

(4) 직업: 농수축산업 종사자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거리감

직업별로는 총5개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견해차를 발견할 수 있었다. 두드러진 특징은 전 5개 문항에서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의 견해가 여타 종사자들과 차이를 드러낸다는 점이며, 5개 문항 4문항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문항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북한이탈주민과 '동네이웃', '직장동료', '사업동업자'로서 관계 맺기를 다른 직업군에 비해 가장 꺼리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의 역할로서 '남북 이질화 해소'에 대한 공감도도 가장 낮았다. 또한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지고 있다고 보며, 조직 내에서 동일한 경쟁을 해야한다는 견해를 가장 많이 드러냈다.

그렇다면 왜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주로 국한되어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일까. 대북지원이나 인권관련 문제는 북한이탈주민 문제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멀게 인식되고 있는 반면, 북한이탈주민과 관련된 문항은 직접적인 삶과의 연계성이 반영되어 다른 집단에 비해 부정적이거나 경쟁적 견해를 보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전업주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전업주부의 동의율은 45.3%로 농수축산업종사자 59.4%, 자영업 61.9%, 블루칼라 56.7%, 화이트칼라 56.6%, 학생/무직/기타가 57.8%로 나타나는 것에서 약 10% 이상 낮게 나타나는 것이다.

표 2-Ⅰ-5 직업별 주요 견해차 구도

응답자 특성	문항	주요 견해 차이 구도
직업	북한이탈주민과 ‘동네이웃’으로 관계 맺기	농수축산업 종사자 거부감 최고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 관계 맺기	농수축산업 종사자 거부감 최고
	북한이탈주민과 ‘사업동업자’로 관계 맺기	농수축산업 종사자 거부감 최고
	북한이탈주민의 남북 이질화 해소 역할	농수축산업, 전업주부 공감도 최저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짐	농수축산업 공감도 최저
	북한이탈주민도 조직 내 동일 경쟁 당위성	농수축산업 공감도 최고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에 대한 견해	전업주부 공감도 최저

(5) 가구소득: 200 만원 이하 가구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경제적 이해관계 인식

가구소득별 견해차를 보인 4문항 중 3문항은 북한이탈주민과의 관계 맺기 2문항,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인식에 관한 것이다. 특히 관계 맺기에서도 '직장동료, 사업동업자'라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관계에서 200 만원 가구 소득 응답자들에서 거부감을 드러낸 것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부분이다. 앞서 보았던 직업별 견해차에서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노동시장 내 경쟁의식과 위기의식이 가구소득이 200 만원 이하인 응답자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면서도 남한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에서는 200 만원·300 만원 가구소득자의 동의 비율(각각 48.9%, 49.4%)이 200 만원 미만(58.1%), 400 만원 이상(66.4%)에 비해 적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즉, 저소득, 고소득 가구에 비해 중산층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 수준 확대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표 2-Ⅰ-6 가구소득별 주요 견해차 구도

응답자 특성	문항	주요 견해 차이 구도
가구 소득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 관계 맺기	200 만원 미만 거부감 > 400 만원 이상 거부감
	북한이탈주민과 '사업동업자'로 관계 맺기	200 만원 미만 거부감 > 400 만원 이상 거부감
	정부의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에 대한 견해	200 만원·300 만원 동의 < 200 만원 미만, 400 만원 이상

(6) 지역: 영·호남 대비보다 영남 대 여타 지역, 호남대 여타지역 대비

총 15개 문항에서 유의미한 견해차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다른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른 견해 차 보다 여전히 많은 부문에서 견해 차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지역간 격차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유의할 것은 이른바 '영호남 간 직접적 견해 대립'은 뚜렷하지 않다는 점이다. 영남, 강원 지역과 여타지역, 내지 호남과 여타지역이 문항에 따라 견해 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특히, 영남지역과 여타 지역의 견해 차가 눈에 띤다.

영호남간 견해의 대립을 보이는 문항은 1문항 정도로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했는가에 대해서였다. 여기에서 영남지역이 기여도를 가장 낮게 평가한 반면, 호남지역이 가장 높게 기여도를 평가하고 있었다.

영남지역은 대북지원, 인권, 북한이탈주민 지원 전체 영역에서 여타 지역과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대북지원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가장 부정적 평가를 내렸고, 북한인권 개선,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해결의 시급성 인식도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동네 이웃', '직장동료'로 관계 맺기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가장 많이 드러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장 낮은 공감도를 보였고, 북한이탈주민이 남북한 이질화 해소에 기여한다는 역할 인식의 공감도도 가장 낮았다.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에서는 가장 많이 공감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과 그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드러낸다는 점은 강원 지역에서 두드러진다. 강원 지역은 북한과 가장 인접하고 있으면서, 북한 지역 실향민들이 거주율이 여타 지역대비 높은 곳이기도 하다. 이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남북한의 이념적 대립을 투사해 그들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낸 것으로도 해석될 수도 있을 것이다.

호남지역이 다른 지역과 견해차를 가장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은 10문

항 중 1문항으로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지원을 연계해야 하는 가에 대한 것으로 다른 지역대비 연계에 대한 찬성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현정부의 주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영남지역에서 오히려 북한이탈주민과 인권문제 등을 대북지원과 더불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은 눈여겨 볼 만하다. 지역별 견해차가 가장 많은 영역에서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은 남북한 사회통합과정에서 지역간 갈등 구도가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나, 영호남의 정치적 지지세 형성을 영호남 지역의 국민의식에 있어서도 상호 대립된다는 구도로 오도하는 것은 배제해야 할 것이다.

표 2-Ⅰ-7 지역별 주요 견해차 구도

응답자 특성	문항	주요 견해 차이 구도
지역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	영남권 긍정 < 호남권 긍정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 지원 연계	호남권 찬성 최저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성	영남권 공감 최저
	이산가족·국군포로 문제 해결의 시급성	영남권 공감 < 중부권 공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영남권 최저
	북한이탈주민과 ‘동네이웃’으로 관계 맺기	영남권 거부감 최고
	북한이탈주민과 ‘직장동료’로 관계 맺기	영남, 강원권 거부감 최고
	북한이탈주민의 남북 이질화 해소 역할	영남, 강원권 공감도 최저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 필요성	영남, 강원권 공감도 최저
	북한이탈주민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짐	영남, 강원권 공감도 최고

(7) 정치성향: 대북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견해차, 인권에 대한 공감대 형성

정치성향별로는 총 18개 문항 중 10개 문항에서 견해차가 나타났는데, 주로 대북지원,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문항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대북지원이 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가에 대해서는 보수 보다 진보·중도가 긍정적이고, 인도적 지원의 통일 기여도에 대해서도 진보가 보수 보다 긍정적 평가를 내렸다.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에서 진보, 보수, 중도의 견해차가 뚜렷했는데, 대북지원수준을 늘려야 한다는 견해에 있어서 진보가 36%, 중도 20.5%, 보수 16.1%의 찬성률을 보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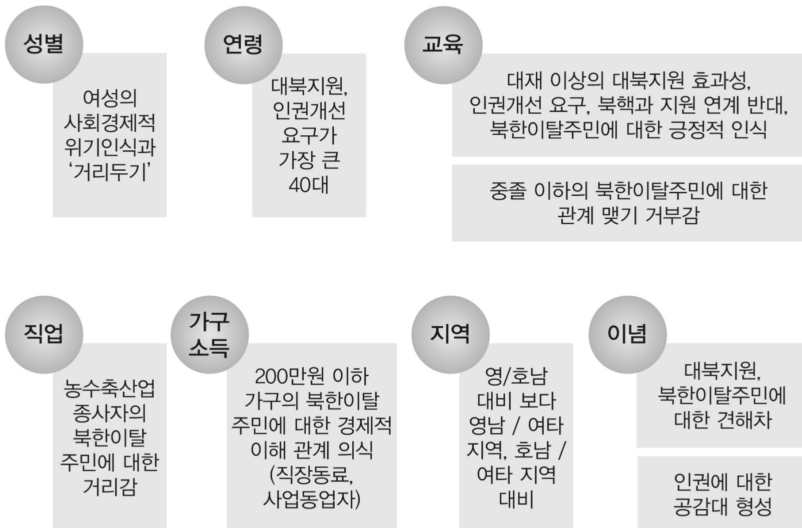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해서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과 '사업동업자'로 관계, 지원 확대 등에서 진보가 보수에 비해 호의적 답변을 보였다. '결혼상대자'로서 북한이탈주민과 관계 맺기에 있어서 진보의 경우 꺼린다는 응답이 45%로 가장 낮은 반면 중도 49.3%, 보수 52.8%가 꺼린다는 응답을 나타냈다.

정치성향별로 인권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별다른 인식차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인권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념을 넘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표 2-Ⅰ-8 정치성향별 주요 견해차 구도

응답자 특성	문항	주요 견해 차이 구도
정치 성향	대북지원이 북한주민 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정도	보수 긍정 < 진보·중도 긍정
	인도적지원이 통일에 기여하는 정도	보수 긍정 < 진보 긍정
	북한 인권 개선의 시급성	뚜렷한 차이 없음
	대북지원 수준 적절성	확대 견해: 진보 > 중도 > 보수
	북핵문제 해결과 대북 지원 연계	보수 찬성 > 진보·중도 찬성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	중도·보수 공감 < 진보 공감
	북한이탈주민과 ‘사업동업자’로 관계 맺기	보수 거부감 > 진보 거부감
	북한이탈주민과 ‘결혼상대자’로 관계 맺기	거부감: 보수> 중도> 진보
	북한이탈주민의 남북 이질화 해소 역할	진보 공감도 최고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 필요성	중도·보수 찬성 < 진보 찬성

이상에서 살펴본 응답자 특성별로 나타난 견해차를 정리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그림 2-Ⅰ-2] 응답자 특성에 따른 주요 견해

3. '지원·인권·관계' 의식 지형과 통일비용 쟁점

1) 통일의 경제적 비용 부담, 어디까지 가능할 것인가?

대북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한 의식을 통해서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통일비용, 통일세에 대한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짚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리 국민은 대북지원에 대해서는 축소(38.9%)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36.4%)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지원 규모 증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여기서 파악해야 할 것은 지원 규모 증대에 대한 회의감이 '세 부담'이라는 '비용' 부담에 의한 것이 큰 요인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세 부담'에 대한 우려는 지난 3개년과 올해에 이르기까지 하

향세를 유지하고 있기도 하다.

물론 본 조사 결과는 8·15 경축사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통일세 문제가 이슈로 제기되지 않았을 때이다. 따라서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들의 세부담 비용에 대한 의식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시기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8·15 경축사 이전에는 현실적 부담으로 대북지원, 통일 비용에 대한 인식이 국민들에게 폭넓게 인지되지 못하고 있다가 8·15 경축사에서 '통일세' 문제가 제기된 이후 현실적인 고민으로 다가오게 되었을 수 있다. 그러면서 '세 부담'에 대한 우려가 상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분명 인지해야 할 것은 '비용'의 사용 목적과 내용이 충분히 타당성을 갖추어 대국민 신뢰도를 확보한다면 비용 부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도를 확보해 나갈 수 있는 여지를 이번 결과를 통해 확인했다는 점이다.

조사 당시까지는 비용 부담 보다는 대북지원의 '오용'을 우려 하는 목소리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대북지원이 국내 정치적으로 이용될 것에 대한 우려[2]나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지에 대한 의구심 등이 주된 대북지원 축소 견해의 이유가 되고 있는 것이다. 비용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은 오히려 매년 하향세를 보이고 있기 까지 하다.

그리고 대북지원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매년 상승세를 타고 있다는 점도 대북지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확보될 경우, 통일비용으로까지 이어지는 비용 나눔에 대한 공감대 확보가 가능하리라는 예측을 확인하게 한다. 즉, 비용 부담에 대해 왜곡의 우려를 줄이고, 충분히 타당성이 있다라는 대국민 신뢰도를 확보해 나간다면 대북지원 뿐

[2]- '국내 정치적 이용'과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이라는 응답은 상향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아니라 통일 비용 '나눔'에 대한 지지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본 조사결과에서도 드러나듯이 성별, 이념[3] 지향 등 사회경제적 배경에 따라 대북지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 및 지원에 대한 견해가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할 것이다. 대국민 지지 확보를 위해서는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다양한 방안 마련이 요구되며, 필요에 따라서는 대상별로 집중적인 지지 확보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통일의 사회문화적 비용 예측 근거로서의 국민의식은 어떠한가?

북한이탈주민들과의 관계 인식을 바탕으로 남북한의 사회문화적 통일 비용과 관련한 논의를 확장해 보고자 한다. 우선, 북한이탈주민과 일정 거리를 둔 상태로는 관계 맺기가 가능하다는 인식이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러한 인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가족이라는 1차 집단 내로 인입하거나 '사업동업자'라는 실질적인 이해관계에 맞부딪쳐서는 관계맺기를 꺼리는 인식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남북한 사회 통합과정에서 일정정도 남북한 '사람들간'에 나타날 '거리두기'를 시사한다. 이러한 '거리두기'가 큰 변화의 폭 없이 다년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은 남북한 사회 통합의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동시에 다음과 같이 사회경제적 배경별로 갈등이 확산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본 조사 결과에서와 같이 응답자 특성별 견해차가 성별, 교육, 직업, 소득, 지역 등을 망라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남북한 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성별, 교육수준, 직업, 소득 등에 따라 폭넓

3- 국민 세 부담이 늘기 때문에 대북지원을 축소해야 한다는 견해가 진보는2.2%인 반면 중도 13.3%, 보수 13.4%로 였으며, 남성 6.4%, 여성 13.8%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은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저학력자와 저소득층, 농수축산업 종사자, 전업주부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역적 소외를 경험할 가능성이 있는 계층들이 남북한 사회 통합과정에서 위기의식과 반감을 드러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있어 200~299 만원 가구소득의 중간소득층이 다른 소득층에 비해 부정적 시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체감하는 사회경제적 불안정성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불안정이 커지고 그로 인한 영향을 가장 크게 인식할 수 있는 계층이 통합 비용 부담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워나갈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통합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

농수축산업 종사자들이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대해서만 유독 다른 집단과 견해차를 보이면서 부정적·경쟁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은 '북한이탈주민은 눈에 보이는 현실, 북한주민은 눈에 보이지 않는 미래'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대북지원에 대해서 호의적이라 하더라도 막상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남북한 사람들의 함께 살기가 시작된다면, 현실인식의 작동으로 경쟁적 대립 의식이 확대 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갈등이 장기화될 때, 갈등의 분출이 폭발적으로 확산될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에서 사회경제적 배경을 고려한 남북한 사회 통합 방안 구축과 비용 예측 및 대비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3) '지원 Vs 인권' 구도는 국민의식 속에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가?

대북지원을 축소하거나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지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견해보다 현저히 앞서고 있으나 지원을 증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매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만하다. 그러면

서도 유의해야 할 것은 대북지원이 북한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크다는 것이며, 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도 매해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대북지원을 통해 북한 주민의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인도주의적 요구가 드러난 것이며, 인권 개선의 시급성과 정부의 지속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접합점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다.

그러면서도 인권 개선의 시급성과 지속적 문제제기에는 대다수가 지지 의사를 표시하나 대북지원은 축소, 내지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다수라는 점은 아직까지 대북지원과 인권을 별개로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다음과 같은 해석도 가능하게 한다. 인권개선은 주로 '북한체제의 변화'라는 '정치시민적' 권리로 인식하고 있으며, 대북지원은 '인도주의'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이탈했다는 판단 하에 북한 주민의 '경제적' 권리 실현 수단으로 인식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응답률이 지원 확대를 공감하지 않는 비율 보다 높게 나타나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가 크다는 것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대북지원과 비교해 '투명성'과 '효과성'이 확보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작용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국민들은 근본적으로 인권과 지원을 별개의 차원으로 인식하지는 않으나, '신뢰'를 잣대로 양자의 연계를 달리 한다는 것이다. 즉, 지원이 실질적으로 인도주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판단하지 않을 때는 대북지원과 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의 찬성률이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 바와 같이 지원과 인권을 별개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은 대북지원에 비해 투명성과 효과성을 확인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원 확대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또한 달리 보면, 대북지원 보다 북한이탈주민 지원이 '남한 사회의 안정'과 직접 맞닿아 있다고 판단하는 '실리주의'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보면, 향후 남북한 통합과정에서 북한 주민에 대한 지원이 직접적으로 한반도의 안정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커지게 될 경우 그 지지도가 반대보다 커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지원을 통한 '인도주의' 가치 실현을 제고한다는 판단이 가능해진다면, 지지의 폭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3가지 통일 비용과 관련한 쟁점의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적 비용

사용 목적 및 내용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 확보 관건
성별, 이념 등 경제사회적 배경에 따른 지원 견해차 고려,
대상 별 비용 지지 방안 모색

사회문화적 비용

사람들간 '거리두기' 고착화 대비
특히, 우리 사회 소외 가능 집단 및
계층과의 사회문화적 통합 방안 모색 필요

'지원 vs. 인권' 의식과 가치관

북한이탈주민 지원, 대북 지원에 내포된 '인도주의' 가치발견,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 대북지원 축소라는 상반된 인식에서
〈인도주의〉와 〈실리주의〉 연계 요구 파악

[그림 2-Ⅰ-3] '지원·인권·관계' 의식 지형과 통일비용 쟁점

4. 소결: 국민의식의 향방과 통일론, 통일세

본 조사 결과에서 우세적인 응답률을 보인 답변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다. 즉, 대북지원을 현재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줄이되, 단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게 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통해 북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며, 남한에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하기보다 '선택적'으로 수용하되 일단 남한에 입국한 이후에는 지원을 확대하여 정착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대세 속에 국민들의 의식은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자면, '대북지원, 인권, 북한이탈주민' 각 영역별로 각각에 대한 지원과 개선이 상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는 현재 논의되는 통일비용, 통일세와 관련한 국민 의식의 향방을 가늠케 해준다.

대북지원에 대한 견해가 현재로서는 인도주의의 실현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구심으로 '축소 및 현재 수준 유지'라는 견해가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를 크게 앞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대북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가 매해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는 점은 향후 대북지원에 대한 지지도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오히려 대북지원으로 인한 '국민 세부담'에 대한 우려는 매년 줄어들고 있고,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요구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확대 견해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도 유의 깊게 볼 필요가 있다. 이는 우리국민의 의식이 '인도주의'라는 목적의식에 부합할 경우 '세 부담' 자체만으로 반대의사를 굳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견해는 인도주의와 실리주의 두 차원 모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즉, 북한이

탈주민의 남한사회 정착을 위해서라는 인도주의적 차원의 목적의식이 작용하기도 했겠지만, 현재의 삶에서 이웃할 수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남한 사회의 안정과 무관하지 않다는 '실리주의'적 가치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향후 통일 비용, 통일세, 통일논의가 정치적 목적 지향을 비롯한 목적의 왜곡과 오용을 넘어 본연의 합목적성을 지향하고 있다는 국민적 공감대를 넓혀 나갈 수 있다면, 더욱이 한반도의 안정과 발전에 맞닿아 있다는 '실리주의'적인 현실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서 분명해 진다면, 통일비용, 통일세에 대한 공감대 확대와 통일논의의 진전은 속도를 높여가게 될 것이다.

Ⅱ. 정치 이념과 대북 정책: 이념 집단별 인식의 비교

2010년 통일의식조사는 천안함 사건 이후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그 사건이 북한, 통일,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조사였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북한에 대한 적개심이 높아졌지만 동시에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도 컸다. 한편 천안함 사건의 영향 하에 실시된 6월 지방선거에서 집권 한나라당은 이른바 '북풍 전략'에도 불구하고 선거에서 패배했다. 북한의 소행에 대한 분노와 함께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려 한 데 대한 불만도 동시에 표출되었던 셈이다. 이와 같이 서로 상반된 국민의 반응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올바른 대북 정책의 마련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이 글에서는 정치 이념이 북한과 통일, 대북 정책에 대한 해석과 평가에 어

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에서 주목하는 독립변인은 이념이다. 이미 기존 연구에서 여러 차례 입증된 것처럼 한국 사회에서 보수와 진보 이념을 구분하는 매우 핵심적인 변수 중 하나는 반공이데올로기를 둘러싼 시각의 차이이다.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봐야하나, 대북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나, 미국과의 관계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 등이 모두 이념 갈등의 중요한 요인들이었다. 이 글에서는 응답자의 주관적 이념 평가에 따라 보수, 중도, 진보의 세 집단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별로 북한과 대북정책에 대해서 얼마나 상이한 시각을 취하고 있는지 분석할 것이다. 특히 이 조사가 천안함 사건 이후에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북한의 공세적 행태가 이념 집단별로 시각의 변화와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할 것이다. 이념 집단별 분석과 함께 현재의 대북정책에 긍정 혹은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이들의 사회경제적 속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이다.

1. 이념과 대북 정책

서구에서 정치 이념은 대체로 경제적 재화의 배분을 둘러싼 입장의 차이에 의해 나눠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흔히 좌파(left)와 우파(right)로 불리는 이념 갈등은 근대 사회의 계급정치적 균열을 대표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이념 갈등은 종종 북한이나 그와 관련된 반공이데올로기에 대한 수용 여부와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 따라서 대북정책에 대한 시각의 차이는 보수나 진보냐 하는 이념적 정체성을 규정하는 핵심 변수가 되고 있다.

한국 사회에서 이념적 정체성의 구분이 북한과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면 이념 집단별로 북한과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인식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우선 각 이념 집단별

로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살펴보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표 2-Ⅱ-1>은 북한에 대해서 각 이념 집단이 각각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각 질문에 대한 평균값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모두 네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다. '북한 정권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볼 수 있느냐', '북한 정권은 통일을 희망한다고 생각하느냐', '북한 사회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느냐',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이다. 이 네 가지 질문은 대체로 대북 정책의 파트너로서 북한 정권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하는 것으로 그 특성을 요약해 볼 수 있다. <표 2-Ⅱ-1>에서 보는 것처럼, 이념 집단별로 대체로 일관된 인식의 차이가 확인된다.

북한 정권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진보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으며 중도, 보수로 갈수록 부정적인 응답이 강해졌다. 북한 정권이 통일을 원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유사한 패턴의 응답이 확인된다. 진보에서 보수 쪽으로 갈수록 통일을 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의 비율이 커졌다. 그러나 이념 집단과 무관하게 대체로 부정적인 응답의 강도가 강하다는 점도 지적할 만하다. 북한이 최근 얼마나 변화하고 있느냐는 데 대한 질문에 대해서도 진보에서 보수로 갈수록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이념 집단 간 상이한 태도는 분산분석 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세 가지 응답을 요약하면, 보수적 시각은 북한은 대화, 타협이 어렵고 통일도 원하지 않으며 그 사이 내부적으로 별로 바뀐 게 없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보수의 입장은 북한에 대한 높은 불신을 나타내고 있다. 중도는 보수보다는 그런 불신의 정도가 덜 하고 진보의 경우 비교적 그런 불신이 가장 약한 편인 셈이다.

네 번째 질문은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의 패턴은 앞의 세 가지 질문과는 상이한 형태로 나타났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념 집단 간 의견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탓인지 아니면 분단과 한국전쟁 이후 크고 작은 도발이 지속되어 온 탓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대부분의 응답은 어느 정도 그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 모아졌다.

<표 2-Ⅱ-1>에서의 질문은 군사적이든, 외교적이든, 경제적이든, 혹은 민족적이든 남한의 대북 정책의 '파트너'로서의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를 물어본 것인데, 이념 집단별로 북한 정권을 바라보는 시각은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국 정치에서 대북 정책에 대한 상이한 평가와 이를 둘러싼 갈등의 출발점은 바로 이러한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로부터 비롯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다른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은 흥미롭다.

표 2-Ⅱ-1 북한에 대한 이념 집단별 인식

질문	이념	평균	분산분석
[1]북한 정권은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	진보	2.66	F=15.5 p<0.00
	중도	2.75	
	보수	2.98	
[2]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	진보	2.92	F=6.5 p<0.00
	중도	3.07	
	보수	3.11	
[3]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진보	2.51	F=6.2 p<0.00
	중도	2.68	
	보수	2.70	
[4]향후 북한의 무력 도발 가능성	진보	2.19	F=0.43 p=0.65
	중도	2.23	
	보수	2.23	

1: 1-매우 가능, 2-어느 정도 가능, 3-별로 가능하지 않다, 4-전혀 가능하지 않다.
2: 1- 매우 원한다, 2-다소 원한다, 3-별로 원하지 않는다, 4-전혀 원하지 않는다.
3: 1- 많이 변하고 있다, 2-약간 변하고 있다, 3-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4-전혀 변하지 않고 있다.
4: 1-많이 있다, 2-약간 있다, 3-별로 없다, 4-전혀 없다

그런데 대화, 접촉, 협력의 파트너로서 북한 정권에 대한 평가는 다소 막연하고 주관적 응답자의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우리와의 직접, 간접적 연관 속에서 북한을 평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혹은 천안함 사태와 같은 단기적 요인, 상황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 결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는 응답자들이 북한을 우리에게 어떤 대상으로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즉 남한과의 관계 속에서 북한의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평가하도록 했다. 그 결과가 <표 2-Ⅱ-2>에 정리되어 있다.

표 2-Ⅱ-2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

	진보	중도	보수
지원 대상	17.8	20.5	19.2
협력 대상	49.2	44.7	37.5
경쟁 대상	3.0	3.5	3.4
경계 대상	18.8	21.8	21.1
적대 대상	11.1	9.4	18.8
합계(N)	100.0(398)	100.0(541)	100.0(261)
카이제곱 검정	Pearson 카이제곱 20.1 df=8 $p<0.05$		

<표 2-Ⅱ-2>에서는 <표 2-Ⅱ-1>에서와는 다소 다른 응답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은 보수, 진보, 중도의 구분 없이 대체로 유사한 응답의 패턴을 보이고 있다. 가장 많은 응답을 보인 것은 북한은 우리의 협력 대상이라는 것이었다. 진보 집단에서는 거의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그렇게 응답했고 보수 집단에서도 그 비율은 37.5%로 가장 높았다. 북한은 우리의 지원대상이라는 비교적 호의적이고 유화적인 정책적 입장에 대한 응답은 진보 집단보다 오히려 중도, 보수 집단에서 다소나마 높게 나타났다. 지원대상과 협력대상이라는 유화적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응답을 합하면 진보 집단 67%, 중도 집단 65.2%, 보수 집단 56.7%으로 나타났다. 이념 성향과 무관하게 절반 이상(진보, 중도의 경우에는 2/3)의 응답자가 북한을 바라보는 시각이 오히려 협력이나 지원 대상이라는 유화적인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북한이 우리의 경쟁 대상이라는 응답은 이념과 무관하게 대체로 3% 선에 머물렀다. 북한에 대한 남한 사람들의 자신감을 엿볼 수 있다.

<표 2-Ⅱ-2>에서 이념 집단과 무관하게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은 북

한을 경계대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이다. 보수 집단의 21.1%, 중도 집단의 21.8% 그리고 진보 집단의 18.8%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이념 집단 간 차이가 있지만 그 차이는 예상했던 만큼 그리 크지 않았다. 반면 북한이 적대 대상이라는 응답은 다소 차이를 보였는데, 보수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은 18.8%인 반면 진보 집단에서 그렇다는 응답은 11.1%, 그리고 중도 집단은 9.4%에 불과했다. 보수 집단에서 북한을 적대적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유독 강하게 나타났다. 경계 대상이라는 인식까지 합하면, 북한을 다소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보수 집단의 경우 39.9%, 중도 집단은 31.2%, 그리고 진보 집단은 29.9%로 나타났다.

<표 2-Ⅱ-2>의 결과는 매우 흥미로운 경향을 보여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념 집단별로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시각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체로 유사한 응답의 패턴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사한 응답 패턴 속에서도 보수 대 진보의 시각 차이는 확인이 되는데,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경계 혹은 적대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하는데서 두 집단 간 대체로 10% 정도의 응답의 차이가 존재했다. 예상대로, 보수 집단의 경우 적대·경계 대상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강한 반면, 진보 집단의 경우에는 그런 적대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표 2-Ⅱ-1>에서도 지적한 대로 북한 정권에 대한 신뢰감에 있어서 이념 집단 간 상당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2-Ⅱ-1>과 <표 2-Ⅱ-2>에서는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과 관련된 흥미로운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을 어떤 대상으로 바라봐야 하는가라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이념별 차이가 크지 않았지만, 대북 정책의 '파트너'로서 북한에 대한 신뢰감은 커다란 차이를 보였다. 즉 구체적인 대북 정책 추진의 방식에 대해서는 이념 집단 간 상당

한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고 이것이 정치적 갈등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음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사실 남한의 현실정치 속에서 북한이 갈등의 원천이 된 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김영삼 정부 때 대북 쌀 지원 문제를 둘러싼 것이거나, 보다 분명하게는 김대중 정부 때의 햇볕정책 추진으로 인해 과거 냉전 시대에 적대적인 대북 정책으로부터 변화가 발생했을 때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에 대해서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이들은 북한에 대한 강경한 정책을 주장해 온 반면, 진보적인 성향의 국민들은 대북 유화정책을 선호해 왔다. 그러나 그 차이를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것 같다. 부분적으로 '경향성'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표 2-Ⅱ-2>에서 볼 수 있는 대로 기본적인 응답의 패턴은 보수, 중도, 진보와 무관하게 대체로 유사한 형태를 보였기 때문이다. 즉 북한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념 집단별로 예상만큼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정치 이념에 따른 상이한 태도를 확인하기 위해 두 가지 차원에서 개별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았다. <표 2-Ⅱ-3>는 각 항목의 대북정책이 통일에 얼마나 도움이 될 것이냐에 대한 질문의 응답이고, <표 2-Ⅱ-4>는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각 항목의 대북 정책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응답을 정리한 것이다. 비슷한 질문으로도 볼 수 있지만 <표 2-Ⅱ-3>가 규범적 속성의 질문이라면 <표 2-Ⅱ-4>는 정책의 우선순위와 같은 단기적, 전략적 고려가 포함된 질문으로 구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2-Ⅱ-3>에서 이념 집단 간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었지만 그 패턴은 질문마다 조금씩 달랐다. 쌀, 비료, 의약품 등 인도적 대북 지원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념 집단 간 분명한 시각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진보적일수록 긍정적이었으며 보수적으로 갈수록 부

정적이었다. 학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등 사회문화 교류에 대한 것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개성관광 등 경제 협력에 대한 질문에서도 진보 집단과 중도-보수 집단의 양극적 패턴으로 입장이 구분되었다. 한편, 정기적인 남북한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집단 간 평균의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다른 항목과 평균값을 비교할 때 대체로 긍정적 평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사회 분야의 대북 교류에 대한 시각은 이념 집단별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남북한 간 정치적 대화의 필요성에는 대체로 그 필요성은 인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안의 시급성을 물어본 <표 2-Ⅱ-4>에서는 모두 여섯 가지 대북정책이 제시되었는데 몇 가지 특성이 주목할 특성이 발견된다. <표 2-Ⅱ-3>와 비교할 때도 조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여섯 가지 대북 정책의 시급함에 대한 응답은 예상과는 달리 그다지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았고 사안에 따라서는 이념에 따른 차별성이 그다지 크지 않게 나타났다. 여섯 가지 질문 중 군사적 긴장 해소,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해결에 대해서는 이념 집단별 차이가 없었는데 시급하다는 응답이 대체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특히 군사적 긴장 해소는 여섯 가지 항목 중 가장 시급하다고 나타났는데, 천안함 사건 이후 남북한 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개방과 개혁은 분산분석 결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차이는 보수 대 진보가 아니라 중도와 진보간의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말하자면 이 사안 역시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보수 대 진보 간의 시각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인권 개선 문제 역시 통계적 유의미성이 확인되었지만 F 값은 비교적 작았다. 여기서 특이할 만한 한 사실은 북한의 인권 개선

의 시급함에 대한 높은 평가이다. 전체 평균은 군사적 긴장 해소(1.74) 다음으로 낮은 1.82로 나타나 여섯 가지 정책 사안 가운데 두 번째로 시급함을 크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수와 진보 간 시각 차이가 분명했던 것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두 가지 사안이었다.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 진보 대 중도-보수로 의견이 갈렸는데 진보는 시급하다고 본 반면, 중도-보수는 상대적으로 덜 시급한 문제로 보았다. 그런데 이 응답 패턴은 <표 2-Ⅱ-3>에서 본 응답 패턴과 비교할 때 흥미로운 차이를 보인다. <표 2-Ⅱ-3>에서는 보수, 중도, 진보를 막론하고 정기적인 남북한 회담이 통일에 도움이 된다고 인식했고, 평균값도 네 개의 질문 중 제일 낮았다. 그런데 시급함을 물은 질문에 대해서는 진보와 보수-중도 간 의견의 차이를 보였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단기적, 전략적 고려로부터의 평가 사이의 차이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즉 궁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은 통일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는데 공감대가 존재하지만 당장 시급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념 집단별로 각기 다른 입장을 나타낸 것이다.

한편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역시 이념 성향별로 매우 뚜렷한 응답의 차이를 보였다. 예상대로, 진보-중도-보수로 갈수록 시급하지 않다는 응답이 높았다. 그러나 전체 평균은 2.96으로 매우 큰 값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미군 철수에 대한 입장이 이념 집단별로 다르기는 하지만 시급성에 대한 평가는 그리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본다면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대북정책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한 해소나 이산가족, 국군 포로 해결에 대해서는 통계적으로 입증될 만큼 입장의 차이가 크지 않았고, 북한의 인권 개선 역시 그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았다. 오히려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의 시급함에 대

한 전체적인 인식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 미군 철수가 '전통적인' 보수-진보 논쟁의 한 대상이었는지 모르지만 시급함에 대한 응답의 차이는 사실 근본적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정도였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평가는 진보와 보수-중도 집단 간 상이하게 나타났지만 앞에서의 결과가 함께 고려한다면 근원적 시각의 차이라기보다는 상황적, 전략적 고려가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Ⅱ-3 이념 성향에 따른 대북정책 평가 A

대북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이념	평균	분산분석
쌀, 비료, 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 지원	진보	2.34	F=5.44 p<0.01
	중도	2.48	
	보수	2.55	
	평균	2.45	
학술인, 예술인, 체육인, 종교인 등 사회문화 교류	진보	2.12	F=4.07 p<0.05
	중도	2.26	
	보수	2.24	
	평균	2.21	
금강산, 개성공단, 개성관광 등 경제 협력	진보	2.09	F=3.83 p<0.05
	중도	2.23	
	보수	2.22	
	평균	2.18	
정기적인 남북한 회담	진보	1.97	F=1.53 p=0.22
	중도	2.06	
	보수	2.04	
	평균	2.02	

주: 1-매우 도움이 된다, 2-다소 도움이 된다, 3-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표 2-Ⅱ-4 이념 성향에 따른 대북정책의 시급성에 대한 평가 B

통일을 이루기 위한 사안의 시급함	이념	평균	분산분석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진보	2.01	F=10.7 p<0.00
	중도	2.23	
	보수	2.17	
북한의 개방과 개혁	진보	1.79	F=10.6 p<0.00
	중도	2.02	
	보수	1.91	
군사적 긴장 해소	진보	1.70	F=2.0 p=0.14
	중도	1.79	
	보수	1.71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진보	2.80	F=12.6 p<0.00
	중도	2.99	
	보수	3.11	
이산가족 및 국군 포로 문제 해결	진보	1.90	F=1.5 p=0.22
	중도	1.98	
	보수	2.00	
북한의 인권 개선	진보	1.75	F=3.2 p<0.05
	중도	1.88	
	보수	1.82	

주: 1-매우 시급하다, 2-다소 시급하다, 3-별로 시급하지 않다, 4-전혀 시급하지 않다

지금까지의 논의 결과는 대북 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이념 갈등에 대해 기존의 해석과는 다소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표 2-Ⅱ-1>에서 <표 2-Ⅱ-4>까지 살펴본 대로, 북한과 관련된 각 질문에 대한 이념 집단별 응답 패턴을 보면, 이념에 따른 시각이 그리 크지 않거나 대체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거나 혹은 이념적 차이가 확인되더라도

어느 한 방향으로 몰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북한 정권에 대한 인식과 같은 일부 대북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비교적 분명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지만,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념적 차이가 북한 혹은 보다 구체적으로는 대북정책을 둘러싼 근본적인 세계관의 차이, 혹은 보편적 인식 틀의 상이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오히려 사안마다 다른 응답의 모습을 보이고 태도의 일관성도 그다지 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국내정치와 대북 정책 인식

지금까지 살펴본 결과를 보면, 이념 집단 간 북한과 대북 정책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예상과는 달리 그 차이가 아주 크지 않았고 또 그 차이가 일관된 패턴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현실 정치적으로 본다면 '북한 변수'를 둘러싼 국내 정치적 갈등은 우려를 자아낼 만큼 커다란 간극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고려하면 북한 변수가 국내 정치적으로 이념 갈등을 격화시킨 것은 북한에 대한 인식의 차이보다 그것이 국내 정치적 요인과 결합하면서 확대 재생산된 탓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북한 변수는 결국 북한이 아니라 국내 정치의 문제라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북한에 대한 태도와 국내 정치적 요인 간의 관계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선 통일과 남북한의 민주주의의 관계에 대한 응답의 특성을 분석했다. 여기서의 관심은 민주주의와 통일에 대한 관계에 대한 인식이 남북한 간에 서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지 아니면 각기 상이한 기준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정리한 것이 <표 2-Ⅱ-5>의 결과이다.

표 2-Ⅱ-5 통일과 남북한의 민주주의

구분	항목	진보	중도	보수	카이제곱 검정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 관계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	21.6	17.6	13.8	$\chi^2=17.3$ df=4 $p<0.01$
	남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통일 가능	33.9	28.9	25.8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는 관계없다.	44.5	53.5	60.4	
	합계(N)	100.0(398)	100.0(540)	100.0(260)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 관계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 실현	36.2	31.2	37.9	$\chi^2=7.8$ df=4 $p=0.1$
	북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통일 가능	35.2	34.8	28.4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는 관계없다.	28.6	34.0	33.7	
	합계(N)	100.0(398)	100.0(541)	100.0(261)	

<표 2-Ⅱ-5>에서는 남한과 북한에 대한 상이한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 간의 관계를 보면, 보수의 60.4%는 남한 민주주의와 통일 간의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반면, 진보 집단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비율은 44.5%에 그쳤다. 즉 진보 집단에서는 절반 이상의 응답자가 통일 문제와 국내 정치, 즉 민주주의의 관련성을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보수 집단에서 그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았다. 중도 집단의 응답은 그 중간이었다. 남한의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통일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남한의 정치적 발전이 통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으로 국내 정치변수의 중요성을 보다 중시하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은 진보 33.9%, 중도 28.9% 그리고 보수는 25.8%로 나타났다.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실

현될 것이라는 시각은 통일을 남한 민주주의의 독립변수로 바라본 것이다. 남한 민주주의가 통일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보다는 국내 정치 변수의 영향을 소극적으로 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대한 응답은 진보 21.6%, 중도 17.6%, 보수 13.8%로 나타났다. 남한 민주주의와 통일 간의 관계에 대한 응답의 패턴은 보수, 중도, 진보 간 매우 일관되고 뚜렷한 패턴을 보여줬으며, 카이제곱 검정을 통해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이념 집단 간 이러한 태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이다. 우선 교차분석의 결과가 95%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각 항목별 보수-중도-진보 집단 간의 응답이 순서대로 변화하는 일관된 패턴을 나타내고 있지도 않다. 다만 어느 집단에서든 북한 민주주의와 통일 간에 관계가 없다는 응답은 남한 사례에 비해서 크게 낮아서 28~34% 수준이었다. 즉 이념 집단과 무관하게 북한 민주주의는 통일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도 북한을 바라보는 이념 집단 간 인식의 차이는 남한 내부 문제일 때에 비해 그다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표 2-Ⅱ-5>의 결과가 보여주는 것은 한국 사회의 이념 갈등이 대북 정책을 중심으로 격화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그것이 정치적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은 북한보다는 남한의 국내 정치적 요소와 보다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국내 정치적 요소를 고려하여 대북정책에 대한 이념 집단별 평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표 2-Ⅱ-6>은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를 이념 집단별로 나눠 본 것이다. 두 가지 질문이 포함되어 있는데 하나는 전반적인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대북 정책 방향의 설정이 국

민적 공감대 위에서 추진되고 있느냐 하는 국민적 요구의 수용성에 대한 것이었다. <표 2-Ⅱ-6>의 결과는 무척 흥미롭다. 두 질문 모두에 대한 응답에서 이념 집단별로 매우 분명하고도 일관된 패턴이 나타났다.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진보 집단에서 가장 낮았고 중도, 보수의 순으로 높아져 갔다. 현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결정할 때 국민 의견을 얼마나 반영하는가에 대한 응답에 대해서도 보수-중도-진보의 순으로 만족도가 높음에서 낮음으로 변해갔다. 이런 응답은 물론 이명박 정부가 보수적인 대북 정책을 취해 왔기 때문에 보수 집단에서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크고, 진보층에서의 만족도가 낮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 본 대로 실제로 구체적인 대북 정책에 대해서는 이념 집단 간 이처럼 분명하고 일관된 패턴의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다. 대북 정책이 국내 정치의 문제로 회귀할 때 이념 집단 간 시각의 차이는 대단히 분명하고 일관된 형태를 보이는 것이다. 한편, 현 정부가 국민 의견을 참조한다는 데 대한 응답의 평균은 전반적으로 낮은 편이었다는 점도 특이할 만하다. 자주 지적되어 온 이명박 정부의 소통 부재의 문제점이 여기서도 드러나는 것으로 보인다.

표 2-Ⅱ-6 이념 성향에 따른 대북정책 평가

태도	이념	평균	분산분석
현 정부 대북 정책에 대한 만족도	진보	2.79	F=9.9 p<0.00
	중도	2.68	
	보수	2.54	
현 정부 대북정책 결정시 국민 의견 반영 정도	진보	2.92	F=10.0 p<0.00
	중도	2.84	
	보수	2.69	

주: 1-매우 만족, 2-다소 만족, 3-다소 불만족, 4-매우 불만족

국내 정치적 요인의 효과를 보다 분명히 보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 평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사실 이 두 가지 내용은 서로 긴밀하게 관련되어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와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 평가에 대한 상관관계는 0.38($p<0.0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사실 이 두 변인 간의 인과관계는 어느 것이 독립변수이고 종속변수인지 그리 분명하지는 않다. 그러나 대통령에 대한 직무 평가가 주요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 수행을 포함하고 있다면 대북정책은 매우 중요한 평가 대상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표 2-Ⅱ-7 대북정책 만족도에 따른 이명박 대통령 직무 평가

대북정책 만족도	이명박 대통령 직무평가	N	분산분석
매우 만족	1.94	35	F=67.4 p<0.00
다소 만족	2.44	439	
다소 불만족	2.82	596	
매우 불만족	3.35	130	

주: 이명박 대통령 직무평가 1-매우 잘하고 있다, 2-대체로 잘하고 있다, 3-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4-매우 잘못하고 있다

<표 2-Ⅱ-7>은 매우 분명하고 일관된 평가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고, 대북 정책 만족도가 떨어질수록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현재의 대북 정책에 '매우 만족'하는 것으로 응답한 응답자의 수가 비교적 소수라는 점도 지적해 둘 만하다. <표 2-Ⅱ-7>은 대북정책에 대한 평가가 국내 정치적 평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다시 확인시켜주고 있다.

3. 소결: 보수와 진보를 넘어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한국 사회에서 나타나는 이념 집단 간 북한을 둘러싼 갈등은 실제보다 정치적으로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이념 집단 간 서로 상이한 시각과 세계관을 갖는 것은 다원주의 정치 사회에서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북한 변수를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이견과 대립, 이른바 '남남 갈등'은 종종 격렬한 대립과 충돌로 이어지곤 했다. 그러나 앞의 분석에서 본 대로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사안별로는 보수, 중도, 진보의 이념 집단 간 의견이 수렴되는 항목도 적지 않았고 더욱이 전 영역에 걸쳐 일관되고 분명한 차별적인 응답의 패턴을 보이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오히려 국내 정치적 요소가 개입되는 경우에 대북 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심각하게 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남 갈등'은 북한에 대한 태도보다 국내정치적 함의를 더욱 크게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만큼 북한 변수를 둘러싼 이념 갈등이 극복하기 불가능한 것이 아니며, 그런 만큼 이제는 그러한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이념 집단 간 의견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이 의미 있게 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번 조사는 특히 천안함 사건 이후 실시되었다는 점에서 이러한 발견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생각된다. 천안함 사건이라는 커다란 충격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이 대북정책과 관련하여 어느 한 방향으로 급속히 치우쳐져 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표 2-Ⅱ-8>은 남북 교류가 통일에 어느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도움이 된다'는 긍정적인 답변의 비율을 연도별로 정리한 것이다. 흥미롭게도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교류가 통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2010년 조사에서도 여전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기적인 남북 간 회담이 통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천안함 사건을 겪은 2010년 조사에서 오히려 이전에 비해 다소나마 높아졌다. 남북한

경제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도 이전에 비해 높아졌다. 사회문화교류 및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도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모두 통일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남북 교류가 통일에 도움을 줄 것이라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평가는 천안함 사건과 같은 단기적 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표 2-Ⅱ-8 남북 교류가 통일에 도움을 주는 정도

	2010	2009	2008	2007
정기적 남북 간 회담	75.3	73.3	64.3	74.7
남북한 경제 협력	68.6	64.2	57.3	72.5
사회문화교류	66.8	68.1	59.9	69.7
인도적 지원	52.3	54.0	51.8	57.4

* 표의 비율은 모두 [매우 도움 + 다소 도움]

그러나 <표 2-Ⅱ-3>, <표 2-Ⅱ-4>에서 본 대로, 장기적 평가와 단기적 대응에 대한 태도는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남북회담의 정례화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것과 통일을 위해 시급한 일이라는 두 질문에 대한 이념 집단 간 응답에는 차이가 있었다. 여기서 보듯이 네 명 중 세 명이 정기적 남북 회담이 통일에 유익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그 시급성에 대해서는 이념 집단 간 차이가 있었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두 가지 가능성을 제기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나는 앞서 지적한 대로, 원칙적으로 필요하더라도 방법론, 전략의 문제로 이를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미래에 정례적인 남북 정상 간 회합이 필요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또 다른 가능성은 두 가지 상반된 메시지가 동시에 제시되었을 수도 있다. 즉 천안함 사건과 같은 북한의 적대적 행위에 대해 대응해야 하지만 동시에 교류 협력

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도 안 된다는 두 가지 메시지가 동시에 표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표 2-Ⅱ-9>에서는 여섯 가지 쟁점이 되는 대북정책에 대한 응답의 패턴을 요인 분석을 통해 그 특성을 요약해 보았다. 매우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

표 2-Ⅱ-9 대북정책 관련 쟁점에 대한 요인분석(회전된 성분 행렬)

대북 정책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	성분	
	1	2
약간의 희생에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847	-.048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849	-.074
북핵 해결 전에는 대북지원 하지 말아야 한다	-.229	.707
대북 삐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	.429	.194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434	.655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110	.857

요인추출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멕스.

요인 분석 결과 대북 관련 여섯 가지 쟁점에 대한 응답은 두 가지 성분으로 구분되었다. 개성공단 유지, 금강산 관광 재개, 대북 삐라 살포 제재가 하나의 성분으로 나타났으며, 북핵과 대북 지원 연계, 북한 인권 문제 제기, 국제사회 대북 제재 동참을 또 다른 성분 속에 포함되었다. 성분 1은 대북 협력 사업의 지속,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의 제한과 같은 대북 협력 혹은 유화적인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반면, 성분 2는 이와는 반대로 보다 공세적이고 적대적인 대북 제재를 강조하는 태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말하자면 대북 정책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은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강경과 온건의 두 가지 태도를 모

두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에서는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에 대한 제재나 영향력 행사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북 교류 사업을 아예 중단하거나 북한을 자극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태도도 동시에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응답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대단히 현실적인 반응이라고 생각된다.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적대적인 공세와 같은 어떤 한 방향으로 대북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이 <표 2-Ⅱ-9>에는 포함되어 있다.

전체적으로 여기서의 논의를 요약한다면, 북한 변수가 한국 사회의 정치적 갈등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지만 사실 보수, 중도, 진보 집단 간 시각의 차이는 예상만큼 일관되고 포괄적인 형태를 보이지 않았다. 사안별로는 오히려 시각의 수렴도 확인되었다. 그러나 국내 정치적 요인과 결합하면서 격화되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천안함 사건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대한 대응은 공세적인 것과 유화적인 것 모두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대북 정책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이념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대북정책이 이념적 경직성에서 벗어나 보다 유연하고 실용적인 대응을 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Ⅲ. 통일·북한인식의 지형분석: 지역과 이념

지역과 이념은 한국의 정치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구조적 갈등의 두 산맥이다. 어느 사회나 갈등은 존재하고 또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한국사회에서 이념갈등과 지역갈등은 남북분단과 권위주의 정치체제에 의해 확대·재생산되어 왔다. 영호남의 지역갈등과 진보-보수의 이념갈등은 한국의 권위주의 시대를 상징하는 담론이 되었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기를 지나면서 대북정책을 둘러싼 의견대립이 심화되었다. 대북정책과 북한인식, 통일에 대한 생각, 주변국을 바라보는 시각 등 여러 측면에서 지역간, 이념성향간 차이가 심각한 사회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통일·대북인식에서의 지역·이념에 의한 지형이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2008년 이후 어떻게 변화하였으며, 2010년의 상황은 어떠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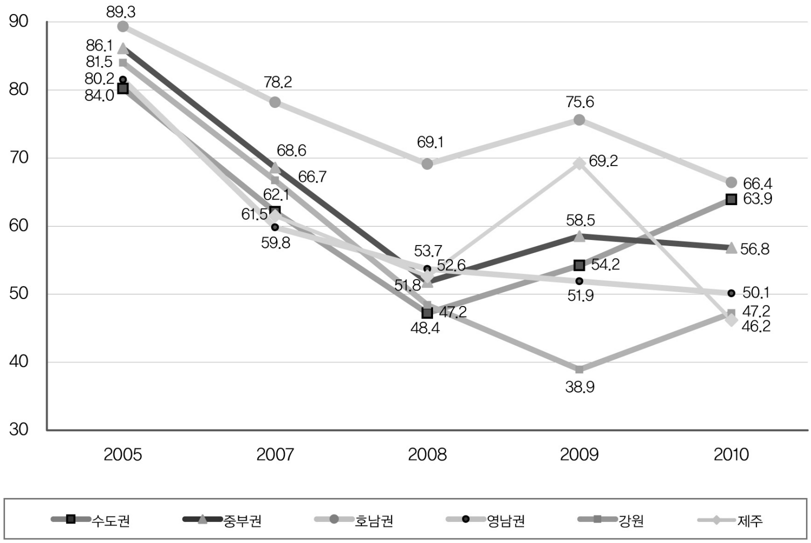
가?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은 완화되고 있는가, 아니면 어떤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는가?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이라는 북한변수와 6.2지방선거라는 국내정치 변수가 대북·통일 인식과 정책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런 맥락에서 이 장은 지역과 이념 변수에 따라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2010년 8월 현재 지역과 이념에 따라 통일·북한·대북정책·새터민·주변국 인식이 어떻게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 정권교체 효과가 지속되고 있는지, 북한효과와 국내정치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1. 지역갈등의 지형 변화

1) 통일인식

아래의 [그림 3-Ⅲ-1]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10년 통일인식의 지역별 차이는 2009년에 비해 상당히 좁혀졌음을 알 수 있다. 2005년까지만 해도 80~90%에 달하던 높은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최근 몇 년 동안 급격히 약화되면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벌어져 2009년에 가장 큰 지역격차가 발생했고, 이러한 지역별 분화현상이 2010년에는 다시 완화되는 양상으로 발전했다. 즉 심화되던 지역별 격차가 현격히 줄어들면서 통일인식이 한 곳으로 모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아마도 천암함 사건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국민의식이 일정한 공감대를 형성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림 3-Ⅲ-1] 지역별 통일의 필요성 인식 추이 (2005~2010년)

2010년의 조사결과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63.9%)과 호남권(66.4%)은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높게 나타나 통일에 적극적인 반면, 중부권(56.8%)과 영남권(50.1%), 강원(47.2%), 제주(54.8%)는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낮게 나타나 통일에 소극적으로 임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전통적으로 통일에 적극적이었던 호남권 응답자들이 지난해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호남권 응답자들은 75.6%였던데 비해 올해는 66.4%로 크게 감소했다.

통일인식의 지형변화 추이를 보면, 2008년의 경우 지역적 응답분포가 매우 특이하게 나타났다. 호남권이 69.1%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중부권과 수도권에서 통일 필요성 응답이 각각 51.8%, 47.2%로 영남권(53.7%)보다 낮아졌다. 호남권-수도·중부권-영남권 순으로 형성

되었던 지형에서 2008년에 수도·중부권과 영남권의 뒤바뀜 현상이 나타난 것이다. 즉 수도권과 중부권이 통일인식에서 매우 부정적 태도를 보인 것이다. 이는 수도권과 중부권이 2007년 말 대선 정국에서 보수정당을 지지함으로써 기존 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것과 관련이 있다.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비판이 부각되면서 대통령선거의 학습효과가 통일의식조사에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2009년의 추이를 보면 [그림 3-Ⅲ-1]에서 보이듯 호남권(75.6%)이 높은 위치를 유지한 반면, 수도·중부권이 다시 영남권과 분리되어 호남권-영남권의 중간에 위치함으로써 2007년의 지형으로 다시 복귀하였다. 호남권과 영남권(51.9%)의 격차가 23.7%로 크게 벌어지고, 수도권(54.2%) 중부권(58.5%)이 중간으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보면, 2008년에는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이른바 정권교체 효과가 작용했으나, 2009년에는 정권교체 효과가 사라지고, 영호남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기존의 지역갈등 형태로의 회귀현상이 나타났다.

2010년에는 중부권과 영남권은 큰 변화가 없는 반면, 수도권과 강원은 올라갔고 호남권과 제주는 감소했다. 2009년도에 지역편차를 벌이는데 기여했던 호남권과 강원지역이 수렴현상을 보임으로써 2010년에 지역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 또한 2009년에 호남권과 함께 높은 통일인식을 보이며 지역격차를 벌이는 데 기여했던 제주권이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함으로써 통일인식의 지형변화를 가져왔다.

[그림 3-Ⅲ-1]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까지 통일인식의 지역별 분화가 지속되다가 2010년에 수렴하는 현상으로 발전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속적으로 분화현상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예상했었는데, 2010년에 북한효과가 작용함으로써 지역별 분화가 억제되었다. 1990년대에 모

든 지역에서 90%이상의 높은 통일인식이 형성되어 지역간 의견차이가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이후 통일인식이 호남권에서는 비교적 높게 유지된 반면 다른 지역, 특히 영남권에서는 빠른 속도로 낮아지고 수도권과 중부권, 강원, 제주 등 지역간에 상당한 격차가 벌어졌다. 이러한 추세가 2010년에 꺾이고 지역간 수렴현상으로 회귀하는 양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통일·대북정책에 대한 높은 관심과 지지를 보내던 호남권과 제주가 다른 지역과 비슷한 의식으로 변화하고 있고 수도권과 강원이 남북관계의 불안정성 증대로 인해 통일과 대화의 필요성을 새삼 인식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 북한인식

북한존재에 대한 인식에 대한 지역 차이는 <표 2-Ⅲ-1>에서 보듯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다. 북한을 '경계대상'으로 인식하는 경향은 영남권과 중부권이 각각 32.7%, 25.4%로 호남권(10.1%)과 수도권(15.1%)에 비해 높았다. 반면, 지원대상이라는 인식은 호남권이 27.7%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강했다. 2009년과 비교하면 수도권의 대북 경계의식이 22.3%(09년)→15.1%로 낮아진 반면, 중부권의 경계의식은 17.8%(09년)→25.4%로 높아졌다. 북한존재 인식에서 영남권은 큰 변화가 없으며, 기존에 다른 지역과 현저한 차이가 있었던 호남권의 특성이 약화된 것이 특징적이다. 또 2008년에 정권교체로 요동쳤던 중부권의 의식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안정적·일상적 패턴으로 회귀한 것으로 보이며, 수도권은 대북 경계의식이 2009년에 비해 조금 완화되었다.

표 2-Ⅲ-1 지역별 북한의 대상인식 (2010년)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 지역 교차분석(2010)						Total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	제주	
지원대상	빈도	116	21	33	55	7	0	232
	%	19.7%	17.8%	27.7%	17.0%	19.4%	0%	19.3%
협력대상	빈도	292	51	61	112	11	9	536
	%	49.5%	43.2%	51.3%	34.6%	30.6%	69.2%	44.7%
경쟁대상	빈도	20	5	3	11	1	0	40
	%	3.4%	4.2%	2.5%	3.4%	2.8%	.0%	3.3%
경계대상	빈도	89	30	12	106	8	3	248
	%	15.1%	25.4%	10.1%	32.7%	22.2%	23.1%	20.7%
적대대상	빈도	73	11	10	40	9	1	144
	%	12.4%	9.3%	8.4%	12.3%	25.0%	7.7%	12.0%
Total	빈도	590	118	119	324	36	13	12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70.8,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호남권이 다른 지역보다 북한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현상은 뚜렷하나, 작년에 비해 그 강도가 약화되었다. <표 2-Ⅲ-2>에서 보듯, “북한 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서 호남권은 51.2%가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반면, 영남권은 25.3%로 매우 낮았으며, 수도권과 중부권은 각각 36.3%, 40.6%로 중간 정도를 차지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호남권-수도·중부권-영남권의 세 집단으로 북한인식의 지형이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표 2-Ⅲ-2 대화·타협 가능 상대로서의 북한인식과 지역 (2010년)

		북한정권 대화·타협 가능 상대 * 지역 교차분석(2010)						Total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	제주	
매우 가능하다	빈도	26	3	11	2	2	1	45
	%	4.4%	2.5%	9.2%	.6%	5.6%	7.7%	3.8%
어느 정도 가능하다	빈도	188	45	50	80	10	1	374
	%	31.9%	38.1%	42.0%	24.7%	27.8%	7.7%	31.2%
별로 가능하지 않다	빈도	273	60	45	185	19	9	591
	%	46.3%	50.8%	37.8%	57.1%	52.8%	69.2%	49.2%
전혀 가능하지 않다	빈도	103	10	13	57	5	2	190
	%	17.5%	8.5%	10.9%	17.6%	13.9%	15.4%	15.8%
Total	빈도	590	118	119	324	36	13	12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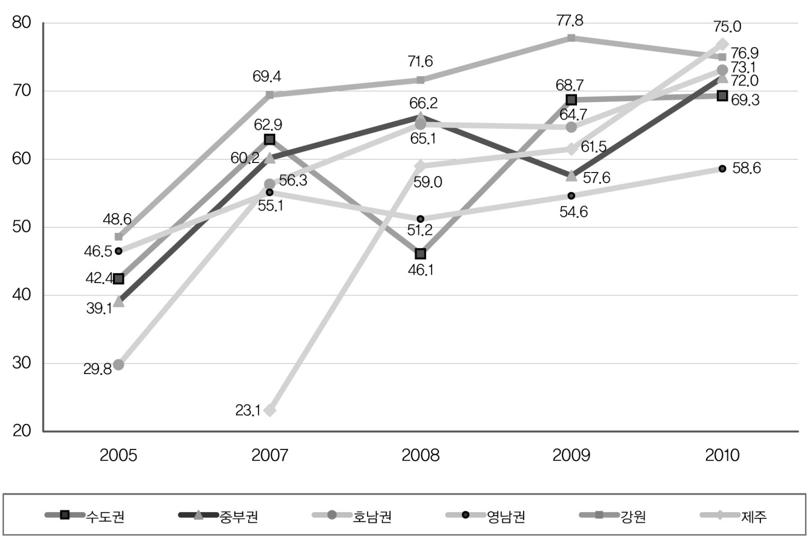
Chi-Square=50.3,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북한으로 인한 불안의식을 평가할 수 있는 '북한에 의한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은 이른바 '북한효과'가 작용하여 영남권을 제외한 호남권, 수도권, 중부권이 매우 높은 불안의식을 갖고 있었다. 2009년에는 중부권이 영남권과 함께 북한의 무력도발을 낮게 인식했으나, 2010년에는 중부권이 영남권으로부터 이탈하여 수도권과 유사한 대북태도를 보였다. 2009년에는 '정권교체 효과'가 작용했다고 한다면, 2010년에는 천안함 사건으로 인해 '북한효과'가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2007년까지는 일반적으로 휴전선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 반면, 휴전선과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낮게 인식하는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1990년대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즉 북한과 근접해 있는 강원·수도권 지역이 북한의 도발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고,

남쪽 지역으로 내려갈수록 낮게 인식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이 2008년에는 조금 달라져 수도권이 영남권과 같은 안정감을 보였는데, 이는 아마도 수도권과 영남권이 이명박 정부를 적극 지지하여 정권을 탄생시켰다는 생각으로 현 정부의 안보에 대한 신뢰를 했었기 때문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2009년에는 수도권의 불안감이 다시 고조된데 반해 중부권이 영남권과 유사하게 안정감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부권이 영남권과 함께 다른 지역에 비해 안보불안을 덜 느꼈다는 것이다. 그러나 2010년에는 중부권과 수도권이 모두 안보불안을 크게 느끼는 것으로 변화되었고 호남권의 안보불안도 매우 높아졌다. 수도권의 안보불안은 2010년에도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중부권과 호남권의 안보불안이 상승하여 전반적으로 호남·수도·중부권 대 영남권의 두 지형으로 안보불안이 자리 잡고 있다([그림 3-Ⅲ-2]).



[그림 3-Ⅲ-2] 지역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우려(2005~2010년)

3) 대북정책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에서도 지역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2009년 대북정책 만족도는 영남권이 51.9%로 가장 높고, 수도권(38.6%)과 중부권(37.3%)이 그 다음을 잇고 호남권은 18.5%로 가장 낮았다. 대북정책 만족도에서는 영남권-수도·중부권-호남권의 세 지형으로 형성되어 있다. 2009년에는 중부권이 호남권과 함께 대북정책에 대한 불만족 그룹에 속했었는데, 2010년에는 중부권이 호남권과 함께 중간그룹을 형성하였다. 이는 2008년의 지형으로 회귀한 것으로 중부권의 대북정책의 만족도가 2010년에 다시 상승하였다. 이는 2009년도에 세종시 문제로 중부권의 현 정권에 대한 비판이 높았던 것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10년에는 세종시 문제가 일단락됨으로써 중부권의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4) 주변국 호감도

2010년의 경우, 국가별 선호도를 살펴보면, 모든 지역에서 미국을 가장 가까운 국가로 인식하였다. 미국선호도는 수도권 70.3%, 중부권 66.9%, 호남권 55.5%, 영남권 78.1%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2010년에는 영남권의 미국선호도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이 특징적이다. 영남권의 미국선호도는 51.7%(07년)→60.9%(08년)→67.0%(09년)→78.1%(10년)으로 급성장했다. 반면 수도권에서는 55.0%(07년)→62.8%(08년)→73.4%(09년)→70.3%(10년)으로 급성장세가 2010년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수도권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는 미국 선호도가 200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3~2005년에는 호남권과 수도권에서 미국선호도가 낮고 북한선

호도는 높은 반면, 중부권과 영남권 및 강원지역에서는 미국선호도가 높고 북한선호도는 낮았다.[1] 2007년 이후에는 미국선호도가 전반적으로 높아진 반면, 북한호감도가 현저히 낮아져 지역간 차이가 줄어들었다. 그러나 북한호감도는 2010년에 영남권에서 14.8%(09년)→8.3%(10년)로 더 낮아진 반면, 호남권과 중부권에서는 각각 24.6%(09년)→27.7%(10년), 16.1%(09년)→22.9%(10년)로 북한호감도가 오히려 높아졌다.

표 2-Ⅲ-3 지역별 주변국 선호도 (2010년)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 지역 교차분석

국 가		지역(2010)						Total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강원	제주	
미 국	빈도	415	79	66	253	27	7	847
	%	70.3%	66.9%	55.5%	78.1%	75.0%	53.8%	70.6%
일 본	빈도	62	7	9	31	3	3	115
	%	10.5%	5.9%	7.6%	9.6%	8.3%	23.1%	9.6%
북 한	빈도	87	27	33	27	3	1	178
	%	14.7%	22.9%	27.7%	8.3%	8.3%	7.7%	14.8%
중 국	빈도	20	4	10	11	3	2	50
	%	3.4%	3.4%	8.4%	3.4%	8.3%	15.4%	4.2%
러시아	빈도	6	1	0	2	0	0	9
	%	1.0%	.8%	.0%	0.6%	.0%	.0%	.8%
Total	빈도	590	118	119	324	36	13	1200
	%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Chi-Square=64.7, p=.000로 95% 신뢰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

1– 김병로, "북한·통일 관련 세대·계층·지역별 의식," 『제3차 한국종합사회조사와 시범적 연구 – 세대, 일, 그리고 신뢰: 국제비교』, 성균관대 서베이리서치센터·삼성경제연구소 공동주최 제3차 심포지움(2006.5.18),

결론적으로, 2010년의 통일·북한인식은 지역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벌어지던 지역격차는 크게 줄어드는 양상이다. 특히 그동안 통일지향적, 대북 우호적 성향을 보였던 호남권이 2010년에 통일과 북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성향으로 바뀐 점이 특징적이다. 2009년에는 중부권이 국내 정치적 이슈와 맞물려 수도권보다 빠른 속도로 통일지향, 대북우호적 성향으로 이동했으나, 2010년에는 대체적으로 '북한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전반적으로 지역간 인식의 격차가 줄고 통일·대북인식의 수렴현상이 나타났다.

지역간 격차는 남북관계 및 대북정책 전반의 남남갈등을 일으키는 잠재적 요인으로서 지역간 통일의식의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원만한 이행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일부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간 성향 차이가 매우 대립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인 대립현상을 보이는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한 접근과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을 경우 심각한 남남갈등이 초래되어 대북정책이나 남북관계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 이념갈등의 지형 변화

1) 이념지형의 기본구조

2010년 8월 현재 한국인의 정치적 성향은 진보 33.1%, 중도 45.1%, 보수 21.7%로 구성되어 있다.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는가?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가 스스로 밝힌 결과이다. 이러한 구성은 2007～2009년까지 형성되어 있던 한국사회의 이념지형과는 매우 다른 것이다. 최근 3년간 대체로 진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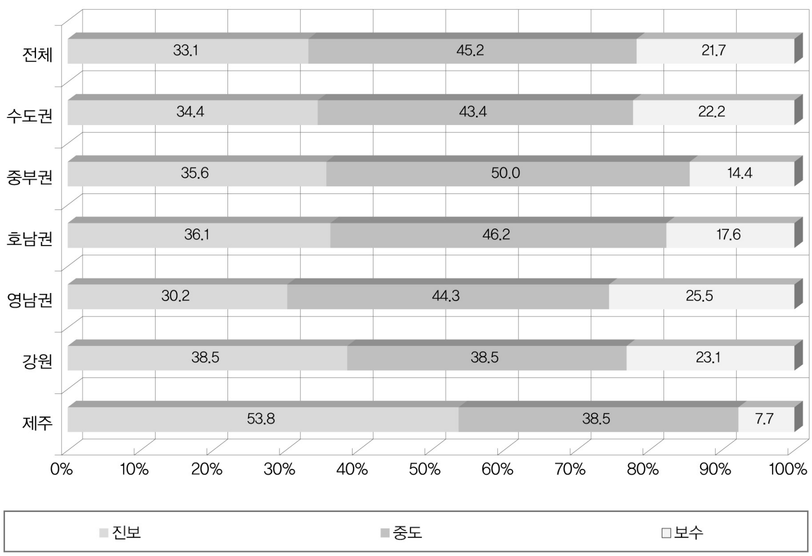
25%, 중도48%, 보수 27%라는 이념지형이 유지되어 왔었는데, 2010년에는 보수가 5%가 줄고 진보와 중도가 각각 8%, 3%가 늘어났다. 이는 천안함 사건과 2010년 6.2지방선거 등의 사건이 현 정권에 대한 불신과 비판 의식을 키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진보-보수의 정치성향은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즉 젊은 세대일수록 진보적이며 연령층이 높을수록 자신을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진보적 의식이 강하며,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진보적이라는 의식이 강하고, 화이트칼라는 자영업이나 블루칼라, 농축산업 종사자보다 진보적 의식이 강하다. 이러한 사회학적 변수에 따른 정치이념의 성향은 이념지형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큰 변화없이 일관적 패턴을 유지했다.

표 2-Ⅲ-4 사회경제적 변수와 정치적 성향 분포 (2010년)

		진보(%)	중도(%)	보수(%)	통계적 유의미 정도
정치적 성향		33.1	45.2	21.7	
연령	20대	40.3	44.6	15.2	chi-square=45.4 p=.000
	30대	34.3	49.4	16.3	
	40대	33.4	43.6	23.0	
	50대이상	23.6	43.0	33.4	
교육	중졸이하	17.2	45.9	36.9	chi-square=42.7 p=.000
	고졸	27.9	47.7	24.5	
	대졸이상	39.5	43.3	17.2	
지역	수도권	34.4	43.4	22.2	chi-square=42.5 p=.002
	중부권	35.6	50.0	14.4	
	호남권	36.1	46.2	17.6	
	영남권	30.2	44.3	25.5	
	강원	16.7	66.7	16.7	
	제주	38.5	38.5	23.1	
직업	농·수·축산업	25.0	34.9	40.1	chi-square=41.5 p=.003
	자영업	31.3	44.2	24.6	
	블루칼라	30.4	46.8	22.7	
	화이트칼라	40.9	47.0	14.3	
	전업주부	26.3	52.0	26.7	
	학생·무직·기타	39.1	44.6	16.4	
소득	200 만원미만	30.2	43.8	26.1	chi-square=15.9 p=.459
	200~299	31.1	48.3	20.6	
	200~399	35.5	46.4	18.0	
	400 만원이상	34.3	41.8	23.9	
성별	남자	36.6	43.0	20.4	chi-square=11.2 p=.024
	여자	29.5	47.4	23.1	

지역에 따라 정치적 성향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Chi-Square=42.7, p=.002로 95% 신뢰수준에서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 경향은 해마다 상당히 다르게 나타났다. 2009년에는 호남권과 영남권에서 진보가 각각 20.2%, 17.9%로 최저로 낮아졌으나, 2010년에는 36.1%, 30.2%로 각각 상승했다. 2009년에 중도로 대거 옮겨갔던 호남권이 다시 진보로 복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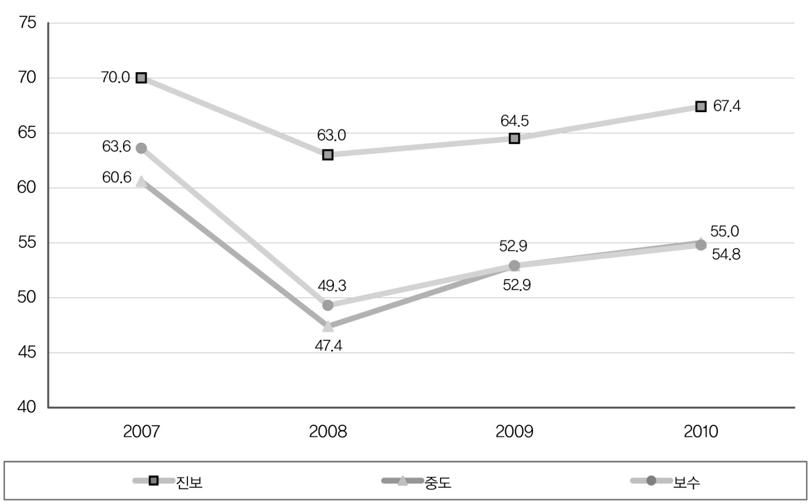
[그림 3-Ⅲ-3] 지역별 이념성향 분포(2010년)

2) 통일인식

그렇다면 이념갈등을 가장 첨예하게 드러낼 것으로 예상되는 통일·북한 인식에서 진보-보수의 차이는 어느 정도일까? 한국사회에서 진보와 보수의 이념갈등을 야기하는 요인은 대체로 북한 및 미국 관련 이슈로 거론되고 있다. 먼저, 통일의 필요성 인식에서 진보-보수 간에 차이가

있다. 진보는 통일이 필요하다는데 더 찬성을 하고 보수는 통일이 필요없다는 데 더 찬성을 한다. 2010년에도 여전히 진보적 성향의 응답자들이 중도적, 보수적 성향의 응답자들보다 통일에 대해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모든 정치적 성향에서 통일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증가하였다. 진보적 성향은 64.5%에서 67.4%로, 중도적 성향은 52.9%에서 55%로, 보수적 성향은 52.9%에서 54.8%로 증가하였다.

통일인식의 이념지형은 지속적으로 완만해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2008년에 비해 2009년에 진보와 보수 성향간의 격차가 좁혀졌으며 2010년에는 아래의 [그림 3-Ⅲ-4]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의 추세가 유지되었다. 2010년 조사에서는 진보적 성향의 전체 응답자 중 67.4%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보수적 성향의 경우는 58.4%가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여, 두 성향간의 격차는 9%다. 이러한 격차는 13.7%(08년)→11.7%(09년)→9.0%(10년)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는 통일의식에 대한 이념적 대립이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매우 고무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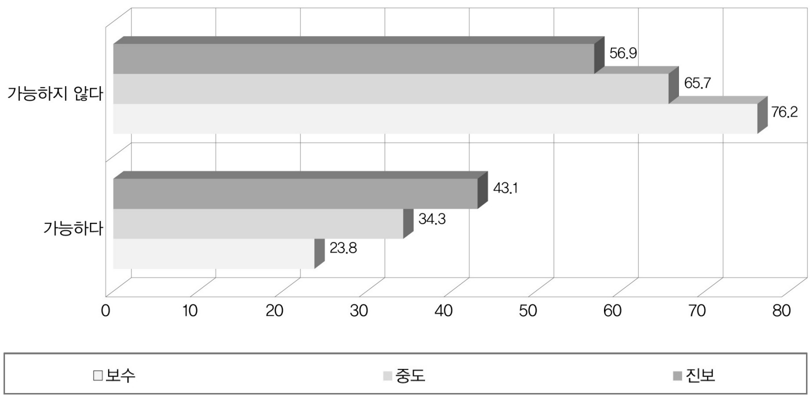


[그림 3-Ⅲ-4] 정치이념에 따른 통일인식 (2007~2010년)

3) 북한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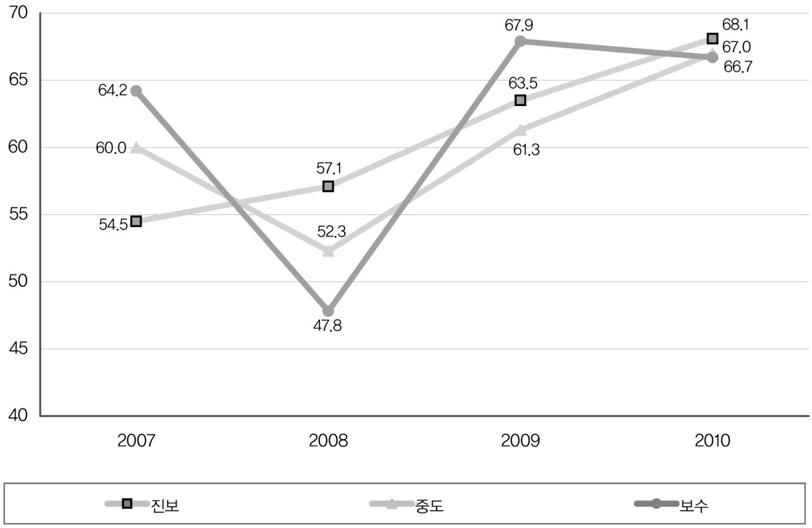
다음으로 북한인식을 살펴보면,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응답한 사람들은 진보(49.4%)>중도(44.7%)>보수(37.5%)이며,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자는 진보(18.6%)<중도(22.0%)≒보수(21.0%)로 중도의 보수화 경향이 어느 정도 지속되었다. 그러나 2009년의 가장 큰 변화는 진보의 대북인식 보수화 경향이다.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인식한 진보는 2009년 60.9%에서 2010년에 49.4%로 11.5%나 급감하였다. 중도와 보수가 각각 5% 정도씩 감소한 반면, 진보는 그보다 2배 가량 감소한 것이다. 대북인식에서 2009년에는 중도의 보수화가 진행되었다면, 2010년에는 진보의 보수화가 급격히 진행된 것이 특징적이다.

북한정권을 대화 가능한 상대로 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정치적 성향에 따라 뚜렷이 엇갈렸다. 가능하다는 생각이 진보(43.1%)>중도(34.3%)>보수(23.8%), 가능하지 않다는 의견이 진보(56.9%)<중도(65.7%)<보수(76.2%)로 이념성향에 따라 의견이 확연하게 달랐다. 이는 일반적으로 한국의 이념갈등이 북한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야기된다는 주장을 가장 신빙성 있게 증명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북한정권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리고 있는가, 즉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북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에 따라 진보와 보수가 확연히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정하는 사람은 진보적 성향을 지니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보수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그림 3-Ⅲ-5] 정치적 성향에 따른 대북인식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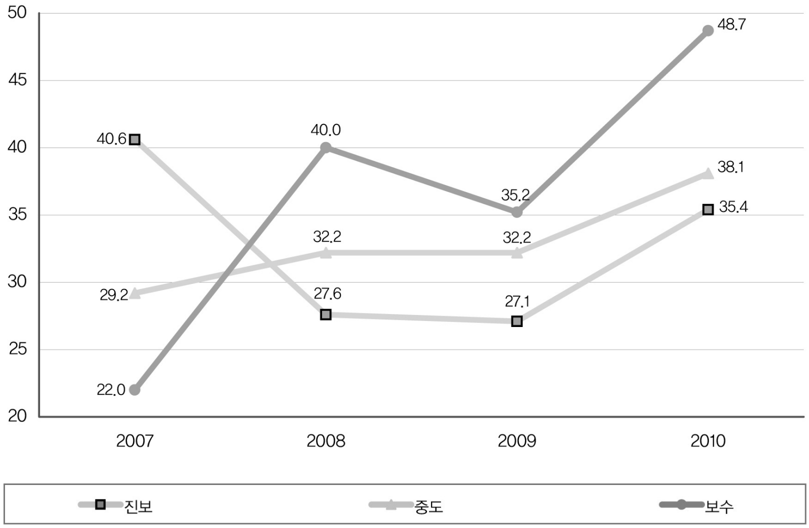
2010년에 나타난 특징은 정치성향에 따른 대북인식이 수렴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래의 [그림 3-Ⅲ-6]에서 볼 수 있듯이 2009년에 비해 이념성향에 따른 북한도발인식이 이념성향과는 무관하게 수렴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2007년과 2008년에는 북한도발에 의한 안보불안 의식에서 정권교체 효과가 뚜렷이 발견되었다. 즉 2007년에 보수(64.7%)가 진보(54.5%)보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하다가, 2008년에는 진보(57.1%)가 보수(47.8%)보다 북한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진보정권 하에서는 보수가 안보불안을 더 크게 느낀 반면, 보수로 정권이 이동하면서 진보가 안보불안을 더 느끼는 것으로 정권교체의 효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9년에는 보수(67.9%)가 진보(63.5%)보다 다시 안보불안을 크게 느끼는 상황으로 역전되었는데, 이는 2009년에 북한효과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2010년에는 진보(68.1%)가 보수(66.7%)보다 조금 높기는 하지만, 중도가 67.0%로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가 매우 좁혀졌다. 이는 2010년에 천안함 사건 등으로 북한효과가 다시 작용하여 이념성향간 차이를 무력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림 3-Ⅲ-6] 정치이념에 따른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인식 (2007~2010년)

4) 대북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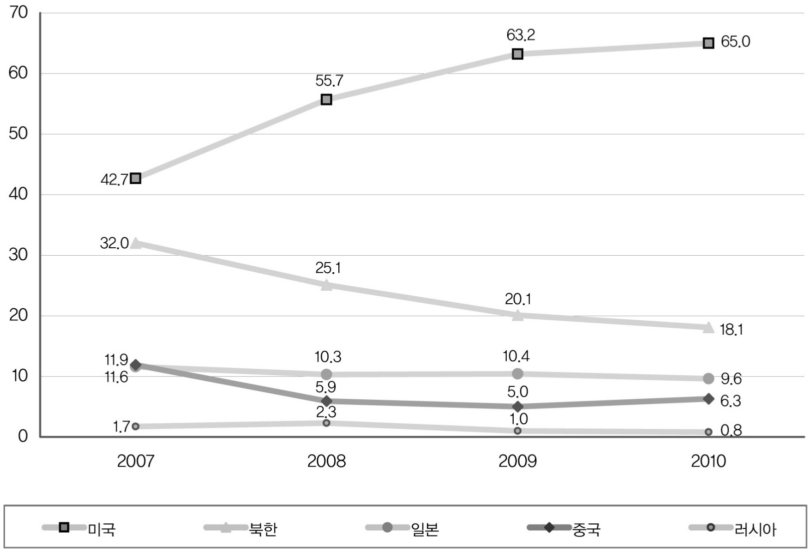
대북정책에 대한 인식에서도 2010년에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타났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 만족도를 보면, 진보 35.4%, 중도 38.1%, 보수 48.7%로 전반적으로 2009년에 비해 대북정책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보수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추세는 유지되었다. 2007년과 2008년 사이에는 정권교체의 효과도 진보-보수의 정책만족도 지형이 완전히 바뀌었으며, 그 후 현 정부에서 이러한 추이는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2008년에 크게 벌어졌던 이념성향간 만족도의 격차가 2009년에 약간 줄어들다가 2010년에 다시 크게 벌어졌다. 이는 보수의 정책만족도가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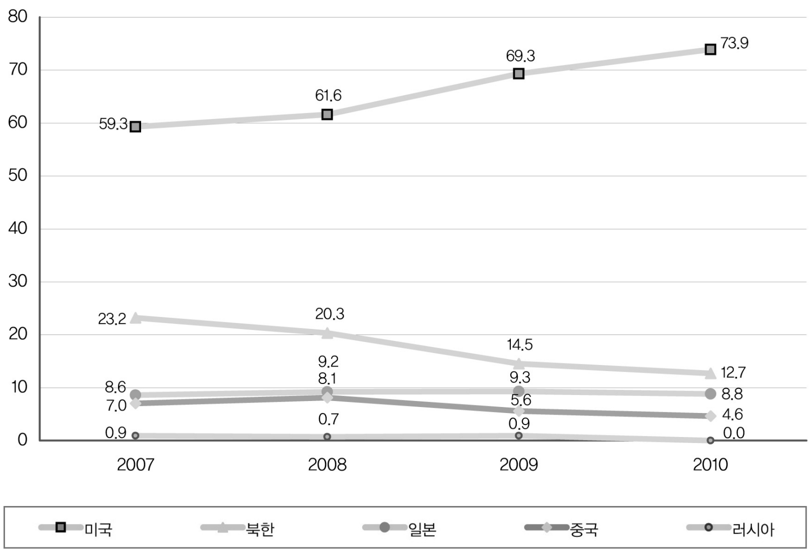
[그림 3-Ⅲ-7] 대북정책의 만족도 (2007~2010년)

5) 주변국 호감도

이념적 성향과 주변국 호감도는 진보와 보수간에 아주 미미한 차이가 있었다. 진보와 보수 모두 미국을 가장 가까운 나라로 느끼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의 순이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가 미국과 북한을 가까운 나라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조금 달랐다. 즉 진보는 가장 가깝게 느끼는 나라를 미국 65%, 북한 18.1%로 답한 반면, 보수는 73.9%, 12.7%로 각각 응답하여 이념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진보와 보수 모두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로 북한을 지목하는 데는 일치했으나, 진보는 일본과 미국을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로 여기는 비중이 각각 12.7%, 12.1%인 반면, 보수는 5.4%, 4.2%에 불과하였다. 한편, 보수는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로 중국이라는 응답이 31.0%로 높은 반면, 진보는 23.9%에 불과했다.



[그림 3-Ⅲ-8] 진보의 주변국선호도 (2007~2009년)



[그림 3-Ⅲ-9] 보수의 주변국선호도 (2007~2009년)

3. 소결

한국사회에서 통일·북한문제와 관련한 지역·이념의 차이는 여전히 존재하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2009년에 호남-영남-수도·중부권의 세 집단으로 형성되어 있던 지형은 2010년에 호남·중부·수도권-영남권의 두 집단으로 통합되었으며, 지역간 격차도 크게 줄어들고 수렴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2008년 이후 정권교체 효과가 결정적으로 작용한 이후 2009년과 2010년에 북한에 의한 도발과 무력충돌이 발생함으로써 이른바 북한효과가 크게 작용하여 지역별로 분화되던 통일·북한인식이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는 세종시 등 국내 정치적 문제로 중부권과 수도권이 통일지향, 대북 우호적 태도를 보였으나, 2010년에는 이 역시 천안함 사건 등 북한변수에 압도되어 지역간 격차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통일·북한인식의 이념적 차이는 진보와 보수간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이 존재하나, 그 격차는 좁혀지고 있다. 북한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가라는 북한인식에서는 진보-중도-보수 간의 차이가 매우 뚜렷하고 확연하게 존재하였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2009년에 중도의 보수화가 진행된 이후 2010년에는 진보의 대북인식 보수화 경향이 강하게 형성되었다. 북한의 무력도발 우려와 같은 안보불안은 2008년 정권교체로 진보와 보수가 완전히 뒤바뀌는 현상이 나타나 진보가 안보불안을 더 크게 느꼈으나, 2009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보수의 안보불안이 진보를 압도한 후 2010년에는 진보-중도-보수 간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수렴현상이 나타났다.

2010년의 조사에서 나타난 통일·북한의식의 특징은 지역간 격차나 이념간 격차가 현저히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사실, 1990년대에는 통일·북한인식에서 지역간 격차나 이념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2000년대

들어 분화하기 시작한 지역간, 이념간 격차는 북한이 1차 핵실험을 감행한 2006년을 계기로 달라졌고 2008년 보수정권의 집권,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 2010년 천안함 사건 등이 발생하면서 정권교체 효과와 북한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함으로써 한국사회의 통일·북한인식의 지형을 변화시켰다. 2010년에는 북한변수로 인해 의식의 수렴현상이 나타났으나, 2010년 이후 북한의 변화와 남북관계의 상황에 따라 통일·대북정책을 둘러싼 이념갈등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최근 몇 년간 통일·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호남권의 중도쪽으로의 이동(2009년)이나 대북인식의 보수화(2010년)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중부권과 수도권이 정권교체의 효과로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대북정책을 지지했으나, 세종시 문제 등 국내 정치문제와 연결되면서 중부권이 새로운 진보집단으로 등장하는 듯 보였다. 그러나 이 역시 북한변수에 압도되어 통일·대북인식에서 보수적 성향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본다면 앞으로도 북한변수와 국내정치적 변수에 따라 각 지역간 통일의식이 요동하고 이념성향에 따른 차이가 급변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존재한다. 2010년 6.2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으로 한국사회의 진보와 보수의 이념지형이 크게 달라져 보수가 줄고 진보의 지형이 확대되었다는 사실을 유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변화된 이념지형은 북한변수와 국내정치 변수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통일·대북 인식과 정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른 사회문제와 마찬가지로 통일·북한문제에 대해서도 한국사회 내 보수-진보 간 큰 의식의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 차이가 상당히 좁혀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의견수렴이 한국사회 내의 합리적 의사소통의 구조가 마련되고 성숙한 시민의식에 의해 형성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군사적 위협과 안보불안 등의 북한효과로 인한 것이라

면 결코 미래를 낙관할 수 없다. 일시적으로 의견이 수렴되고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바뀌면 또 다시 대북·통일문제를 둘러싼 지역갈등과 이념갈등을 되풀이 할 수 있다. 표면적으로는 지역·이념갈등이 완화된 듯 보이나, 그러한 갈등이 심층에 잠복하여 남북관계의 환경과 정권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남남갈등으로 표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Ⅳ. 정부신뢰와 통일인식*

민주주의를 포함하여 모든 정치 체제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에 최소한도의 신뢰가 바탕되었을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에 대한 신뢰가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점점 하락하는 추세라는 것이다[1]. 미국에서 연방정부를 신뢰한다는 국민은 이제 4분의 1 이하이며, 이 밖에도 영국, 벨기에, 노르웨이 스웨덴 등 모범적이고 민주주의의 역사가 오랜 서방 선진국들과 일본에서도 정부신뢰의 저하는 하나의 시대적 추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2].

---

* 이 장의 내용 일부는 이상신, “정부신뢰의 위기: 천안함 사건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2010). 제 44집, 4호에 게재되었다.

1_ 김인영. 2002. 『한국사회 신뢰와 불신의 구조 : 거시적 접근』. 서울: 小花; 이승종. 2010. “정부신뢰에 대한 종교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4 (1):99-119; 조진만·임성학. 2008. “한국 국회의 불신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 분석.” 『정치정보연구』 11 (2):213-37.

2_ Nye, Joseph S. Jr., Philip D. Zelikow, and David C King, eds. 1997.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최근 정부신뢰 하락의 문제를 한국에서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천안함 사건을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이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침몰 사건 발생 후, 남한 정부는 두 달 가까운 조사 끝에 천안함이 북한 잠수함의 어뢰 공격에 의해 격침되었다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객관적 조사를 위해 외국 조사팀이 합류하고 천안함 선체를 인양하여 정밀 조사를 벌였으며, 사고 해역을 샅샅이 조사 한 끝에 결정적 단서로 여겨진 북한산 어뢰 파편까지 발견하여 그 실물을 공개하는 등 정부로서는 천안함 침몰의 원인으로 북한 공격을 지목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증거를 언론에 모두 공개한 이후에도 정부 발표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종식시키는 것에 실패했다. 여러 여론 조사에서 약 30%에 달하는 국민들이 정부 발표를 믿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여기에 천안함 사건으로 인한 안보위기결집효과(rally-around-the-flag effect)가 여당인 한나라당에게 결정적인 이득을 안겨줄 것이라 예상되었던 6월 2일 지방선거 결과, 한나라당이 충격에 가까운 참패를 당함으로써 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국민들의 불신이 현실 정치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평가되었다.

천안함 사건이 보여준 한국에서의 정부불신의 경향은 과연 전 세계적인 정부신뢰 저하 현상의 한 부분일까? 혹은 현 한국 정부의 정책이나 정치 운영 방식에서 비롯된 한국적 현상일까? 우선 한국에서 정부신뢰의 저하 현상이 현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1980년대까지 오랜 군부 통치를 겪으며 정부 권력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했던 터라 한국의 국민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를 쌓을 기회를 갖지 못했다. 민주화 이후에도 각종 권력형 부패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였고,

---

Ruscio, Kenneth P. 1996. "Trust, Democracy, and Public Management: A Theoretical Argument."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 and Theory* 6 (3):461-77.

특히 1990년대 말의 IMF 금융위기를 겪은 국민들은 무능한 정부들을 신뢰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3]. 이런 측면에서 보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발표를 상당수 국민들이 신뢰하지 않는 최근의 현상은 이러한 장기적 신뢰저하 현상이 표출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임성호에 따르면, 이명박 정부가 겪는 여러 정치적 어려움의 상당 부분은 이 정부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서 비롯된 것이다[4]. 그는 이명박 정부 전반기의 국정 운영 스타일을 "결과지향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정치과정을 우회하는 정치 회피 내지 무시 전략"을 그 특징으로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명박 정부 초기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는 과정중심적 국정 운영 전략으로 선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그리고 2008년의 촛불 시위로 상징되는 이명박 정부 전반기의 가장 큰 실수는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실패한 것이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임성호는 이명박 정부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참조해야할 정치 패러다임으로 공동체주의를 들고 있는데, 공동체주의의 핵심에는 정치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타인과 공적 체계에 대한 신뢰가 상정되어 있다.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모델이 여러 상충되는 개인과 집단의 이익 사이에서 상호 견제와 경쟁, 타협을 통해 그 이익의 절충점을 찾는 것이라면, 공동체주의 모델은 구성원들간의 상호작용과 연계망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성된 정치체제에 대한 신뢰가 이익 사이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건이라고 본다. 이 신뢰의 형성과 확산이 결코 쉬운 과제는 아니나, 임성호는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모델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조건

3- 김인영 (2002), p.127.

4- 임성호. 2010. "결과지향적 국정운영, 과정중심적 정치리더십: 이명박 정부의 한계와 과제." 관훈클럽-한국정치학회 공동학술회의 발표논문 『임기 중반 이명박 정부의 과제와 전망』. 서울: 한국정치학회.

인 사회적 합의, 즉 컨센서스 형성(consensus-building)에 비해서는 [신뢰형성이] 오늘날의 전환적 환경에서 좀 더 현실적인 성취가능성을 지닐 수 있다”라고 본다. 신뢰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해 합의에 도달해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일반적인 차원에서의 서로가 상대방을 배신하거나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태도를 뜻하기 때문이다.

물론 답은 이 두 시각의 중간쯤 어디에 위치해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정부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고 있다는 추세를 부정할 필요도 없으며, 또 동시에 이명박 정부의 특정한 정책 방향이나 정치 행태도 정부신뢰 저하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하여, 이 연구는 천안함 사건이라는 구체적 사안을 통해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구조적 변인과 상황적 변인으로 나누어 점검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첫째, 신뢰의 개념과 그 중요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하고 선행연구들을 검토할 것이다. 둘째, 천안함 사건의 진행 과정을 개괄하고 정부신뢰와 그 결정요인에 대한 가설을 제시한다. 셋째, 이 연구를 위해 사용된 데이터를 소개하고 분석에 투입될 변수들을 개괄한다. 넷째,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고 결론의 정치적 함의를 논의한다.

1.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1) 정부신뢰의 개념

신뢰(trust)는 여러 연구에서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정의되어 왔다. 크게는 신뢰를 정의하는 기준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상대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기준으로 신뢰를 정의하는 방법과 보다 일반적인 긍정적 태도로서 신뢰를 정의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감베타(Gambetta), 로

터(Rotter), 가바로(Gabarro) 등은 신뢰를 피신뢰자의 행동에 대한 예측가능성의 측면에서 정의한다[5]. 이 경우 신뢰는 상대방이 나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을 가능성에 대한 주관적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도이치(Deutsch)는 "사람이나 집단의 행도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라고 신뢰를 정의했다[6]. 이헌수 또한 "피신뢰자의 바람직한 행동을 획득할 가능성에 대한 믿음 또는 기대"로 신뢰를 정의하여 예측가능성의 측면에 비중을 두었다[7].

또는 신뢰를 좀 더 일반적으로 한 대상에 대해 갖는 긍정적 태도라고 정의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손호중·채원호는 "불확실한 상황 하에서 국민이 정부의 행동(정책)에 대해 취하는 긍정적인 기대나 심리적 지지"라고 정의하고 있다[8]. 또 비슷한 맥락에서 이승종은 "정부에 대하여 국민이 갖는 긍정적 태도" 혹은 "정부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게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긍정적 평가"라고 정의했다[9]. 마찬가지로 커밍스와 브로밀리(Cummings & Bromiley)은 "상대방의 선의와 의존가능성의 평가"라고 신뢰를 정의하고 있다[10].

5- Gambetta, D. 1988. *Trust: Making and Breaking Cooperative Relations*. New York: Basil Blackwell; Rotter, J. B. 1967. "A New Scale for the Measurement of Interpersonal Trust." *The Journal of Personality* 3 (5):615-65; Gabarro, J. 1979. "The Development of Trust, Influence, and Expectations." In *Interpersonal Behavior: Communication and Understanding in Relationship*, ed. A. G. Athos and J. J. Gabarro.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6- Deutsch, M. 1958. "Trust and Suspicion." *The Journal of Conflict Resolution* 2:265-79

7- 이헌수. 1999. "국민의 행정 신뢰에 관한 영향요인 분석: 공무원에 대한 신뢰를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33 (2):37-56.

8- 손호중·채원호. 2005. "정부신뢰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보』 39 (3):87-113.

9- 이승종. 2010. "정부신뢰에 대한 종교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4 (1):99-119.

신뢰를 예측가능성 측면에서만 정의하는 경우 신뢰 개념 안에 내포된 정부의 의도 및 방향성에 대한 동의와 정부에 대한 심리적 지지 등의 풍부한 내용을 담아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마찬가지로 신뢰를 정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만 정의할 경우에도 경제적 이익이나 이념적 동질성, 정책에 대한 원칙적 동의 등 다른 이유에 따른 정부 지지와 신뢰를 구별하는 것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예측가능성과 긍정적 태도라는 두 기준을 종합하여 정부신뢰를 정의하고자 한다. 즉, 정부신뢰는 “정부가 국민에게 바람직하게 방향으로 행동할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 긍정적 기대와 지지”라고 정의할 수 있다.

2) 신뢰의 중요성

이승종[11]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중요한 이유를 다음 다섯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다. 첫째, 정부신뢰는 도덕적으로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는 정부는 정당성을 인정받지 못한다. 둘째, 정부의 권한과 그에 따른 책임 간에는 항상 긴장의 가능성이 있는데, 신뢰는 이 긴장을 완화하는 역할을 한다. 즉, 정부는 업무 수행을 위해 더 많은 재량권을 요구하고 시민들은 정부가 정책행위에 대해 더 큰 책임을 질 것을 원한다. 여기서 긴장이 발생하는데, 시민들이 정부를 믿고 정부권위를 기꺼이 받아들인다면 이 긴장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 셋째, 신뢰는 거래비용(transaction cost)를 줄여 정부로 하여금 더 효율적으로 정책을 집행하고 정부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10- Cummings., L. L., and P. Bromiley. 1996. “The Organizational Trust Inventory (OTI): Development and Validation.” In *Trust in Organizations: Frontiers of Theory and Research*, ed. R. M. Kramer and T. R. Tyler. CA: Sage Publications.

11- 이승종 (2010), pp. 103-4.

있다. 넷째, 신뢰받는 정부는 단기적 성과를 내서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것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정책 집행에 눈을 돌릴 여유를 가질 수 있다. 다섯째, 최근의 정부불신 경향이 지속된다면 정부의 권력이 약화되면서 비공식적 의사소통이 제약되고, 규칙, 규제, 합법성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승종의 논의가 주로 정부의 효율성과 정부-시민간 관계에 집중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정부신뢰는 그것이 다른 유형의 신뢰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중요하다. 신뢰는 크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가족이나 동료 같이 친근한 개인들 사이의 신뢰, 이전에 알지 못하던 사람에 대한 신뢰, 그리고 공적 혹은 사적 기구에 대한 신뢰이다[12]. 정부신뢰는 물론 이 중 마지막 유형에 해당하지만, 이 세 가지 유형의 신뢰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퍼트냄(Robert D. Putnam)은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을 시민참여의 네트워크(networks of civic engagement)와 호혜성의 규범으로 정의하였는데[13], 이 사회적 자본이 고도로 발달한 사회는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generalized norms of reciprocity)"을 갖는 특징이 있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일반화된 호혜성의 규범이란 친근한 개인들 사이의 신뢰가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의 신뢰로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 개인 사이의 신뢰는 또 개인의 정부에 대한 신뢰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14]. 따라서 신뢰는 사회적 자본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사회적 협동을 지탱하는 규범, 상호

12- Healy, Tom, and Sylvain Côté.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OECD. p. 41.

13- Putnam, Robert D. 2000. *Bowling Alone :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 Schuster.

14- Putnam, Robert D., Robert Leonardi, and Raffaella Nanetti. 1993. *Making Democracy work :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이해(理解), 혹은 가치에 대한 좋은 근사치(proxy)라고 할 수 있다[15].

사회적 자본과 그 결과물로서의 신뢰는 사회 구성원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퍼트냄은 사회 구성원들의 신체적 건강과 사회적 자본에 상관관계가 있음을 다양한 자료를 인용하여 밝히고 있다. 실제로 사회적 자본이 높은 사회의 구성원들은 그렇지 않은 사회의 개인들보다 더 오래 살며 더 건강하다. 또한 퍼트냄은 사회적 자본이 그 사회의 아동 복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회적 자본이 많은 사회에서는 십대 임신율이나 영아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향이 있다. 또 다른 연구들에서는 사회적 유대가 낮을 때 아동 학대의 경향이 높아지는 것을 밝힌 바도 있다[16]. 또 사회적 자본이 잘 발달된 국가들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범죄율이 낮다[17].

그리고 이 사회적 자본은 공적 기구와 정부에 대한 신뢰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퍼트냄에 따르면 정부의 효율성과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신뢰는 상관관계에 있다. 또 그는 정치 참여에 적극적인 시민들은 극단적 주장에 귀를 기울일 가능성이 적다는 것도 밝혀냈다. 자발적인 참여는 신뢰 및 호혜성, 그리고 협동을 통해 이루어지며, 이런 과정에 참여한 시민들은 자신의 의견과 대치되는 의견에 접할 기회를 더 많이 갖게 된다. 자연스럽게 이런 학습을 통해 시민들은 관용적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높은 사회적 자본과 신뢰는 발달된 민

15- Healy and Côté (2001), p. 41.

16- Garbarino, J., and D. Sherman. 1980. "High-Risk Neighborhoods and High Risk Families: The Human Ecology of Child Maltreatment." *Child Development* No. 51:188 98; Korbin, J., and C. Coulton. 1997. "Understanding the Neighborhood Context for Children and Families: Combining Epidemiological and Ethnographic Approaches." In *Neighborhood Poverty*, ed. J. Brooks-Gunn, G. J. Duncan and J. L. Abe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17- Healy and Côté (2001), p. 54.

주주의 결과물이면서 동시에 민주주의 발전의 원동력이기도 한 것이다.

또 사회적 자본과 신뢰는 이명박 정부가 임기 후반기의 화두로 내세우고 있는 “공정사회”의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이기도 하다. 불평등이 심한 사회는 신뢰 및 사회적 자본이 낮은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18]. 경제적·정치적 불평등이 만연한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믿게 되며 당연히 자신들에게 항상 불리하게 적용되는 법 규범이나 사회 구조, 정치 시스템에 대해 신뢰를 잃게 될 것이다. 따라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해서도 신뢰의 회복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 정부신뢰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들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되어왔다[19]. 이들 연구에서 중요하게 지적된 변인들은 정부의 업적이나 역량에 대한 평가 같은 정치적 변인, 혹은 국민 개인들의 효능감(efficiency)이나 타인에 대한 신뢰 같은 개인적 변인,

---

18- Healy and Côté (2001), pp. 55-7

19- 김대욱·이승종. 2008. “정부신뢰의 참여에 대한 효과.”『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8 (4):43-62; 박희봉·이희창·조연상. 2003. “우리나라 정부신뢰 특성 및 영향 요인 분석.”『한국행정학보』 37 (3):45-66; 이시원. 1993.『정부신뢰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제 6공화국 정부에 대한 태도조사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Christensen, T., and P. Leagreid. 2005. “Trust in Government: The Relative Importance of Service Satisfaction, Political Factors and Demography.” *Public Performance & Management Review* 28 (4):487-511; Newton, Kenneth., and Pippa. Norris. 1999.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Faith, Culture, or Performance.” In *Disaffected Democracies: What's Troubling the Trilateral Countries?*, ed. S. J. Pharr and R. D. Putnam.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Nye, Joseph S. Jr., Philip D. Zelikow, and David C King, eds. 1997. *Why People Don't Trust Govern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그리고 각 문화나 국가에 고유한 사회문화적 변인 등이 지목되고 있다. 물론 각 국가에 고유한 정부신뢰의 수준은 이들 여러 변수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이승종은 '공공분야에 대한 시민 인식도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한국에서 사회문화적 변인인 종교가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연구하였는데[20], 이에 따르면 종교가입은 정부신뢰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반면 종교참여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흥미롭게도 같은 연구에서 정치 이념은 정치신뢰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결과가 나왔다[21].

정부신뢰의 요인에 대한 한국의 연구사례를 보면, 우선 박희봉·이희창·조연상은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인신뢰, 단체참여, 정치참여 양식, 거주지역,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꼽았다. 서문기는 퍼트냄과 비슷한 맥락에서 자발적 결사체의 감소와 정부신뢰 저하 사이의 상관관계를 지적했다[22]. 또 이종범은 사회경제적 요인, 공직자 요인, 정부구조요인, 정부환경요인 등의 다각적 측면에서 정치신뢰와의 관련성을 보았다[23].

위에 언급한 연구들에서 요인들은 주로 구조적 변인들로, 특정 정부의 정책이나 국정운영 방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들이다. 이와 달리 각 정부에 고유한 특성과 국정운영방식 및 정책 성과 등을 정부신뢰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적 변수라고 규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연구들을 보면

20- 이승종. 2010. "정부신뢰에 대한 종교의 영향." 『한국행정학보』 44 (1):99-119.

21- 이승종의 연구에서 사용된 종속변수는 "정부신뢰"로, "귀하께서는 지방정부의 집행기관(시청/군청/구청)에 대해 신뢰하고 계십니까"라는 항목을 통해 리커트 5점척도를 사용하여 측정되었다(2010, 108). 따라서 이승종의 연구결과는 중앙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해야 한다.

22- 서문기. 2001. "한국사회의 정부신뢰구조." 『한국사회학』 35 (5):119-46.

23- 이종범. 1988. 『국민과 정부관료제』.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이종수는 청렴성, 일관성, 공정성, 그리고 효율성을 갖춘 피신뢰자가 높은 신뢰를 받는다고 주장했다[24]. 오경민·박흥식의 연구는 이에 더해 전문적 지식, 대응성, 절약, 피해감수의 의지, 순응적 태도 등의 변수를 이용하여 정부신뢰를 측정하였다[25]. 또 이종범은 위에 인용한 연구에서 정부신뢰의 척도로 정직성, 정책내용, 정책집행, 정부능력 등을 제시하였다.

2. 천안함 사건과 정부신뢰

1) 천안함 사건의 전개

2008년 이명박 대통령 취임이후 남북 관계는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북한의 제 2차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6자 회담의 무력화, NLL을 둘러싼 대청해전, 그리고 금강산 및 개성관광의 중단 등의 일련의 사건을 겪었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상대적으로 우호적이었던 남북관계는 지난 2년 반 동안 급격히 경색 국면으로 치달았으며, 결국은 2010년 3월 26일 남한 해군 초계함인 천안함이 백령도 인근에서 침몰하고 해군장병 46명이 사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게 되었다.

천안함 사건 직후 남한 정부는 민간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침몰 원인을 분석하였으며, 5월 20일에는 그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민간합동조사단은 이 날 천안함이 북한의 잠수함이 발사한 어뢰에 피격되어 침몰하였다고 주장했다. 그 유력한 증거로는 침몰한 해역 인근에서 인양한 어뢰 파편이 제시되었다. 나흘 후, 이명박 대통령은 전쟁기념관에서 천

24- 이종수. 2001. “정부에 대한 신뢰와 그 결정요인.”『사회과학논집』32:67-86.
25- 오경민·박흥식. 2002. “정부신뢰 수준의 측정과 비교에 관한 연구.”『한국정책학회보』3:113-35.

안함 사건에 대한 이른바 "5.24 조치"를 발표한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앞으로 우리의 영해, 영공, 영토를 무력 침범한다면 즉각 자위권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구체적으로는 북한 선박의 남측 해상교통로 이용금지, 개성공단을 제외한 모든 남북한 교역과 교류의 중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제재 조치 회부 등이 실행되었다.

천안함이 침몰한 원인에 대해서는 정부가 5월 20일의 발표에서 이른바 "1번 어뢰"의 파편을 직접적 물증으로 제시한 이후에도 각종 의혹이 끊이질 않았다. 이에는 정부의 소홀한 대응도 한 몫을 했는데, 예를 들어 천안함 사고 시각에 대한 끊임없는 말바꾸기, 천안함 사고 동영상의 뒤늦은 발견 등이 국민의 의혹을 부추겼다. 북한 역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연관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 중국과 러시아가 천안함의 주범으로 북한을 지목하는 것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는 점, 그리고 야당 및 민간 전문가들이 북한 어뢰설을 부정하는 점 등이 천안함 침몰 원인에 대한 회의적 태도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6월 2일의 지방선거에 정부 여당이 천안함 사건을 이용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정부 발표의 불신 경향은 이미 여러 여론조사를 통해 확인된 바 있다. 한겨레신문이 이명박 대통령의 5.24 조치 직후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대통령의 담화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북풍을 선거에 이용하는 의도를 담고 있다고 대답한 비율이 56.5%가 넘었다[26]. 같은 시기 중앙일보, SBS, 동아시아 연구원에서 조사한 결과에서도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부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응답이 67.2%에 이르렀고,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한

26_ 김하영. 2010. "'천안함 발표 신뢰'…20~30대 절반 못 미쳐." 『프레시안』 5월 31일.

다는 의견은 64%였다[27].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한 물증이 제시되었고 사건 해역이 북한과 여러 차례 군사적 충돌을 빚은 바 있는 백령도 인근이라는 점, 미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들이 북한을 천안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이는 결코 높은 비율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의 불신은 실제로 6.2 지방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같은 조사에 따르면 6.2 지방선거에서 "MB심판론"에 공감하는 이유를 물었을 때 "천안함 사건 정부 발표에 신뢰가 안가서"라고 대답한 비율은 10.8%로, '정부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스타일'의 뒤를 이어서 두 번째로 중요한 원인으로 꼽혔다[28].

이후 천안함 사건은 남북관계의 파열을 넘어 동북아 전체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발전하였다. 한미 양국은 미국의 항공모함을 동원하여 서해와 동해에서 합동군사훈련을 강행했고 여기에 북한도 해안포 발사 및 전쟁불사 발언을 통해 강경대응, 문제를 더욱 심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노골적으로 북한을 옹호하는 중국의 대응은 천안함 사건의 여파를 동북아 전체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했다. 애초부터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북한 제제 문제를 유엔에서 다루는 것에 미온적이었던 중국의 태도 때문에, 한국은 기대했던 것보다 한참 낮은 수준의 유엔 안보리 의장 성명으로 만족해야만 했다. 더욱이 이 성명에서는 천안함의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직접적인 언급조차 되어 있지 않았다.

27- 김성룡. 2010. "'투표 때 고려' 천안함 54%, 노풍 36%." 『중앙일보』 5월 31일.
28- 강원택. 2010. "6.2 지방선거결과의 의미와 과제." EAI 여론브리핑 83호: EAI.

2) 연구가설의 설정

앞에서 밝혔듯, 본 연구의 목적은 천안함 사건을 통해 드러난 한국 국민들의 정부신뢰 정도 및 그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밝히는 것이다. 지역주의, 연령, 교육수준, 소득수준 같은 구조적 요인들과 정부신뢰간의 상관관계를 추적하는 것은 물론, 현 정부에 대한 태도 및 북한에 대한 태도 같은 상황적 요인 또한 고려할 것이다. 지금까지 논의한 이론적 내용을 바탕으로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정부신뢰 문제에 있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가설이 설정될 수 있다.

가설 1: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가 높을수록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발표를 신뢰할 것이다.

한국에서 정부 및 정치과정 전반에 대한 극심한 불신이 존재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현 이명박 정부의 책임만도 아니다. 정치불신에는 여러 구조적 요인들이 작용하였겠지만, 천안함 사건과 같이 특정 사안에 관련되어 표출된 정치불신의 경우에는 이명박 정부 고유의 국정운영방식에 대한 반감이나 지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즉, 지난 2년여의 기간 동안 이명박 정부에 대해 형성된 지지 혹은 반대의 태도가 일반적 차원에서 정부신뢰의 수준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이는 다시 천안함 사건과 같은 특정한 사안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 혹은 불신의 형태로 드러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임 이후 조사시점까지 형성된 일반적 수준에서의 이명박 정부에 대한 태도는 천안함 관련 정부발표 신뢰도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가설 2: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많이 느낄수록 천안함 발표를 신뢰할 것이다.

또 하나 천안함 관련 정부발표 신뢰도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는 상황적 요인은 북한에 대한 태도이다. 2008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및 2009년 북한의 제 2차 핵실험 등으로 북한과의 정치적 긴장은 계속 심화되던 추세였다. 북한에 대해 기존에 갖고 있던 응답자 개인의 태도가 천안함을 북한의 잠수함이 격침시켰다는 정부의 발표 내용과 상응하였다면 보다 자연스럽게 정부발표를 신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 이명박 정부는 취임 초기부터 북한과의 관계에 상당히 강경한 자세를 취해오면서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국민적 경각심이 필요하다고 역설해왔다. 북한에 대한 정부의 이러한 태도와 응답자 개인의 태도가 일치하였을 때도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가 높아졌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실버스타인(Silverstein)에 따르면 사람들은 적성국가가 미래에 적대적인 행위를 저지를 것으로 예측하는 경향이 있으며, 또 적의 잘못을 부인하는 말보다 적에 대한 비판(accusation)에 더 크게 영향 받고 비판을 더 잘 기억한다[29]. 즉, 적을 비판하는 주장을 판단할 때 사람들은 좀 더 너그러운 잣대를 사용한다. 만약 적국이 우리에게 명백히 긍정적인 행위나 태도를 보였을 때는 그것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속임수나 조작 같은 호전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가설 3: 천안함 사건 관련 정부신뢰가 낮을수록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남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경향이 클 것이다.

정부신뢰가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앞에서 밝혔듯 더 많은 권한을 원하는 정부와 정부가 더 큰 책임을 지기를 원하는 국민 사이에 긴장을

29- Silverstein, Brett, and Catherine Flamenbaum. 1989. “Biases in the Perception and Cognition of the Actions of Enemies.” *Journal of Social Issues* 45 (2):51 72.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신뢰가 높다면 국민들은 정부의 권력행사에 좀 더 관대하고 인내하는 태도로 장기적 결과를 기대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만약 정부신뢰가 낮을 경우 국민은 정부에게 더 큰 책임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를 천안함 사건과 연결시켜 보면 정부신뢰가 낮을수록 천안함 사건에 남한 정부 또한 책임있음을 인정하는 경향이 커질 것이라고 가설을 설정할 수 있다.

3. 데이터와 변수

1) 통일의식조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는 2007년부터 매년 통일의식조사를 실시해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 분석 자료로 사용된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2010년 통일의식조사는 천안함 사건 후 약 4개월이 지난 후인 7월 12일에서 7월 27일 사이에 실시되었으며, 설문 문항 중에는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과 그 원인,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를 묻는 질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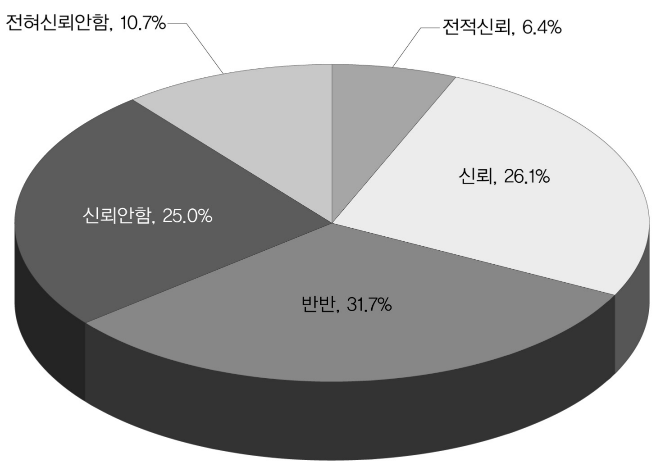
2010년 통일의식조사의 모집단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16개시도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의 성인 남녀 전체였다. 다단층화무작위추출법(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사용하여 표본이 추출되었으며, 전체 유효표본은 총 1,200명이었다.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여 일대일 개별면접을 통해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 자료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8% 다.

2) 변수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의 종속변수가 사용되었는데, 첫째는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도' 이며 두 번째는 '천안함 관련 정부책임수준'이다. 우선

첫 번째 종속변수는 "천안함 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측정되었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조사였다. 이 변수의 응답분포를 보면 정부발표를 전적으로 신뢰한다는 반응은 6.4%, 신뢰하는 편이라는 반응은 26.1%에 그쳤다. 반면,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거나 신뢰 안하는 편이라는 답변은 각각 10.7%와 25%로 드러나, 전체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반응(35.7%)이 신뢰한다는 반응(32.5%)보다 약간 높은 비율인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2-Ⅳ-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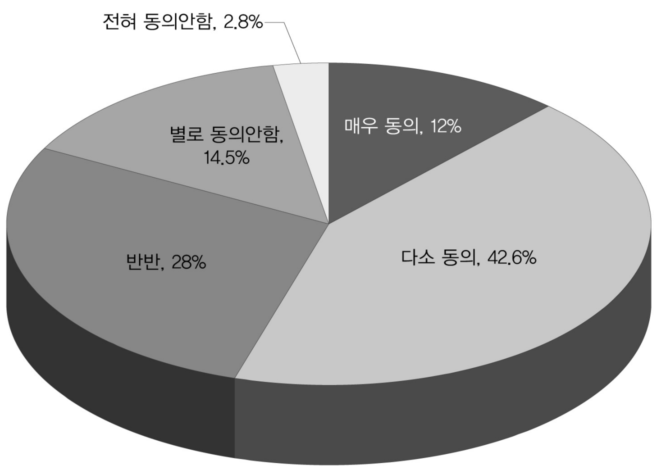
여기에 중간점("반반")을 선택한 유권자가 31.7% 정도여서, 전체 응답자는 거의 고른 비율로 신뢰 - 반반 - 불신의 세 집단으로 나뉘어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실 따져보면 정부 발표를 절반은 믿고 절반은 믿지 못한다고 답한 중간층 유권자들 또한 정부 발표에 대한 의구심을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 N= 1,200

[그림 2-Ⅳ-1]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도

두 번째 종속변수인 ‘천안함 관련 정부책임수준’은 “천안함 사건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원인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는 지를 묻는 것으로 측정하였으며, 역시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변수의 분포를 보면 절반이 넘는 54.6%의 응답자들이 매우 혹은 다소 동의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반”이라고 답한 응답자들은 28%, 별로 혹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들은 전체의 17.3%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2-Ⅳ-2]).



[그림 2-Ⅳ-2] 천안함 관련 정부책임수준

독립변수로는 ‘이명박 대통령 직무평가’, ‘북한위협수준’, ‘연령’, ‘정치적 이념성향’, ‘소득수준’ ‘교육수준’, ‘호남’, ‘영남’ 이 사용되었다. 이 독립변수들의 구체적 내용과 측정방식은 아래 <표 2-Ⅳ-1>에 정리되어 있다.

이중 ‘이명박 대통령 직무평가’는 가설 1의 검증에, 그리고 ‘북한위협수준’은 가설 2의 검증에 사용된 독립변수이다. 나머지 변수들은 통제변

인으로 사용되었다. 가설 3은 '천안함 관련 정부책임수준'을 종속변수로, 그리고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도'를 독립변수로 하여 검증하였다.

표 2-Ⅳ-1 독립 변수 일람

변수명	변수 측정 내용	측정방법
이명박 대통령 직무평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지금까지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4점 척도 (1 = 매우 잘함; 4 = 매우 잘못함)
북한위협 수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하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4점 척도 (1 = 매우 위협; 2=다소 위협; 3=별로 안느낌; 4=전혀 안느낌)
연령	4개 연령 그룹	1 = 20대; 2 = 30대; 3 = 40대; 4 = 50대 이상
정치적 성향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생각하십니까" 에 대한 응답	5점 척도 (1=매우 진보; 3 = 중도; 5=매우 보수)
소득수준	응답자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자신의 상대적 소득 수준	5점 척도 (1= 최고소득; 3 = 중간; 5 = 최저소득)
교육수준	응답자의 교육 수준	1 = 중졸 이하; 2= 고졸; 3 = 대재 이상
호남	호남지역 이항변수	1 = 호남; 0 = 기타지역
영남	영남지역 이항변수	1 = 영남; 0 = 기타지역

첫 번째 종속변수인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도와 통제변수들을 교차분석한 결과가 아래 <표 2-Ⅳ-2>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정치적 성향에 따른 정부신뢰도의 차이부터 살펴보자. 이 조사에서 스스로를 정치적으로 진보라고 답한 이는 전체 응답자의 33.1%, 중도는 45.2%, 보수는 21.7%였다. 자신을 진보라고 밝힌 이들 중 천안함 사건에 관련하여 정

부발표를 신뢰한다고 답한 비율은 29.3%이었고 신뢰하지 못한다라고 답한 비율은 42.4%였다. 이에 비해 보수의 43.8%가 정부를 신뢰하는 반면 27.5%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하여 정반대의 분포경향을 보였다.

연령별 차이를 보면 50대 이상의 거의 절반 가까운 49.6%가 정부 발표를 신뢰한 반면, 젊은 연령대로 내려갈수록 신뢰도는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다. 40대는 32.8%가, 30대는 26.3% 만이 정부 발표를 신뢰하였으며 20대는 50대 이상 세대의 절반도 되지 않는 22.8%만이 정부 발표를 믿는다고 답했다. 흔히 이런 연령별 차이는 노년층과 젊은 세대의 공산주의와 한국전쟁에 대한 직접적 경험의 유무 차이로 설명되곤 한다. 그런데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최고령자는 68세로, 단 한 명이 있었을 뿐이다. 이 최고령 응답자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 당시 8세였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1,200명중 60세 이상은 85명이었다. 즉, 공산주의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말할 수 있는 응답자는 전체 50대 이상 세대 280명 중에서도 85명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 최고령층 응답자들도 한국전쟁과 공산주의를 직접적으로 경험했다고 말하기에는 사실 너무 나이가 젊다. 따라서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도에 세대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공산주의에 대한 직접적 경험 유무보다는 과거 철저한 반공교육에 따른 북한에 대한 태도의 경직성 등으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교차분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교육수준도 천안함 발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인다.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정부 발표를 불신하는 비율도 높은데,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은(40.8%) 중졸 이하 학력자들(23.6%) 보다 천안함 발표를 믿지 않는 비율이 17.2%나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Ⅳ-2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도 교차분석

(단위: %)

		(1) 전적 신뢰	(2) 신뢰	(1)+(2)	(3) 반반	(4) 신뢰 안함	(5) 전혀 신뢰 안함	(4)+(5)
연령	19~29 세	3.6	19.1	22.8	32.7	30.4	14.2	44.6
	30 대	2.2	24	26.3	30.1	28.5	15.1	43.6
	40 대	5.9	26.9	32.8	34.1	24.3	8.9	33.1
	50대 이상	14.7	34.9	49.6	30	16.1	4.3	20.4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0.5	36.4	46.9	29.5	19.8	3.8	23.6
	고 졸	6.9	28	35	33.4	23.2	8.5	31.6
	대재 이상	5.4	22.9	28.3	30.9	27.2	13.6	40.8
소득 수준	중간보다 훨씬 높다	9.1	27.3	36.4	18.2	18.2	27.3	45.5
	중간보다 약간 높다	10.1	31.3	41.4	31.3	18.2	9.1	27.3
	중간과 비슷	5.8	26.3	32.1	31.6	26.1	10.3	36.4
	중간보다 약간 낮다	5.3	24.5	29.8	34.8	25.1	10.3	35.4
	중간보다 훨씬 낮다	11.5	25.3	36.8	21.8	25.3	16.1	41.4
지역	수도권	8	23.4	31.4	32.5	24.7	11.4	36.1
	중부권	7.6	24.2	31.8	33.1	25.8	9.3	35.2
	호남권	2.5	14.3	16.8	31.9	36.1	15.1	51.3
	영남권	5	38.7	43.7	28.4	19.3	8.6	28
	강 원	2.8	8.3	11.1	38.9	38.9	11.1	50
	제 주	7.7	7.7	15.4	46.2	30.8	7.7	38.5
정치 성향	진보적	5.5	23.8	29.3	28.2	26.1	16.4	42.4
	중 도	3.5	25.9	29.4	35.8	26.9	7.9	34.8
	보수적	13.9	29.9	43.8	28.7	19.5	8.1	27.5

소득수준 역시 어느 정도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인다. 스스로를 중간 소득수준이상이라고 답한 이들은 천안함 정부발표를 신뢰하는 수준은 각각 36.4% 및 41.4%인데 반해, 자신이 중간 소득이거나 중간보다 약간 낮은 소득층이라고 답한 이들의 신뢰도는 32.1%와 29.8%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자신들을 최저소득층이라고 답한 이들의 신뢰도는 36.8%로 오히려 중간층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왔다.

지역별로 보면 응답자수가 각각 36명과 13명으로 매우 적은편인 강원과 제주를 제외했을 때 천안함 관련 정부 발표를 가장 신뢰하고 있는 지역은 역시 집권당의 지역적 정치기반인 영남이었다(43.7%). 이와 대조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지역은 예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호남으로, 고작 16.8%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두 지역 간의 신뢰도 차이는 무려 26.9%에 이르렀다. 반면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비율은 각각 31.4%와 31.8%로 거의 비슷했다.

4. 회귀분석

1) 정부신뢰와 직무수행만족도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수준에 대한 각 변수의 영향력을 측정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분석에는 독립변수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와 북한위협수준이 포함되었으며 통제변인으로 소득수준, 호남, 영남, 연령, 교육수준, 정치적 성향 등 모두 여섯 가지의 독립변수가 사용되었다.

이 회귀분석 결과는 아래 <표 2-Ⅳ-3>에 보고되어 있다. 이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설 1에서 예측한 것처럼 천안함 발표의 신뢰수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변수는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평가였다.

즉,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까지 직무 수행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 또한 더욱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이명박 대통령이 매우 잘못했다고 평가한 사람보다 신뢰수준이 평균 1.75 정도 높았다.

신뢰수준에 대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변수로 응답자의 연령과 북한위협수준이 있었다. 교차분석 결과에서 짐작할 수 있었던 것처럼, 젊은 세대는 노년층 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 발표를 불신하고 있었다. 20대와 50대 이상 노년층의 신뢰수준 차이는 약 0.49 정도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 만큼 확실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심각할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북한으로부터 위협을 많이 느끼는 사람은 정부발표를 신뢰하는 경향이, 반대로 위협을 덜 느끼는 사람들은 정부발표를 불신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위협을 높게 느낄수록 정부신뢰도가 높을 것이라는 가설 2의 예측이 검증되었다.

표 2-Ⅳ-3 회귀분석 -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수준에 미치는 영향

	B	S.E.	*p*
이명박 대통령 직무평가	.567	.038	.000
연령	-.164	.029	.000
북한위협수준	.164	.036	.000
정치적 성향	-.098	.034	.003
소득수준	.076	.051	.035
교육수준	.027	.051	.588
호남	.130	.096	.173
영남	-.095	.064	.137
상수	1.878	.270	.000
Adjusted R^2 = 0.255 n=1197 F=52.294			

이 밖에도 신뢰수준에 대한 영향력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드러난 변수는 정치적 성향과 소득수준이었다. 우선 정치적 성향은 교차분석에서 예측된 것과 마찬가지로 진보적인 응답자일수록 천안함에 대한 신뢰수준이 낮았다. 스스로를 “매우 진보적”이라고 평가한 응답자는 “매우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보다 약 0.39 정도 신뢰수준이 낮았다.

흥미롭게도 소득수준 변수는 예측한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신뢰수준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즉, 교차분석에서 예상된 것과는 달리,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천안함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가 높았다. 하지만 그 차이는 다른 변수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작은 편이었다.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스스로를 최고 소득 집단에 속한다고 보는 응답자들은 자신의 소득이 최하 집단에 속한다고 보는 응답자들에 비해 신뢰수준이 약 0.30 정도 높았다.

이상의 네 변수 –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 연령, 정치적 성향, 소득수준 –가 95% 수준에서 천안함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수준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통제변수 중 종속변수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난 것은 교육수준, 호남, 영남이 있었다. 예상과는 달리, 학력의 높고 낮음은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에 있어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또한 호남이나 영남에 거주하는 것이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만한 통계적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 <표 2-Ⅳ-2>의 교차분석에서는 호남과 영남의 신뢰도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지만, 다른 독립변수들로 통제하였을 때 이러한 차이가 사라지는 것을 이 회귀분석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즉, 호남에 거주한다고 해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가 높거나 나이가 많고 혹은 정치적으로 보수적이라면 천안함과 관련된 정부발표

를 신뢰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영남 출신들이 정부발표를 좀 더 신뢰할 것이라는 예측도 정당화되지 못했다. 젊고 정치적으로 진보적이며 이명박 대통령에 비판적인 영남 사람들은 천안함 사고원인에 대해 회의적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 회귀분석 결과는 천안함과 정부에 대한 신뢰에 대해 이 연구에서 가설로 설정하였던 관계가 사실로 존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즉,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정부의 발표에 상당수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로 표시되는 현정부에 대한 불만에 영향받은 것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천안함 발표에 대한 신뢰수준이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현 정부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항상 지적되고 있는 소통의 문제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2) 정부신뢰와 정부책임

앞장에서 제시된 [그림 2-Ⅳ-2]에 따르면 절반이 넘는 54.6%의 응답자들이 천안함 사건에 현 남한 정부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것에 동의하고 있다. 이것은 결과적으로 다수의 국민들이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천안함 사건에 일정정도의 원인제공을 했다고 생각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표 2-Ⅳ-2>의 회귀분석과 종합하여 여기서 추측할 수 있는 점은 이명박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갖고 있던 불만이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발표에 대한 회의적 시각으로 이어졌으며, 이는 천안함 사건에 대해 남한 정부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에까지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가설 3을 증명하기 위해 '천안함 관련 정부책임수준'를 종속변수로 하여 또 하나의 회귀분석을 시도해보았다. 독립변수로는 앞에서 사용되

었던 변수들에 더해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도'가 추가되었다.

두번째 회귀분석 모델은 <표 2-Ⅳ-4>에 소개되어 있다. 우선 종속변수와 유의미한 상관관계에 있는 것으로 드러난 독립변수는 이대통령에 대한 직무평가, 정치적 성향, 그리고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수준 등 모두 세 가지였다. 나머지 여섯 가지 변수 – 북한위협수준, 소득수준, 연령, 교육수준, 호남, 영남 –들은 모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먼저 <표 2-Ⅳ-2>의 회귀분석과 비교해보자. 앞선 회귀분석에서는 정부발표에 대한 불신 정도에 있어 응답자의 연령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었다. 즉, 젊을수록 정부 발표를 믿지 못하는 경향이 있던 반면, 천안함 사건에 대한 남한 정부의 책임을 묻는 경우에는 연령이 의미 있는 변수가 되지 못했다. 이것은 남한 정부의 책임을 평가하는 것에는 젊은 세대나 노장년 세대가 별로 큰 차이가 없었음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표 2-Ⅳ-2>의 모델에서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지만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였던 것에 반해, <표 2-Ⅳ-4>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도 다른 점이다. 그리고 두 모델 모두에서 호남이나 영남의 지역주의 변수 및 교육수준은 의미있는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표 2-Ⅳ-4 회귀분석 - 천안함 사건과 현정부의 대북정책의 책임

	B	S.E.	*p*
이명박 대통령 직무평가	-.156	.040	.000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도	-.167	.028	.000
정치적 성향	.167	.033	.000
북한위협수준	.065	.036	.069
연령	-.025	.029	.393
소득수준	.041	.035	.253
교육수준	-.019	.050	.707
호남	-.139	.093	.138
영남	.105	.063	.095
상수	2.920	.267	.000
Adjusted R^2 = 0.107 n=1197 F=16.889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천안함 사건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세 가지로, 이명박 대통령 직무평가, 정치적 성향, 그리고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도였다. 즉,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낮을수록, 정치적 성향이 진보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천안함과 관련된 정부발표를 불신할수록 현정부의 대북정책이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라는 주장에 동의할 가능성이 높았다. 따라서 가설 3에서 예측한 바와 같이 '천안함 정부발표 신뢰도'는 '천안함 관련 정부책임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이 증명되었다.

천안함 사건과 관련된 두 모델을 종합해보면, 이 조사가 시행되던 시점에서 이명박 정부에 대한 불신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물론 보수적인 현정부에 대해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

진 국민들이 어느 정도 불만을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불만이 반드시 정부에 대한 심각한 불신으로 이어져야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정책과 방향에는 반대하지만 정부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는 유지하는 것이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일 수 있다. 그리고 보수적이라고 해서 반드시 정부의 천안함 관련 발표를 신뢰하는 것도 아니었다. 스스로를 보수적이라고 답한 응답자 261명 가운데 4분의 1이 좀 넘는 27.5%가 천안함 정부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한 497명의 응답자 중에서도 현 정부의 대북정책이 천안함 사건의 한 원인이라는 주장에 동조하는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6.5%에 달했다 (<표 2-Ⅳ-5>).

표 2-Ⅳ-5 이명박 대통령 직무평가와 천안함 관련 정부책임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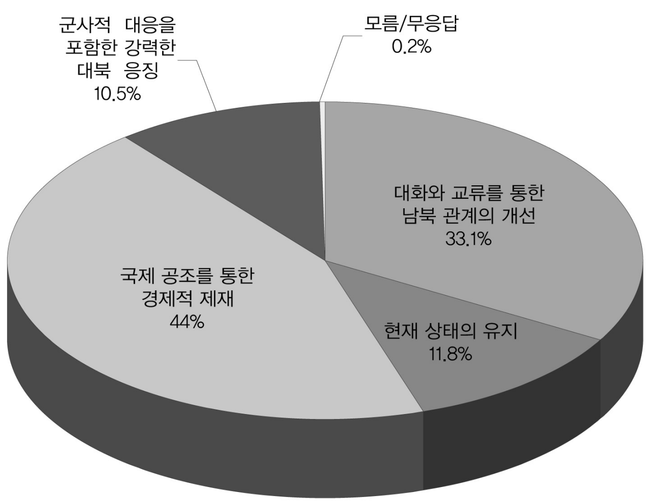
	(1) 매우 동의	(2) 다소 동의	(1)+(2)	(3) 반반	(4) 별로 동의하지 않음	(5) 전혀 동의하지 않음	(4)+(5)	합계
이명박 대통령 부정 평가	16.7% (117)	43.5% (305)	60.2% (422)	26.7% (187)	11.4% (80)	1.7% (12)	13.1% (92)	100.0% (701)
이명박 대통령 긍정 평가	5.4% (27)	41.1% (204)	46.5% (231)	30.0% (149)	19.0% (94)	4.4% (22)	23.4% (116)	100.0% (496)
합계	12.0% (144)	42.5% (509)	54.5% (653)	28.1% (336)	14.5% (174)	2.8% (34)	17.3% (208)	100.0% (1197)

*괄호 안 숫자는 응답자 수

위의 표에서 보듯, 천안함 문제가 현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은 전체의 17.3%에 불과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는, 북한이 천안함을 공격하여 침몰시켰다고 믿는 국민들 역시 천안함 사건의 원인이 단순히 북한의 적화야욕이나 김정일 정권의 호전성에 있다고만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오히려 천안함 사건은 지난 2년 반 동안 급속히 악화일로를 걸어온 남북 관계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주장이 국민들에게 더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것은 한국 국민들이 남북문제에 대해서 예리한 통찰력과 자제력, 그리고 냉정한 판단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천안함 침몰처럼 충격적인 사안이라면 국민들의 감정이 고양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되나, 위의 분석 결과는 한국 국민들이 상당히 냉정하고 침착하게 다차원적 시각으로 천안함 문제를 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점은 천안함 사건의 해법을 물었을 때 대부분의 국민들이 평화적이면서도 확실한 북한 제재 방안을 선호한다는 것에서 다시 한 번 확인된다([그림 2-Ⅳ-3]).



[그림 2-Ⅳ-3] 천안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적절한 방안

46명의 무고한 장병의 희생을 가져온 충격적인 사건이었음에도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응징”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10.5%로 적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체의 4분의 3이 넘는(77.1%)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국제 공조를 통한 경제적 제재” 같은 현실적이면서도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안이나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 관계의 개선” 같은 유화적인 방안을 선호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종합해서 결론 내려 보면, 한국인들은 최소한 남북관계 및 안보 문제에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매우 냉정하면서도 예리한 통찰력을 지니고 있다. 천안함 침몰이라는 충격적인 사태에 직면해서도 6.2 지방선거에서 ‘안보위기 결집효과(rally around the flag effect)’가 사실상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는 이러한 한국인들의 냉철하고 현실주의적인 태도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30]. 권위주의 정권 시절 선거 때마다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과장하여 이용했던 이른바 ‘북풍’의 효과는 따라서 앞으로 한국의 정치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5. 소결

지금까지의 분석에 따르면 많은 국민들이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에 대한 정부 발표를 신뢰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회귀분석 결과, 이 불신 수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소는 이명박 대통령의 직무 수행

30- 이 논문을 제출한 후인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 북한이 포격을 실시하여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 4명 및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연평도 사건 직후 11월 27일에 동아시아연구원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지지율이 44.2%로, 한 달 전 같은 기관에서 조사했던 51%보다 6.8%가 낮아졌다(조혜정 2010). 이는 지난 천안함 사건에 이어 또 다른 안보결집효과 부재의 사례라 할 수 있다.

에 대한 평가 및 북한으로부터 느끼는 위협이었으며, 세대간 격차 및 소득 수준, 정치적 이념 성향 등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정부 발표에 대한 신뢰 수준에 있어 영호남간 지역 차이는 사실상 없었으며, 교육 수준에 따른 차이도 존재하지 않았다. 또, 절반이상의 응답자들은 남한 정부 또한 천안함 침몰에 일정 정도 책임이 있다고 답하였다. 그리고 천안함 사건의 충격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은 경제적 제재나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 관계 개선 같은 평화적 해법에 절대적 지지를 보내고 있었다.

이 연구는 몇몇 구조적 요인-정치적 이념성향, 연령, 소득 등-이 천안함 사건을 통해 드러난 정부불신의 문제에 영향을 주기는 하였으나, 가장 결정적이었던 것은 현 정부에 대한 평가와 북한에 대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태도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이런 불신의 태도는 이어서 천안함 문제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는 정도에도 영향을 주고 있음을 밝혔다. 현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높았다면 아마도 천안함 사건에 있어서 남한 정부의 책임에 인정하는 비율도 낮아졌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정부로 하여금 정책적 운신의 폭을 넓힘으로써 좀 더 성공적인 대북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정부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현 이명박 정부의 남은 임기를 성공적으로 끝내기 위해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과제라고 하겠다.

후쿠야마(Fukuyama)는 비록 한국을 낮은 신뢰도의 국가로 분류하였지만[31], 조기숙·박혜윤이 새로운 척도를 사용하여 한국의 신뢰도를 측정한 결과를 보면 한국인의 일반신뢰는 결코 낮지 않았다[32]. 이것은 한국의 문화에 "신뢰적 토대"가 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그들은 정치

31- Fukuyama, Francis. 1995. *Trust :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32- 조기숙·박혜윤. 2004. "신뢰의 측정."『한국정치학회보』38 (2):95 116.

기구와 지도자들에 대한 신뢰가 낮은 것은 “제도의 실패”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런 이유로 “정치지도자들의 노력에 따라 제도화에 성공한다면 얼마든지 단시일 내에 정치 신뢰, 제도 신뢰 등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된다. 그러므로 정부신뢰를 제고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나 불가능한 과업은 더욱 아니며, 또 회피할 수도 없는 현 정부의 당면 문제이다.

결 장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결장: 격동의 정국과 의식의 심층

2010년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2007, 2008, 2009년도와 비교하여 몇 가지 흥미 있는 변화와 함께 일정하게 지속되는 안정적 흐름도 발견된다. 본 조사는 기본적으로 동일한 문항을 활용함으로써 시계열별 변화를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의 경향과 방향성을 확인하는데 도움이 된다. 특히 2010년은 남북관계, 북한의 내부사정, 국제사회 등에서 전례 없이 중대하고도 심대한 변화가 일어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적 조건과 집합적 의식 사이에 어떤 상호관계가 있는지를 분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된다. 아래에서 2010년도 상황에서의 변화, 4년간의 추이, 그리고 좀더 심층적인 차원에서 언급될 수 있는 의식의 흐름에 대해 정리하고 몇 가지 정책적 함의를 언급함으로써 본 연구의 결론을 삼고자 한다.

1. 2010년 조사에 나타나는 통일의식의 특징

2009년도 통일의식조사에서는 V형 변화, 양면성, 현실주의, 실용적 유연성, 분절성 등의 특징을 지적한 바 있다. 2010년도 의식조사에서도 양면성, 현실주의, 실용적 유연성 등은 유사하게 확인된다. 동시에 이전과는 다른 결과도 발견되는데 통일에 대한 인식 변화, 지역적 편차의 변화, 정부신뢰 변수의 중요성 등을 지적할 수 있다. 아래에서 그 특징들을 몇가지로 서술해 보기로 한다.

1) 통일기대감과 대북불안의식의 동시증대

2010년도 통일에 대한 국민의식에서 나타난 주요한 특징은 통일에 대한 필요성과 기대감이 늘어나는 한편으로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과 불안의식이 증가했다는 점이다. 통일이 필요한가에 대한 응답에서 무관심하다는 층은 다소 줄었고 통일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숫자가 작년에 비해 늘었다. 통일의 시기와 관련해서도 가급적 빠른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점도 눈에 띈다. 통일에 대한 관심이 그동안 상승해온 것은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런 변화는 주목할 만하다. 하지만 자연스런 통일과정으로의 진전가능성에 대해서는 비관적 전망이 높아지고 통일방식과 관련해서도 두 체제의 공존화합형 내지 절충형 통일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이는 북한체제에 대한 전반적 비판의식이 증대해온 경향과 맥을 같이한다고 여겨진다.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은 2010년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 '협력대상'이라는 인식은 2008년을 정점으로 2009년에 7% 감소, 2010년에는 다시 6%가 감소했다. 북한과 대화와 타협이 불가능하다는 불신정도도 59.1%에서 65.1%로 늘었다. 북한으로 인한 불안의식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북한을 가장 가까운 국가로 느낀다는 응답 비율도 2007년 23.8%에서 매년 20.3%, 15.9%, 14.8%로 줄곧 하락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기대감과 북한비판의식이 함께 증가하고 동시에 불안심리도 커지고 있다는 점은 현 시점에서 매우 신중하고도 중요하게 해석되어야 할 문제다. 북한비판과 불안심리, 통일에의 기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는 사안들이지만 그 관계의 방식은 단일하거나 단순하지 않다. 추상적 수준에서 이들은 동시적으로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 상호 긴장을 내포하며 구체적인 현실 속에서는 갈등의 소지도 없지 않다.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을 가진 사람도 불안이 증폭되는 것은 원치 않으며

통일에 대한 기대가 높은 사람이 반드시 북한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더 표명하는 것도 아니다. 국민들의 의식과 심리의 바탕에는 통일과 안보, 그리고 북한의 바람직한 변화를 함께 지향하고 이러한 가치들이 잘 실현되는 변화를 원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상황과 국면에 따라 특정한 지향과 가치가 특별히 부각되는 경우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균형에의 지향이 근간을 이룬다고 보여진다.

이전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통일의식에서 세대별, 학력별, 지역별, 이념별 차이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며 이번에도 유사한 경향은 확인되었다. 하지만 그러한 차이에 앞서서 전체 국민의 일정한 공감대가 존재하는 측면도 주목해야 한다. 예컨대 상대적으로 고학력일수록, 젊은 세대일수록, 또 이념적으로 진보적이고 정치적으로 야당성향이 강한 집단일수록 대북정책이나 통일인식에서 유화적인 경향을 보인다. 하지만 조사결과를 보면 이러한 범주별 차이보다는 오히려 전반적 유사성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통일에 대한 기대나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의식, 대외인식이나 탈북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등에서 공통적인 지향을 확인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통일이 개인에게 어떤 이익이 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응답은 국가의 이익을 기대하는 것과 비교하여 꽤 큰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결과는 국민들이 당위적인 차원과 현실적인 차원을 구별하여 응답한 탓일 수도 있고 실제로 집단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같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격차가 크다는 사실은 통일의 과정 및 절차와 관련하여 명분과 당위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는 것은 곤란함을 말해준다. 통일론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개인별, 집단별, 계층별 인식차와 공통점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대북정책에서의 양면적 지향

대북정책에 대하여는 2009년의 경향과 유사하게 의식의 양면성이 발견된다. 즉 한편으로는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이 증대하고 적절한 응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남북관계의 개선과 긴장완화를 원하는 태도가 함께 나타나고 있다. 천안함 사태를 겪으면서 피부로 느낀 한반도의 위험성이 반영된 탓인지 2010년도 조사에서는 공세적이고 적극적인 대북정책을 지지하는 비율이 다소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남북교류를 지지하고 정치적 대화와 접촉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비중도 뚜렷하게 확인된다. 남북교류협력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지지도가 2009년과 비교하여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천안함 사건을 겪고 그것이 북한의 어뢰공격의 결과라는 발표와 강경한 응징의 필요성이 강조되던 시점에서 조사된 국민의식에서 남북교류나 정치적 관계의 중요성을 지지하는 태도가 이전에 비해 큰 변화가 없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이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지만 정책적으로는 강경대응 일변도에 동의하기보다는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남북관계를 통해 불안정과 위기감을 해소할 필요성을 지지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런 특징은 단지 대북정책에서만 확인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중적 태도에서도 나타난다. 북한이탈주민을 남북한의 이질화해소와 통합에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고 수용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개인적으로 이들과 가까운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는 꺼리는 경향이 2009년에 이어 계속 커지고 있다. 당위적 차원에서는 포용적이지만 개인적인 일상생활 속에서의 친밀한 관계형성은 그다지 원치 않는 거리두기형 태도가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다. 당연히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부지원의 필요성은 강조하면서도 그들 역시 우리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동일하게 경쟁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요구가 함께 커지고 있다. 이

번 조사에서 소득수준이 중하위층에 속하는 계층에서 탈북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온 점은 이런 맥락에서 주목해 볼 일이다. 이는 한국사회에서 북한이탈주민 문제 역시 의식과 정서 속에 자리잡은 '인식의 경계'를 해소하는 일 못지 않게 실질적인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를 함께 해소해가는 일이 중요함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와 관련한 국민의식의 이런 균형성이 아마도 천안함 정국과 6.2 지방선거 결과를 함께 이해하는 열쇠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불안감,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이 증대한 것은 틀림없지만 동시에 그러한 방향으로 한반도 정세가 지속될 경우에 대한 우려와 좀더 복합적이고 예정적인 정책대응을 바라는 심리가 강하게 작동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특징은 2010년에 국한되지 않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요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3) 지역 및 세대 변수의 복잡화

한국사회에서 통일, 북한문제와 관련한 지역별, 세대별 차이는 늘 일정하게 확인되어왔는데 2010년 조사에서도 기본적으로 그 특징은 나타난다. 매년 통일의식조사에서 확인되어 온 경향은 호남권이 상대적으로 가장 진보적인 반응을 보이고 수도권, 중부권, 강원과 영남권으로 갈수록 보수적 반응이 강하다는 점이었다. 2010년에도 기본적으로는 이와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서 "북한정권과 대화와 타협이 가능하다"는 의견에 호남권의 51.3%가 동의한 반면 중부권, 수도권, 강원이 각각 40.7%, 36.3%, 33.3%, 영남권은 25.3%로 매우 낮은 비율만 공감함으로써 지역별 상대적 차이가 두드러지게 확인된다. 하지만 매우 유의미한 변화도 나타나고 있는데 이전에 비해 호남권에서 대북비판의식이 강화되고 중부권이 보다 진보적인 방향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뚜렷하다. 예컨대 '북

한이 변하고 있다'는 인식에 공감하는 응답이 중부권과 호남권에서 각기 52.5%와 52.9%로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여준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중부권은 72.0%, 호남권은 73.1%가 없다고 답했는데 이런 수치는 영남권에 비해 무려 15% 가까이 높은 것이지만 둘 사이는 거의 유사하다. 대북인식에서 중부권과 수도권이 호남권과 유사한 반응을 보이는 문항들이 여럿 발견되는데 그 결과 이전까지 수도권, 중부/호남/영남으로 크게 구별되던 지역적 편차가 수도권, 중부, 호남/영남, 강원으로 이원화되는 경향이 보인다. 이런 변화의 이유는 정확하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지만 6.2 지방선거의 결과가 이런 의식변화와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직은 이런 변화가 구조적인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앞으로 주목해 볼 점이 아닐까 여겨진다.

다음은 세대별 차이와 관련하여 2009년에도 지적했던 '20대의 보수화' 경향이 여전히 지속됨으로써 20대와 50대이상이 상대적으로 유사해지고 있다. 그 결과 많은 문항에서 30대 및 40대가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20대·및 50대이상이 보수적인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세대변수를 단순히 연령의 고하로 구분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북한이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에서 30대와 40대에서 각각 16.0%, 17.4%로 낮게 나온 반면, 20대와 50대이상에서는 각각 23.8%, 26.2%로 높게 나왔다.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비율은 30대가 40대로부터 분리되어 40대에서만 독특한 경향이 나타났다. 즉 20대와 30대, 50대이상에서는 각각 16.2%, 18.3%, 16.3%인데 비해, 40대는 26.2%로 높았다. 이전과 비교하여 40대가 가장 진보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음은 여전한데 20대 젊은 세대로 내려오면서 보수적 경향이 더 강화되고 있는 현상을 발견하게 된다. 2008~2009년에는 20대가 30~40대

의 대북인식과 궤를 같이 했으나, 2010년에는 20대의 보수화가 더 진행되어 오히려 50대의 인식과 가까워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북한의 모험주의적 행동으로 부정적 인식을 강화하는 소위 ‘북한효과’에 20대가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4) 유연한 현실주의

2010년 통일의식조사에서 나타난 국제관계에 대한 국민의식은 2009년도에 유연한 현실주의라고 이름했던 경향이 그대로 확인된다. 국제정치에서 현실주의란 국가와 국가의 관계의 기본을 갈등이라고 파악하며, 각 국가는 자국의 안보를 위해 힘을 추구하고, 국제사회에서의 평화는 이 힘의 균형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보는 시각을 말한다. 지난 4년간의 통일의식조사를 보면 일관되게 한국인들은 동맹의 중요성과 한반도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 사회의 공조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남북문제 및 장래 통일을 고려할 때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주변국의 역할이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이들에 대한 기대감이나 실망감 등이 시시각각 변화하는 국제 정세와 연동하여 의식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사에서 미국은 한국과 가장 가까운 나라로 평가되고, 또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다. 미국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지난 수년간 지속적으로 확인되어온 경향이지만 특히 2010년도 조사에서 이 비율은 70%대로 상승하였다.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로 미국을 응답한 비율이 지난 4년간 53.0%에서 59.9%, 68.2%, 70.6%로 줄곧 증대해오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의 유동적 현실을 감안할 때 미국과의 동맹, 한미간 정책공조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동시에 강

대국으로서의 중국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뚜렷하게 강화되고 있는 점이 주목할 부분이다. 가깝게 느끼는 국가로 중국을 선택한 응답비율이 지난 2007년 10.1%에서 다음해 7.7%, 작년 6.1%로 떨어지다가 2010년도에는 4.2%까지 낮아졌다. 미국에 대한 호감도 증대와 중국에 대한 호감도의 하락은 지난 수년간의 경향이기는 하지만 특히 2010년도 천안함 정국에서 보여준 양국의 행보에 대한 국민적 정서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중국이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에 매우 큰 영향력을 행사할 국가임을 인정하고 중국과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 또한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현실주의적이고 실용주의적인 국민의식을 잘 보여주는데 정서적 거부감과 정책적 강경책을 구별하고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수단을 중시하려는 경향을 나타낸다. 중국에 대한 호감도는 낮아지지만 중국과의 협력의 중요성은 여전히 강하게 인식하고 있고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지지만 정책에서의 적절한 독자성을 옹호하는 경향성에서 이런 실용적 태도를 확인하게 된다. 이런 실용성은 이데올로기적 견고함이나 냉전적인 적대성, 또는 민족주의적 도덕론과는 구별되는, 상황에 민감한 대응양식을 말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집합적 의식이 의외로 탄탄한 현실주의적 전망을 지니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고조시키고 군사적 도발행위를 번번이 감행하며 신뢰하기 어려운 북한에 대해서는 분명한 비판의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국민들은 강경한 대북정책 우선론에는 강한 지지를 보이지 않는다. 안보가 불안한 상황에서도 교류협력과 정치적 대화의 효용성과 필요성을 변함없이 인정하는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이 되는 국가로 북한을 지목하는데 동의하면서도 북한을 적대의 대상이 아닌 협력과 원조의 대상으로 보는 시

각이 여전히 상당한 비중을 점하고 있는 것도 이런 현실주의의 반영이라 하겠다. 국민들이 이념적이거나 도덕주의적인 지향보다도 상황의 조건과 초래될 결과에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점은 앞으로도 주의깊게 고려해야 할 변수가 아닌가 생각한다.

2. 정책적 함의

1) 남남갈등의 실제

이번 조사를 통해 흔히 논의되는 남남갈등의 실제를 좀더 객관적이고 분석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문제와 관련하여 이념집단간, 세대간, 지역간, 학력집단간 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고 이들 간에 정책적 대립과 긴장의 가능성도 확인되었다. 한국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진보와 보수라는 이념적 지향성이 대북인식 및 통일론과 관련한 갈등의 원천이 아닌가라는 시각이 존재한다. 실제로 지난 통일의식조사에서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정하는가의 여부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뉘는 경향이 있었고 2010년도 조사에서도 이런 특징은 발견되었다. 즉 여전히 진보집단은 북한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고, 보수층은 북한을 대화와 타협의 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다른 항목에서도 이념이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 이 차이는 예상한 것처럼 심각하거나 사회적 균열을 우려할 정도가 아니다. 앞서도 언급한 바대로 이념, 세대, 학력, 지역 범주별 차이가 없지 않고 이 점에 관심을 기울여야 함은 틀림없지만 그 차이 못지않게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부분이 뚜렷할 뿐 아니

라 2010년에는 차이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이 발견된다. 이념집단별로 보면 특히 진보집단의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이 높아져서 보수집단과의 편차가 줄어들고 있다. 2009년에는 스스로 응답한 이념범주가 진보 24.9%, 중도 48.3%, 보수 26.8%였는데 2010년에는 진보 33.1%, 중도 45.2%, 보수 21.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보수층은 위축되고, 진보층이 확대된 것으로 확인된다. 하지만 진보층이 이처럼 8.2%나 확장된 상황에서도 진보층의 대북신뢰도는 13%나 급추락하였다. 이는 진보가 북한에 대한 불신과 실망감을 보수나 중도보다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치적 성향과 안보불안을 느끼는 정도에 대한 지난 4년간의 변화에서도 흥미로운 현상이 발견된다. 즉 2007년에는 보수(64.7%)가 진보(54.5%)보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높다고 인식했는데 2008년에는 진보(57.1%)가 보수(47.8%)보다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을 더 높게 보았다. 2009년에는 보수(67.9%)가 진보(63.5%)보다 안보불안을 더 느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2010년 조사에서 보수(66.7%)-진보(68.1%)간 차이가 별로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진보의 대북인식이 비판적, 부정적으로 변한 데는 천안함 사건 등 북한의 일련의 도발적 행동과 발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을 보는 시각에서도 진보, 보수 이념집단 간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예컨대 북한을 협력대상으로 보는 진보집단의 응답이 2009년의 60.9%에서 49.4%로 현저하게 줄었으며, 경계대상이라는 응답은 15.5%에서 18.6%로 늘어났다. 중도집단의 경우에는 2009년에 보였던 '중도의 보수화'가 부분적으로 발견되었으나, 일부 '진보화'의 현상도 나타나 양극단으로의 분기가 발견되었다. 예컨대, 북한을 지원대상으로 보는 응답에서는 중도(20.4%)>보수(19.2)>진보(17.9%)로 보수쪽으로 이동했으나, 적대대상이라는 응답에서는 보수(18.8%)>진보(11.1%)>중도(9.4%)

로 진보쪽으로 이동했다. 북한이 변하지 않고 있다는 실망감에 대해서도 중도(60.1%)>보수(57.5%)>진보(46.7%)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을 했는데 특히 중도집단에서 대북 비판의식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념성향이 강한 사람들보다도 중도의 정치의식을 가진 사람들에게서 북한에 대한 비판의식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념집단별로 대북정책에서 나타나는 반응은 소통이 불가능할 정도의 사회적 균열을 나타내고 있지 않다. 특히 진보와 보수, 좌와 우의 대립과 갈등은 실제보다 과장되어 있고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해 확대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된다.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손쉽게 언급되는 남남갈등의 내용은 실제 북한에 대한 정책적 지향의 차이보다도 국내정치적 대립과 정략적 고려에 의해 더 크게 증폭되는 것일 수 있다. 천안함 사태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정책에 대한 이념집단별 평가는 일정한 차이를 수반하면서도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여준다. 북한관련 정책에 대한 반응을 요인별로 분석해 보면 결국 강경과 온건의 두 태도가 공존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것이 이념집단별로 뚜렷하게 분절되어 대립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별로는 양자의 시각이 공존하기도 하고 일정하게 수렴되기도 하는 복합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결론적으로 남남갈등으로 지칭되는 우리 사회의 북한관련 이념대립은 실제보다도 국내정치적 요인에 의해 과정된 측면이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이념적 대응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2) 정부신뢰의 중요성

이번 2010년도 조사에서 새롭게 분석한 항목의 하나는 정부신뢰와 대북정책의 상호연관성에 대한 것이다. 이는 천안함 사태를 둘러싼 사

회적 논란과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문제가 주요하게 부각되었던 시기적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지만, 그런 특정 시점을 떠나서도 북한관련 인식과 논란의 바탕에 정부신뢰라는 매개항이 주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한 의미있는 분석이었다고 생각된다.

천안함 사태에 대한 민관합동조사본부의 종합적 발표는 여러 국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적 분석이 동반된 결과물이었다. 상식적으로 볼 때 이런 결과발표에 대해 일반 국민이 높은 수준의 신뢰와 동의를 표하는 것이 당연하다. 더구나 군사대치상황에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과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높아지는 국민의식을 고려하면 더더욱 정부발표에 대한 신뢰는 높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결과는 매우 의외였는데 정부발표를 명시적으로 신뢰한다는 비율이 30% 대에 머물고 '반반'이라는 응답과 신뢰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나머지 3분의 1씩을 점하였다. 이 결과는 물론 천안함이 북한의 공격으로 침몰했다고 보는가라는 사실에 대한 응답이 아니라 정부발표를 어느 정도 믿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므로 이것이 곧 북한책임론에 대한 거부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는 없다.

분석결과 천안함 사건에 대한 정부발표를 어느 정도 신뢰하는가는 그 사건 자체와는 별개로 정부에 대한 전반적 신뢰수준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의 거의 절반 가까운 49.6%가 정부 발표를 신뢰한 반면, 젊은 연령대로 내려갈수록 신뢰도는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40대는 32.8%가, 30대는 26.3% 만이 정부 발표를 신뢰하였으며 20대는 50대 이상 세대의 절반도 되지 않는 22.8%만이 정부 발표를 믿는다고 답했다. 응답자의 교육수준도 천안함 발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보인다. 대체로 학력이 높을수록 정부발표를 불신하는 비율도 높은데,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응답자들

은(28.3%) 중졸 이하 학력자들(46.9%) 보다 천안함 발표를 믿지 않는 비율이 18.6%나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천안함 관련 정부 발표를 가장 신뢰하고 있는 지역은 역시 집권당의 지역적 정치기반인 영남이었다(43.7%). 이와 대조적으로 신뢰도가 낮은 지역은 예상할 수 있는 것과 같이 호남으로, 고작 16.8% 밖에 되지 않았다. 이 두 지역 간의 신뢰도 차이는 무려 26.9%에 이르렀다. 반면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정부 발표를 신뢰하는 비율은 각각 31.4%와 31.8%로 거의 비슷했다. 정치적 진보(29.3%)와 보수(19.5%)의 정치적 성향 차이 역시 정부발표 신뢰도에 차이를 보였다.

이 조사결과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이해와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 간에 일정한 연관관계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즉,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해 침몰되었다는 정부의 발표에 국민들이 적극적인 공감을 전적으로 표명하지 않은 이유는, 대통령의 직무수행 지지도로 표시되는 현정부에 대한 불만에 영향받은 것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평가와 천안함 발표에 대한 신뢰수준이 매우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다는 것은, 정치적 소통의 문제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한다. 또한 국민들이 의외로 정부의 발표에 대해 나름대로의 판단력과 선택적 대응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천안함 침몰처럼 충격적인 사안이라면 국민들의 감정이 고양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되나, 오히려 그것이 갖는 정치사회적 결과와 영향에 대한 다양한 반응과 시각을 드러내고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것이 특정한 국면에서 정책적 지지와 공감을 얻는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조사는 보여주고 있다.

3) 현실주의적이고 균형적인 대북정책

남북관계가 긴장의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교류협력정책에 대한 국민의지지 여부는 매우 관심이 가는 사안이다. 2008년도에는 2007년도에 비해 남북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줄어들었었지만, 2009년도에는 남북교류가 통일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이 다시 늘었었다. 2010년 조사결과에서는 군사적 충돌 속에서도 교류협력의 필요성에 대한 지지는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남북관계가 갈등과 긴장의 상태로 가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과 함께 한반도 불안정성이 미칠 부정적 영향에 대한 현실적 인식이 커졌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정책적으로 교류협력을 지지하는 것이 반드시 북한에 대한 호감도가 증대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2010년 조사결과는 오히려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적으로 교류협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잘 보여준다. 특히 그 가운데서도 남북 당국간 정기 회담이 여전히 유용하고 남북한 군사적 긴장해소가 통일을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할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고 지적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민들이 남북관계에서 정치 및 군사적 관계가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게 되면서 이 분야에 대한 종합적이고 평화지향적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을 느끼고 있음을 말해준다. 천안함 사건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북한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실질적인 제재 방안을 지지하면서도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응징”이 필요하다고 답한 비율은 10.5%로 적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전체의 4분의 3이 넘는(77.1%)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국제 공조를 통한 경제적 제재” 같은 현실적이면서도 북한에 강력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방안이나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 관계의 개선” 같은 유화적인 방안을 선호하였다. 남북간 긴장과 군사적 대립의 심화를 경험하면서 남북교류 활성

화나 통일을 위해서는 경제, 사회문화, 인도적 측면만으로는 불충분하고 결국 남북한 간에 정치 교류가 활성화되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2009년 조사에서도 발견되었듯이 국민들은 북한에 대해서도 꼭같이 남북교류정책에 부합하는 반응을 보일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번 조사에서 강화된 대북비판의식도 본질적으로 북한에 대한 적대감의 증대를 반영한다기보다 남한 정부와 사회를 경시하는 듯한 북한의 태도에 대한 거부감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다고 해석된다. 조사결과를 세밀히 검토해보면 남북관계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남한의 대북정책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북한의 대남정책도 바뀔 필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남북관계는 한국정부의 대북정책 못지 않게 북한이 어떠한 대남정책을 펴느냐에 따라 큰 영향을 받는다. 이 점에서 남북 모두 교류협력정책의 기조와 철학을 지속적으로 견지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성에 국민들의 공감대가 모아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국민들은 이념적인 지향에 따라 정책을 평가하기 보다 실질적으로 남북관계를 평화적으로 조율하고 통일에 보다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대북정책을 선호하기 때문이다. 2009년 조사에서 이런 국민들의 태도를 '따뜻한 현실주의'로 규정한 바 있는데 2010년 조사에서는 '따뜻함'은 상대적으로 약화되었지만 현실주의적 정책지향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국민들은 북한의 문제점을 잘 인식하고 있고 북한의 대남정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강하지만 그럼에도 강경일변도나 이념적 대응을 내세우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이다. 북한은 장차 통일을 이루어야할 같은 민족이라는 의식과 함께 한반도의 긴장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현실주의적인 정책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이 함께 작용하기 때문이다. 북한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과 한반도의 불안고조는 대북의식의 유연성과 통일의식수준의 고

저(高低)를 조절하는 독특한 메카니즘으로 작동하기도 한다. 이 점에서 한국인의 통일의식은 통일국가에 대한 이상이나 도덕적 열망, 규범적 당위성에만 뿌리를 두지도 않고 그렇다고 이질적이고 경쟁적인 북한체제에 대한 국제정치적 현실주의에만 의존하지도 않는다. 한국인의 통일의식은 외형적으로는 부침의 폭이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것은 심층의식에서 현실주의적이고 비판적인 대북인식과 평화공존적 민족연대의식이라는 양가적 인식이 끊임없이 상호작용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4) 통일의 지향과 다원적 민주주의

2010년은 남북관계가 매우 악화되는 가운데 통일에 대한 담론이 사회적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보듯 21세기 한반도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일론에 대한 준비는 필요한 일이다. 하지만 논리적 균형감과 시대감각, 한국사회 안팎을 종합적으로 조망하는 능력 없이 일방적으로 통일을 강조하는 논의는 자칫 냉전시대에 보이던 체제대립의 담론전쟁으로 변질될 수도 있고 내부적으로는 이념적 갈등을 조장할 수도 있다. 통일의 최종상태에 대한 그림은 물론이고 통일과정 및 그와 관련한 대북정책 역시 매우 구체적인 이해관계의 재조정을 동반하며 현실적인 계산과 정략이 불가피하다. 기본적으로 통일이 무엇이며 무엇을 위한 통일인가라는 근본적 가치지향의 물음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는 일을 바탕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의 통일의식이 보여주는 바는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매우 복합적이며 단순방정식이 아닌, 매우 복합적인 대응능력과 소프트파워가 준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식조사에서 확인되는 양면성, 불일치성, 가

변성의 바탕에는 이런 정치와 가치, 현실적 이해와 당위적 지향 사이의 딜렘마가 반영되어 있고 이런 점을 극복해가는 역량이 실제 통일역량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2010년도 조사에서도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한 응답과 개인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으로 보는가에 대한 응답 사이의 격차가 매우 크게 나타났다. 이것은 통일에 대한 규범적이고 당위적인 판단이 개인의 일상생활 및 미시적 차원에서는 뚜렷하게 작용하지 못할 가능성을 말해준다. 통일이 남한 전체 차원에는 이익이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대감은 다소 늘어났지만 여전히 통일이 개인 차원에서는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더 지배적인 상황에서 통일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합적 변수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민주주의의 질적 고양을 통해 개개인의 가치지향과 일상생활에서의 욕구들이 공동체와 민족의 시대적 과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우리 국민은 통일이 비록 개인의 이익 증대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집단의 이익 증대에는 통일이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후자의 공감대를 주요한 자산으로 활용하면서 동시에 양자의 격차를 줄이고 유연하게 연결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일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지난 해에도 지적했던 바이지만 민주주의적 가치와 소통방식의 제도화, 평화에 대한 감수성 및 다양한 문화에 대한 포용력을 발전시키는 일이 통일역량을 키우는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다. 관용성과 포용성을 바탕으로 하는 민주주의적 가치와 제도는 장차 한반도의 화해와 통일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다. 이 부분을 질적으로 고양시키려는 노력과 준비가 없으면 현실적인 이해의 상충과 내부 갈등으로 인해 통일과정이 힘들어질 뿐 아니라 통일되는 경우에도 심각한 내

홍을 겪을 수 있다. 2009년도 조사에서 한국사회의 민주화선호집단은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는 타 집단 과의 큰 차이가 발견되었는데 아마도 2010년도 조사에서도 유사한 패턴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사회의 민주적 균형 발전과 질적 성장이 한반도의 위기국면을 타개해가는 정책역량으로 이어지고 나아가 통일을 앞당기는 종합적 소프트파워로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부 록

IPUS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1. 표본 설계 (Sample Design)

구분	내용
1) 모집단	전국 16개시도 만 19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전체
2) 표본크기	1,200명 (유효표본)
3) 표본추출방법 〈주1〉	다단층화무작위추출법 (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4) 표본오차	± 2.8% (95% 신뢰수준)

<주1> 전국 인구현황(2005년 인구총조사, 통계청)에 따라 조사표본을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배분하고 난 후, 각 지역별로 모집단 비율에 따라 층화하여 최종조사지점(통반)을 추출함.

〈표본 할당〉

지역	구분	총 합계	19~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5세
전국	총계	1200	303	312	305	195	85
	남자	604	156	157	154	97	40
	여자	596	147	155	151	98	45
서울특별시	남자	131	38	34	30	21	8
	여자	134	38	32	32	23	9
경기도	남자	131	32	39	35	18	7
	여자	130	31	39	34	18	8
인천광역시	남자	33	8	9	9	5	2
	여자	31	8	8	9	4	2
강원도	남자	18	5	4	5	3	1
	여자	18	4	4	5	3	2
대전광역시	남자	19	5	5	5	3	1
	여자	18	5	5	4	3	1
충청북도	남자	18	5	4	5	3	1
	여자	18	4	5	4	3	2
충청남도	남자	23	6	5	6	4	2
	여자	22	5	6	5	4	2
광주광역시	남자	18	5	5	4	3	1
	여자	18	5	5	5	2	1
전라북도	남자	21	5	5	5	4	2
	여자	21	5	5	5	4	2
전라남도	남자	21	5	5	5	4	2
	여자	20	3	5	5	4	3
대구광역시	남자	32	8	8	9	5	2
	여자	32	8	8	8	6	2
경상북도	남자	33	8	8	8	6	3
	여자	31	7	7	8	6	3
부산광역시	남자	47	12	10	12	9	4
	여자	46	12	10	12	9	3
울산광역시	남자	14	3	4	4	2	1
	여자	14	3	4	4	2	1
경상남도	남자	38	9	10	10	6	3
	여자	37	8	10	10	6	3
제주도	남자	7	2	2	2	1	0
	여자	6	1	2	1	1	1

2. 조사방법 및 기간

구 분	내 용
1) 조사방법	1:1 개별면접조사(Face-to-Face Interview)
2)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질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3) 조사기간	2010년 7월 12일~7월 27일 (12일간)

응답자 특성

	사례수	%
■ 전체	(1200)	100.0
▣ 성별		
남자	(604)	50.3
여자	(596)	49.7
▣ 연령별		
19~29세	(303)	25.2
30대	(312)	26.0
40대	(305)	25.4
50대이상	(280)	23.3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8.7
고졸	(461)	38.4
대재이상	(634)	52.8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2.7
자영업	(259)	21.6
블루칼라	(233)	19.4
화이트칼라	(239)	19.9
전업주부	(247)	20.6
학생/무직/기타	(190)	15.8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6.9
200~299만원	(315)	26.3
300~399만원	(332)	27.7
400만원이상	(347)	28.9
모름 / 무응답	(3)	.2
▣ 지역별		
수도권	(590)	49.2
중부권	(118)	9.8
호남권	(119)	9.9
영남권	(324)	27.0
강원	(36)	3.0
제주	(13)	1.1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33.1
중도	(542)	45.2
보수적	(261)	21.7
▣ 종교별		
불교	(279)	23.2
기독교	(282)	23.5
천주교	(87)	7.3
기타	(6)	.5
종교없음	(530)	44.2
모름 / 무응답	(16)	1.3

표1. 남북한 통일의 필요성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27.3	31.8	59.0	20.4	16.6	4.0	20.6	100.0
▣ 성별									
남자	(604)	32.2	33.4	65.6	17.3	13.3	3.8	17.1	100.0
여자	(596)	22.3	30.1	52.4	23.5	19.9	4.2	24.1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6.8	32.0	48.8	23.8	21.8	5.6	27.4	100.0
30대	(312)	25.0	30.4	55.4	24.7	17.0	2.9	19.9	100.0
40대	(305)	33.1	32.1	65.2	17.0	13.1	4.6	17.7	100.0
50대이상	(280)	34.7	32.6	67.3	15.5	14.3	2.9	17.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38.1	29.1	67.2	15.3	15.6	1.9	17.5	100.0
고졸	(461)	24.1	32.6	56.7	21.0	17.3	5.0	22.3	100.0
대재이상	(634)	27.8	31.6	59.4	20.7	16.2	3.6	19.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4.3	28.7	63.0	28.1	5.8	3.1	8.9	100.0
자영업	(259)	34.7	30.1	64.8	14.5	16.9	3.9	20.7	100.0
블루칼라	(233)	28.8	27.9	56.7	24.0	15.4	3.9	19.3	100.0
화이트칼라	(239)	26.8	35.2	62.0	18.0	16.7	3.3	20.1	100.0
전업주부	(247)	20.2	32.0	52.2	22.3	20.3	5.3	25.5	100.0
학생/무직/기타	(190)	23.7	34.8	58.6	23.2	14.5	3.7	18.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31.6	26.2	57.7	20.3	18.5	3.5	22.0	100.0
200~299만원	(315)	21.0	31.2	52.2	23.1	19.6	5.1	24.6	100.0
300~399만원	(332)	29.0	29.2	58.2	19.6	18.0	4.2	22.2	100.0
400만원이상	(347)	28.5	38.2	66.7	18.6	11.5	3.2	14.7	100.0
모름 / 무응답	(3)	66.7	.0	66.7	33.3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31.2	32.7	63.9	18.1	14.7	3.2	18.0	100.0
중부권	(118)	26.3	30.5	56.8	23.3	14.8	5.1	19.9	100.0
호남권	(119)	42.9	23.5	66.4	25.2	6.7	1.7	8.4	100.0
영남권	(324)	15.5	34.6	50.1	22.2	22.4	5.2	27.6	100.0
강원	(36)	22.2	25.0	47.2	8.3	36.1	8.3	44.4	100.0
제주	(13)	23.1	23.1	46.2	38.5	7.7	7.7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35.0	32.4	67.4	15.2	13.9	3.5	17.4	100.0
중도	(542)	22.0	33.0	55.0	24.5	16.4	4.1	20.5	100.0
보수적	(261)	26.5	28.3	54.8	19.6	21.0	4.6	25.7	100.0
▣ 종교별									
불교	(279)	23.7	30.8	54.5	25.3	14.8	5.4	20.2	100.0
기독교	(282)	30.5	34.4	64.9	19.1	13.1	2.8	16.0	100.0
천주교	(87)	39.0	28.9	67.9	11.5	19.5	1.1	20.6	100.0
기타	(6)	83.3	16.7	100.0	.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24.9	31.7	56.7	20.2	19.2	4.0	23.1	100.0
모름 / 무응답	(16)	25.0	25.0	50.0	18.8	12.5	18.8	31.3	100.0

표2. 남북한 통일에 대한 견해

문)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사례수	통일을 서두르기 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현재대로가 좋다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통일에대한 관심이별로 없다	계
		%	%	%	%	%
■ 전체	(1200)	66.9	16.1	10.0	6.9	100.0
▣ 성별						
남자	(604)	67.8	13.4	13.5	5.2	100.0
여자	(596)	66.0	18.7	6.5	8.7	100.0
▣ 연령별						
19~29세	(303)	65.7	20.8	5.3	8.3	100.0
30대	(312)	70.2	16.3	6.7	6.7	100.0
40대	(305)	67.5	14.8	11.1	6.6	100.0
50대이상	(280)	64.0	12.1	17.7	6.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57.1	13.2	19.6	10.0	100.0
고졸	(461)	67.3	16.2	10.2	6.3	100.0
대재이상	(634)	68.3	16.4	8.4	6.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53.7	12.0	21.8	12.5	100.0
자영업	(259)	66.7	12.7	15.2	5.3	100.0
블루칼라	(233)	67.4	16.7	10.3	5.6	100.0
화이트칼라	(239)	71.1	14.7	7.1	7.1	100.0
전업주부	(247)	64.7	21.1	6.5	7.7	100.0
학생/무직/기타	(190)	66.5	15.8	9.0	8.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63.7	12.4	13.8	10.1	100.0
200~299만원	(315)	59.6	20.6	9.7	10.1	100.0
300~399만원	(332)	69.9	17.4	6.9	5.7	100.0
400만원이상	(347)	72.9	13.0	10.7	3.5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0	66.7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72.7	12.0	11.0	4.2	100.0
중부권	(118)	70.3	11.9	7.2	10.6	100.0
호남권	(119)	68.1	9.2	17.6	5.0	100.0
영남권	(324)	55.9	26.8	6.8	10.4	100.0
강원	(36)	50.0	25.0	11.1	13.9	100.0
제주	(13)	84.6	7.7	.0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67.8	13.9	13.4	5.0	100.0
중도	(542)	69.4	16.8	6.9	6.9	100.0
보수적	(261)	60.5	18.1	11.5	10.0	100.0
▣ 종교별						
불교	(279)	62.1	19.0	10.0	8.8	100.0
기독교	(282)	73.0	11.0	11.0	5.0	100.0
천주교	(87)	69.0	16.1	13.8	1.1	100.0
기타	(6)	33.3	16.7	50.0	.0	100.0
종교없음	(530)	66.6	16.8	8.6	8.1	100.0
모름 / 무응답	(16)	56.3	31.3	6.3	6.3	100.0

표3. 남북한 통일 가능 시기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5년이내	10년이내	20년이내	30년이내	30년이상	불가능하다	계
		%	%	%	%	%	%	%
■ 전체	(1200)	3.4	17.8	24.1	13.4	20.8	20.6	100.0
▣ 성별								
남자	(604)	3.5	22.7	23.5	13.2	19.7	17.3	100.0
여자	(596)	3.4	12.7	24.6	13.6	21.8	23.9	100.0
▣ 연령별								
19~29세	(303)	2.6	14.9	15.8	13.9	27.1	25.7	100.0
30대	(312)	2.6	17.9	26.3	16.0	18.9	18.3	100.0
40대	(305)	4.3	19.0	29.2	12.1	19.3	16.1	100.0
50대이상	(280)	4.3	19.3	25.0	11.3	17.5	22.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6.7	16.2	24.2	10.5	13.4	28.9	100.0
고졸	(461)	2.6	16.9	25.0	12.8	21.2	21.4	100.0
대재이상	(634)	3.5	18.6	23.4	14.3	21.6	18.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1	21.8	6.2	6.2	31.2	31.4	100.0
자영업	(259)	4.2	22.7	24.3	12.5	14.7	21.5	100.0
블루칼라	(233)	3.4	17.2	24.4	13.8	24.9	16.3	100.0
화이트칼라	(239)	3.3	21.4	26.8	14.2	18.4	15.9	100.0
전업주부	(247)	3.6	8.1	30.3	12.6	21.1	24.3	100.0
학생/무직/기타	(190)	2.1	19.0	14.8	15.3	24.8	24.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5.4	18.3	21.2	11.9	18.8	24.4	100.0
200~299만원	(315)	3.2	18.3	21.1	13.4	20.2	23.7	100.0
300~399만원	(332)	1.5	17.2	25.0	15.1	21.1	20.1	100.0
400만원이상	(347)	4.0	17.6	27.8	12.8	21.9	15.8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0	.0	.0	33.3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3.6	19.2	25.9	14.4	20.0	16.9	100.0
중부권	(118)	3.4	10.2	25.4	19.1	24.6	17.4	100.0
호남권	(119)	6.7	26.9	17.6	10.1	18.5	20.2	100.0
영남권	(324)	2.5	14.5	23.8	11.5	20.7	27.0	100.0
강원	(36)	.0	5.6	16.7	8.3	36.1	33.3	100.0
제주	(13)	.0	53.8	15.4	7.7	.0	23.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5.0	20.4	27.1	14.7	16.9	15.9	100.0
중도	(542)	2.0	15.3	22.6	13.7	25.3	21.1	100.0
보수적	(261)	3.8	18.7	22.7	10.7	17.3	26.7	100.0
▣ 종교별								
불교	(279)	2.9	15.9	24.3	14.2	19.7	23.1	100.0
기독교	(282)	5.7	20.2	25.9	13.8	16.0	18.4	100.0
천주교	(87)	1.1	24.1	22.9	16.1	18.6	17.2	100.0
기타	(6)	33.3	16.7	16.7	16.7	16.7	.0	100.0
종교없음	(530)	2.5	16.4	23.5	12.7	24.1	20.9	100.0
모름 / 무응답	(16)	6.3	18.8	18.8	.0	25.0	31.3	100.0

표4-1.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13.2	39.1	52.3	37.3	10.4	47.7	100.0
▣ 성별								
남자	(604)	15.8	37.2	53.0	37.6	9.4	47.0	100.0
여자	(596)	10.6	41.1	51.6	37.0	11.4	48.4	100.0
▣ 연령별								
19~29세	(303)	8.3	41.3	49.5	40.6	9.9	50.5	100.0
30대	(312)	12.5	36.9	49.4	41.3	9.3	50.6	100.0
40대	(305)	17.0	41.0	58.0	31.5	10.5	42.0	100.0
50대이상	(280)	15.1	37.3	52.4	35.7	12.0	47.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6.7	34.3	41.0	43.2	15.8	59.0	100.0
고졸	(461)	12.8	39.1	51.9	37.0	11.1	48.1	100.0
대재이상	(634)	14.5	39.9	54.4	36.6	9.0	45.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21.8	31.2	53.0	31.2	15.8	47.0	100.0
자영업	(259)	17.0	41.8	58.8	28.1	13.1	41.2	100.0
블루칼라	(233)	14.6	34.4	49.0	41.2	9.9	51.0	100.0
화이트칼라	(239)	16.0	35.9	51.9	39.3	8.8	48.1	100.0
전업주부	(247)	8.1	42.1	50.2	39.7	10.1	49.8	100.0
학생/무직/기타	(190)	7.9	42.7	50.7	40.6	8.7	49.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21.8	27.1	48.9	36.9	14.2	51.1	100.0
200~299만원	(315)	9.9	40.6	50.5	41.0	8.6	49.5	100.0
300~399만원	(332)	12.6	36.4	49.1	38.9	12.0	50.9	100.0
400만원이상	(347)	11.8	47.7	59.5	32.2	8.4	40.5	100.0
모름 / 무응답	(3)	.0	.0	.0	100.0	.0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3.1	43.4	56.4	33.9	9.7	43.6	100.0
중부권	(118)	14.4	36.0	50.4	35.6	14.0	49.6	100.0
호남권	(119)	37.0	31.1	68.1	26.1	5.9	31.9	100.0
영남권	(324)	4.7	37.0	41.7	48.1	10.2	58.3	100.0
강원	(36)	11.1	25.0	36.1	44.4	19.4	63.9	100.0
제주	(13)	7.7	38.5	46.2	23.1	30.8	53.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8.6	37.7	56.3	34.6	9.1	43.7	100.0
중도	(542)	10.3	40.8	51.1	39.5	9.3	48.9	100.0
보수적	(261)	10.8	37.9	48.7	36.8	14.5	51.3	100.0
▣ 종교별								
불교	(279)	10.1	33.2	43.3	41.1	15.6	56.7	100.0
기독교	(282)	16.0	45.0	61.0	30.5	8.5	39.0	100.0
천주교	(87)	12.6	43.6	56.2	31.2	12.6	43.8	100.0
기타	(6)	50.0	33.3	83.3	.0	16.7	16.7	100.0
종교없음	(530)	12.1	38.8	50.9	41.0	8.1	49.1	100.0
모름 / 무응답	(16)	43.8	25.0	68.8	18.8	12.5	31.3	100.0

표4-2.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17.8	49.0	66.8	27.5	5.7	33.2	100.0
▣ 성별								
남자	(604)	19.9	47.3	67.2	26.6	6.2	32.8	100.0
여자	(596)	15.8	50.6	66.4	28.4	5.2	33.6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4.9	46.2	61.1	32.3	6.6	38.9	100.0
30대	(312)	17.6	50.0	67.6	27.6	4.8	32.4	100.0
40대	(305)	21.0	49.5	70.5	23.9	5.6	29.5	100.0
50대이상	(280)	17.9	50.2	68.1	26.1	5.7	31.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0.5	46.2	56.7	34.5	8.8	43.3	100.0
고졸	(461)	13.7	51.5	65.2	29.2	5.6	34.8	100.0
대재이상	(634)	22.1	47.6	69.7	25.1	5.2	30.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21.8	40.6	62.4	30.7	6.9	37.6	100.0
자영업	(259)	24.7	47.6	72.3	19.6	8.0	27.7	100.0
블루칼라	(233)	13.3	47.7	61.0	33.4	5.6	39.0	100.0
화이트칼라	(239)	21.4	47.7	69.1	27.6	3.3	30.9	100.0
전업주부	(247)	13.0	52.2	65.2	29.9	4.9	34.8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5.3	51.2	66.5	27.2	6.3	33.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6.3	44.4	60.7	31.3	8.0	39.3	100.0
200~299만원	(315)	14.6	49.4	64.0	31.0	5.0	36.0	100.0
300~399만원	(332)	19.6	45.8	65.4	28.0	6.6	34.6	100.0
400만원이상	(347)	19.9	54.1	74.0	21.9	4.0	26.0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66.7	100.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9.3	52.0	71.4	24.2	4.4	28.6	100.0
중부권	(118)	15.3	53.0	68.2	26.7	5.1	31.8	100.0
호남권	(119)	37.8	44.5	82.4	15.1	2.5	17.6	100.0
영남권	(324)	9.3	45.1	54.4	37.5	8.0	45.6	100.0
강원	(36)	11.1	36.1	47.2	41.7	11.1	52.8	100.0
제주	(13)	23.1	46.2	69.2	7.7	23.1	30.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24.7	44.8	69.5	24.4	6.0	30.5	100.0
중도	(542)	13.5	52.1	65.6	28.8	5.5	34.4	100.0
보수적	(261)	16.5	48.7	65.2	29.4	5.4	34.8	100.0
▣ 종교별								
불교	(279)	13.7	45.6	59.4	32.7	8.0	40.6	100.0
기독교	(282)	19.1	56.4	75.5	20.2	4.3	24.5	100.0
천주교	(87)	28.7	50.5	79.1	12.8	8.0	20.9	100.0
기타	(6)	50.0	33.3	83.3	.0	16.7	16.7	100.0
종교없음	(530)	16.6	47.2	63.8	31.9	4.3	36.2	100.0
모름 / 무응답	(16)	37.5	31.3	68.8	12.5	18.8	31.3	100.0

표4-3.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금강산관광·개성 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금강산개성관광·개성 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19.0	49.6	68.6	25.3	6.1	31.4	100.0
▣ 성별								
남자	(604)	21.8	46.3	68.2	25.2	6.7	31.8	100.0
여자	(596)	16.1	53.0	69.1	25.4	5.5	30.9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7.5	48.2	65.7	28.1	6.3	34.3	100.0
30대	(312)	16.7	48.7	65.4	29.5	5.1	34.6	100.0
40대	(305)	20.0	53.1	73.1	21.6	5.2	26.9	100.0
50대이상	(280)	22.1	48.4	70.5	21.6	7.8	29.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6.2	41.9	58.2	31.3	10.6	41.8	100.0
고졸	(461)	17.9	50.9	68.8	26.0	5.2	31.2	100.0
대재이상	(634)	20.2	50.0	70.2	23.8	6.0	29.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5.6	43.7	59.3	33.9	6.9	40.7	100.0
자영업	(259)	24.9	48.5	73.3	19.4	7.3	26.7	100.0
블루칼라	(233)	16.0	53.2	69.1	25.3	5.6	30.9	100.0
화이트칼라	(239)	21.0	47.3	68.3	26.7	5.0	31.7	100.0
전업주부	(247)	13.8	53.0	66.8	28.0	5.2	33.2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9.5	46.4	66.0	26.6	7.4	34.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22.7	38.5	61.2	31.8	6.9	38.8	100.0
200~299만원	(315)	17.2	45.3	62.5	30.5	6.9	37.5	100.0
300~399만원	(332)	17.8	50.6	68.4	24.7	6.9	31.6	100.0
400만원이상	(347)	19.4	59.2	78.7	17.3	4.0	21.3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33.3	66.7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9.8	54.2	74.1	20.8	5.1	25.9	100.0
중부권	(118)	23.3	41.1	64.4	31.4	4.2	35.6	100.0
호남권	(119)	31.9	48.7	80.7	16.8	2.5	19.3	100.0
영남권	(324)	11.5	46.0	57.6	33.5	8.9	42.4	100.0
강원	(36)	16.7	41.7	58.3	27.8	13.9	41.7	100.0
제주	(13)	15.4	38.5	53.8	38.5	7.7	46.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25.6	45.7	71.3	22.4	6.3	28.7	100.0
중도	(542)	16.1	50.4	66.5	27.6	5.9	33.5	100.0
보수적	(261)	15.0	54.1	69.0	24.8	6.1	31.0	100.0
▣ 종교별								
불교	(279)	17.8	45.5	63.3	27.0	9.7	36.7	100.0
기독교	(282)	21.3	58.2	79.4	16.7	3.9	20.6	100.0
천주교	(87)	18.3	54.1	72.5	19.5	8.0	27.5	100.0
기타	(6)	50.0	50.0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17.4	46.9	64.3	30.8	4.9	35.7	100.0
모름 / 무응답	(16)	43.8	37.5	81.3	6.3	12.5	18.8	100.0

표4-4. 대북 정책별 통일 도움 정도 -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문)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다소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26.9	48.4	75.3	20.1	4.6	24.7	100.0
▣ 성별								
남자	(604)	29.7	46.3	76.0	18.5	5.5	24.0	100.0
여자	(596)	24.0	50.6	74.6	21.7	3.7	25.4	100.0
▣ 연령별								
19~29세	(303)	26.1	46.9	72.9	22.8	4.3	27.1	100.0
30대	(312)	26.9	50.3	77.2	18.9	3.8	22.8	100.0
40대	(305)	28.2	47.5	75.7	20.3	3.9	24.3	100.0
50대이상	(280)	26.3	49.0	75.3	18.2	6.5	24.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5.8	48.6	64.4	24.9	10.7	35.6	100.0
고졸	(461)	24.4	50.2	74.7	21.4	3.9	25.3	100.0
대재이상	(634)	30.5	47.1	77.6	18.3	4.1	22.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4.3	31.2	65.5	27.6	6.9	34.5	100.0
자영업	(259)	34.0	45.3	79.3	13.8	6.9	20.7	100.0
블루칼라	(233)	24.5	52.3	76.8	20.2	3.0	23.2	100.0
화이트칼라	(239)	27.7	44.7	72.4	22.6	5.0	27.6	100.0
전업주부	(247)	20.3	51.4	71.7	24.7	3.6	28.3	100.0
학생/무직/기타	(190)	26.4	51.7	78.1	18.2	3.7	21.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29.7	44.9	74.6	20.4	5.0	25.4	100.0
200~299만원	(315)	24.1	46.2	70.2	24.7	5.1	29.8	100.0
300~399만원	(332)	24.5	48.8	73.2	20.4	6.3	26.8	100.0
400만원이상	(347)	30.1	52.0	82.1	15.6	2.3	17.9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66.7	100.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28.5	51.2	79.7	16.6	3.7	20.3	100.0
중부권	(118)	36.4	42.8	79.2	16.5	4.2	20.8	100.0
호남권	(119)	42.0	49.6	91.6	5.9	2.5	8.4	100.0
영남권	(324)	16.5	46.8	63.4	30.1	6.5	36.6	100.0
강원	(36)	13.9	36.1	50.0	41.7	8.3	50.0	100.0
제주	(13)	23.1	38.5	61.5	30.8	7.7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31.9	44.2	76.1	19.1	4.8	23.9	100.0
중도	(542)	23.6	51.1	74.7	21.2	4.1	25.3	100.0
보수적	(261)	26.2	49.4	75.6	19.1	5.4	24.4	100.0
▣ 종교별								
불교	(279)	25.4	42.2	67.6	25.5	6.9	32.4	100.0
기독교	(282)	29.4	55.0	84.4	13.8	1.8	15.6	100.0
천주교	(87)	24.1	55.3	79.4	16.1	4.6	20.6	100.0
기타	(6)	83.3	16.7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25.2	48.4	73.6	21.7	4.7	26.4	100.0
모름 / 무응답	(16)	56.3	18.8	75.0	12.5	12.5	25.0	100.0

표5-1.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 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 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18.3	51.4	69.7	27.6	2.7	30.3	100.0
▣ 성별								
남자	(604)	21.2	49.7	70.8	25.8	3.3	29.2	100.0
여자	(596)	15.4	53.1	68.6	29.4	2.0	31.4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2.9	53.8	66.7	30.0	3.3	33.3	100.0
30대	(312)	16.0	55.8	71.8	26.0	2.2	28.2	100.0
40대	(305)	22.6	49.2	71.8	25.6	2.6	28.2	100.0
50대이상	(280)	22.1	46.3	68.4	29.0	2.6	31.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7.2	44.6	61.9	35.3	2.9	38.1	100.0
고졸	(461)	15.3	52.4	67.8	29.0	3.3	32.2	100.0
대재이상	(634)	20.7	51.7	72.4	25.3	2.2	27.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7.4	31.2	68.6	31.4	.0	31.4	100.0
자영업	(259)	23.7	47.5	71.3	24.8	3.9	28.7	100.0
블루칼라	(233)	15.5	55.7	71.3	24.4	4.3	28.7	100.0
화이트칼라	(239)	18.9	48.5	67.3	31.0	1.7	32.7	100.0
전업주부	(247)	13.4	54.3	67.6	30.3	2.0	32.4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6.9	54.6	71.5	26.9	1.6	28.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21.8	42.6	64.4	31.2	4.4	35.6	100.0
200~299만원	(315)	18.1	49.2	67.4	29.1	3.5	32.6	100.0
300~399만원	(332)	14.2	50.3	64.5	34.0	1.5	35.5	100.0
400만원이상	(347)	20.6	59.6	80.2	17.7	2.1	19.8	100.0
모름 / 무응답	(3)	.0	33.3	33.3	66.7	.0	66.7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8.5	56.9	75.4	21.9	2.7	24.6	100.0
중부권	(118)	19.1	51.7	70.8	25.0	4.2	29.2	100.0
호남권	(119)	37.8	45.4	83.2	16.0	.8	16.8	100.0
영남권	(324)	10.9	45.9	56.8	40.1	3.1	43.2	100.0
강원	(36)	16.7	30.6	47.2	52.8	.0	52.8	100.0
제주	(13)	15.4	46.2	61.5	38.5	.0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24.8	51.4	76.2	21.5	2.3	23.8	100.0
중도	(542)	14.3	51.1	65.3	31.7	3.0	34.7	100.0
보수적	(261)	16.9	52.0	68.9	28.4	2.7	31.1	100.0
▣ 종교별								
불교	(279)	15.0	49.3	64.3	32.5	3.2	35.7	100.0
기독교	(282)	18.8	60.6	79.4	19.1	1.4	20.6	100.0
천주교	(87)	19.5	50.5	70.0	27.5	2.5	30.0	100.0
기타	(6)	66.7	33.3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18.7	48.7	67.4	29.9	2.6	32.6	100.0
모름 / 무응답	(16)	31.3	25.0	56.3	25.0	18.8	43.8	100.0

표5-2.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북한의 개방과 개혁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 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 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32.3	45.9	78.2	19.6	2.2	21.8	100.0
▣ 성별								
남자	(604)	37.2	43.6	80.8	17.4	1.8	19.2	100.0
여자	(596)	27.3	48.2	75.6	21.8	2.7	24.4	100.0
▣ 연령별								
19~29세	(303)	31.4	44.6	75.9	20.8	3.3	24.1	100.0
30대	(312)	32.4	43.9	76.3	21.8	1.9	23.7	100.0
40대	(305)	30.8	50.2	81.0	16.7	2.3	19.0	100.0
50대이상	(280)	34.8	44.9	79.7	18.9	1.4	20.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26.0	48.7	74.7	21.5	3.8	25.3	100.0
고졸	(461)	29.3	49.3	78.6	19.9	1.5	21.4	100.0
대재이상	(634)	35.5	42.9	78.4	19.0	2.5	21.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41.2	43.2	84.4	15.6	.0	15.6	100.0
자영업	(259)	36.3	43.1	79.4	18.7	1.9	20.6	100.0
블루칼라	(233)	31.3	46.8	78.1	20.6	1.3	21.9	100.0
화이트칼라	(239)	34.8	41.4	76.2	20.5	3.3	23.8	100.0
전업주부	(247)	24.7	49.3	74.1	23.1	2.8	25.9	100.0
학생/무직/기타	(190)	33.2	50.1	83.4	14.5	2.1	16.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31.2	48.2	79.5	17.6	3.0	20.5	100.0
200~299만원	(315)	25.7	51.0	76.6	21.8	1.6	23.4	100.0
300~399만원	(332)	33.5	40.9	74.4	21.7	3.9	25.6	100.0
400만원이상	(347)	38.0	44.2	82.2	16.9	.9	17.8	100.0
모름 / 무응답	(3)	.0	100.0	100.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36.4	43.9	80.3	17.5	2.2	19.7	100.0
중부권	(118)	36.4	44.9	81.4	17.8	.8	18.6	100.0
호남권	(119)	42.9	43.7	86.6	12.6	.8	13.4	100.0
영남권	(324)	19.6	49.9	69.5	26.8	3.7	30.5	100.0
강원	(36)	22.2	58.3	80.6	19.4	.0	19.4	100.0
제주	(13)	53.8	30.8	84.6	15.4	.0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39.3	45.0	84.3	13.7	2.0	15.7	100.0
중도	(542)	26.4	47.3	73.7	24.0	2.2	26.3	100.0
보수적	(261)	33.8	44.4	78.1	19.2	2.7	21.9	100.0
▣ 종교별								
불교	(279)	31.4	40.3	71.7	24.4	3.9	28.3	100.0
기독교	(282)	38.3	44.7	83.0	16.0	1.1	17.0	100.0
천주교	(87)	31.0	53.9	84.9	14.0	1.1	15.1	100.0
기타	(6)	50.0	16.7	66.7	16.7	16.7	33.3	100.0
종교없음	(530)	29.4	48.7	78.2	19.9	1.9	21.8	100.0
모름 / 무응답	(16)	37.5	37.5	75.0	18.8	6.3	25.0	100.0

표5-3.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군사적 긴장 해소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 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 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44.4	39.3	83.6	13.9	2.4	16.4	100.0
▣ 성별								
남자	(604)	46.2	37.7	83.9	13.6	2.5	16.1	100.0
여자	(596)	42.6	40.8	83.4	14.2	2.3	16.6	100.0
▣ 연령별								
19~29세	(303)	45.9	38.9	84.8	12.9	2.3	15.2	100.0
30대	(312)	44.9	38.5	83.3	14.1	2.6	16.7	100.0
40대	(305)	42.0	42.0	83.9	13.4	2.6	16.1	100.0
50대이상	(280)	44.9	37.5	82.4	15.4	2.1	17.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36.2	43.9	80.1	16.1	3.8	19.9	100.0
고졸	(461)	39.9	41.9	81.8	15.2	3.0	18.2	100.0
대재이상	(634)	49.0	36.5	85.6	12.7	1.7	14.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7.4	47.0	84.4	12.5	3.1	15.6	100.0
자영업	(259)	45.5	34.8	80.3	16.6	3.1	19.7	100.0
블루칼라	(233)	47.2	38.3	85.4	11.6	3.0	14.6	100.0
화이트칼라	(239)	41.4	39.3	80.6	16.9	2.5	19.4	100.0
전업주부	(247)	39.3	44.2	83.4	15.3	1.2	16.6	100.0
학생/무직/기타	(190)	51.2	38.8	90.0	7.9	2.1	10.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43.9	40.3	84.3	11.8	4.0	15.7	100.0
200~299만원	(315)	42.7	40.4	83.1	14.6	2.2	16.9	100.0
300~399만원	(332)	39.8	39.1	78.9	18.4	2.7	21.1	100.0
400만원이상	(347)	50.7	37.5	88.2	10.4	1.4	11.8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66.7	100.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45.9	38.1	84.1	13.4	2.5	15.9	100.0
중부권	(118)	50.0	34.7	84.7	12.7	2.5	15.3	100.0
호남권	(119)	60.5	28.6	89.1	9.2	1.7	10.9	100.0
영남권	(324)	32.6	47.8	80.5	16.7	2.8	19.5	100.0
강원	(36)	50.0	38.9	88.9	11.1	.0	11.1	100.0
제주	(13)	53.8	15.4	69.2	30.8	.0	30.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46.3	39.8	86.1	11.6	2.3	13.9	100.0
중도	(542)	41.1	40.4	81.6	16.4	2.0	18.4	100.0
보수적	(261)	48.2	36.0	84.2	12.4	3.5	15.8	100.0
▣ 종교별								
불교	(279)	42.7	38.9	81.6	15.5	2.9	18.4	100.0
기독교	(282)	51.1	36.2	87.2	11.3	1.4	12.8	100.0
천주교	(87)	41.3	42.7	83.9	14.9	1.1	16.1	100.0
기타	(6)	66.7	33.3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42.2	40.8	83.0	14.3	2.6	17.0	100.0
모름 / 무응답	(16)	37.5	31.3	68.8	18.8	12.5	31.3	100.0

표5-4.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 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 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5.2	19.1	24.3	50.4	25.2	75.7	100.0
▣ 성별								
남자	(604)	4.9	17.3	22.2	50.7	27.1	77.8	100.0
여자	(596)	5.5	21.0	26.5	50.1	23.4	73.5	100.0
▣ 연령별								
19~29세	(303)	5.6	24.1	29.7	46.2	24.1	70.3	100.0
30대	(312)	4.8	19.9	24.7	54.5	20.8	75.3	100.0
40대	(305)	6.2	17.7	23.9	55.1	21.0	76.1	100.0
50대이상	(280)	4.1	14.5	18.6	45.4	36.0	81.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4.8	15.3	20.1	47.8	32.1	79.9	100.0
고졸	(461)	5.3	14.8	20.1	52.6	27.3	79.9	100.0
대재이상	(634)	5.2	22.9	28.2	49.3	22.6	71.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1	18.7	21.8	46.8	31.4	78.2	100.0
자영업	(259)	8.3	17.9	26.2	45.6	28.1	73.8	100.0
블루칼라	(233)	3.4	16.4	19.8	57.9	22.3	80.2	100.0
화이트칼라	(239)	3.8	20.5	24.2	51.5	24.2	75.8	100.0
전업주부	(247)	3.2	15.4	18.6	54.3	27.0	81.4	100.0
학생/무직/기타	(190)	7.9	27.4	35.4	42.0	22.7	64.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7.9	22.2	30.2	38.8	31.0	69.8	100.0
200~299만원	(315)	5.4	19.4	24.8	54.7	20.6	75.2	100.0
300~399만원	(332)	5.4	16.9	22.3	50.4	27.4	77.7	100.0
400만원이상	(347)	3.3	19.4	22.8	53.3	24.0	77.2	100.0
모름 / 무응답	(3)	.0	.0	.0	66.7	33.3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5.8	19.0	24.7	49.7	25.6	75.3	100.0
중부권	(118)	5.5	20.8	26.3	46.6	27.1	73.7	100.0
호남권	(119)	10.1	23.5	33.6	51.3	15.1	66.4	100.0
영남권	(324)	1.9	14.6	16.4	53.7	29.8	83.6	100.0
강원	(36)	8.3	41.7	50.0	44.4	5.6	50.0	100.0
제주	(13)	7.7	23.1	30.8	46.2	23.1	69.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7.9	23.8	31.7	47.9	20.4	68.3	100.0
중도	(542)	4.1	17.7	21.8	53.1	25.1	78.2	100.0
보수적	(261)	3.5	15.0	18.4	48.8	32.8	81.6	100.0
▣ 종교별								
불교	(279)	3.8	13.5	17.2	53.4	29.3	82.8	100.0
기독교	(282)	6.0	19.5	25.5	49.3	25.2	74.5	100.0
천주교	(87)	5.7	32.1	37.8	35.6	26.6	62.2	100.0
기타	(6)	33.3	.0	33.3	50.0	16.7	66.7	100.0
종교없음	(530)	4.7	19.7	24.4	52.3	23.3	75.6	100.0
모름 / 무응답	(16)	18.8	31.3	50.0	37.5	12.5	50.0	100.0

표5-5.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30.8	44.9	75.7	22.0	2.3	24.3	100.0
▣ 성별								
남자	(604)	30.5	44.3	74.8	22.9	2.3	25.2	100.0
여자	(596)	31.0	45.5	76.6	21.1	2.3	23.4	100.0
▣ 연령별								
19~29세	(303)	30.4	45.2	75.6	22.8	1.7	24.4	100.0
30대	(312)	33.0	42.3	75.3	21.2	3.5	24.7	100.0
40대	(305)	28.9	48.2	77.0	21.6	1.3	23.0	100.0
50대이상	(280)	30.8	43.9	74.7	22.5	2.8	25.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27.4	47.9	75.3	19.1	5.6	24.7	100.0
고졸	(461)	29.5	43.9	73.4	24.7	2.0	26.6	100.0
대재이상	(634)	32.2	45.2	77.4	20.6	2.1	22.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41.2	49.5	90.6	6.2	3.1	9.4	100.0
자영업	(259)	38.6	36.0	74.6	23.1	2.3	25.4	100.0
블루칼라	(233)	25.4	46.7	72.1	25.3	2.6	27.9	100.0
화이트칼라	(239)	28.1	47.6	75.7	22.2	2.1	24.3	100.0
전업주부	(247)	23.5	53.0	76.5	21.1	2.4	23.5	100.0
학생/무직/기타	(190)	37.7	40.1	77.8	20.1	2.1	22.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38.4	40.9	79.3	15.3	5.4	20.7	100.0
200~299만원	(315)	27.3	47.3	74.7	23.1	2.2	25.3	100.0
300~399만원	(332)	29.3	42.7	72.0	26.8	1.2	28.0	100.0
400만원이상	(347)	30.5	47.5	78.1	20.2	1.7	21.9	100.0
모름 / 무응답	(3)	66.7	.0	66.7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31.7	46.9	78.6	19.0	2.4	21.4	100.0
중부권	(118)	47.0	41.1	88.1	10.2	1.7	11.9	100.0
호남권	(119)	48.7	37.8	86.6	12.6	.8	13.4	100.0
영남권	(324)	15.0	44.9	59.9	36.8	3.4	40.1	100.0
강원	(36)	38.9	50.0	88.9	11.1	.0	11.1	100.0
제주	(13)	46.2	38.5	84.6	15.4	.0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34.5	42.8	77.3	20.4	2.3	22.7	100.0
중도	(542)	29.0	46.2	75.2	22.7	2.2	24.8	100.0
보수적	(261)	28.8	45.4	74.2	23.1	2.7	25.8	100.0
▣ 종교별								
불교	(279)	29.0	45.1	74.1	24.1	1.7	25.9	100.0
기독교	(282)	37.9	45.0	83.0	15.2	1.8	17.0	100.0
천주교	(87)	32.1	42.4	74.5	22.0	3.4	25.5	100.0
기타	(6)	66.7	33.3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27.4	45.1	72.5	24.8	2.6	27.5	100.0
모름 / 무응답	(16)	25.0	50.0	75.0	18.8	6.3	25.0	100.0

표5-6. 대북 사안별 시급성 - ㉥ 북한의 인권 개선

문)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시급하다	② 다소 시급하다	①+②	③ 별로 시급 하지 않다	④ 전혀 시급 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36.9	45.9	82.8	15.0	2.2	17.2	100.0
▣ 성별								
남자	(604)	38.6	43.5	82.1	15.3	2.5	17.9	100.0
여자	(596)	35.2	48.3	83.5	14.7	1.8	16.5	100.0
▣ 연령별								
19~29세	(303)	38.9	42.6	81.5	15.2	3.3	18.5	100.0
30대	(312)	37.8	45.5	83.3	14.7	1.9	16.7	100.0
40대	(305)	37.0	49.8	86.9	11.5	1.6	13.1	100.0
50대이상	(280)	33.7	45.5	79.1	19.1	1.8	20.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27.8	50.9	78.6	18.6	2.7	21.4	100.0
고졸	(461)	32.7	48.9	81.6	16.6	1.7	18.4	100.0
대재이상	(634)	41.5	42.8	84.3	13.3	2.4	15.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43.9	43.7	87.5	12.5	.0	12.5	100.0
자영업	(259)	42.4	37.9	80.4	16.9	2.8	19.6	100.0
블루칼라	(233)	29.2	54.5	83.7	14.6	1.7	16.3	100.0
화이트칼라	(239)	38.5	43.0	81.5	16.4	2.1	18.5	100.0
전업주부	(247)	32.0	51.8	83.8	13.4	2.8	16.2	100.0
학생/무직/기타	(190)	42.2	42.2	84.4	14.0	1.6	15.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35.7	47.3	83.0	14.6	2.4	17.0	100.0
200~299만원	(315)	33.3	48.4	81.6	16.8	1.6	18.4	100.0
300~399만원	(332)	40.7	40.1	80.7	17.2	2.1	19.3	100.0
400만원이상	(347)	37.4	48.1	85.5	11.8	2.6	14.5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66.7	100.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39.3	46.4	85.8	12.2	2.0	14.2	100.0
중부권	(118)	46.6	41.1	87.7	9.7	2.5	12.3	100.0
호남권	(119)	47.9	39.5	87.4	10.9	1.7	12.6	100.0
영남권	(324)	23.5	49.9	73.5	23.7	2.8	26.5	100.0
강원	(36)	38.9	47.2	86.1	13.9	.0	13.9	100.0
제주	(13)	69.2	15.4	84.6	15.4	.0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43.3	41.3	84.6	12.3	3.0	15.4	100.0
중도	(542)	33.1	47.5	80.6	17.9	1.5	19.4	100.0
보수적	(261)	35.2	49.3	84.6	13.1	2.3	15.4	100.0
▣ 종교별								
불교	(279)	36.3	45.2	81.5	16.0	2.5	18.5	100.0
기독교	(282)	45.0	44.3	89.4	8.5	2.1	10.6	100.0
천주교	(87)	34.4	45.9	80.3	16.1	3.7	19.7	100.0
기타	(6)	66.7	16.7	83.3	16.7	.0	16.7	100.0
종교없음	(530)	32.4	48.2	80.6	17.5	1.9	19.4	100.0
모름 / 무응답	(16)	56.3	18.8	75.0	25.0	.0	25.0	100.0

표6.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

문)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같은 민족이니까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위해	한국이보다 선진국이 되기위해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북한주민도 잘살수 있도록	기타	없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	%	%
■ 전체	(1200)	43.0	24.1	20.7	7.0	4.0	.6	.3	.2	100.0
▣ 성별										
남자	(604)	41.4	24.5	22.4	6.1	4.0	.8	.5	.3	100.0
여자	(596)	44.7	23.8	19.0	7.9	4.0	.3	.2	.2	100.0
▣ 연령별										
19~29세	(303)	32.0	30.7	24.1	8.6	3.0	.7	1.0	.0	100.0
30대	(312)	40.7	23.4	25.6	5.4	4.5	.3	.0	.0	100.0
40대	(305)	47.2	24.3	18.0	6.2	3.9	.0	.0	.3	100.0
50대이상	(280)	52.9	17.8	14.4	7.8	4.6	1.4	.4	.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56.8	17.5	11.5	7.5	3.8	1.0	.0	1.9	100.0
고졸	(461)	46.8	21.0	18.7	8.5	3.9	.2	.9	.0	100.0
대재이상	(634)	38.0	27.5	23.7	5.8	4.1	.8	.0	.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66.1	2.7	6.2	12.5	6.2	.0	3.1	3.1	100.0
자영업	(259)	51.4	18.1	20.1	5.7	2.7	1.2	.4	.4	100.0
블루칼라	(233)	45.0	24.9	20.2	4.7	3.4	.9	.4	.4	100.0
화이트칼라	(239)	36.8	28.2	23.8	6.7	4.6	.0	.0	.0	100.0
전업주부	(247)	44.1	21.9	19.9	8.5	4.9	.4	.4	.0	100.0
학생/무직/기타	(190)	31.7	33.0	21.6	9.0	4.2	.5	.0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49.4	23.5	12.4	6.9	6.4	.5	.5	.5	100.0
200~299만원	(315)	46.3	25.7	14.6	7.6	4.4	.3	1.0	.0	100.0
300~399만원	(332)	41.0	27.1	20.8	8.1	2.7	.0	.0	.3	100.0
400만원이상	(347)	38.4	20.2	30.8	5.5	3.5	1.4	.0	.3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33.3	33.3	.0	.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39.7	21.0	27.3	5.8	4.6	.8	.5	.3	100.0
중부권	(118)	42.8	30.9	21.2	2.5	1.7	.0	.8	.0	100.0
호남권	(119)	49.6	24.4	9.2	8.4	7.6	.0	.0	.8	100.0
영남권	(324)	47.4	26.6	14.0	9.2	2.2	.6	.0	.0	100.0
강원	(36)	36.1	30.6	11.1	19.4	2.8	.0	.0	.0	100.0
제주	(13)	46.2	23.1	15.4	.0	15.4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40.3	26.4	20.2	8.3	4.0	.8	.0	.0	100.0
중도	(542)	44.3	22.3	22.9	5.7	3.7	.4	.6	.2	100.0
보수적	(261)	44.4	24.6	16.9	7.6	4.6	.8	.4	.8	100.0
▣ 종교별										
불교	(279)	42.7	24.0	19.0	10.0	2.9	.4	.4	.7	100.0
기독교	(282)	45.4	21.6	23.0	3.5	5.0	.4	.7	.4	100.0
천주교	(87)	35.8	33.3	19.5	6.9	3.4	1.1	.0	.0	100.0
기타	(6)	50.0	16.7	16.7	.0	16.7	.0	.0	.0	100.0
종교없음	(530)	43.2	24.1	20.0	7.5	4.1	.8	.2	.0	100.0
모름 / 무응답	(16)	37.5	25.0	37.5	.0	.0	.0	.0	.0	100.0

표7. 통일이 남한에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①+②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14.6	38.9	53.5	38.0	8.5	46.5	100.0
▣ 성별								
남자	(604)	19.5	41.3	60.8	31.6	7.6	39.2	100.0
여자	(596)	9.6	36.5	46.1	44.5	9.4	53.9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3.9	37.6	51.5	40.6	7.9	48.5	100.0
30대	(312)	18.9	37.8	56.7	36.5	6.7	43.3	100.0
40대	(305)	15.1	43.0	58.0	33.8	8.2	42.0	100.0
50대이상	(280)	10.0	37.1	47.1	41.5	11.4	52.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4.8	29.5	34.3	47.5	18.2	65.7	100.0
고졸	(461)	12.8	37.7	50.5	39.5	10.0	49.5	100.0
대재이상	(634)	17.5	41.3	58.8	35.4	5.8	41.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2.5	22.5	34.9	52.6	12.5	65.1	100.0
자영업	(259)	17.4	34.9	52.2	37.0	10.8	47.8	100.0
블루칼라	(233)	12.0	43.4	55.4	35.2	9.4	44.6	100.0
화이트칼라	(239)	18.0	47.4	65.3	31.7	2.9	34.7	100.0
전업주부	(247)	8.5	32.7	41.2	49.0	9.7	58.8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7.9	39.1	57.0	34.0	9.0	43.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9.8	29.6	49.4	38.7	11.9	50.6	100.0
200~299만원	(315)	11.1	36.5	47.6	41.3	11.1	52.4	100.0
300~399만원	(332)	14.8	39.8	54.6	37.9	7.5	45.4	100.0
400만원이상	(347)	14.4	45.9	60.3	34.8	4.9	39.7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0	33.3	33.3	33.3	66.7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5.8	43.6	59.3	33.7	6.9	40.7	100.0
중부권	(118)	22.9	32.6	55.5	38.6	5.9	44.5	100.0
호남권	(119)	16.8	42.9	59.7	32.8	7.6	40.3	100.0
영남권	(324)	8.3	33.4	41.8	46.8	11.4	58.2	100.0
강원	(36)	8.3	27.8	36.1	44.4	19.4	63.9	100.0
제주	(13)	38.5	15.4	53.8	38.5	7.7	46.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9.1	39.2	58.3	33.6	8.1	41.7	100.0
중도	(542)	12.5	41.0	53.6	39.8	6.6	46.4	100.0
보수적	(261)	11.9	34.1	46.0	40.9	13.0	54.0	100.0
▣ 종교별								
불교	(279)	13.6	34.1	47.7	41.5	10.8	52.3	100.0
기독교	(282)	13.5	43.3	56.7	36.2	7.1	43.3	100.0
천주교	(87)	12.6	40.1	52.8	40.4	6.9	47.2	100.0
기타	(6)	33.3	66.7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15.7	38.3	53.9	37.8	8.3	46.1	100.0
모름 / 무응답	(16)	18.8	50.0	68.8	18.8	12.5	31.3	100.0

표8. 통일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정도

문)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②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①+②	③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④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3.6	21.2	24.8	55.1	20.1	75.2	100.0
▣ 성별								
남자	(604)	5.3	25.6	30.9	51.8	17.4	69.1	100.0
여자	(596)	1.8	16.8	18.6	58.5	22.9	81.4	100.0
▣ 연령별								
19~29세	(303)	3.3	21.8	25.1	53.1	21.8	74.9	100.0
30대	(312)	4.5	19.6	24.0	55.4	20.5	76.0	100.0
40대	(305)	3.9	25.2	29.2	51.8	19.0	70.8	100.0
50대이상	(280)	2.5	17.9	20.4	60.4	19.2	79.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9	16.1	18.0	56.4	25.5	82.0	100.0
고졸	(461)	2.6	19.1	21.7	55.1	23.2	78.3	100.0
대재이상	(634)	4.6	23.5	28.1	54.9	17.0	71.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6.2	12.5	18.7	68.8	12.5	81.3	100.0
자영업	(259)	3.9	20.8	24.7	56.8	18.5	75.3	100.0
블루칼라	(233)	3.4	19.0	22.4	56.2	21.4	77.6	100.0
화이트칼라	(239)	5.0	28.1	33.1	51.5	15.5	66.9	100.0
전업주부	(247)	.8	13.7	14.5	58.0	27.5	85.5	100.0
학생/무직/기타	(190)	4.7	26.9	31.7	49.9	18.5	68.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6.9	18.2	25.1	49.3	25.6	74.9	100.0
200~299만원	(315)	2.5	20.1	22.6	54.2	23.1	77.4	100.0
300~399만원	(332)	1.8	19.6	21.4	58.4	20.2	78.6	100.0
400만원이상	(347)	4.3	25.1	29.4	56.2	14.4	70.6	100.0
모름 / 무응답	(3)	.0	66.7	66.7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3.4	22.2	25.6	56.6	17.8	74.4	100.0
중부권	(118)	6.8	24.6	31.4	50.8	17.8	68.6	100.0
호남권	(119)	4.2	30.3	34.5	49.6	16.0	65.5	100.0
영남권	(324)	2.8	15.2	18.0	56.8	25.2	82.0	100.0
강원	(36)	2.8	19.4	22.2	41.7	36.1	77.8	100.0
제주	(13)	.0	15.4	15.4	69.2	15.4	84.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5.8	26.7	32.5	50.1	17.4	67.5	100.0
중도	(542)	2.6	19.7	22.3	58.5	19.2	77.7	100.0
보수적	(261)	2.3	15.8	18.1	55.5	26.4	81.9	100.0
▣ 종교별								
불교	(279)	3.9	17.2	21.2	55.2	23.6	78.8	100.0
기독교	(282)	1.8	28.0	29.8	52.1	18.1	70.2	100.0
천주교	(87)	3.4	24.1	27.5	51.8	20.6	72.5	100.0
기타	(6)	16.7	33.3	50.0	50.0	.0	50.0	100.0
종교없음	(530)	4.3	18.7	23.1	57.2	19.8	76.9	100.0
모름 / 무응답	(16)	.0	31.3	31.3	56.3	12.5	68.8	100.0

표9-1.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빈부격차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빈부격차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3.4	12.5	15.9	18.5	36.8	28.9	65.6	100.0
▣ 성별									
남자	(604)	4.1	12.9	17.0	19.5	34.9	28.6	63.5	100.0
여자	(596)	2.7	12.0	14.7	17.4	38.7	29.2	67.8	100.0
▣ 연령별									
19~29세	(303)	4.0	10.9	14.9	21.5	35.0	28.7	63.7	100.0
30대	(312)	5.1	13.5	18.6	16.7	34.9	29.8	64.7	100.0
40대	(305)	2.3	13.1	15.4	18.7	36.1	29.8	65.9	100.0
50대이상	(280)	2.1	12.3	14.4	17.1	41.5	26.9	68.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4.8	14.5	19.3	16.2	40.7	23.8	64.4	100.0
고졸	(461)	3.0	10.8	13.9	17.0	39.6	29.5	69.1	100.0
대재이상	(634)	3.5	13.3	16.7	19.9	34.1	29.2	63.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1	12.5	15.6	25.0	31.4	28.1	59.4	100.0
자영업	(259)	2.7	13.5	16.2	18.9	34.0	30.9	64.9	100.0
블루칼라	(233)	2.1	12.4	14.6	15.4	37.7	32.2	70.0	100.0
화이트칼라	(239)	5.0	14.3	19.3	19.6	34.7	26.4	61.1	100.0
전업주부	(247)	3.2	11.6	14.9	14.2	44.2	26.8	70.9	100.0
학생/무직/기타	(190)	4.2	9.8	14.0	24.8	33.2	28.0	61.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4.9	13.0	17.9	22.2	33.7	26.1	59.8	100.0
200~299만원	(315)	3.8	12.1	15.9	16.5	38.1	29.5	67.6	100.0
300~399만원	(332)	2.1	10.8	12.9	19.0	35.5	32.6	68.1	100.0
400만원이상	(347)	3.5	13.5	17.0	17.6	38.9	26.6	65.4	100.0
모름 / 무응답	(3)	.0	66.7	66.7	33.3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3.6	11.9	15.4	21.0	37.6	25.9	63.6	100.0
중부권	(118)	3.4	21.6	25.0	16.1	25.8	33.1	58.9	100.0
호남권	(119)	4.2	15.1	19.3	21.8	40.3	18.5	58.8	100.0
영남권	(324)	2.2	10.5	12.6	14.2	40.9	32.2	73.2	100.0
강원	(36)	11.1	.0	11.1	11.1	13.9	63.9	77.8	100.0
제주	(13)	.0	15.4	15.4	23.1	23.1	38.5	61.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4.8	15.4	20.2	21.2	34.5	24.2	58.7	100.0
중도	(542)	3.0	11.1	14.1	18.3	37.1	30.5	67.7	100.0
보수적	(261)	2.3	10.8	13.1	15.0	39.4	32.6	72.0	100.0
▣ 종교별									
불교	(279)	3.6	12.8	16.3	15.4	35.9	32.3	68.2	100.0
기독교	(282)	3.2	17.0	20.2	19.1	37.2	23.4	60.6	100.0
천주교	(87)	6.9	13.8	20.6	26.4	27.5	25.5	53.0	100.0
기타	(6)	.0	50.0	50.0	16.7	33.3	.0	33.3	100.0
종교없음	(530)	2.8	8.8	11.7	18.3	39.2	30.8	70.0	100.0
모름 / 무응답	(16)	6.3	25.0	31.3	25.0	12.5	31.3	43.8	100.0

표9-2.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부동산투기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부동산투기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4.2	15.5	19.8	25.2	33.2	21.8	55.0	100.0
▣ 성별									
남자	(604)	4.5	16.0	20.4	24.7	32.1	22.7	54.9	100.0
여자	(596)	4.0	15.1	19.1	25.7	34.3	20.9	55.2	100.0
▣ 연령별									
19~29세	(303)	5.9	12.2	18.2	33.0	26.4	22.4	48.8	100.0
30대	(312)	5.4	14.1	19.6	24.4	30.8	25.3	56.1	100.0
40대	(305)	3.9	17.4	21.3	21.3	34.8	22.6	57.4	100.0
50대이상	(280)	1.4	18.7	20.1	21.9	41.6	16.5	58.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9	18.0	19.9	18.2	46.6	15.3	61.9	100.0
고졸	(461)	3.9	16.5	20.4	24.7	34.9	19.9	54.9	100.0
대재이상	(634)	4.9	14.4	19.3	26.7	29.7	24.3	54.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1	18.7	21.8	12.5	37.0	28.7	65.7	100.0
자영업	(259)	5.4	16.2	21.6	24.8	29.0	24.6	53.6	100.0
블루칼라	(233)	3.0	16.4	19.4	24.9	33.9	21.9	55.7	100.0
화이트칼라	(239)	3.3	17.2	20.6	25.1	35.9	18.5	54.4	100.0
전업주부	(247)	4.9	14.1	19.0	23.5	36.4	21.1	57.5	100.0
학생/무직/기타	(190)	4.7	12.7	17.4	30.6	29.8	22.2	52.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5.9	15.7	21.7	26.2	33.3	18.8	52.1	100.0
200~299만원	(315)	2.9	20.1	22.9	21.6	34.3	21.2	55.5	100.0
300~399만원	(332)	3.9	12.6	16.6	22.9	36.4	24.2	60.5	100.0
400만원이상	(347)	4.9	13.5	18.4	30.3	29.1	22.2	51.3	100.0
모름 / 무응답	(3)	.0	66.7	66.7	.0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4.9	13.6	18.5	27.6	31.9	22.0	53.9	100.0
중부권	(118)	7.6	12.7	20.3	13.6	33.1	33.1	66.1	100.0
호남권	(119)	.8	17.6	18.5	21.8	42.9	16.8	59.7	100.0
영남권	(324)	2.5	20.1	22.6	29.1	31.9	16.4	48.3	100.0
강원	(36)	8.3	5.6	13.9	8.3	33.3	44.4	77.8	100.0
제주	(13)	7.7	23.1	30.8	.0	38.5	30.8	69.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6.0	18.9	24.9	25.9	32.5	16.6	49.1	100.0
중도	(542)	3.0	12.5	15.5	24.7	33.3	26.4	59.8	100.0
보수적	(261)	4.2	16.6	20.8	24.9	34.0	20.3	54.3	100.0
▣ 종교별									
불교	(279)	5.0	18.0	23.0	23.0	32.4	21.6	54.0	100.0
기독교	(282)	4.3	15.6	19.9	27.3	35.5	17.4	52.8	100.0
천주교	(87)	5.7	20.6	26.4	25.5	26.4	21.8	48.2	100.0
기타	(6)	.0	33.3	33.3	50.0	16.7	.0	16.7	100.0
종교없음	(530)	3.4	12.9	16.3	25.1	34.2	24.5	58.7	100.0
모름 / 무응답	(16)	12.5	25.0	37.5	18.8	18.8	25.0	43.8	100.0

표9-3.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실업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실업문제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5.7	20.3	26.0	19.8	32.7	21.5	54.2	100.0
▣ 성별									
남자	(604)	5.7	21.1	26.8	19.4	32.1	21.7	53.8	100.0
여자	(596)	5.7	19.4	25.1	20.3	33.3	21.2	54.6	100.0
▣ 연령별									
19~29세	(303)	5.3	24.1	29.4	22.4	27.7	20.5	48.2	100.0
30대	(312)	6.4	21.2	27.6	16.7	34.9	20.8	55.8	100.0
40대	(305)	5.6	18.7	24.3	23.9	29.5	22.3	51.8	100.0
50대이상	(280)	5.4	17.0	22.4	16.1	39.1	22.4	61.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6.7	16.1	22.8	16.2	40.2	20.8	61.0	100.0
고졸	(461)	4.6	18.2	22.8	19.5	35.2	22.5	57.7	100.0
대재이상	(634)	6.3	22.5	28.8	20.7	29.6	20.8	50.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6.2	21.4	27.6	3.1	34.9	34.3	69.3	100.0
자영업	(259)	7.3	19.8	27.1	18.1	31.8	23.0	54.8	100.0
블루칼라	(233)	5.6	20.2	25.7	20.2	33.9	20.2	54.1	100.0
화이트칼라	(239)	5.1	22.6	27.7	21.0	33.0	18.4	51.4	100.0
전업주부	(247)	4.5	15.0	19.5	20.7	36.4	23.5	59.9	100.0
학생/무직/기타	(190)	5.8	25.1	30.9	22.2	26.9	20.1	47.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7.9	20.5	28.4	18.8	34.1	18.6	52.8	100.0
200~299만원	(315)	5.1	17.0	22.0	16.5	38.3	23.1	61.4	100.0
300~399만원	(332)	5.2	21.6	26.8	19.6	30.4	23.2	53.6	100.0
400만원이상	(347)	5.5	21.5	27.0	23.9	28.9	20.2	49.1	100.0
모름 / 무응답	(3)	.0	66.7	66.7	.0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5.9	21.4	27.3	22.4	32.5	17.8	50.3	100.0
중부권	(118)	9.3	28.4	37.7	13.6	22.5	26.3	48.7	100.0
호남권	(119)	5.9	21.8	27.7	17.6	42.0	12.6	54.6	100.0
영남권	(324)	3.5	16.7	20.1	19.8	35.5	24.6	60.0	100.0
강원	(36)	5.6	11.1	16.7	5.6	19.4	58.3	77.8	100.0
제주	(13)	15.4	.0	15.4	23.1	15.4	46.2	61.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7.8	23.8	31.6	20.4	30.1	17.9	48.0	100.0
중도	(542)	5.0	19.0	24.0	19.9	32.4	23.6	56.0	100.0
보수적	(261)	3.8	17.6	21.4	18.9	37.2	22.5	59.7	100.0
▣ 종교별									
불교	(279)	5.5	17.9	23.3	23.0	31.1	22.6	53.6	100.0
기독교	(282)	4.6	24.1	28.7	21.3	32.6	17.4	50.0	100.0
천주교	(87)	12.6	22.0	34.6	19.5	26.4	19.5	45.9	100.0
기타	(6)	33.3	16.7	50.0	16.7	33.3	.0	33.3	100.0
종교없음	(530)	4.3	19.7	24.1	17.2	34.9	23.9	58.8	100.0
모름 / 무응답	(16)	25.0	6.3	31.3	31.3	25.0	12.5	37.5	100.0

표9-4.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범죄문제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범죄문제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모름/무응답	계
		%	%	%	%	%	%	%	%	%
■ 전체	(1200)	2.4	6.7	9.1	22.0	44.7	24.2	68.8	.1	100.0
▣ 성별										
남자	(604)	2.7	6.1	8.8	21.2	45.6	24.3	69.8	.2	100.0
여자	(596)	2.2	7.2	9.4	22.8	43.7	24.1	67.8	.0	100.0
▣ 연령별										
19~29세	(303)	2.3	8.3	10.6	23.4	42.9	23.1	66.0	.0	100.0
30대	(312)	3.2	5.8	9.0	20.2	47.4	23.4	70.8	.0	100.0
40대	(305)	1.6	7.2	8.9	25.9	40.0	25.2	65.2	.0	100.0
50대이상	(280)	2.6	5.4	7.9	18.2	48.5	25.0	73.6	.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3.8	8.6	12.4	18.0	46.9	22.7	69.6	.0	100.0
고졸	(461)	1.1	5.4	6.5	20.4	45.1	27.8	72.9	.2	100.0
대재이상	(634)	3.2	7.3	10.4	23.8	44.0	21.8	65.7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0	9.4	9.4	21.8	40.7	28.1	68.8	.0	100.0
자영업	(259)	3.1	6.2	9.3	17.4	42.8	30.2	73.0	.4	100.0
블루칼라	(233)	1.3	5.1	6.4	23.2	47.3	23.2	70.4	.0	100.0
화이트칼라	(239)	2.6	6.7	9.3	25.1	48.1	17.5	65.7	.0	100.0
전업주부	(247)	2.4	7.3	9.7	19.8	44.6	25.9	70.5	.0	100.0
학생/무직/기타	(190)	3.2	7.9	11.1	25.9	40.4	22.7	63.1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3.0	6.9	9.9	26.1	41.4	22.6	64.0	.0	100.0
200~299만원	(315)	2.6	7.6	10.2	20.9	46.7	22.1	68.9	.0	100.0
300~399만원	(332)	1.5	6.3	7.8	19.0	46.1	27.1	73.2	.0	100.0
400만원이상	(347)	2.9	6.0	8.9	22.8	43.7	24.3	68.0	.3	100.0
모름 / 무응답	(3)	.0	.0	.0	100.0	.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2.9	6.4	9.3	22.9	44.2	23.6	67.8	.0	100.0
중부권	(118)	1.7	5.9	7.6	17.8	45.3	29.2	74.6	.0	100.0
호남권	(119)	1.7	10.1	11.8	29.4	41.2	16.8	58.0	.8	100.0
영남권	(324)	1.9	7.1	9.0	21.3	48.9	20.9	69.7	.0	100.0
강원	(36)	5.6	.0	5.6	5.6	22.2	66.7	88.9	.0	100.0
제주	(13)	.0	.0	.0	15.4	46.2	38.5	84.6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3.8	7.3	11.1	23.2	43.2	22.3	65.5	.3	100.0
중도	(542)	1.8	6.1	7.9	22.1	45.1	24.9	70.0	.0	100.0
보수적	(261)	1.6	6.9	8.5	20.0	45.9	25.6	71.5	.0	100.0
▣ 종교별										
불교	(279)	2.2	7.2	9.4	22.2	42.4	26.0	68.4	.0	100.0
기독교	(282)	2.1	7.4	9.6	25.5	41.8	23.0	64.9	.0	100.0
천주교	(87)	6.9	6.9	13.8	19.5	42.7	24.1	66.7	.0	100.0
기타	(6)	16.7	.0	16.7	16.7	50.0	.0	50.0	16.7	100.0
종교없음	(530)	1.5	6.2	7.7	20.6	47.6	24.1	71.7	.0	100.0
모름 / 무응답	(16)	12.5	.0	12.5	18.8	43.8	25.0	68.8	.0	100.0

표9-5.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지역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역갈등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3.9	9.2	13.1	20.0	41.8	25.2	66.9	100.0
▣ 성별									
남자	(604)	4.2	10.4	14.6	19.7	41.4	24.3	65.7	100.0
여자	(596)	3.7	7.9	11.6	20.3	42.2	26.0	68.2	100.0
▣ 연령별									
19~29세	(303)	4.3	7.3	11.6	20.1	40.9	27.4	68.3	100.0
30대	(312)	4.5	8.3	12.8	19.9	39.4	27.9	67.3	100.0
40대	(305)	3.6	12.5	16.1	17.7	41.6	24.6	66.2	100.0
50대이상	(280)	3.3	8.6	11.9	22.3	45.5	20.3	65.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3.8	7.6	11.5	20.4	53.0	15.2	68.1	100.0
고졸	(461)	3.0	8.2	11.3	17.8	44.9	26.0	70.9	100.0
대재이상	(634)	4.6	10.1	14.7	21.4	37.7	26.2	63.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0	6.2	6.2	15.6	41.2	37.0	78.2	100.0
자영업	(259)	3.9	10.4	14.3	20.6	40.4	24.7	65.1	100.0
블루칼라	(233)	3.4	9.0	12.4	20.7	45.9	21.0	66.9	100.0
화이트칼라	(239)	4.3	9.6	13.9	20.1	38.9	27.2	66.1	100.0
전업주부	(247)	3.6	8.9	12.6	19.0	46.1	22.3	68.4	100.0
학생/무직/기타	(190)	5.3	7.9	13.2	20.1	36.7	30.1	66.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4.0	10.4	14.3	17.7	45.2	22.7	67.9	100.0
200~299만원	(315)	5.8	9.5	15.3	18.6	41.4	24.7	66.2	100.0
300~399만원	(332)	2.7	7.5	10.2	18.7	45.2	25.9	71.1	100.0
400만원이상	(347)	3.5	9.5	13.0	23.9	36.6	26.5	63.1	100.0
모름 / 무응답	(3)	.0	33.3	33.3	.0	66.7	.0	66.7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4.4	10.0	14.4	19.5	41.2	24.9	66.1	100.0
중부권	(118)	1.7	12.7	14.4	19.9	41.1	24.6	65.7	100.0
호남권	(119)	4.2	8.4	12.6	22.7	38.7	26.1	64.7	100.0
영남권	(324)	3.1	7.7	10.9	21.9	47.2	20.0	67.2	100.0
강원	(36)	8.3	.0	8.3	5.6	19.4	66.7	86.1	100.0
제주	(13)	7.7	7.7	15.4	7.7	30.8	46.2	76.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4.8	14.6	19.4	20.7	38.3	21.7	59.9	100.0
중도	(542)	3.0	6.8	9.8	19.3	44.6	26.4	71.0	100.0
보수적	(261)	4.7	5.8	10.4	20.3	41.3	28.0	69.3	100.0
▣ 종교별									
불교	(279)	4.7	9.0	13.7	17.5	40.5	28.3	68.8	100.0
기독교	(282)	3.5	12.1	15.6	22.0	40.8	21.6	62.4	100.0
천주교	(87)	6.9	6.9	13.8	21.8	35.8	28.7	64.4	100.0
기타	(6)	16.7	16.7	33.3	16.7	50.0	.0	50.0	100.0
종교없음	(530)	2.8	8.1	10.9	20.1	44.2	24.7	69.0	100.0
모름 / 무응답	(16)	12.5	6.3	18.8	12.5	31.3	37.5	68.8	100.0

표9-6. 통일 후 사회 문제 개선 정도 예측 – ㉥ 이념갈등

문)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념갈등

	사례수	① 크게 개선	② 약간 개선	①+②	③ 차이 없음	④ 약간 악화	⑤ 크게 악화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5.8	10.6	16.4	17.9	37.3	28.4	65.7	100.0
▣ 성별									
남자	(604)	6.7	11.3	17.9	17.7	37.7	26.6	64.3	100.0
여자	(596)	4.9	9.9	14.8	18.1	36.8	30.3	67.2	100.0
▣ 연령별									
19~29세	(303)	5.3	10.2	15.5	17.5	38.6	28.4	67.0	100.0
30대	(312)	5.4	10.9	16.3	16.0	34.3	33.3	67.6	100.0
40대	(305)	7.2	11.1	18.4	18.7	36.4	26.6	63.0	100.0
50대이상	(280)	5.1	10.1	15.1	19.6	40.1	25.1	65.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4.8	10.5	15.3	19.0	49.5	16.2	65.7	100.0
고졸	(461)	3.7	9.8	13.4	18.9	38.2	29.5	67.7	100.0
대재이상	(634)	7.4	11.2	18.7	17.0	34.6	29.7	64.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0	9.4	9.4	15.6	37.6	37.4	75.0	100.0
자영업	(259)	6.2	10.8	17.0	18.1	34.3	30.6	64.9	100.0
블루칼라	(233)	3.4	11.1	14.6	20.2	41.6	23.6	65.2	100.0
화이트칼라	(239)	7.6	10.9	18.5	17.5	33.0	30.9	63.9	100.0
전업주부	(247)	5.7	8.5	14.2	18.2	42.5	25.1	67.6	100.0
학생/무직/기타	(190)	6.9	12.1	19.0	15.3	34.6	31.1	65.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7.4	12.9	20.3	17.2	38.3	24.2	62.5	100.0
200~299만원	(315)	5.5	11.7	17.2	17.5	35.3	30.1	65.4	100.0
300~399만원	(332)	4.5	8.5	13.0	19.0	39.1	28.9	68.0	100.0
400만원이상	(347)	6.3	10.1	16.4	17.9	37.1	28.7	65.7	100.0
모름 / 무응답	(3)	.0	33.3	33.3	.0	.0	66.7	66.7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5.1	11.9	16.9	17.5	37.1	28.5	65.6	100.0
중부권	(118)	5.9	13.6	19.5	16.1	34.3	30.1	64.4	100.0
호남권	(119)	8.4	12.6	21.0	15.1	38.7	25.2	63.9	100.0
영남권	(324)	5.6	7.8	13.4	21.9	40.4	24.3	64.7	100.0
강원	(36)	5.6	2.8	8.3	5.6	13.9	72.2	86.1	100.0
제주	(13)	15.4	.0	15.4	15.4	46.2	23.1	69.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9.3	12.8	22.2	17.6	33.1	27.1	60.2	100.0
중도	(542)	3.3	9.8	13.1	19.4	38.8	28.7	67.5	100.0
보수적	(261)	5.4	8.8	14.3	15.3	40.5	29.9	70.4	100.0
▣ 종교별									
불교	(279)	6.2	9.8	15.9	17.2	37.3	29.6	66.9	100.0
기독교	(282)	5.7	13.1	18.8	17.4	37.2	26.6	63.8	100.0
천주교	(87)	5.7	14.9	20.6	14.9	35.8	28.7	64.4	100.0
기타	(6)	16.7	16.7	33.3	16.7	50.0	.0	50.0	100.0
종교없음	(530)	5.1	9.1	14.1	19.4	37.4	29.0	66.4	100.0
모름 / 무응답	(16)	18.8	6.3	25.0	6.3	37.5	31.3	68.8	100.0

표10. 통일과 남한 민주주의의 관계

문)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전체	(1200)	18.0	29.9	51.9	.2	100.0
▣ 성별						
남자	(604)	20.5	29.1	50.5	.0	100.0
여자	(596)	15.6	30.7	53.5	.3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6.2	32.7	50.8	.3	100.0
30대	(312)	17.9	29.8	51.9	.3	100.0
40대	(305)	19.7	30.5	49.8	.0	100.0
50대이상	(280)	18.4	26.1	55.5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6.3	31.3	52.4	.0	100.0
고졸	(461)	19.6	26.0	54.4	.0	100.0
대재이상	(634)	17.2	32.4	50.1	.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25.1	25.0	49.9	.0	100.0
자영업	(259)	18.7	23.9	57.1	.4	100.0
블루칼라	(233)	21.0	30.4	48.5	.0	100.0
화이트칼라	(239)	20.1	36.3	43.6	.0	100.0
전업주부	(247)	13.8	30.7	55.5	.0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5.3	28.8	55.4	.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8.4	31.7	49.4	.5	100.0
200~299만원	(315)	17.1	29.3	53.6	.0	100.0
300~399만원	(332)	22.5	25.9	51.3	.3	100.0
400만원이상	(347)	14.5	33.0	52.5	.0	100.0
모름 / 무응답	(3)	.0	33.3	66.7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3.7	29.0	56.9	.3	100.0
중부권	(118)	22.5	34.3	43.2	.0	100.0
호남권	(119)	21.8	35.3	42.9	.0	100.0
영남권	(324)	24.0	27.7	48.3	.0	100.0
강원	(36)	8.3	19.4	72.2	.0	100.0
제주	(13)	15.4	61.5	23.1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21.5	33.9	44.6	.0	100.0
중도	(542)	17.5	28.9	53.4	.2	100.0
보수적	(261)	13.8	25.7	60.2	.4	100.0
▣ 종교별						
불교	(279)	18.5	27.2	54.0	.4	100.0
기독교	(282)	17.0	36.9	45.7	.4	100.0
천주교	(87)	14.9	36.7	48.4	.0	100.0
기타	(6)	16.7	33.3	50.0	.0	100.0
종교없음	(530)	18.8	26.3	54.8	.0	100.0
모름 / 무응답	(16)	18.8	31.3	50.0	.0	100.0

표11. 통일과 북한 민주주의의 관계

문) ○○님은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계
		%	%	%	%
■ 전체	(1200)	34.4	33.5	32.2	100.0
▣ 성별					
남자	(604)	37.5	30.5	32.1	100.0
여자	(596)	31.2	36.5	32.3	100.0
▣ 연령별					
19~29세	(303)	26.7	39.6	33.7	100.0
30대	(312)	35.3	34.9	29.8	100.0
40대	(305)	41.0	28.2	30.8	100.0
50대이상	(280)	34.4	30.9	34.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34.1	37.2	28.7	100.0
고졸	(461)	31.8	32.8	35.3	100.0
대재이상	(634)	36.2	33.3	30.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41.2	24.5	34.3	100.0
자영업	(259)	35.8	25.2	38.9	100.0
블루칼라	(233)	33.4	37.3	29.2	100.0
화이트칼라	(239)	42.7	33.4	23.9	100.0
전업주부	(247)	28.8	38.0	33.2	100.0
학생/무직/기타	(190)	29.0	35.6	35.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39.6	30.2	30.2	100.0
200~299만원	(315)	32.4	35.2	32.4	100.0
300~399만원	(332)	32.6	34.0	33.4	100.0
400만원이상	(347)	34.7	33.6	31.7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0	66.7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35.6	30.5	33.9	100.0
중부권	(118)	33.9	40.7	25.4	100.0
호남권	(119)	47.9	30.3	21.8	100.0
영남권	(324)	28.8	38.7	32.5	100.0
강원	(36)	19.4	16.7	63.9	100.0
제주	(13)	38.5	46.2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36.1	35.1	28.7	100.0
중도	(542)	31.3	34.7	34.0	100.0
보수적	(261)	38.0	28.2	33.8	100.0
▣ 종교별					
불교	(279)	33.0	30.3	36.7	100.0
기독교	(282)	37.9	36.2	25.9	100.0
천주교	(87)	41.3	28.7	30.0	100.0
기타	(6)	66.7	.0	33.3	100.0
종교없음	(530)	31.8	34.7	33.6	100.0
모름 / 무응답	(16)	31.3	37.5	31.3	100.0

표12. 희망하는 통일 한국의 체제

문) ○○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통일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계
		%	%	%	%	%
■ 전체	(1200)	44.5	38.7	12.6	4.2	100.0
▣ 성별						
남자	(604)	43.7	38.1	14.4	3.8	100.0
여자	(596)	45.2	39.4	10.7	4.7	100.0
▣ 연령별						
19~29세	(303)	45.2	41.6	9.6	3.6	100.0
30대	(312)	44.2	37.8	13.8	4.2	100.0
40대	(305)	42.0	41.6	12.8	3.6	100.0
50대이상	(280)	46.6	33.5	14.2	5.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47.4	32.7	10.4	9.6	100.0
고졸	(461)	47.4	34.3	13.5	4.8	100.0
대재이상	(634)	41.8	43.0	12.2	3.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40.7	28.1	18.7	12.5	100.0
자영업	(259)	44.5	37.1	14.2	4.2	100.0
블루칼라	(233)	46.7	40.4	7.7	5.1	100.0
화이트칼라	(239)	42.3	41.4	14.7	1.7	100.0
전업주부	(247)	46.6	34.8	13.3	5.3	100.0
학생/무직/기타	(190)	42.2	42.5	11.6	3.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42.6	38.2	12.3	6.9	100.0
200~299만원	(315)	47.6	29.8	16.9	5.7	100.0
300~399만원	(332)	47.3	38.5	11.7	2.4	100.0
400만원이상	(347)	40.3	47.1	9.4	3.2	100.0
모름 / 무응답	(3)	.0	66.7	33.3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43.6	43.1	9.7	3.7	100.0
중부권	(118)	41.1	42.4	11.4	5.1	100.0
호남권	(119)	29.4	44.5	21.8	4.2	100.0
영남권	(324)	53.1	27.7	14.6	4.6	100.0
강원	(36)	47.2	27.8	16.7	8.3	100.0
제주	(13)	30.8	61.5	7.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43.6	37.7	15.5	3.3	100.0
중도	(542)	41.0	44.2	10.7	4.1	100.0
보수적	(261)	52.9	29.0	12.0	6.1	100.0
▣ 종교별						
불교	(279)	50.3	30.8	13.1	5.7	100.0
기독교	(282)	40.8	42.9	12.1	4.3	100.0
천주교	(87)	34.4	49.3	15.1	1.1	100.0
기타	(6)	16.7	66.7	16.7	.0	100.0
종교없음	(530)	45.5	38.7	12.1	3.8	100.0
모름 / 무응답	(16)	37.5	37.5	12.5	12.5	100.0

표13. 남북한 관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지원대상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계
		%	%	%	%	%	%
■ 전체	(1200)	19.3	44.7	3.3	20.7	12.0	100.0
▣ 성별							
남자	(604)	16.1	47.5	3.1	20.8	12.6	100.0
여자	(596)	22.6	41.9	3.5	20.6	11.4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6.2	41.9	4.6	23.8	13.5	100.0
30대	(312)	18.3	49.0	5.1	16.0	11.5	100.0
40대	(305)	26.2	45.2	.7	17.4	10.5	100.0
50대이상	(280)	16.3	42.2	2.8	26.2	12.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21.0	21.7	3.7	39.2	14.3	100.0
고졸	(461)	23.1	42.3	2.2	20.7	11.7	100.0
대재이상	(634)	16.2	50.2	4.1	17.6	11.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5.6	37.4	.0	34.5	12.5	100.0
자영업	(259)	20.0	46.6	1.9	21.5	10.0	100.0
블루칼라	(233)	20.2	47.3	2.6	16.7	13.3	100.0
화이트칼라	(239)	19.6	47.4	2.1	18.0	12.9	100.0
전업주부	(247)	21.5	37.6	5.2	23.5	12.2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4.8	45.9	5.8	21.9	11.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25.2	38.4	3.4	21.6	11.4	100.0
200~299만원	(315)	16.7	41.6	3.8	26.2	11.7	100.0
300~399만원	(332)	19.0	47.0	2.1	20.4	11.4	100.0
400만원이상	(347)	18.4	49.0	4.0	15.6	13.0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33.3	.0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9.7	49.5	3.4	15.1	12.4	100.0
중부권	(118)	17.8	43.2	4.2	25.4	9.3	100.0
호남권	(119)	27.7	51.3	2.5	10.1	8.4	100.0
영남권	(324)	16.9	34.6	3.4	32.8	12.3	100.0
강원	(36)	19.4	30.6	2.8	22.2	25.0	100.0
제주	(13)	.0	69.2	.0	23.1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7.9	49.4	3.0	18.6	11.1	100.0
중도	(542)	20.4	44.7	3.5	22.0	9.4	100.0
보수적	(261)	19.2	37.5	3.5	21.0	18.8	100.0
▣ 종교별							
불교	(279)	21.5	39.2	2.5	22.8	14.0	100.0
기독교	(282)	23.4	43.6	4.3	17.0	11.7	100.0
천주교	(87)	16.1	61.9	2.3	12.8	6.9	100.0
기타	(6)	33.3	66.7	.0	.0	.0	100.0
종교없음	(530)	16.0	45.1	3.4	23.3	12.3	100.0
모름 / 무응답	(16)	31.3	43.8	6.3	12.5	6.3	100.0

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대상이다
2.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대상이다

표14. 북한 정권을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로 생각하는 정도

문) ○○님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가능하다	② 어느 정도 가능하다	①+②	③ 별로 가능하지 않다	④ 전혀 가능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3.7	31.2	34.9	49.3	15.8	65.1	100.0
▣ 성별								
남자	(604)	4.5	32.9	37.4	47.5	15.1	62.6	100.0
여자	(596)	3.0	29.4	32.4	51.0	16.6	67.6	100.0
▣ 연령별								
19~29세	(303)	2.0	32.3	34.3	48.5	17.2	65.7	100.0
30대	(312)	5.1	33.3	38.5	48.1	13.5	61.5	100.0
40대	(305)	4.6	33.8	38.4	46.9	14.8	61.6	100.0
50대이상	(280)	3.2	24.6	27.9	54.0	18.2	72.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2.9	21.0	23.9	59.0	17.1	76.1	100.0
고졸	(461)	4.3	26.9	31.2	50.4	18.4	68.8	100.0
대재이상	(634)	3.5	36.0	39.4	46.9	13.7	60.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6.2	21.8	28.1	56.8	15.2	71.9	100.0
자영업	(259)	7.3	30.9	38.2	43.3	18.5	61.8	100.0
블루칼라	(233)	2.1	27.9	30.0	53.7	16.3	70.0	100.0
화이트칼라	(239)	3.3	37.2	40.5	49.9	9.6	59.5	100.0
전업주부	(247)	2.4	26.3	28.8	55.0	16.2	71.2	100.0
학생/무직/기타	(190)	2.6	35.9	38.5	42.5	19.0	61.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4.9	25.7	30.7	49.6	19.8	69.3	100.0
200~299만원	(315)	4.1	29.2	33.3	55.0	11.7	66.7	100.0
300~399만원	(332)	3.0	32.8	35.8	47.3	16.8	64.2	100.0
400만원이상	(347)	3.5	34.9	38.3	45.9	15.8	61.7	100.0
모름 / 무응답	(3)	.0	.0	.0	33.3	66.7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4.4	31.9	36.3	46.3	17.5	63.7	100.0
중부권	(118)	2.5	38.1	40.7	50.8	8.5	59.3	100.0
호남권	(119)	9.2	42.0	51.3	37.8	10.9	48.7	100.0
영남권	(324)	.6	24.7	25.3	57.1	17.5	74.7	100.0
강원	(36)	5.6	27.8	33.3	52.8	13.9	66.7	100.0
제주	(13)	7.7	7.7	15.4	69.2	15.4	84.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6.5	36.5	43.1	41.6	15.4	56.9	100.0
중도	(542)	2.4	31.9	34.3	53.7	12.0	65.7	100.0
보수적	(261)	2.3	21.5	23.8	51.7	24.5	76.2	100.0
▣ 종교별								
불교	(279)	4.3	25.8	30.1	55.2	14.7	69.9	100.0
기독교	(282)	3.9	33.3	37.2	45.7	17.0	62.8	100.0
천주교	(87)	3.4	35.6	39.0	38.1	22.9	61.0	100.0
기타	(6)	33.3	66.7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3.0	30.9	34.0	51.1	14.9	66.0	100.0
모름 / 무응답	(16)	6.3	56.3	62.5	25.0	12.5	37.5	100.0

표15. 북한 정권의 통일 희망 정도에 대한 인식

문)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다소 원한다	①+②	③ 별로 원하지 않는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2.7	17.5	20.2	54.0	25.8	79.8	100.0
▣ 성별								
남자	(604)	4.1	16.1	20.2	53.9	25.9	79.8	100.0
여자	(596)	1.2	18.9	20.1	54.1	25.8	79.9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7	15.2	16.8	60.1	23.1	83.2	100.0
30대	(312)	3.5	18.3	21.8	52.2	26.0	78.2	100.0
40대	(305)	3.0	21.6	24.6	52.5	23.0	75.4	100.0
50대이상	(280)	2.5	14.6	17.1	51.1	31.8	82.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2.9	16.2	19.1	56.0	24.8	80.9	100.0
고졸	(461)	2.2	14.5	16.7	53.5	29.9	83.3	100.0
대재이상	(634)	3.0	19.9	22.9	54.0	23.1	77.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6.2	15.6	21.8	56.3	21.8	78.2	100.0
자영업	(259)	4.2	19.6	23.9	46.1	30.1	76.1	100.0
블루칼라	(233)	3.9	14.6	18.4	52.8	28.7	81.6	100.0
화이트칼라	(239)	1.7	18.0	19.6	59.8	20.6	80.4	100.0
전업주부	(247)	.4	18.2	18.6	54.2	27.2	81.4	100.0
학생/무직/기타	(190)	2.6	16.9	19.5	58.3	22.2	80.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6.4	18.3	24.7	45.6	29.7	75.3	100.0
200~299만원	(315)	2.5	15.2	17.7	57.0	25.3	82.3	100.0
300~399만원	(332)	1.2	16.9	18.1	52.1	29.9	81.9	100.0
400만원이상	(347)	2.0	19.6	21.6	57.9	20.5	78.4	100.0
모름 / 무응답	(3)	.0	33.3	33.3	66.7	.0	66.7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2.7	17.1	19.8	54.9	25.3	80.2	100.0
중부권	(118)	2.5	18.6	21.2	59.3	19.5	78.8	100.0
호남권	(119)	5.9	22.7	28.6	52.9	18.5	71.4	100.0
영남권	(324)	1.2	15.4	16.6	50.9	32.4	83.4	100.0
강원	(36)	2.8	19.4	22.2	58.3	19.4	77.8	100.0
제주	(13)	7.7	23.1	30.8	38.5	30.8	69.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3.8	22.2	25.9	51.9	22.2	74.1	100.0
중도	(542)	1.8	16.6	18.4	54.4	27.1	81.6	100.0
보수적	(261)	2.7	12.2	14.9	56.3	28.8	85.1	100.0
▣ 종교별								
불교	(279)	3.9	15.1	19.0	52.2	28.8	81.0	100.0
기독교	(282)	1.8	17.7	19.5	57.1	23.4	80.5	100.0
천주교	(87)	1.1	25.2	26.4	48.2	25.5	73.6	100.0
기타	(6)	16.7	50.0	66.7	16.7	16.7	33.3	100.0
종교없음	(530)	2.5	16.6	19.0	54.8	26.2	81.0	100.0
모름 / 무응답	(16)	6.3	31.3	37.5	50.0	12.5	62.5	100.0

표16. 최근 북한의 변화에 대한 인식

문)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변하고 있다	② 약간 변하고 있다	①+②	③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④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7.2	37.7	44.9	40.3	14.8	55.1	100.0
▣ 성별								
남자	(604)	7.9	38.3	46.2	37.9	15.9	53.8	100.0
여자	(596)	6.4	37.2	43.6	42.7	13.8	56.4	100.0
▣ 연령별								
19~29세	(303)	7.9	33.7	41.6	42.2	16.2	58.4	100.0
30대	(312)	9.0	36.5	45.5	41.0	13.5	54.5	100.0
40대	(305)	6.2	40.3	46.6	40.0	13.4	53.4	100.0
50대이상	(280)	5.4	40.6	46.0	37.6	16.4	54.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4.8	38.9	43.7	39.1	17.2	56.3	100.0
고졸	(461)	7.2	37.2	44.3	42.2	13.4	55.7	100.0
대재이상	(634)	7.6	37.9	45.5	39.0	15.5	54.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6.2	56.8	63.0	30.7	6.2	37.0	100.0
자영업	(259)	8.5	41.5	50.0	35.7	14.3	50.0	100.0
블루칼라	(233)	5.1	33.9	39.0	44.7	16.3	61.0	100.0
화이트칼라	(239)	6.3	42.6	48.9	38.2	12.9	51.1	100.0
전업주부	(247)	5.3	35.3	40.5	46.1	13.4	59.5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1.6	31.1	42.7	37.7	19.5	57.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1.4	36.7	48.1	36.6	15.3	51.9	100.0
200~299만원	(315)	6.3	36.5	42.8	43.6	13.6	57.2	100.0
300~399만원	(332)	5.4	37.0	42.5	38.6	19.0	57.5	100.0
400만원이상	(347)	7.2	40.2	47.4	41.1	11.5	52.6	100.0
모름 / 무응답	(3)	.0	33.3	33.3	33.3	33.3	66.7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8.6	37.1	45.8	38.1	16.1	54.2	100.0
중부권	(118)	5.9	46.6	52.5	38.1	9.3	47.5	100.0
호남권	(119)	12.6	40.3	52.9	31.9	15.1	47.1	100.0
영남권	(324)	2.5	34.5	37.0	48.5	14.5	63.0	100.0
강원	(36)	11.1	36.1	47.2	41.7	11.1	52.8	100.0
제주	(13)	7.7	46.2	53.8	23.1	23.1	46.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8.6	44.7	53.3	33.9	12.8	46.7	100.0
중도	(542)	6.5	33.4	39.9	45.9	14.2	60.1	100.0
보수적	(261)	6.5	36.0	42.5	38.3	19.2	57.5	100.0
▣ 종교별								
불교	(279)	4.7	40.4	45.1	42.3	12.6	54.9	100.0
기독교	(282)	7.1	37.9	45.0	39.7	15.2	55.0	100.0
천주교	(87)	11.5	37.8	49.3	33.5	17.2	50.7	100.0
기타	(6)	16.7	50.0	66.7	33.3	.0	33.3	100.0
종교없음	(530)	7.0	35.9	42.8	41.5	15.7	57.2	100.0
모름 / 무응답	(16)	31.3	43.8	75.0	12.5	12.5	25.0	100.0

표17. 향후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 예측

문)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약간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모름/무응답	계
		%	%	%	%	%	%	%	%
■ 전체	(1200)	15.7	51.6	67.3	27.7	4.8	32.5	.2	100.0
▣ 성별									
남자	(604)	15.7	49.4	65.1	28.9	6.0	34.9	.0	100.0
여자	(596)	15.6	54.0	69.6	26.5	3.6	30.1	.3	100.0
▣ 연령별									
19~29세	(303)	22.4	52.1	74.6	22.8	2.6	25.4	.0	100.0
30대	(312)	18.9	50.6	69.6	27.2	3.2	30.4	.0	100.0
40대	(305)	11.5	51.8	63.3	31.5	5.2	36.7	.0	100.0
50대이상	(280)	9.3	52.1	61.3	29.3	8.6	37.9	.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8.6	53.0	61.6	30.9	6.6	37.5	1.0	100.0
고졸	(461)	13.2	52.9	66.1	28.0	5.6	33.7	.2	100.0
대재이상	(634)	18.6	50.5	69.2	26.9	4.0	30.8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9.4	40.7	50.1	34.3	9.4	43.7	6.2	100.0
자영업	(259)	14.3	49.7	64.0	26.8	9.2	36.0	.0	100.0
블루칼라	(233)	17.2	49.7	66.9	30.0	3.1	33.1	.0	100.0
화이트칼라	(239)	13.8	53.0	66.8	29.4	3.8	33.2	.0	100.0
전업주부	(247)	9.7	56.7	66.4	29.9	3.6	33.6	.0	100.0
학생/무직/기타	(190)	26.9	50.1	77.0	19.8	3.2	23.0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8.3	52.4	70.7	23.9	4.4	28.3	1.0	100.0
200~299만원	(315)	12.4	55.9	68.3	27.3	4.5	31.7	.0	100.0
300~399만원	(332)	16.6	52.4	68.9	26.6	4.5	31.1	.0	100.0
400만원이상	(347)	16.1	46.5	62.6	31.5	5.8	37.4	.0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66.7	100.0	.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7.5	51.9	69.3	26.6	4.1	30.7	.0	100.0
중부권	(118)	14.4	57.6	72.0	25.4	1.7	27.1	.8	100.0
호남권	(119)	21.8	51.3	73.1	16.8	9.2	26.1	.8	100.0
영남권	(324)	10.2	48.4	58.6	37.1	4.4	41.4	.0	100.0
강원	(36)	16.7	58.3	75.0	11.1	13.9	25.0	.0	100.0
제주	(13)	23.1	53.8	76.9	7.7	15.4	23.1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7.9	50.3	68.1	27.1	4.8	31.9	.0	100.0
중도	(542)	14.0	53.0	67.0	28.1	4.7	32.8	.2	100.0
보수적	(261)	15.7	51.0	66.7	27.6	5.3	32.9	.4	100.0
▣ 종교별									
불교	(279)	14.4	50.0	64.4	30.3	5.3	35.6	.0	100.0
기독교	(282)	17.7	52.5	70.2	25.9	3.9	29.8	.0	100.0
천주교	(87)	20.6	44.7	65.4	27.5	7.1	34.6	.0	100.0
기타	(6)	.0	50.0	50.0	50.0	.0	50.0	.0	100.0
종교없음	(530)	14.7	53.1	67.8	27.1	4.7	31.8	.4	100.0
모름 / 무응답	(16)	12.5	56.3	68.8	25.0	6.3	31.3	.0	100.0

표18-1. 북한 사회 인지도 - ㉮ 선군정치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 선군정치

	사례수	잘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0)	5.2	18.9	28.0	47.9	100.0
▣ 성별						
남자	(604)	8.1	25.2	28.0	38.7	100.0
여자	(596)	2.2	12.6	28.0	57.3	100.0
▣ 연령별						
19~29세	(303)	4.6	19.1	27.7	48.5	100.0
30대	(312)	5.1	20.8	28.5	45.5	100.0
40대	(305)	6.6	20.3	26.9	46.2	100.0
50대이상	(280)	4.3	15.1	28.8	51.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0	9.6	28.1	61.4	100.0
고졸	(461)	4.1	15.2	27.6	53.1	100.0
대재이상	(634)	6.6	23.2	28.2	41.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1	12.5	18.7	65.7	100.0
자영업	(259)	7.3	20.5	27.4	44.8	100.0
블루칼라	(233)	6.0	18.0	31.3	44.7	100.0
화이트칼라	(239)	5.4	26.0	29.3	39.3	100.0
전업주부	(247)	1.2	9.3	29.5	59.9	100.0
학생/무직/기타	(190)	6.3	22.7	22.4	48.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7.9	12.4	25.4	54.3	100.0
200~299만원	(315)	2.5	19.0	27.0	51.5	100.0
300~399만원	(332)	4.5	16.6	26.2	52.7	100.0
400만원이상	(347)	6.6	24.8	32.3	36.3	100.0
모름 / 무응답	(3)	.0	33.3	.0	66.7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6.4	22.5	29.8	41.2	100.0
중부권	(118)	8.5	19.5	17.4	54.7	100.0
호남권	(119)	4.2	17.6	17.6	60.5	100.0
영남권	(324)	2.5	14.0	30.9	52.7	100.0
강원	(36)	.0	11.1	38.9	50.0	100.0
제주	(13)	7.7	7.7	30.8	53.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7.1	22.2	27.0	43.8	100.0
중도	(542)	4.4	17.6	29.0	49.0	100.0
보수적	(261)	3.8	16.9	27.3	52.0	100.0
▣ 종교별						
불교	(279)	5.0	17.3	25.0	52.7	100.0
기독교	(282)	4.3	21.6	26.6	47.5	100.0
천주교	(87)	4.6	22.9	38.1	34.4	100.0
기타	(6)	.0	33.3	33.3	33.3	100.0
종교없음	(530)	6.0	17.4	28.6	48.0	100.0
모름 / 무응답	(16)	.0	25.0	25.0	50.0	100.0

표18-2. 북한 사회 인지도 - ㉯ 주체사상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 주체사상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0)	11.2	34.6	35.4	18.8	100.0
▣ 성별						
남자	(604)	16.3	38.1	31.5	14.2	100.0
여자	(596)	6.0	31.0	39.4	23.5	100.0
▣ 연령별						
19~29세	(303)	8.6	31.7	34.3	25.4	100.0
30대	(312)	10.3	37.5	34.6	17.6	100.0
40대	(305)	16.1	36.4	34.4	13.1	100.0
50대이상	(280)	9.8	32.5	38.5	19.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9.6	28.7	37.1	24.6	100.0
고졸	(461)	8.1	30.9	41.2	19.9	100.0
대재이상	(634)	13.8	38.2	30.9	17.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2.5	18.7	34.3	34.5	100.0
자영업	(259)	10.8	42.4	31.8	15.0	100.0
블루칼라	(233)	14.2	30.4	39.0	16.3	100.0
화이트칼라	(239)	13.9	36.3	34.7	15.1	100.0
전업주부	(247)	5.3	31.2	41.3	22.2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2.1	33.8	29.3	24.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2.9	26.7	35.3	25.2	100.0
200~299만원	(315)	9.3	33.0	37.8	19.9	100.0
300~399만원	(332)	8.5	34.9	37.0	19.5	100.0
400만원이상	(347)	14.7	40.0	31.7	13.6	100.0
모름 / 무응답	(3)	.0	66.7	33.3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1.4	39.7	35.6	13.4	100.0
중부권	(118)	13.6	45.8	24.6	16.1	100.0
호남권	(119)	12.6	27.7	37.0	22.7	100.0
영남권	(324)	9.4	25.0	37.3	28.4	100.0
강원	(36)	11.1	27.8	41.7	19.4	100.0
제주	(13)	15.4	23.1	46.2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4.6	37.8	32.2	15.4	100.0
중도	(542)	9.1	31.3	37.6	22.0	100.0
보수적	(261)	10.4	36.5	35.7	17.5	100.0
▣ 종교별						
불교	(279)	11.6	34.4	35.3	18.7	100.0
기독교	(282)	11.0	42.9	29.8	16.3	100.0
천주교	(87)	6.9	37.8	42.4	12.8	100.0
기타	(6)	.0	66.7	33.3	.0	100.0
종교없음	(530)	12.1	29.4	37.6	20.9	100.0
모름 / 무응답	(16)	6.3	31.3	25.0	37.5	100.0

표18-3. 북한 사회 인지도 - ㉰ 천리마운동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 천리마운동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0)	8.9	30.8	38.2	22.1	100.0
▣ 성별						
남자	(604)	12.3	33.8	35.8	18.0	100.0
여자	(596)	5.4	27.9	40.6	26.2	100.0
▣ 연령별						
19~29세	(303)	5.3	22.1	37.3	35.3	100.0
30대	(312)	6.1	34.9	38.1	20.8	100.0
40대	(305)	12.8	36.4	37.4	13.4	100.0
50대이상	(280)	11.6	29.7	40.1	18.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9.6	30.8	32.5	27.2	100.0
고졸	(461)	6.8	28.8	45.8	18.6	100.0
대재이상	(634)	10.3	32.3	33.6	23.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2.5	22.5	53.0	12.0	100.0
자영업	(259)	12.0	35.7	33.2	19.1	100.0
블루칼라	(233)	9.9	30.9	41.2	18.0	100.0
화이트칼라	(239)	8.9	34.7	37.7	18.8	100.0
전업주부	(247)	4.9	28.8	41.7	24.6	100.0
학생/무직/기타	(190)	7.9	23.5	34.8	33.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0.4	23.6	37.6	28.5	100.0
200~299만원	(315)	7.0	31.9	39.3	21.8	100.0
300~399만원	(332)	9.1	29.5	38.2	23.1	100.0
400만원이상	(347)	9.5	35.1	37.5	17.9	100.0
모름 / 무응답	(3)	.0	66.7	33.3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9.7	33.4	36.1	20.8	100.0
중부권	(118)	11.9	33.1	37.3	17.8	100.0
호남권	(119)	12.6	21.0	40.3	26.1	100.0
영남권	(324)	6.0	28.1	40.8	25.0	100.0
강원	(36)	.0	36.1	44.4	19.4	100.0
제주	(13)	7.7	38.5	38.5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0.1	32.7	36.3	20.9	100.0
중도	(542)	7.8	29.0	40.0	23.2	100.0
보수적	(261)	9.2	31.8	37.3	21.7	100.0
▣ 종교별						
불교	(279)	9.0	32.5	39.2	19.2	100.0
기독교	(282)	8.9	36.2	31.9	23.0	100.0
천주교	(87)	10.3	24.1	48.4	17.2	100.0
기타	(6)	.0	66.7	33.3	.0	100.0
종교없음	(530)	8.9	27.6	39.4	24.1	100.0
모름 / 무응답	(16)	.0	37.5	37.5	25.0	100.0

표18-4. 북한 사회 인지도 - ㉣ 고난의 행군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 고난의 행군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0)	5.3	18.1	29.6	46.9	100.0
▣ 성별						
남자	(604)	8.1	20.4	31.9	39.6	100.0
여자	(596)	2.5	15.8	27.3	54.4	100.0
▣ 연령별						
19~29세	(303)	2.0	14.5	26.4	57.1	100.0
30대	(312)	4.2	18.9	33.3	43.6	100.0
40대	(305)	9.2	19.3	29.2	42.3	100.0
50대이상	(280)	6.1	19.8	29.4	44.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6.7	18.6	22.9	51.7	100.0
고졸	(461)	3.9	16.7	30.5	48.9	100.0
대재이상	(634)	6.2	19.1	30.1	44.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2.5	9.4	12.5	65.7	100.0
자영업	(259)	8.9	20.5	30.6	40.1	100.0
블루칼라	(233)	5.6	19.7	28.7	46.0	100.0
화이트칼라	(239)	5.0	19.6	31.8	43.5	100.0
전업주부	(247)	2.4	14.6	31.6	51.4	100.0
학생/무직/기타	(190)	3.2	17.2	26.9	52.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7.4	13.6	24.2	54.8	100.0
200~299만원	(315)	4.1	19.3	29.2	47.4	100.0
300~399만원	(332)	4.2	17.5	29.3	49.0	100.0
400만원이상	(347)	6.0	20.2	33.8	40.0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6.1	20.8	32.2	40.8	100.0
중부권	(118)	4.2	19.9	22.0	53.8	100.0
호남권	(119)	8.4	18.5	26.1	47.1	100.0
영남권	(324)	3.7	13.6	27.3	55.4	100.0
강원	(36)	.0	8.3	41.7	50.0	100.0
제주	(13)	7.7	15.4	38.5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5.3	18.9	32.7	43.1	100.0
중도	(542)	5.2	15.6	29.8	49.5	100.0
보수적	(261)	5.8	22.3	24.6	47.4	100.0
▣ 종교별						
불교	(279)	5.4	19.6	25.5	49.5	100.0
기독교	(282)	3.9	20.6	31.9	43.6	100.0
천주교	(87)	5.7	13.8	38.1	42.4	100.0
기타	(6)	.0	50.0	.0	50.0	100.0
종교없음	(530)	6.2	16.0	29.8	47.9	100.0
모름 / 무응답	(16)	.0	31.3	18.8	50.0	100.0

표18-5. 북한 사회 인지도 – ㉮ 장마당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 장마당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0)	2.9	8.5	20.9	67.7	100.0
▣ 성별						
남자	(604)	5.1	10.8	24.5	59.6	100.0
여자	(596)	.7	6.2	17.3	75.8	100.0
▣ 연령별						
19~29세	(303)	2.3	7.3	18.2	72.3	100.0
30대	(312)	2.2	8.3	22.8	66.7	100.0
40대	(305)	4.9	8.2	19.7	67.2	100.0
50대이상	(280)	2.1	10.4	23.3	64.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9	8.6	20.1	69.4	100.0
고졸	(461)	2.4	7.4	21.7	68.6	100.0
대재이상	(634)	3.5	9.3	20.5	66.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6.2	12.5	9.4	71.9	100.0
자영업	(259)	5.0	8.9	22.8	63.3	100.0
블루칼라	(233)	3.9	5.6	24.4	66.1	100.0
화이트칼라	(239)	2.5	10.9	23.9	62.7	100.0
전업주부	(247)	.0	5.7	19.1	75.3	100.0
학생/무직/기타	(190)	2.6	11.6	14.8	71.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4.4	6.4	19.3	69.8	100.0
200~299만원	(315)	1.9	8.2	20.6	69.3	100.0
300~399만원	(332)	1.8	6.9	19.0	72.2	100.0
400만원이상	(347)	4.0	11.5	24.2	60.3	100.0
모름 / 무응답	(3)	.0	.0	.0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3.7	11.2	25.1	60.0	100.0
중부권	(118)	.8	4.2	14.4	80.5	100.0
호남권	(119)	1.7	9.2	10.1	79.0	100.0
영남권	(324)	2.8	5.2	17.7	74.3	100.0
강원	(36)	.0	8.3	36.1	55.6	100.0
제주	(13)	7.7	.0	30.8	61.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3.8	10.6	22.4	63.2	100.0
중도	(542)	2.2	7.6	19.6	70.6	100.0
보수적	(261)	3.1	7.3	21.5	68.2	100.0
▣ 종교별						
불교	(279)	2.9	9.0	16.9	71.2	100.0
기독교	(282)	3.2	8.9	25.2	62.8	100.0
천주교	(87)	4.6	3.4	24.1	67.9	100.0
기타	(6)	.0	50.0	16.7	33.3	100.0
종교없음	(530)	2.6	8.1	20.6	68.7	100.0
모름 / 무응답	(16)	.0	18.8	12.5	68.8	100.0

표18-6. 북한 사회 인지도 – ㉥ 아리랑 축전

문)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 아리랑 축전

	사례수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적 있다	전혀 모른다	계
		%	%	%	%	%
■ 전체	(1200)	6.9	24.1	35.7	33.3	100.0
▣ 성별						
남자	(604)	9.8	27.8	34.4	27.9	100.0
여자	(596)	3.9	20.3	37.1	38.8	100.0
▣ 연령별						
19~29세	(303)	3.6	18.8	30.7	46.9	100.0
30대	(312)	5.4	25.0	36.9	32.7	100.0
40대	(305)	9.5	27.9	36.1	26.6	100.0
50대이상	(280)	9.1	24.6	39.6	26.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1.5	21.0	37.3	30.2	100.0
고졸	(461)	4.8	24.7	39.9	30.6	100.0
대재이상	(634)	7.6	24.1	32.5	35.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9.4	12.5	34.3	43.9	100.0
자영업	(259)	9.6	27.9	35.5	26.9	100.0
블루칼라	(233)	7.8	22.7	37.7	31.7	100.0
화이트칼라	(239)	5.9	25.1	36.8	32.2	100.0
전업주부	(247)	4.5	22.7	39.3	33.5	100.0
학생/무직/기타	(190)	5.8	23.0	28.0	43.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8.4	17.6	44.0	30.0	100.0
200~299만원	(315)	6.1	20.7	36.8	36.4	100.0
300~399만원	(332)	4.9	23.5	34.6	37.0	100.0
400만원이상	(347)	8.6	31.4	30.8	29.1	100.0
모름 / 무응답	(3)	.0	33.3	66.7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7.8	29.3	37.3	25.6	100.0
중부권	(118)	7.6	27.1	23.7	41.5	100.0
호남권	(119)	7.6	24.4	37.0	31.1	100.0
영남권	(324)	5.4	14.8	36.1	43.7	100.0
강원	(36)	.0	11.1	44.4	44.4	100.0
제주	(13)	7.7	23.1	30.8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8.6	28.5	32.5	30.5	100.0
중도	(542)	5.8	22.5	35.8	35.9	100.0
보수적	(261)	6.5	20.7	40.7	32.1	100.0
▣ 종교별						
불교	(279)	7.2	23.1	34.1	35.5	100.0
기독교	(282)	7.8	30.1	35.5	26.6	100.0
천주교	(87)	4.6	20.6	40.1	34.6	100.0
기타	(6)	.0	83.3	16.7	.0	100.0
종교없음	(530)	6.6	21.4	36.0	35.9	100.0
모름 / 무응답	(16)	6.3	18.8	43.8	31.3	100.0

표19-1.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공단 등을 방문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00)	3.8	96.2	100.0
▣ 성별				
남자	(604)	4.0	96.0	100.0
여자	(596)	3.6	96.4	100.0
▣ 연령별				
19~29세	(303)	4.0	96.0	100.0
30대	(312)	3.2	96.8	100.0
40대	(305)	2.6	97.4	100.0
50대이상	(280)	5.6	94.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4.6	95.4	100.0
고졸	(461)	2.4	97.6	100.0
대재이상	(634)	4.7	95.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2.0	88.0	100.0
자영업	(259)	3.8	96.2	100.0
블루칼라	(233)	2.1	97.9	100.0
화이트칼라	(239)	4.2	95.8	100.0
전업주부	(247)	2.0	98.0	100.0
학생/무직/기타	(190)	6.3	93.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3.0	97.0	100.0
200~299만원	(315)	3.4	96.6	100.0
300~399만원	(332)	4.8	95.2	100.0
400만원이상	(347)	3.7	96.3	100.0
모름 / 무응답	(3)	.0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3.9	96.1	100.0
중부권	(118)	5.1	94.9	100.0
호남권	(119)	1.7	98.3	100.0
영남권	(324)	3.0	97.0	100.0
강원	(36)	11.1	88.9	100.0
제주	(13)	7.7	92.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3.5	96.5	100.0
중도	(542)	4.2	95.8	100.0
보수적	(261)	3.4	96.6	100.0
▣ 종교별				
불교	(279)	3.9	96.1	100.0
기독교	(282)	3.9	96.1	100.0
천주교	(87)	4.6	95.4	100.0
기타	(6)	.0	100.0	100.0
종교없음	(530)	3.7	96.3	100.0
모름 / 무응답	(16)	.0	100.0	100.0

표19-2.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00)	13.8	86.2	100.0
▣ 성별				
남자	(604)	16.4	83.6	100.0
여자	(596)	11.2	88.8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1.9	88.1	100.0
30대	(312)	13.1	86.9	100.0
40대	(305)	15.7	84.3	100.0
50대이상	(280)	14.7	85.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5.7	94.3	100.0
고졸	(461)	15.1	84.9	100.0
대재이상	(634)	14.2	85.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1	96.9	100.0
자영업	(259)	19.2	80.8	100.0
블루칼라	(233)	15.9	84.1	100.0
화이트칼라	(239)	11.8	88.2	100.0
전업주부	(247)	10.5	89.5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2.7	87.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3.3	86.7	100.0
200~299만원	(315)	14.9	85.1	100.0
300~399만원	(332)	13.6	86.4	100.0
400만원이상	(347)	13.2	86.8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66.7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8.1	81.9	100.0
중부권	(118)	22.9	77.1	100.0
호남권	(119)	5.9	94.1	100.0
영남권	(324)	6.2	93.8	100.0
강원	(36)	11.1	88.9	100.0
제주	(13)	7.7	92.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4.6	85.4	100.0
중도	(542)	13.1	86.9	100.0
보수적	(261)	14.1	85.9	100.0
▣ 종교별				
불교	(279)	13.0	87.0	100.0
기독교	(282)	17.7	82.3	100.0
천주교	(87)	17.2	82.8	100.0
기타	(6)	50.0	50.0	100.0
종교없음	(530)	11.1	88.9	100.0
모름 / 무응답	(16)	18.8	81.3	100.0

표19-3.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00)	37.4	62.6	100.0
▣ 성별				
남자	(604)	39.3	60.7	100.0
여자	(596)	35.4	64.6	100.0
▣ 연령별				
19~29세	(303)	40.9	59.1	100.0
30대	(312)	35.6	64.4	100.0
40대	(305)	35.7	64.3	100.0
50대이상	(280)	37.3	62.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39.9	60.1	100.0
고졸	(461)	33.2	66.8	100.0
대재이상	(634)	40.0	6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0.7	69.3	100.0
자영업	(259)	38.5	61.5	100.0
블루칼라	(233)	37.8	62.2	100.0
화이트칼라	(239)	36.0	64.0	100.0
전업주부	(247)	34.4	65.6	100.0
학생/무직/기타	(190)	42.0	58.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38.7	61.3	100.0
200~299만원	(315)	38.0	62.0	100.0
300~399만원	(332)	34.9	65.1	100.0
400만원이상	(347)	38.1	61.9	100.0
모름 / 무응답	(3)	66.7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36.4	63.6	100.0
중부권	(118)	47.5	52.5	100.0
호남권	(119)	40.3	59.7	100.0
영남권	(324)	32.5	67.5	100.0
강원	(36)	41.7	58.3	100.0
제주	(13)	69.2	30.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41.1	58.9	100.0
중도	(542)	36.2	63.8	100.0
보수적	(261)	34.1	65.9	100.0
▣ 종교별				
불교	(279)	36.8	63.2	100.0
기독교	(282)	36.9	63.1	100.0
천주교	(87)	39.2	60.8	100.0
기타	(6)	83.3	16.7	100.0
종교없음	(530)	36.1	63.9	100.0
모름 / 무응답	(16)	68.8	31.3	100.0

표19-4. 북한 관련 경험 유무 - ㉣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문)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 대북지원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사례수	있다	없다	계
		%	%	%
■ 전체	(1200)	2.2	97.8	100.0
▣ 성별				
남자	(604)	2.3	97.7	100.0
여자	(596)	2.2	97.8	100.0
▣ 연령별				
19~29세	(303)	3.6	96.4	100.0
30대	(312)	1.6	98.4	100.0
40대	(305)	2.3	97.7	100.0
50대이상	(280)	1.4	98.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9	98.1	100.0
고졸	(461)	1.1	98.9	100.0
대재이상	(634)	3.2	96.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1	96.9	100.0
자영업	(259)	1.9	98.1	100.0
블루칼라	(233)	.9	99.1	100.0
화이트칼라	(239)	1.7	98.3	100.0
전업주부	(247)	2.0	98.0	100.0
학생/무직/기타	(190)	5.3	94.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2.5	97.5	100.0
200~299만원	(315)	2.5	97.5	100.0
300~399만원	(332)	1.2	98.8	100.0
400만원이상	(347)	2.9	97.1	100.0
모름 / 무응답	(3)	.0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3.2	96.8	100.0
중부권	(118)	1.7	98.3	100.0
호남권	(119)	.8	99.2	100.0
영남권	(324)	.3	99.7	100.0
강원	(36)	2.8	97.2	100.0
제주	(13)	23.1	76.9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3.8	96.2	100.0
중도	(542)	1.3	98.7	100.0
보수적	(261)	1.9	98.1	100.0
▣ 종교별				
불교	(279)	1.4	98.6	100.0
기독교	(282)	2.8	97.2	100.0
천주교	(87)	2.3	97.7	100.0
기타	(6)	.0	100.0	100.0
종교없음	(530)	2.3	97.7	100.0
모름 / 무응답	(16)	6.3	93.8	100.0

표20-1.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선거방식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선거방식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70.8	23.0	93.8	5.0	1.2	6.2	100.0
▣ 성별								
남자	(604)	71.5	21.8	93.4	5.0	1.7	6.6	100.0
여자	(596)	70.0	24.2	94.2	5.0	.8	5.8	100.0
▣ 연령별								
19~29세	(303)	66.0	26.7	92.7	5.3	2.0	7.3	100.0
30대	(312)	68.6	24.4	92.9	5.8	1.3	7.1	100.0
40대	(305)	76.1	19.3	95.4	3.9	.7	4.6	100.0
50대이상	(280)	72.6	21.4	94.0	4.9	1.1	6.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64.8	22.0	86.8	12.3	1.0	13.2	100.0
고졸	(461)	68.8	25.1	93.9	4.3	1.7	6.1	100.0
대재이상	(634)	73.2	21.6	94.8	4.3	.9	5.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81.3	12.5	93.8	6.2	.0	6.2	100.0
자영업	(259)	71.9	23.0	95.0	3.1	1.9	5.0	100.0
블루칼라	(233)	68.3	22.7	91.0	8.1	.9	9.0	100.0
화이트칼라	(239)	74.9	19.7	94.6	2.9	2.5	5.4	100.0
전업주부	(247)	70.5	23.5	94.0	6.0	.0	6.0	100.0
학생/무직/기타	(190)	65.7	28.5	94.2	4.7	1.1	5.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71.9	17.8	89.7	8.3	2.0	10.3	100.0
200~299만원	(315)	64.8	26.7	91.4	6.7	1.9	8.6	100.0
300~399만원	(332)	72.9	23.2	96.1	3.6	.3	3.9	100.0
400만원이상	(347)	73.3	22.7	96.0	2.9	1.2	4.0	100.0
모름 / 무응답	(3)	100.0	.0	100.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70.0	24.7	94.7	4.4	.8	5.3	100.0
중부권	(118)	77.5	17.4	94.9	.8	4.2	5.1	100.0
호남권	(119)	79.8	16.0	95.8	4.2	.0	4.2	100.0
영남권	(324)	64.7	26.0	90.8	8.6	.6	9.2	100.0
강원	(36)	80.6	13.9	94.4	.0	5.6	5.6	100.0
제주	(13)	84.6	7.7	92.3	.0	7.7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71.7	22.0	93.7	5.5	.8	6.3	100.0
중도	(542)	68.6	24.9	93.6	5.0	1.5	6.4	100.0
보수적	(261)	73.8	20.4	94.2	4.2	1.5	5.8	100.0
▣ 종교별								
불교	(279)	71.8	19.6	91.4	6.0	2.5	8.6	100.0
기독교	(282)	70.6	25.9	96.5	3.2	.4	3.5	100.0
천주교	(87)	67.7	27.8	95.4	2.3	2.3	4.6	100.0
기타	(6)	33.3	66.7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71.3	22.3	93.6	5.5	.9	6.4	100.0
모름 / 무응답	(16)	68.8	12.5	81.3	18.8	.0	18.8	100.0

표20-2.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생활수준

문) ㅇㅇ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생활수준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73.0	23.3	96.3	3.0	.7	3.7	100.0
▣ 성별								
남자	(604)	74.6	21.4	96.0	3.0	1.0	4.0	100.0
여자	(596)	71.3	25.2	96.5	3.0	.5	3.5	100.0
▣ 연령별								
19~29세	(303)	70.6	24.4	95.0	3.3	1.7	5.0	100.0
30대	(312)	73.1	24.0	97.1	2.9	.0	2.9	100.0
40대	(305)	74.4	22.3	96.7	3.0	.3	3.3	100.0
50대이상	(280)	73.8	22.3	96.1	2.9	1.0	3.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68.1	23.4	91.5	5.7	2.7	8.5	100.0
고졸	(461)	73.7	23.1	96.7	2.8	.4	3.3	100.0
대재이상	(634)	73.3	23.4	96.7	2.7	.6	3.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84.4	9.4	93.8	3.1	3.1	6.2	100.0
자영업	(259)	72.5	24.0	96.5	2.3	1.2	3.5	100.0
블루칼라	(233)	70.8	24.0	94.9	5.1	.0	5.1	100.0
화이트칼라	(239)	75.7	21.8	97.5	1.3	1.3	2.5	100.0
전업주부	(247)	74.1	22.7	96.8	2.8	.3	3.2	100.0
학생/무직/기타	(190)	69.4	26.4	95.8	3.7	.5	4.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71.9	23.2	95.1	3.5	1.4	4.9	100.0
200~299만원	(315)	73.2	21.8	94.9	3.8	1.3	5.1	100.0
300~399만원	(332)	73.5	23.5	97.0	3.0	.0	3.0	100.0
400만원이상	(347)	73.0	24.7	97.7	1.7	.6	2.3	100.0
모름 / 무응답	(3)	66.7	.0	66.7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69.7	27.6	97.3	2.2	.5	2.7	100.0
중부권	(118)	76.3	20.3	96.6	2.5	.8	3.4	100.0
호남권	(119)	84.0	13.4	97.5	2.5	.0	2.5	100.0
영남권	(324)	71.5	22.3	93.9	5.2	.9	6.1	100.0
강원	(36)	88.9	8.3	97.2	.0	2.8	2.8	100.0
제주	(13)	84.6	7.7	92.3	.0	7.7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72.9	24.1	97.0	2.8	.3	3.0	100.0
중도	(542)	71.9	23.5	95.4	3.9	.7	4.6	100.0
보수적	(261)	75.4	21.6	96.9	1.5	1.5	3.1	100.0
▣ 종교별								
불교	(279)	77.6	17.8	95.4	2.9	1.7	4.6	100.0
기독교	(282)	71.3	25.5	96.8	3.2	.0	3.2	100.0
천주교	(87)	74.5	24.3	98.9	1.1	.0	1.1	100.0
기타	(6)	66.7	33.3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71.6	24.6	96.2	3.0	.8	3.8	100.0
모름 / 무응답	(16)	62.5	25.0	87.5	12.5	.0	12.5	100.0

표20-3.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법률제도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법률제도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46.8	42.0	88.7	10.1	1.2	11.3	100.0
▣ 성별								
남자	(604)	45.3	42.4	87.7	11.0	1.3	12.3	100.0
여자	(596)	48.3	41.5	89.8	9.2	1.0	10.2	100.0
▣ 연령별								
19~29세	(303)	37.6	47.9	85.5	12.9	1.7	14.5	100.0
30대	(312)	47.8	42.0	89.7	9.3	1.0	10.3	100.0
40대	(305)	51.1	39.0	90.2	8.9	1.0	9.8	100.0
50대이상	(280)	50.8	38.8	89.6	9.4	1.1	10.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49.1	36.7	85.8	12.3	1.9	14.2	100.0
고졸	(461)	48.1	41.2	89.4	9.1	1.5	10.6	100.0
대재이상	(634)	45.4	43.4	88.7	10.5	.8	11.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68.8	15.6	84.4	15.6	.0	15.6	100.0
자영업	(259)	50.6	36.2	86.8	12.4	.8	13.2	100.0
블루칼라	(233)	43.0	46.3	89.3	8.6	2.1	10.7	100.0
화이트칼라	(239)	43.1	48.0	91.1	7.2	1.7	8.9	100.0
전업주부	(247)	49.9	42.9	92.8	6.4	.8	7.2	100.0
학생/무직/기타	(190)	43.0	40.1	83.1	16.4	.5	16.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47.7	38.0	85.7	14.3	.0	14.3	100.0
200~299만원	(315)	48.5	39.7	88.2	9.3	2.5	11.8	100.0
300~399만원	(332)	45.8	43.7	89.5	9.9	.6	10.5	100.0
400만원이상	(347)	45.1	45.1	90.1	8.7	1.2	9.9	100.0
모름 / 무응답	(3)	100.0	.0	100.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46.3	44.2	90.5	8.6	.8	9.5	100.0
중부권	(118)	55.9	37.3	93.2	5.1	1.7	6.8	100.0
호남권	(119)	64.7	29.4	94.1	5.9	.0	5.9	100.0
영남권	(324)	35.9	45.5	81.4	16.7	1.9	18.6	100.0
강원	(36)	69.4	25.0	94.4	2.8	2.8	5.6	100.0
제주	(13)	30.8	53.8	84.6	15.4	.0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44.5	45.0	89.4	10.1	.5	10.6	100.0
중도	(542)	47.7	41.0	88.7	9.8	1.5	11.3	100.0
보수적	(261)	48.2	39.4	87.6	10.8	1.5	12.4	100.0
▣ 종교별								
불교	(279)	44.9	42.2	87.1	11.1	1.8	12.9	100.0
기독교	(282)	50.7	40.8	91.5	8.5	.0	8.5	100.0
천주교	(87)	51.6	35.6	87.2	11.7	1.1	12.8	100.0
기타	(6)	33.3	66.7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44.9	43.6	88.5	10.2	1.3	11.5	100.0
모름 / 무응답	(16)	50.0	31.3	81.3	12.5	6.3	18.8	100.0

표20-4.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언어사용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언어사용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39.3	49.9	89.2	9.7	1.2	10.8	100.0
▣ 성별								
남자	(604)	35.3	53.1	88.4	10.8	.9	11.6	100.0
여자	(596)	43.3	46.6	90.0	8.5	1.5	10.0	100.0
▣ 연령별								
19~29세	(303)	33.7	53.1	86.8	10.9	2.3	13.2	100.0
30대	(312)	34.6	52.9	87.5	11.5	1.0	12.5	100.0
40대	(305)	44.3	47.2	91.5	7.5	1.0	8.5	100.0
50대이상	(280)	45.1	45.9	91.1	8.5	.4	8.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42.6	45.1	87.7	12.3	.0	12.3	100.0
고졸	(461)	42.6	46.4	88.9	10.0	1.1	11.1	100.0
대재이상	(634)	36.4	53.2	89.6	9.0	1.5	10.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68.2	22.5	90.6	6.2	3.1	9.4	100.0
자영업	(259)	40.9	49.9	90.7	8.5	.8	9.3	100.0
블루칼라	(233)	34.0	50.6	84.6	14.6	.9	15.4	100.0
화이트칼라	(239)	36.3	55.2	91.6	6.3	2.2	8.4	100.0
전업주부	(247)	43.7	47.0	90.7	8.5	.8	9.3	100.0
학생/무직/기타	(190)	36.7	50.7	87.3	11.6	1.1	12.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42.6	42.1	84.7	14.3	1.0	15.3	100.0
200~299만원	(315)	39.1	48.5	87.6	10.1	2.3	12.4	100.0
300~399만원	(332)	40.3	49.4	89.8	9.6	.6	10.2	100.0
400만원이상	(347)	36.3	56.2	92.5	6.6	.9	7.5	100.0
모름 / 무응답	(3)	66.7	33.3	100.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35.8	55.4	91.2	7.6	1.2	8.8	100.0
중부권	(118)	52.5	39.0	91.5	7.6	.8	8.5	100.0
호남권	(119)	51.3	39.5	90.8	9.2	.0	9.2	100.0
영남권	(324)	34.4	49.3	83.6	14.8	1.6	16.4	100.0
강원	(36)	55.6	33.3	88.9	8.3	2.8	11.1	100.0
제주	(13)	46.2	53.8	100.0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36.5	51.6	88.2	11.6	.3	11.8	100.0
중도	(542)	39.6	48.6	88.2	10.3	1.5	11.8	100.0
보수적	(261)	42.8	49.9	92.6	5.4	2.0	7.4	100.0
▣ 종교별								
불교	(279)	41.0	47.9	88.9	8.6	2.6	11.1	100.0
기독교	(282)	39.4	52.8	92.2	7.4	.4	7.8	100.0
천주교	(87)	45.9	45.0	90.8	8.0	1.1	9.2	100.0
기타	(6)	16.7	83.3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37.4	50.6	87.9	11.1	.9	12.1	100.0
모름 / 무응답	(16)	43.8	25.0	68.8	31.3	.0	31.3	100.0

표20-5.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40.0	46.7	86.7	12.1	1.2	13.3	100.0
▣ 성별								
남자	(604)	36.4	48.3	84.7	14.1	1.2	15.3	100.0
여자	(596)	43.6	45.1	88.8	10.1	1.2	11.2	100.0
▣ 연령별								
19~29세	(303)	35.6	49.5	85.1	12.9	2.0	14.9	100.0
30대	(312)	37.2	47.8	84.9	14.4	.6	15.1	100.0
40대	(305)	42.0	46.2	88.2	10.8	1.0	11.8	100.0
50대이상	(280)	45.7	43.1	88.8	10.1	1.1	11.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42.3	38.7	81.0	18.2	.8	19.0	100.0
고졸	(461)	43.7	43.5	87.2	11.1	1.7	12.8	100.0
대재이상	(634)	36.9	50.4	87.3	11.9	.8	12.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68.8	18.7	87.5	9.4	3.1	12.5	100.0
자영업	(259)	41.8	46.2	88.0	11.2	.8	12.0	100.0
블루칼라	(233)	34.4	48.5	82.8	15.9	1.3	17.2	100.0
화이트칼라	(239)	34.3	54.3	88.6	9.7	1.8	11.4	100.0
전업주부	(247)	46.1	42.6	88.7	10.5	.8	11.3	100.0
학생/무직/기타	(190)	38.8	45.9	84.7	14.2	1.1	15.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45.2	38.1	83.3	15.3	1.4	16.7	100.0
200~299만원	(315)	41.5	43.3	84.7	12.7	2.6	15.3	100.0
300~399만원	(332)	40.6	47.3	87.9	11.8	.3	12.1	100.0
400만원이상	(347)	35.1	54.5	89.6	9.8	.6	10.4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33.3	66.7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37.5	51.9	89.3	9.8	.8	10.7	100.0
중부권	(118)	52.1	41.9	94.1	5.1	.8	5.9	100.0
호남권	(119)	51.3	39.5	90.8	9.2	.0	9.2	100.0
영남권	(324)	36.0	41.7	77.7	20.1	2.2	22.3	100.0
강원	(36)	47.2	47.2	94.4	5.6	.0	5.6	100.0
제주	(13)	23.1	46.2	69.2	23.1	7.7	30.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38.3	49.1	87.4	12.3	.3	12.6	100.0
중도	(542)	39.9	46.6	86.5	11.8	1.6	13.5	100.0
보수적	(261)	42.8	43.4	86.1	12.3	1.6	13.9	100.0
▣ 종교별								
불교	(279)	40.0	46.3	86.3	11.2	2.5	13.7	100.0
기독교	(282)	42.2	47.5	89.7	9.9	.4	10.3	100.0
천주교	(87)	42.4	48.4	90.8	8.0	1.1	9.2	100.0
기타	(6)	16.7	66.7	83.3	16.7	.0	16.7	100.0
종교없음	(530)	39.0	46.7	85.7	13.4	.9	14.3	100.0
모름 / 무응답	(16)	31.3	25.0	56.3	43.8	.0	43.8	100.0

표20-7. 사회 분야별 남북한 간 차이 – ㉳ 가치관

문)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 가치관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66.3	27.8	94.1	5.0	.9	5.9	100.0
▣ 성별								
남자	(604)	65.1	28.2	93.3	6.0	.7	6.7	100.0
여자	(596)	67.5	27.3	94.8	4.0	1.2	5.2	100.0
▣ 연령별								
19~29세	(303)	63.7	31.4	95.0	3.0	2.0	5.0	100.0
30대	(312)	66.7	26.6	93.3	6.1	.6	6.7	100.0
40대	(305)	67.2	27.2	94.4	5.2	.3	5.6	100.0
50대이상	(280)	67.7	25.9	93.6	5.7	.7	6.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56.6	32.0	88.7	10.5	.8	11.3	100.0
고졸	(461)	65.4	28.7	94.1	5.2	.7	5.9	100.0
대재이상	(634)	68.5	26.4	94.9	3.9	1.1	5.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75.0	9.4	84.4	12.5	3.1	15.6	100.0
자영업	(259)	68.9	25.3	94.2	5.0	.8	5.8	100.0
블루칼라	(233)	60.1	32.6	92.7	6.9	.4	7.3	100.0
화이트칼라	(239)	66.1	28.0	94.1	3.3	2.6	5.9	100.0
전업주부	(247)	66.8	28.0	94.8	4.9	.3	5.2	100.0
학생/무직/기타	(190)	68.3	28.0	96.3	3.7	.0	3.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63.5	26.7	90.2	8.9	.9	9.8	100.0
200~299만원	(315)	63.3	30.3	93.6	4.4	2.0	6.4	100.0
300~399만원	(332)	68.1	28.0	96.1	3.6	.3	3.9	100.0
400만원이상	(347)	68.6	26.2	94.8	4.6	.6	5.2	100.0
모름 / 무응답	(3)	100.0	.0	100.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66.1	29.3	95.4	3.7	.8	4.6	100.0
중부권	(118)	75.0	21.6	96.6	2.5	.8	3.4	100.0
호남권	(119)	72.3	23.5	95.8	4.2	.0	4.2	100.0
영남권	(324)	58.9	30.6	89.5	9.0	1.6	10.5	100.0
강원	(36)	86.1	11.1	97.2	2.8	.0	2.8	100.0
제주	(13)	69.2	30.8	100.0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69.3	25.4	94.7	5.0	.3	5.3	100.0
중도	(542)	63.2	30.1	93.4	5.3	1.3	6.6	100.0
보수적	(261)	68.1	26.5	94.6	4.2	1.2	5.4	100.0
▣ 종교별								
불교	(279)	67.0	25.1	92.1	5.7	2.2	7.9	100.0
기독교	(282)	73.0	22.7	95.7	3.5	.7	4.3	100.0
천주교	(87)	70.2	27.5	97.7	2.3	.0	2.3	100.0
기타	(6)	33.3	66.7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62.9	31.2	94.2	5.3	.6	5.8	100.0
모름 / 무응답	(16)	37.5	37.5	75.0	25.0	.0	25.0	100.0

표21.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위협을 느끼는 정도

문)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위협을 느낀다	② 다소 위협을 느낀다	①+②	③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④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22.4	51.4	73.8	23.3	2.9	26.2	100.0
▣ 성별								
남자	(604)	20.9	47.1	68.0	28.3	3.7	32.0	100.0
여자	(596)	23.8	55.8	79.6	18.2	2.2	20.4	100.0
▣ 연령별								
19~29세	(303)	22.8	52.5	75.2	21.8	3.0	24.8	100.0
30대	(312)	21.5	50.6	72.1	24.0	3.8	27.9	100.0
40대	(305)	21.3	50.2	71.5	25.9	2.6	28.5	100.0
50대이상	(280)	24.1	52.4	76.5	21.4	2.2	23.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7.5	58.0	75.6	21.7	2.7	24.4	100.0
고졸	(461)	21.9	52.8	74.7	22.9	2.4	25.3	100.0
대재이상	(634)	23.5	49.3	72.8	23.9	3.3	27.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7.0	34.3	71.3	25.6	3.1	28.7	100.0
자영업	(259)	21.6	40.5	62.1	33.7	4.2	37.9	100.0
블루칼라	(233)	19.7	53.6	73.3	22.7	3.9	26.7	100.0
화이트칼라	(239)	20.9	52.7	73.6	24.3	2.1	26.4	100.0
전업주부	(247)	23.1	62.7	85.8	13.0	1.2	14.2	100.0
학생/무직/기타	(190)	25.1	50.1	75.2	21.6	3.2	24.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25.0	49.3	74.3	22.8	2.9	25.7	100.0
200~299만원	(315)	22.2	49.4	71.6	25.2	3.2	28.4	100.0
300~399만원	(332)	22.8	54.9	77.7	20.5	1.8	22.3	100.0
400만원이상	(347)	20.4	51.0	71.4	24.8	3.7	28.6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66.7	100.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21.0	49.7	70.7	25.6	3.7	29.3	100.0
중부권	(118)	27.5	52.5	80.1	17.4	2.5	19.9	100.0
호남권	(119)	27.7	43.7	71.4	26.9	1.7	28.6	100.0
영남권	(324)	17.5	58.3	75.8	21.7	2.5	24.2	100.0
강원	(36)	47.2	50.0	97.2	2.8	.0	2.8	100.0
제주	(13)	38.5	23.1	61.5	38.5	.0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22.7	51.6	74.3	23.4	2.3	25.7	100.0
중도	(542)	19.6	52.0	71.6	26.1	2.2	28.4	100.0
보수적	(261)	27.6	49.8	77.3	17.3	5.3	22.7	100.0
▣ 종교별								
불교	(279)	26.7	51.0	77.7	19.9	2.5	22.3	100.0
기독교	(282)	27.7	47.9	75.5	22.3	2.1	24.5	100.0
천주교	(87)	25.2	45.9	71.1	23.2	5.7	28.9	100.0
기타	(6)	16.7	66.7	83.3	.0	16.7	16.7	100.0
종교없음	(530)	16.8	54.8	71.6	25.5	2.9	28.4	100.0
모름 / 무응답	(16)	25.0	31.3	56.3	37.5	6.3	43.8	100.0

표22. 북한 핵무기 포기 여부에 대한 견해

문)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다소 동의한다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③+④	잘모름	계
		%	%	%	%	%	%	%	%
■ 전체	(1200)	40.0	42.9	82.8	9.4	6.4	15.8	1.3	100.0
▣ 성별									
남자	(604)	39.8	44.5	84.3	8.3	6.5	14.7	1.0	100.0
여자	(596)	40.2	41.2	81.4	10.5	6.4	16.9	1.7	100.0
▣ 연령별									
19~29세	(303)	34.7	47.2	81.8	10.2	6.3	16.5	1.7	100.0
30대	(312)	38.8	45.8	84.6	8.3	5.8	14.1	1.3	100.0
40대	(305)	43.6	40.0	83.6	8.9	6.2	15.1	1.3	100.0
50대이상	(280)	43.2	37.9	81.1	10.3	7.5	17.8	1.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42.7	30.6	73.4	15.2	9.6	24.7	1.9	100.0
고졸	(461)	42.1	40.2	82.2	9.8	7.2	16.9	.9	100.0
대재이상	(634)	38.0	46.8	84.9	8.2	5.4	13.6	1.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58.8	22.5	81.3	6.2	9.4	15.6	3.1	100.0
자영업	(259)	41.6	42.2	83.8	8.5	6.6	15.1	1.2	100.0
블루칼라	(233)	38.2	45.5	83.7	10.7	5.1	15.9	.4	100.0
화이트칼라	(239)	41.0	45.6	86.6	7.1	5.4	12.5	.8	100.0
전업주부	(247)	41.3	38.4	79.8	10.9	7.3	18.2	2.0	100.0
학생/무직/기타	(190)	33.8	46.2	79.9	10.6	7.4	17.9	2.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41.0	34.9	75.8	10.8	11.4	22.2	2.0	100.0
200~299만원	(315)	41.5	41.4	82.9	10.1	5.1	15.2	1.9	100.0
300~399만원	(332)	46.1	41.9	88.0	7.2	4.2	11.4	.6	100.0
400만원이상	(347)	32.3	50.2	82.4	10.1	6.6	16.7	.9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0	33.3	.0	33.3	33.3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38.8	43.9	82.7	9.8	5.8	15.6	1.7	100.0
중부권	(118)	39.8	48.3	88.1	6.8	5.1	11.9	.0	100.0
호남권	(119)	38.7	27.7	66.4	12.6	18.5	31.1	2.5	100.0
영남권	(324)	40.7	45.7	86.5	9.2	3.4	12.6	.9	100.0
강원	(36)	61.1	30.6	91.7	2.8	5.6	8.3	.0	100.0
제주	(13)	30.8	46.2	76.9	7.7	15.4	23.1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39.3	44.8	84.1	9.3	5.5	14.9	1.0	100.0
중도	(542)	39.1	42.8	82.0	9.7	7.0	16.8	1.3	100.0
보수적	(261)	42.9	39.9	82.7	8.8	6.5	15.3	1.9	100.0
▣ 종교별									
불교	(279)	41.6	41.6	83.2	9.3	6.8	16.1	.7	100.0
기독교	(282)	41.5	41.5	83.0	8.2	6.7	14.9	2.1	100.0
천주교	(87)	41.3	38.1	79.4	10.3	8.0	18.3	2.3	100.0
기타	(6)	50.0	33.3	83.3	.0	16.7	16.7	.0	100.0
종교없음	(530)	38.3	44.5	82.8	10.4	5.7	16.0	1.1	100.0
모름 / 무응답	(16)	31.3	62.5	93.8	.0	6.3	6.3	.0	100.0

표23. 대북지원이 북한 주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 ○○님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약간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9.2	35.6	44.8	39.7	15.5	55.2	100.0
▣ 성별								
남자	(604)	10.9	34.9	45.8	39.3	14.9	54.2	100.0
여자	(596)	7.4	36.4	43.8	40.2	16.0	56.2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1.9	32.7	44.6	39.9	15.5	55.4	100.0
30대	(312)	6.7	31.7	38.5	43.3	18.3	61.5	100.0
40대	(305)	10.5	39.3	49.8	37.7	12.5	50.2	100.0
50대이상	(280)	7.5	39.2	46.7	37.7	15.6	53.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7.6	33.2	40.8	42.3	16.9	59.2	100.0
고졸	(461)	6.9	35.3	42.3	39.8	18.0	57.7	100.0
대재이상	(634)	11.0	36.3	47.3	39.3	13.4	52.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5.6	38.1	53.7	33.9	12.5	46.3	100.0
자영업	(259)	10.0	35.7	45.7	36.2	18.1	54.3	100.0
블루칼라	(233)	8.1	31.3	39.5	46.4	14.2	60.5	100.0
화이트칼라	(239)	8.8	35.1	43.9	42.4	13.8	56.1	100.0
전업주부	(247)	3.6	39.7	43.4	39.7	17.0	56.6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5.8	35.9	51.7	34.0	14.2	48.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7.3	28.3	45.6	33.3	21.1	54.4	100.0
200~299만원	(315)	8.2	31.9	40.1	42.8	17.1	59.9	100.0
300~399만원	(332)	7.8	39.5	47.3	38.0	14.8	52.7	100.0
400만원이상	(347)	6.6	39.5	46.1	42.3	11.6	53.9	100.0
모름 / 무응답	(3)	.0	66.7	66.7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7.5	39.8	47.3	39.0	13.7	52.7	100.0
중부권	(118)	10.2	30.9	41.1	43.6	15.3	58.9	100.0
호남권	(119)	26.1	36.1	62.2	28.6	9.2	37.8	100.0
영남권	(324)	5.6	29.7	35.2	44.8	20.0	64.8	100.0
강원	(36)	8.3	33.3	41.7	33.3	25.0	58.3	100.0
제주	(13)	15.4	38.5	53.8	30.8	15.4	46.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1.3	39.8	51.1	36.0	12.8	48.9	100.0
중도	(542)	8.9	34.8	43.6	42.1	14.2	56.4	100.0
보수적	(261)	6.5	31.1	37.6	40.3	22.1	62.4	100.0
▣ 종교별								
불교	(279)	7.5	34.2	41.7	40.8	17.5	58.3	100.0
기독교	(282)	11.7	34.8	46.5	40.4	13.1	53.5	100.0
천주교	(87)	6.9	41.3	48.2	33.3	18.6	51.8	100.0
기타	(6)	.0	83.3	83.3	16.7	.0	16.7	100.0
종교없음	(530)	9.2	34.8	44.0	40.9	15.0	56.0	100.0
모름 / 무응답	(16)	6.3	56.3	62.5	12.5	25.0	37.5	100.0

표24-1. 현재 대북지원 수준의 적절성

문) ○○님은 현재의 대북 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대폭 늘려야 한다	② 조금 늘려야 한다	①+②	③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④ 조금 줄여야 한다	⑤ 대폭 줄여야 한다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5.7	19.0	24.7	36.4	23.6	15.2	38.9	100.0
▣ 성별									
남자	(604)	8.3	21.7	30.0	31.1	21.6	17.3	38.9	100.0
여자	(596)	3.0	16.3	19.3	41.9	25.7	13.1	38.8	100.0
▣ 연령별									
19~29세	(303)	3.6	16.8	20.5	38.0	24.4	17.2	41.6	100.0
30대	(312)	4.5	17.3	21.8	39.1	24.0	15.1	39.1	100.0
40대	(305)	7.9	21.3	29.2	37.0	20.7	13.1	33.8	100.0
50대이상	(280)	6.9	20.8	27.6	31.2	25.6	15.6	41.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5.7	18.4	24.1	34.6	25.5	15.8	41.3	100.0
고졸	(461)	4.3	17.6	21.9	40.2	23.6	14.3	37.9	100.0
대재이상	(634)	6.7	20.2	26.8	34.0	23.4	15.8	39.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2.5	19.3	31.8	31.2	27.6	9.4	37.0	100.0
자영업	(259)	10.0	16.2	26.2	37.1	22.7	14.0	36.6	100.0
블루칼라	(233)	2.6	20.6	23.2	43.0	21.9	12.0	33.9	100.0
화이트칼라	(239)	6.3	20.9	27.2	29.2	25.1	18.4	43.5	100.0
전업주부	(247)	3.2	16.2	19.5	39.7	25.9	15.0	40.9	100.0
학생/무직/기타	(190)	4.7	22.2	26.9	33.2	21.6	18.2	39.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0.4	16.4	26.8	34.0	20.7	18.5	39.2	100.0
200~299만원	(315)	4.1	19.0	23.1	37.6	24.7	14.6	39.3	100.0
300~399만원	(332)	6.4	17.5	23.9	36.1	23.4	16.6	40.0	100.0
400만원이상	(347)	3.7	21.9	25.6	37.2	24.5	12.7	37.2	100.0
모름 / 무응답	(3)	.0	33.3	33.3	33.3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4.9	19.5	24.4	41.4	21.9	12.4	34.2	100.0
중부권	(118)	6.8	21.2	28.0	31.8	16.9	23.3	40.3	100.0
호남권	(119)	18.5	32.8	51.3	26.9	15.1	6.7	21.8	100.0
영남권	(324)	2.2	13.0	15.2	35.1	31.4	18.3	49.6	100.0
강원	(36)	2.8	11.1	13.9	11.1	38.9	36.1	75.0	100.0
제주	(13)	7.7	23.1	30.8	46.2	7.7	15.4	23.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9.8	26.2	36.0	29.5	20.9	13.6	34.5	100.0
중도	(542)	3.9	16.6	20.5	39.4	25.9	14.1	40.1	100.0
보수적	(261)	3.1	13.0	16.1	40.9	23.0	20.0	43.0	100.0
▣ 종교별									
불교	(279)	5.8	15.5	21.3	35.1	25.4	18.1	43.6	100.0
기독교	(282)	6.7	21.3	28.0	39.0	21.6	11.3	33.0	100.0
천주교	(87)	4.6	19.5	24.1	36.7	25.2	14.0	39.2	100.0
기타	(6)	33.3	50.0	83.3	16.7	.0	.0	.0	100.0
종교없음	(530)	4.7	19.2	24.0	35.5	24.3	16.2	40.5	100.0
모름 / 무응답	(16)	12.5	18.8	31.3	50.0	6.3	12.5	18.8	100.0

표24-2.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하는 이유

문) 현대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지원된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대북지원이 북한정권을 유지시켜 주기때문에	대북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대북지원 때문에 우리 국민의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기타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체	(466)	47.9	21.0	19.8	10.1	1.1	.2	100.0
▣ 성별								
남자	(235)	48.0	24.7	20.1	6.4	.9	.0	100.0
여자	(231)	47.8	17.2	19.4	13.8	1.3	.4	100.0
▣ 연령별								
19~29세	(126)	46.8	21.4	17.5	12.7	1.6	.0	100.0
30대	(122)	47.5	24.6	20.5	7.4	.0	.0	100.0
40대	(103)	52.4	11.7	24.3	11.7	.0	.0	100.0
50대이상	(115)	45.4	24.9	17.5	8.7	2.6	.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43)	42.8	24.8	13.9	11.6	4.6	2.3	100.0
고졸	(175)	49.6	17.2	21.2	12.0	.0	.0	100.0
대재이상	(248)	47.6	22.9	19.8	8.5	1.2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12)	16.9	49.4	16.9	16.9	.0	.0	100.0
자영업	(95)	53.6	16.9	15.8	13.7	.0	.0	100.0
블루칼라	(79)	49.4	11.4	27.8	11.4	.0	.0	100.0
화이트칼라	(104)	47.0	27.8	20.3	3.8	1.0	.0	100.0
전업주부	(101)	53.5	16.7	14.9	11.9	2.0	1.0	100.0
학생/무직/기타	(76)	37.7	27.8	22.5	9.3	2.6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79)	43.5	26.3	16.4	10.1	3.8	.0	100.0
200~299만원	(124)	48.2	17.8	21.1	12.1	.0	.8	100.0
300~399만원	(133)	45.9	19.5	23.3	11.3	.0	.0	100.0
400만원이상	(129)	52.8	22.4	16.3	7.0	1.5	.0	100.0
모름 / 무응답	(1)	.0	.0	100.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202)	50.5	18.8	17.8	10.9	1.5	.5	100.0
중부권	(48)	45.3	25.3	23.2	6.3	.0	.0	100.0
호남권	(26)	50.0	23.1	19.2	.0	7.7	.0	100.0
영남권	(161)	46.6	22.2	22.5	8.7	.0	.0	100.0
강원	(27)	37.0	18.5	14.8	29.6	.0	.0	100.0
제주	(3)	66.7	33.3	.0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137)	48.2	28.5	20.4	2.2	.7	.0	100.0
중도	(217)	50.4	17.4	17.9	13.3	.5	.5	100.0
보수적	(112)	42.8	18.6	22.5	13.4	2.7	.0	100.0
▣ 종교별								
불교	(121)	46.5	19.5	19.1	13.2	.8	.8	100.0
기독교	(93)	59.1	16.1	12.9	11.8	.0	.0	100.0
천주교	(34)	53.2	17.5	20.5	2.9	5.8	.0	100.0
종교없음	(215)	43.6	24.2	22.8	8.4	.9	.0	100.0
모름 / 무응답	(3)	.0	33.3	33.3	33.3	.0	.0	100.0

표25.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도움이 되는 정도

문) ○○님은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도움이 된다	② 약간 도움이 된다	①+②	③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④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11.8	52.8	64.6	31.1	4.3	35.4	100.0
▣ 성별								
남자	(604)	15.3	51.3	66.5	28.3	5.1	33.5	100.0
여자	(596)	8.2	54.4	62.7	33.8	3.5	37.3	100.0
▣ 연령별								
19~29세	(303)	9.9	52.8	62.7	29.4	7.9	37.3	100.0
30대	(312)	12.5	51.3	63.8	33.7	2.6	36.2	100.0
40대	(305)	14.1	52.5	66.6	29.8	3.6	33.4	100.0
50대이상	(280)	10.4	55.0	65.5	31.3	3.2	34.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7.6	48.0	55.6	39.6	4.8	44.4	100.0
고졸	(461)	8.5	54.6	63.1	32.2	4.8	36.9	100.0
대재이상	(634)	14.8	52.4	67.2	28.8	3.9	32.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1	56.1	59.3	31.4	9.4	40.7	100.0
자영업	(259)	17.4	53.0	70.3	27.0	2.7	29.7	100.0
블루칼라	(233)	11.7	52.3	64.0	31.3	4.7	36.0	100.0
화이트칼라	(239)	10.4	54.0	64.4	31.4	4.2	35.6	100.0
전업주부	(247)	6.9	50.1	57.0	38.9	4.1	43.0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3.7	54.9	68.6	25.6	5.8	31.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2.9	55.7	68.6	27.0	4.4	31.4	100.0
200~299만원	(315)	11.2	48.9	60.0	33.3	6.7	40.0	100.0
300~399만원	(332)	9.6	53.7	63.3	33.1	3.6	36.7	100.0
400만원이상	(347)	13.5	54.1	67.7	29.4	2.9	32.3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33.3	66.7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3.1	52.4	65.4	30.8	3.7	34.6	100.0
중부권	(118)	13.6	54.7	68.2	27.5	4.2	31.8	100.0
호남권	(119)	19.3	58.0	77.3	21.0	1.7	22.7	100.0
영남권	(324)	5.6	52.7	58.3	36.5	5.2	41.7	100.0
강원	(36)	8.3	47.2	55.6	27.8	16.7	44.4	100.0
제주	(13)	30.8	30.8	61.5	38.5	.0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7.1	53.4	70.5	24.7	4.8	29.5	100.0
중도	(542)	9.8	51.1	61.0	35.7	3.3	39.0	100.0
보수적	(261)	7.7	55.5	63.2	31.0	5.8	36.8	100.0
▣ 종교별								
불교	(279)	10.4	53.8	64.3	30.7	5.0	35.7	100.0
기독교	(282)	12.1	55.3	67.4	28.7	3.9	32.6	100.0
천주교	(87)	12.6	50.5	63.1	32.3	4.6	36.9	100.0
기타	(6)	50.0	50.0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11.2	51.7	62.9	33.0	4.1	37.1	100.0
모름 / 무응답	(16)	31.3	43.8	75.0	18.8	6.3	25.0	100.0

표26.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만족도

문)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만족	② 다소 만족	①+②	③ 다소 불만족	④ 매우 불만족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2.9	36.6	39.5	49.7	10.8	60.5	100.0
▣ 성별								
남자	(604)	3.5	33.8	37.3	49.6	13.1	62.7	100.0
여자	(596)	2.3	39.4	41.7	49.7	8.6	58.3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7	34.3	36.0	52.5	11.6	64.0	100.0
30대	(312)	4.2	32.7	36.9	51.3	11.9	63.1	100.0
40대	(305)	1.6	37.0	38.7	49.2	12.1	61.3	100.0
50대이상	(280)	4.3	42.9	47.2	45.3	7.5	52.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3.8	42.4	46.3	48.0	5.7	53.7	100.0
고졸	(461)	3.0	38.5	41.5	48.5	10.0	58.5	100.0
대재이상	(634)	2.7	34.3	36.9	50.8	12.3	63.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0	37.6	37.6	49.9	12.5	62.4	100.0
자영업	(259)	4.6	34.9	39.5	44.7	15.8	60.5	100.0
블루칼라	(233)	2.6	35.2	37.7	55.0	7.3	62.3	100.0
화이트칼라	(239)	2.9	35.6	38.5	49.4	12.1	61.5	100.0
전업주부	(247)	2.8	43.0	45.8	47.3	6.9	54.2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6	33.5	35.1	53.3	11.6	64.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4.4	37.4	41.8	47.3	10.9	58.2	100.0
200~299만원	(315)	2.9	37.8	40.6	50.5	8.9	59.4	100.0
300~399만원	(332)	.9	39.4	40.3	48.2	11.4	59.7	100.0
400만원이상	(347)	4.0	32.7	36.7	51.2	12.1	63.3	100.0
모름 / 무응답	(3)	.0	.0	.0	100.0	.0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3.1	35.6	38.6	50.7	10.7	61.4	100.0
중부권	(118)	4.2	33.1	37.3	50.0	12.7	62.7	100.0
호남권	(119)	.0	18.5	18.5	60.5	21.0	81.5	100.0
영남권	(324)	3.4	48.5	51.9	43.8	4.3	48.1	100.0
강원	(36)	.0	22.2	22.2	55.6	22.2	77.8	100.0
제주	(13)	7.7	23.1	30.8	30.8	38.5	69.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2.0	33.4	35.4	48.5	16.1	64.6	100.0
중도	(542)	2.4	35.7	38.1	53.6	8.3	61.9	100.0
보수적	(261)	5.4	43.3	48.7	43.2	8.1	51.3	100.0
▣ 종교별								
불교	(279)	3.2	40.9	44.2	43.3	12.6	55.8	100.0
기독교	(282)	3.5	36.5	40.1	50.4	9.6	59.9	100.0
천주교	(87)	3.4	28.7	32.1	51.8	16.1	67.9	100.0
기타	(6)	.0	16.7	16.7	33.3	50.0	83.3	100.0
종교없음	(530)	2.1	36.2	38.3	52.7	9.1	61.7	100.0
모름 / 무응답	(16)	12.5	25.0	37.5	43.8	18.8	62.5	100.0

표27. 대북정책 결정 시 국민 의견 반영 정도

문) ○○님은 이명박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②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①+②	③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④ 전혀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1.7	26.2	28.0	59.2	12.9	72.0	100.0
▣ 성별								
남자	(604)	3.0	23.8	26.8	57.4	15.8	73.2	100.0
여자	(596)	.5	28.6	29.1	61.0	9.9	70.9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7	22.4	24.1	62.7	13.2	75.9	100.0
30대	(312)	1.3	24.7	26.0	59.9	14.1	74.0	100.0
40대	(305)	1.6	25.9	27.5	61.3	11.1	72.5	100.0
50대이상	(280)	2.5	32.3	34.8	52.2	13.0	65.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3.8	31.9	35.8	51.8	12.4	64.2	100.0
고졸	(461)	1.7	27.7	29.5	59.2	11.3	70.5	100.0
대재이상	(634)	1.4	24.1	25.5	60.4	14.1	74.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1	25.6	28.7	55.7	15.6	71.3	100.0
자영업	(259)	3.1	21.6	24.6	59.8	15.5	75.4	100.0
블루칼라	(233)	1.7	24.9	26.6	60.1	13.3	73.4	100.0
화이트칼라	(239)	1.3	26.3	27.6	59.4	13.0	72.4	100.0
전업주부	(247)	.8	33.6	34.4	56.3	9.3	65.6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6	24.5	26.1	61.2	12.7	73.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3.5	26.9	30.4	56.3	13.3	69.6	100.0
200~299만원	(315)	1.3	24.7	26.0	62.6	11.4	74.0	100.0
300~399만원	(332)	.9	26.2	27.1	58.7	14.2	72.9	100.0
400만원이상	(347)	2.0	26.8	28.8	58.5	12.7	71.2	100.0
모름 / 무응답	(3)	.0	66.7	66.7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2.0	26.4	28.5	58.8	12.7	71.5	100.0
중부권	(118)	.8	21.6	22.5	63.1	14.4	77.5	100.0
호남권	(119)	.8	12.6	13.4	66.4	20.2	86.6	100.0
영남권	(324)	1.9	33.9	35.8	55.1	9.1	64.2	100.0
강원	(36)	.0	13.9	13.9	63.9	22.2	86.1	100.0
제주	(13)	7.7	23.1	30.8	61.5	7.7	69.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8	23.4	25.2	56.2	18.6	74.8	100.0
중도	(542)	1.1	24.4	25.5	63.9	10.6	74.5	100.0
보수적	(261)	3.1	34.1	37.2	54.0	8.8	62.8	100.0
▣ 종교별								
불교	(279)	1.8	31.7	33.5	54.6	11.9	66.5	100.0
기독교	(282)	1.1	30.5	31.6	56.4	12.1	68.4	100.0
천주교	(87)	1.1	19.5	20.6	61.9	17.4	79.4	100.0
기타	(6)	.0	16.7	16.7	33.3	50.0	83.3	100.0
종교없음	(530)	2.3	22.4	24.7	63.0	12.3	75.3	100.0
모름 / 무응답	(16)	.0	18.8	18.8	56.3	25.0	81.3	100.0

표28.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 사항 계승에 대한 견해

문) ○○님은 "지난 정부에서 체결한 남북한 간 합의사항들을 현 정부가 계승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다소 동의한다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④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③+④	잘모름	계
		%	%	%	%	%	%	%	%
■ 전체	(1200)	14.6	47.9	62.6	27.2	5.4	32.6	4.8	100.0
▣ 성별									
남자	(604)	18.6	46.2	64.8	25.2	6.7	31.9	3.3	100.0
여자	(596)	10.6	49.7	60.3	29.2	4.2	33.4	6.4	100.0
▣ 연령별									
19~29세	(303)	8.6	46.5	55.1	31.4	5.3	36.6	8.3	100.0
30대	(312)	17.3	46.8	64.1	26.9	5.8	32.7	3.2	100.0
40대	(305)	17.0	48.5	65.6	25.9	5.6	31.5	3.0	100.0
50대이상	(280)	15.5	50.1	65.6	24.3	5.1	29.4	5.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1.5	51.3	62.7	27.7	2.9	30.6	6.7	100.0
고졸	(461)	13.7	49.1	62.9	26.7	6.3	33.0	4.1	100.0
대재이상	(634)	15.8	46.5	62.3	27.4	5.2	32.6	5.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9.4	47.0	56.3	31.2	6.2	37.4	6.2	100.0
자영업	(259)	19.7	43.6	63.3	24.6	8.6	33.2	3.5	100.0
블루칼라	(233)	16.4	47.6	64.0	26.6	5.1	31.7	4.3	100.0
화이트칼라	(239)	14.7	51.0	65.7	25.6	4.2	29.7	4.6	100.0
전업주부	(247)	12.2	50.1	62.3	29.6	3.6	33.2	4.5	100.0
학생/무직/기타	(190)	9.5	47.8	57.3	29.6	5.3	34.8	7.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7.3	42.7	60.0	24.7	5.9	30.7	9.4	100.0
200~299만원	(315)	13.4	53.6	67.0	23.2	6.0	29.2	3.8	100.0
300~399만원	(332)	14.8	46.9	61.8	29.8	4.2	34.0	4.2	100.0
400만원이상	(347)	14.1	46.9	61.1	30.0	5.8	35.8	3.2	100.0
모름 / 무응답	(3)	.0	33.3	33.3	.0	.0	.0	66.7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4.6	44.4	59.0	29.8	6.3	36.1	4.9	100.0
중부권	(118)	18.6	42.4	61.0	31.4	3.4	34.7	4.2	100.0
호남권	(119)	29.4	38.7	68.1	23.5	3.4	26.9	5.0	100.0
영남권	(324)	8.1	58.7	66.9	23.5	4.4	27.9	5.2	100.0
강원	(36)	8.3	61.1	69.4	16.7	11.1	27.8	2.8	100.0
제주	(13)	23.1	38.5	61.5	23.1	15.4	38.5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21.2	47.6	68.8	21.7	5.5	27.2	4.0	100.0
중도	(542)	11.9	46.6	58.5	28.9	5.9	34.9	6.6	100.0
보수적	(261)	10.4	51.2	61.6	31.9	4.2	36.1	2.3	100.0
▣ 종교별									
불교	(279)	13.7	52.1	65.8	25.2	4.3	29.5	4.7	100.0
기독교	(282)	12.8	48.2	61.0	25.9	7.4	33.3	5.7	100.0
천주교	(87)	17.2	40.1	57.3	29.8	4.8	34.6	8.0	100.0
기타	(6)	66.7	.0	66.7	16.7	.0	16.7	16.7	100.0
종교없음	(530)	14.4	47.9	62.3	29.2	4.9	34.1	3.6	100.0
모름 / 무응답	(16)	37.5	31.3	68.8	6.3	12.5	18.8	12.5	100.0

표29-1.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12.2	37.5	49.7	32.3	15.4	2.7	18.0	100.0
▣ 성별									
남자	(604)	15.4	39.8	55.1	27.7	14.2	3.0	17.2	100.0
여자	(596)	8.9	35.3	44.2	36.9	16.6	2.3	18.9	100.0
▣ 연령별									
19~29세	(303)	7.9	31.0	38.9	42.6	14.2	4.3	18.5	100.0
30대	(312)	9.6	40.4	50.0	34.0	13.1	2.9	16.0	100.0
40대	(305)	16.4	37.4	53.8	27.2	17.7	1.3	19.0	100.0
50대이상	(280)	15.0	41.6	56.6	24.7	16.6	2.1	18.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1.5	43.1	54.6	31.5	13.9	.0	13.9	100.0
고졸	(461)	12.1	36.9	49.0	30.0	17.7	3.3	21.0	100.0
대재이상	(634)	12.3	37.1	49.4	34.0	13.9	2.7	16.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28.1	18.9	47.0	34.3	18.7	.0	18.7	100.0
자영업	(259)	17.0	40.2	57.2	22.8	16.1	3.9	20.0	100.0
블루칼라	(233)	11.6	36.5	48.1	32.2	17.2	2.6	19.7	100.0
화이트칼라	(239)	11.3	42.3	53.6	32.6	12.6	1.3	13.9	100.0
전업주부	(247)	8.1	37.6	45.7	35.7	16.6	2.0	18.6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0.0	32.2	42.2	40.1	13.5	4.2	17.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6.3	33.5	49.8	31.1	16.6	2.5	19.0	100.0
200~299만원	(315)	10.1	39.5	49.6	32.6	14.2	3.5	17.7	100.0
300~399만원	(332)	9.9	36.2	46.1	35.8	16.3	1.8	18.1	100.0
400만원이상	(347)	13.5	39.5	53.0	29.1	15.0	2.9	17.9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33.3	66.7	33.3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4.4	39.3	53.7	29.7	14.1	2.5	16.6	100.0
중부권	(118)	11.0	26.7	37.7	38.1	19.9	4.2	24.2	100.0
호남권	(119)	31.1	31.1	62.2	26.1	9.2	2.5	11.8	100.0
영남권	(324)	2.5	41.0	43.5	35.6	19.1	1.9	21.0	100.0
강원	(36)	5.6	36.1	41.7	47.2	5.6	5.6	11.1	100.0
제주	(13)	7.7	30.8	38.5	30.8	23.1	7.7	30.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9.1	41.1	60.2	26.4	11.8	1.5	13.4	100.0
중도	(542)	7.9	35.4	43.3	36.5	17.4	2.8	20.1	100.0
보수적	(261)	10.4	36.6	47.0	32.2	16.6	4.2	20.8	100.0
▣ 종교별									
불교	(279)	11.1	38.4	49.5	34.4	14.2	1.8	16.0	100.0
기독교	(282)	10.6	44.3	55.0	30.5	12.1	2.5	14.5	100.0
천주교	(87)	16.1	36.7	52.8	28.9	13.8	4.6	18.3	100.0
기타	(6)	66.7	.0	66.7	16.7	16.7	.0	16.7	100.0
종교없음	(530)	11.7	34.4	46.1	33.0	18.1	2.8	20.9	100.0
모름 / 무응답	(16)	31.3	25.0	56.3	25.0	12.5	6.3	18.8	100.0

표29-2.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16.8	43.3	60.1	26.8	9.9	3.2	13.1	100.0
▣ 성별									
남자	(604)	19.2	41.8	61.1	25.0	9.3	4.6	13.9	100.0
여자	(596)	14.4	44.7	59.1	28.5	10.5	1.8	12.4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3.9	48.8	62.7	25.4	8.3	3.6	11.9	100.0
30대	(312)	16.7	38.8	55.4	33.0	9.3	2.2	11.5	100.0
40대	(305)	18.7	42.3	61.0	26.6	8.9	3.6	12.5	100.0
50대이상	(280)	18.2	43.3	61.5	21.4	13.4	3.6	17.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5.3	42.6	57.9	23.4	16.8	1.9	18.7	100.0
고졸	(461)	16.0	42.0	58.0	26.4	11.0	4.6	15.6	100.0
대재이상	(634)	17.7	44.3	62.0	27.6	7.9	2.5	10.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1.2	28.1	59.3	9.4	25.1	6.2	31.4	100.0
자영업	(259)	21.9	42.2	64.1	23.1	9.7	3.1	12.8	100.0
블루칼라	(233)	15.4	40.4	55.8	30.4	10.3	3.4	13.7	100.0
화이트칼라	(239)	16.0	43.4	59.4	30.6	7.1	2.9	10.0	100.0
전업주부	(247)	12.2	42.4	54.6	30.8	12.6	2.0	14.6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6.4	51.7	68.1	20.1	7.1	4.7	11.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8.3	40.8	59.1	23.2	12.7	4.9	17.6	100.0
200~299만원	(315)	14.2	40.3	54.5	29.0	12.3	4.1	16.4	100.0
300~399만원	(332)	19.3	40.4	59.7	28.0	9.9	2.4	12.3	100.0
400만원이상	(347)	15.8	50.3	66.1	25.5	6.1	2.3	8.4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33.3	66.7	33.3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6.4	46.9	63.4	26.8	7.6	2.2	9.8	100.0
중부권	(118)	19.5	34.3	53.8	28.8	12.3	5.1	17.4	100.0
호남권	(119)	37.8	43.7	81.5	11.8	5.9	.8	6.7	100.0
영남권	(324)	8.7	40.1	48.7	30.9	15.2	5.2	20.4	100.0
강원	(36)	19.4	38.9	58.3	30.6	5.6	5.6	11.1	100.0
제주	(13)	15.4	46.2	61.5	30.8	7.7	.0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24.7	43.7	68.4	21.3	7.6	2.8	10.3	100.0
중도	(542)	12.4	43.3	55.7	30.1	10.8	3.3	14.2	100.0
보수적	(261)	14.1	42.5	56.6	28.1	11.5	3.8	15.3	100.0
▣ 종교별									
불교	(279)	16.6	38.1	54.7	30.8	11.0	3.6	14.6	100.0
기독교	(282)	16.7	48.6	65.2	22.7	8.9	3.2	12.1	100.0
천주교	(87)	17.2	42.4	59.6	25.2	9.4	5.7	15.1	100.0
기타	(6)	66.7	16.7	83.3	16.7	.0	.0	.0	100.0
종교없음	(530)	15.8	44.2	60.0	27.4	10.0	2.6	12.6	100.0
모름 / 무응답	(16)	37.5	25.0	62.5	18.8	12.5	6.3	18.8	100.0

표29-3.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17.6	28.8	46.4	32.5	17.0	4.2	21.1	100.0
▣ 성별									
남자	(604)	18.9	24.6	43.5	32.7	19.0	4.8	23.8	100.0
여자	(596)	16.3	33.0	49.3	32.4	14.9	3.5	18.4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6.8	25.4	42.2	40.3	14.5	3.0	17.5	100.0
30대	(312)	16.7	31.4	48.1	32.7	15.4	3.8	19.2	100.0
40대	(305)	17.0	26.6	43.6	31.1	19.3	5.9	25.2	100.0
50대이상	(280)	20.0	31.9	51.9	25.5	18.7	3.9	22.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21.0	34.5	55.5	22.0	20.8	1.8	22.5	100.0
고졸	(461)	19.5	31.2	50.7	28.8	17.0	3.5	20.5	100.0
대재이상	(634)	15.6	26.1	41.7	37.0	16.3	5.0	21.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8.7	38.1	56.8	15.6	21.8	5.8	27.6	100.0
자영업	(259)	22.4	26.7	49.0	25.9	17.8	7.3	25.1	100.0
블루칼라	(233)	18.4	31.3	49.7	31.8	15.9	2.6	18.4	100.0
화이트칼라	(239)	15.5	27.6	43.0	35.2	17.2	4.6	21.8	100.0
전업주부	(247)	15.8	34.0	49.9	31.6	15.3	3.2	18.5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4.8	21.6	36.4	43.3	18.2	2.1	20.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23.2	27.7	50.9	25.7	18.4	4.9	23.3	100.0
200~299만원	(315)	13.6	31.3	44.9	34.0	17.6	3.5	21.1	100.0
300~399만원	(332)	16.6	28.6	45.2	34.3	16.3	4.2	20.5	100.0
400만원이상	(347)	18.7	27.5	46.2	33.5	16.0	4.3	20.3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0	33.3	33.3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9.0	29.5	48.5	31.9	15.6	4.1	19.7	100.0
중부권	(118)	22.9	22.5	45.3	24.6	25.0	5.1	30.1	100.0
호남권	(119)	16.0	21.8	37.8	28.6	24.4	9.2	33.6	100.0
영남권	(324)	13.0	33.0	45.9	37.8	14.2	2.1	16.3	100.0
강원	(36)	22.2	25.0	47.2	41.7	5.6	5.6	11.1	100.0
제주	(13)	23.1	23.1	46.2	15.4	38.5	.0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3.1	32.4	45.5	27.7	18.5	8.3	26.8	100.0
중도	(542)	18.1	27.1	45.2	35.5	17.5	1.8	19.4	100.0
보수적	(261)	23.4	26.8	50.2	33.8	13.4	2.6	16.0	100.0
▣ 종교별									
불교	(279)	21.2	24.2	45.4	36.0	13.7	5.0	18.6	100.0
기독교	(282)	17.4	26.6	44.0	34.0	17.7	4.3	22.0	100.0
천주교	(87)	14.9	39.0	53.9	25.5	16.1	4.6	20.6	100.0
기타	(6)	16.7	.0	16.7	.0	33.3	50.0	83.3	100.0
종교없음	(530)	16.6	31.4	48.0	31.7	17.4	2.8	20.3	100.0
모름 / 무응답	(16)	6.3	12.5	18.8	25.0	43.8	12.5	56.3	100.0

표29-4.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 대북 삐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 대북 삐라 살포를 정부가 막아야 한다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15.4	28.7	44.1	38.3	13.4	4.3	17.6	100.0
▣ 성별									
남자	(604)	15.9	28.4	44.3	36.2	14.3	5.2	19.5	100.0
여자	(596)	14.9	29.0	44.0	40.3	12.4	3.3	15.7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1.9	29.0	40.9	42.6	11.9	4.6	16.5	100.0
30대	(312)	15.7	29.2	44.9	39.1	12.5	3.5	16.0	100.0
40대	(305)	17.4	25.9	43.3	35.1	16.7	4.9	21.6	100.0
50대이상	(280)	16.8	30.9	47.7	36.1	12.3	3.9	16.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2.4	31.1	43.5	37.3	14.5	4.6	19.2	100.0
고졸	(461)	13.4	29.2	42.6	39.0	14.5	3.9	18.4	100.0
대재이상	(634)	17.3	28.0	45.3	37.9	12.3	4.4	16.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8.7	31.2	49.9	31.2	10.0	8.9	18.9	100.0
자영업	(259)	19.7	25.9	45.5	38.6	10.0	5.8	15.8	100.0
블루칼라	(233)	12.9	27.4	40.3	38.7	15.9	5.1	21.0	100.0
화이트칼라	(239)	16.7	30.5	47.2	35.1	13.9	3.8	17.7	100.0
전업주부	(247)	12.6	31.2	43.8	39.2	14.2	2.8	17.0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4.2	28.2	42.5	41.2	13.7	2.6	16.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7.3	26.0	43.3	39.3	11.0	6.4	17.4	100.0
200~299만원	(315)	11.4	28.8	40.3	41.3	15.3	3.2	18.4	100.0
300~399만원	(332)	14.5	26.2	40.7	38.8	17.2	3.3	20.5	100.0
400만원이상	(347)	18.7	32.8	51.6	34.0	9.5	4.9	14.4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0	33.3	66.7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20.0	27.8	47.8	36.4	10.8	4.9	15.8	100.0
중부권	(118)	16.1	30.9	47.0	28.4	18.6	5.9	24.6	100.0
호남권	(119)	26.1	27.7	53.8	32.8	9.2	4.2	13.4	100.0
영남권	(324)	3.1	30.6	33.6	46.2	18.0	2.2	20.2	100.0
강원	(36)	11.1	30.6	41.7	44.4	8.3	5.6	13.9	100.0
제주	(13)	23.1	7.7	30.8	46.2	15.4	7.7	23.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20.2	28.2	48.4	34.8	12.3	4.5	16.9	100.0
중도	(542)	13.6	28.3	41.9	42.1	12.8	3.2	15.9	100.0
보수적	(261)	11.9	30.3	42.2	35.5	16.2	6.1	22.3	100.0
▣ 종교별									
불교	(279)	17.9	27.1	45.0	38.7	12.7	3.6	16.3	100.0
기독교	(282)	14.5	25.5	40.1	43.6	11.0	5.3	16.3	100.0
천주교	(87)	16.1	37.8	53.9	26.6	13.8	5.7	19.5	100.0
기타	(6)	33.3	33.3	66.7	16.7	16.7	.0	16.7	100.0
종교없음	(530)	14.0	30.4	44.3	37.6	14.7	3.4	18.1	100.0
모름 / 무응답	(16)	25.0	6.3	31.3	31.3	18.8	18.8	37.5	100.0

표29-5.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24.0	45.5	69.5	24.4	5.2	.9	6.1	100.0
▣ 성별									
남자	(604)	26.5	42.2	68.7	24.7	5.3	1.3	6.6	100.0
여자	(596)	21.5	48.8	70.2	24.1	5.2	.5	5.7	100.0
▣ 연령별									
19~29세	(303)	21.8	46.5	68.3	24.8	5.3	1.7	6.9	100.0
30대	(312)	22.8	43.9	66.7	27.6	5.1	.6	5.8	100.0
40대	(305)	27.2	43.3	70.5	24.3	4.9	.3	5.2	100.0
50대이상	(280)	24.3	48.4	72.7	20.6	5.6	1.1	6.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20.9	51.8	72.7	21.7	4.6	1.0	5.6	100.0
고졸	(461)	23.0	43.1	66.1	27.5	5.6	.9	6.5	100.0
대재이상	(634)	25.3	46.1	71.4	22.6	5.0	.9	6.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5.6	49.9	65.5	22.5	8.9	3.1	12.0	100.0
자영업	(259)	30.9	41.8	72.7	20.0	5.7	1.5	7.3	100.0
블루칼라	(233)	23.2	48.5	71.7	24.0	2.6	1.7	4.3	100.0
화이트칼라	(239)	25.1	38.4	63.6	29.3	6.3	.8	7.1	100.0
전업주부	(247)	16.6	50.2	66.8	26.3	6.9	.0	6.9	100.0
학생/무직/기타	(190)	25.3	48.5	73.9	22.4	3.7	.0	3.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28.6	39.9	68.5	25.6	4.4	1.5	5.9	100.0
200~299만원	(315)	16.8	48.4	65.2	27.6	5.7	1.6	7.2	100.0
300~399만원	(332)	25.7	43.7	69.3	24.1	6.6	.0	6.6	100.0
400만원이상	(347)	26.2	48.1	74.3	20.8	4.0	.9	4.9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0	33.3	66.7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28.8	46.1	74.9	20.0	3.9	1.2	5.1	100.0
중부권	(118)	30.5	46.2	76.7	18.2	4.2	.8	5.1	100.0
호남권	(119)	32.8	38.7	71.4	23.5	3.4	1.7	5.0	100.0
영남권	(324)	8.4	47.2	55.5	34.7	9.5	.3	9.8	100.0
강원	(36)	27.8	38.9	66.7	33.3	.0	.0	.0	100.0
제주	(13)	46.2	46.2	92.3	7.7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27.7	44.6	72.3	21.7	4.8	1.3	6.0	100.0
중도	(542)	21.2	47.1	68.4	25.8	5.5	.4	5.9	100.0
보수적	(261)	24.1	43.3	67.4	25.7	5.3	1.5	6.9	100.0
▣ 종교별									
불교	(279)	23.4	43.7	67.1	28.0	4.3	.7	5.0	100.0
기독교	(282)	25.5	44.0	69.5	24.5	5.3	.7	6.0	100.0
천주교	(87)	32.1	47.0	79.1	16.3	3.4	1.1	4.6	100.0
기타	(6)	83.3	.0	83.3	.0	16.7	.0	16.7	100.0
종교없음	(530)	21.1	48.2	69.3	23.9	5.8	.9	6.8	100.0
모름 / 무응답	(16)	37.5	18.8	56.3	31.3	6.3	6.3	12.5	100.0

표29-6. 대북 문제 관련 주장 찬반 의견 – ㉳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문)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사례수	① 매우 찬성	② 다소 찬성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다소 반대	⑤ 매우 반대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19.8	42.7	62.6	28.5	6.8	2.2	8.9	100.0
▣ 성별									
남자	(604)	22.2	38.6	60.9	28.8	6.8	3.5	10.3	100.0
여자	(596)	17.4	46.9	64.3	28.1	6.7	.8	7.6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7.8	43.9	61.7	28.7	7.3	2.3	9.6	100.0
30대	(312)	19.6	42.0	61.5	32.4	3.8	2.2	6.1	100.0
40대	(305)	22.3	39.7	62.0	25.9	9.2	3.0	12.1	100.0
50대이상	(280)	19.7	45.6	65.3	26.8	6.9	1.1	7.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20.1	47.6	67.6	26.6	5.7	.0	5.7	100.0
고졸	(461)	21.1	41.5	62.5	29.5	6.9	1.1	8.0	100.0
대재이상	(634)	18.9	42.8	61.8	28.1	6.8	3.3	10.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5.6	56.3	71.9	25.0	.0	3.1	3.1	100.0
자영업	(259)	30.9	37.1	67.9	21.6	7.3	3.1	10.4	100.0
블루칼라	(233)	17.7	41.6	59.3	29.6	8.6	2.6	11.1	100.0
화이트칼라	(239)	16.3	45.6	61.9	30.1	4.7	3.3	8.0	100.0
전업주부	(247)	16.6	44.9	61.6	31.6	6.5	.4	6.9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6.9	43.0	59.9	31.1	7.9	1.1	9.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24.2	36.3	60.5	30.6	5.4	3.5	8.9	100.0
200~299만원	(315)	16.5	45.4	61.9	29.8	6.4	1.9	8.3	100.0
300~399만원	(332)	19.0	41.3	60.2	28.3	10.2	1.2	11.4	100.0
400만원이상	(347)	21.0	45.8	66.8	26.0	4.6	2.6	7.2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0	33.3	66.7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23.7	42.4	66.1	24.6	6.1	3.2	9.3	100.0
중부권	(118)	20.3	34.7	55.1	31.4	11.9	1.7	13.6	100.0
호남권	(119)	23.5	37.0	60.5	28.6	8.4	2.5	10.9	100.0
영남권	(324)	10.9	49.0	59.8	33.9	5.6	.6	6.2	100.0
강원	(36)	11.1	44.4	55.6	38.9	5.6	.0	5.6	100.0
제주	(13)	53.8	23.1	76.9	15.4	7.7	.0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9.9	41.1	61.0	26.7	7.6	4.8	12.3	100.0
중도	(542)	19.2	43.3	62.5	30.1	6.6	.7	7.4	100.0
보수적	(261)	21.1	44.0	65.1	27.9	5.8	1.2	7.0	100.0
▣ 종교별									
불교	(279)	22.2	42.9	65.1	27.3	5.8	1.8	7.6	100.0
기독교	(282)	19.1	45.4	64.5	27.0	6.7	1.8	8.5	100.0
천주교	(87)	27.5	36.7	64.2	30.0	3.4	2.3	5.7	100.0
기타	(6)	33.3	16.7	50.0	16.7	.0	33.3	33.3	100.0
종교없음	(530)	17.6	42.9	60.4	29.6	8.1	1.9	10.0	100.0
모름 / 무응답	(16)	18.8	31.3	50.0	37.5	.0	12.5	12.5	100.0

표30-1.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북한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북한의 책임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62.6	27.0	89.6	9.0	1.1	.3	1.4	100.0
▣ 성별									
남자	(604)	63.0	26.4	89.4	9.3	.8	.5	1.3	100.0
여자	(596)	62.3	27.5	89.8	8.7	1.3	.2	1.5	100.0
▣ 연령별									
19~29세	(303)	60.1	25.7	85.8	12.5	1.0	.7	1.7	100.0
30대	(312)	59.9	29.8	89.7	9.0	1.3	.0	1.3	100.0
40대	(305)	65.2	25.6	90.8	7.9	1.0	.3	1.3	100.0
50대이상	(280)	65.6	26.6	92.2	6.4	1.1	.4	1.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66.2	29.0	95.2	4.8	.0	.0	.0	100.0
고졸	(461)	63.5	26.3	89.8	8.2	1.5	.4	2.0	100.0
대재이상	(634)	61.4	27.1	88.5	10.3	.9	.3	1.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56.3	34.3	90.6	3.1	3.1	3.1	6.2	100.0
자영업	(259)	65.8	21.5	87.3	11.9	.8	.0	.8	100.0
블루칼라	(233)	65.7	24.9	90.6	8.1	.9	.4	1.3	100.0
화이트칼라	(239)	59.1	30.9	90.0	7.9	1.3	.8	2.1	100.0
전업주부	(247)	64.0	28.3	92.3	6.5	1.2	.0	1.2	100.0
학생/무직/기타	(190)	58.3	29.0	87.3	11.6	1.1	.0	1.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66.9	21.2	88.1	8.9	2.5	.5	3.0	100.0
200~299만원	(315)	58.0	29.3	87.4	11.7	.6	.3	1.0	100.0
300~399만원	(332)	62.1	28.9	91.0	8.1	.9	.0	.9	100.0
400만원이상	(347)	64.5	26.6	91.1	7.5	.9	.6	1.4	100.0
모름 / 무응답	(3)	100.0	.0	100.0	.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65.8	24.7	90.5	8.5	.7	.3	1.0	100.0
중부권	(118)	62.3	28.4	90.7	9.3	.0	.0	.0	100.0
호남권	(119)	50.4	29.4	79.8	16.0	3.4	.8	4.2	100.0
영남권	(324)	61.1	30.6	91.7	6.4	1.5	.3	1.9	100.0
강원	(36)	61.1	22.2	83.3	16.7	.0	.0	.0	100.0
제주	(13)	76.9	15.4	92.3	7.7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60.5	28.7	89.2	8.8	1.3	.8	2.0	100.0
중도	(542)	62.3	26.5	88.8	10.1	1.1	.0	1.1	100.0
보수적	(261)	66.7	25.3	92.0	6.9	.8	.4	1.2	100.0
▣ 종교별									
불교	(279)	65.6	25.8	91.4	7.2	.7	.7	1.4	100.0
기독교	(282)	66.7	22.0	88.7	10.3	.4	.7	1.1	100.0
천주교	(87)	52.8	36.9	89.7	9.2	1.1	.0	1.1	100.0
기타	(6)	66.7	16.7	83.3	16.7	.0	.0	.0	100.0
종교없음	(530)	61.1	28.6	89.7	8.8	1.5	.0	1.5	100.0
모름 / 무응답	(16)	43.8	31.3	75.0	18.8	6.3	.0	6.3	100.0

표30-2.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한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한국의 책임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14.3	39.8	54.2	32.5	10.0	3.4	13.4	100.0
▣ 성별									
남자	(604)	15.4	42.0	57.4	30.0	9.1	3.6	12.7	100.0
여자	(596)	13.3	37.7	50.9	35.0	10.9	3.2	14.1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4.9	38.0	52.8	35.0	8.6	3.6	12.2	100.0
30대	(312)	14.7	38.8	53.5	34.9	9.0	2.6	11.5	100.0
40대	(305)	14.4	45.2	59.7	29.2	8.9	2.3	11.1	100.0
50대이상	(280)	13.2	37.2	50.4	30.5	13.9	5.2	19.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2.4	36.2	48.7	30.4	17.5	3.3	20.9	100.0
고졸	(461)	11.1	41.9	52.9	32.0	10.5	4.6	15.1	100.0
대재이상	(634)	17.0	39.0	56.0	33.1	8.4	2.5	10.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5.6	22.5	38.1	34.3	15.2	12.5	27.6	100.0
자영업	(259)	16.2	39.3	55.5	29.9	9.3	5.4	14.7	100.0
블루칼라	(233)	15.4	47.7	63.1	23.6	12.0	1.3	13.3	100.0
화이트칼라	(239)	14.6	40.2	54.8	35.6	5.8	3.8	9.6	100.0
전업주부	(247)	10.5	36.0	46.6	40.1	12.6	.8	13.4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4.8	38.5	53.3	32.7	9.5	4.5	14.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8.3	37.5	55.8	25.6	12.4	6.2	18.5	100.0
200~299만원	(315)	9.2	38.4	47.6	39.9	9.7	2.9	12.5	100.0
300~399만원	(332)	12.6	40.1	52.8	33.1	11.4	2.7	14.1	100.0
400만원이상	(347)	18.4	41.8	60.2	29.3	7.6	2.9	10.5	100.0
모름 / 무응답	(3)	.0	100.0	100.0	.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8.3	41.2	59.5	29.0	8.3	3.2	11.5	100.0
중부권	(118)	12.7	40.7	53.4	28.4	9.3	8.9	18.2	100.0
호남권	(119)	23.5	40.3	63.9	31.9	2.5	1.7	4.2	100.0
영남권	(324)	3.7	37.4	41.1	40.1	16.6	2.2	18.8	100.0
강원	(36)	16.7	38.9	55.6	36.1	2.8	5.6	8.3	100.0
제주	(13)	23.1	30.8	53.8	30.8	15.4	.0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8.1	42.3	60.5	26.3	10.2	3.0	13.2	100.0
중도	(542)	12.7	37.9	50.6	36.5	9.3	3.6	12.9	100.0
보수적	(261)	11.9	40.2	52.1	33.4	11.1	3.5	14.5	100.0
▣ 종교별									
불교	(279)	15.1	33.1	48.2	34.3	13.8	3.8	17.5	100.0
기독교	(282)	16.7	41.8	58.5	28.7	8.5	4.3	12.8	100.0
천주교	(87)	16.1	37.8	53.9	33.5	6.9	5.7	12.6	100.0
기타	(6)	66.7	16.7	83.3	.0	.0	16.7	16.7	100.0
종교없음	(530)	11.7	43.4	55.1	33.5	9.3	2.1	11.4	100.0
모름 / 무응답	(16)	18.8	25.0	43.8	37.5	12.5	6.3	18.8	100.0

표30-3.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미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국의 책임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15.8	40.7	56.5	34.4	7.7	1.4	9.1	100.0
▣ 성별									
남자	(604)	18.2	40.1	58.3	31.4	8.3	1.9	10.2	100.0
여자	(596)	13.4	41.2	54.6	37.4	7.2	.8	8.0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2.2	41.9	54.1	34.0	9.9	2.0	11.9	100.0
30대	(312)	19.9	37.2	57.1	36.9	5.1	1.0	6.1	100.0
40대	(305)	15.4	44.3	59.7	33.8	5.9	.7	6.6	100.0
50대이상	(280)	15.7	39.2	54.9	32.8	10.3	2.0	12.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5.3	48.0	63.3	26.8	8.5	1.4	9.9	100.0
고졸	(461)	15.1	37.7	52.8	38.3	7.6	1.3	8.9	100.0
대재이상	(634)	16.4	41.6	58.0	32.8	7.8	1.4	9.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8.7	43.9	62.6	28.1	6.2	3.1	9.4	100.0
자영업	(259)	17.3	38.9	56.2	35.0	7.3	1.5	8.8	100.0
블루칼라	(233)	18.0	42.9	60.9	33.5	5.1	.4	5.6	100.0
화이트칼라	(239)	18.8	39.8	58.6	32.6	7.2	1.7	8.9	100.0
전업주부	(247)	12.2	40.5	52.6	38.1	8.9	.4	9.3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1.6	41.2	52.8	33.2	11.1	2.9	14.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8.3	37.0	55.3	32.1	9.3	3.2	12.5	100.0
200~299만원	(315)	12.0	44.2	56.2	33.7	8.9	1.3	10.2	100.0
300~399만원	(332)	19.3	36.5	55.7	37.0	6.6	.6	7.2	100.0
400만원이상	(347)	14.1	43.6	57.7	34.2	6.9	1.2	8.1	100.0
모름 / 무응답	(3)	66.7	33.3	100.0	.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8.1	39.3	57.5	35.3	5.6	1.7	7.3	100.0
중부권	(118)	21.2	37.3	58.5	26.7	11.0	3.8	14.8	100.0
호남권	(119)	23.5	43.7	67.2	29.4	3.4	.0	3.4	100.0
영남권	(324)	6.7	42.5	49.3	37.5	12.9	.3	13.2	100.0
강원	(36)	16.7	47.2	63.9	30.6	2.8	2.8	5.6	100.0
제주	(13)	15.4	38.5	53.8	46.2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20.9	42.7	63.6	27.8	7.3	1.3	8.6	100.0
중도	(542)	12.4	39.4	51.8	39.7	7.1	1.4	8.5	100.0
보수적	(261)	15.3	40.1	55.4	33.4	9.7	1.5	11.2	100.0
▣ 종교별									
불교	(279)	15.1	39.0	54.0	34.3	9.4	2.3	11.7	100.0
기독교	(282)	16.0	40.1	56.0	35.1	7.4	1.4	8.9	100.0
천주교	(87)	27.5	39.0	66.5	28.9	3.4	1.1	4.6	100.0
기타	(6)	33.3	33.3	66.7	16.7	.0	16.7	16.7	100.0
종교없음	(530)	13.9	42.3	56.2	35.1	8.1	.6	8.7	100.0
모름 / 무응답	(16)	18.8	37.5	56.3	37.5	.0	6.3	6.3	100.0

표30-4.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중국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국의 책임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20.8	38.6	59.4	32.4	6.7	1.5	8.2	100.0
▣ 성별									
남자	(604)	24.2	36.9	61.1	31.6	5.8	1.5	7.3	100.0
여자	(596)	17.4	40.3	57.8	33.2	7.5	1.5	9.0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7.2	38.3	55.4	35.6	7.6	1.3	8.9	100.0
30대	(312)	21.2	38.5	59.6	34.6	4.5	1.3	5.8	100.0
40대	(305)	23.6	38.7	62.3	30.8	5.6	1.3	6.9	100.0
50대이상	(280)	21.4	39.0	60.5	28.1	9.3	2.1	11.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4.3	43.7	58.1	26.8	12.3	2.9	15.2	100.0
고졸	(461)	20.8	38.2	58.9	33.7	6.0	1.3	7.3	100.0
대재이상	(634)	22.0	38.1	60.0	32.4	6.2	1.4	7.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8.7	47.0	65.7	18.7	9.4	6.2	15.6	100.0
자영업	(259)	24.6	37.3	62.0	31.9	4.2	1.9	6.1	100.0
블루칼라	(233)	21.9	40.8	62.7	33.0	3.4	.9	4.3	100.0
화이트칼라	(239)	25.6	35.5	61.1	29.7	8.0	1.3	9.3	100.0
전업주부	(247)	13.4	42.5	55.9	32.4	10.5	1.2	11.7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8.5	35.1	53.6	38.0	6.9	1.6	8.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20.3	38.8	59.0	29.7	7.8	3.5	11.3	100.0
200~299만원	(315)	19.0	36.3	55.3	35.2	8.9	.6	9.5	100.0
300~399만원	(332)	20.2	37.3	57.5	34.0	7.2	1.2	8.4	100.0
400만원이상	(347)	23.6	41.6	65.2	29.9	3.5	1.4	4.9	100.0
모름 / 무응답	(3)	.0	66.7	66.7	33.3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22.0	39.2	61.2	32.5	4.4	1.9	6.3	100.0
중부권	(118)	28.8	38.6	67.4	22.5	9.3	.8	10.2	100.0
호남권	(119)	21.8	39.5	61.3	29.4	6.7	2.5	9.2	100.0
영남권	(324)	14.2	37.6	51.8	37.4	10.2	.6	10.8	100.0
강원	(36)	30.6	38.9	69.4	27.8	2.8	.0	2.8	100.0
제주	(13)	23.1	30.8	53.8	30.8	7.7	7.7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24.7	37.7	62.3	29.3	6.5	1.8	8.3	100.0
중도	(542)	17.2	40.6	57.8	34.5	6.4	1.3	7.7	100.0
보수적	(261)	22.6	35.9	58.5	32.6	7.4	1.5	8.9	100.0
▣ 종교별									
불교	(279)	20.9	35.9	56.7	32.5	8.3	2.5	10.8	100.0
기독교	(282)	19.9	40.4	60.3	31.9	5.7	2.1	7.8	100.0
천주교	(87)	25.2	45.9	71.1	25.5	3.4	.0	3.4	100.0
기타	(6)	33.3	16.7	50.0	5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20.2	38.0	58.2	34.0	7.0	.9	7.9	100.0
모름 / 무응답	(16)	31.3	43.8	75.0	18.8	6.3	.0	6.3	100.0

표30-5. 각국별 최근 남북 관계 악화의 책임 정도 – ㉤ 일본의 책임

문)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본의 책임

	사례수	① 아주 크다	② 조금 크다	①+②	③ 중간	④ 별로 크지 않다	⑤ 거의 없다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8.7	29.7	38.4	46.2	12.2	3.2	15.3	100.0
▣ 성별									
남자	(604)	11.2	28.4	39.6	43.4	12.9	4.1	17.1	100.0
여자	(596)	6.2	31.1	37.3	49.1	11.4	2.2	13.5	100.0
▣ 연령별									
19~29세	(303)	6.3	30.4	36.6	47.9	10.9	4.6	15.5	100.0
30대	(312)	9.9	30.1	40.1	46.2	11.9	1.9	13.8	100.0
40대	(305)	10.2	29.2	39.3	46.2	10.8	3.6	14.4	100.0
50대이상	(280)	8.4	29.2	37.6	44.6	15.3	2.5	17.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7.6	34.8	42.4	37.6	18.0	1.9	19.9	100.0
고졸	(461)	8.2	28.0	36.3	50.1	12.1	1.5	13.6	100.0
대재이상	(634)	9.2	30.2	39.4	44.8	11.2	4.6	15.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9.4	25.6	34.9	46.3	15.6	3.1	18.7	100.0
자영업	(259)	12.2	29.7	41.9	41.6	11.9	4.6	16.5	100.0
블루칼라	(233)	11.1	30.0	41.2	46.4	10.7	1.7	12.4	100.0
화이트칼라	(239)	9.6	28.5	38.1	45.9	13.5	2.5	16.0	100.0
전업주부	(247)	4.5	30.7	35.2	51.1	12.1	1.6	13.7	100.0
학생/무직/기타	(190)	5.3	30.3	35.6	46.4	12.1	5.8	17.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8.4	31.4	39.8	47.0	9.8	3.5	13.3	100.0
200~299만원	(315)	8.2	25.6	33.8	50.6	13.3	2.2	15.6	100.0
300~399만원	(332)	8.7	30.5	39.2	45.7	11.4	3.6	15.1	100.0
400만원이상	(347)	9.4	31.8	41.2	42.1	13.2	3.5	16.7	100.0
모름 / 무응답	(3)	.0	33.3	33.3	66.7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9.3	29.0	38.3	46.8	10.5	4.4	14.9	100.0
중부권	(118)	13.1	31.4	44.5	38.6	16.9	.0	16.9	100.0
호남권	(119)	10.9	30.3	41.2	44.5	10.9	3.4	14.3	100.0
영남권	(324)	4.6	29.3	33.9	50.1	14.2	1.9	16.0	100.0
강원	(36)	13.9	41.7	55.6	36.1	5.6	2.8	8.3	100.0
제주	(13)	7.7	23.1	30.8	38.5	23.1	7.7	30.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9.7	33.9	43.6	43.3	9.1	4.0	13.1	100.0
중도	(542)	7.2	28.7	35.9	48.7	12.7	2.8	15.4	100.0
보수적	(261)	10.4	25.5	35.9	45.6	15.8	2.7	18.5	100.0
▣ 종교별									
불교	(279)	10.9	29.9	40.8	43.7	11.9	3.6	15.5	100.0
기독교	(282)	6.7	31.2	37.9	45.4	12.4	4.3	16.7	100.0
천주교	(87)	11.5	39.0	50.5	35.8	10.3	3.4	13.8	100.0
기타	(6)	33.3	.0	33.3	50.0	.0	16.7	16.7	100.0
종교없음	(530)	7.9	27.8	35.8	49.2	12.8	2.3	15.1	100.0
모름 / 무응답	(16)	6.3	25.0	31.3	62.5	6.3	.0	6.3	100.0

표31.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친근감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②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①+②	③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④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4.4	38.1	42.5	50.8	6.7	57.5	100.0
▣ 성별								
남자	(604)	4.8	38.8	43.6	50.1	6.3	56.4	100.0
여자	(596)	4.0	37.4	41.4	51.6	7.0	58.6	100.0
▣ 연령별								
19~29세	(303)	4.3	36.0	40.3	52.8	6.9	59.7	100.0
30대	(312)	3.5	35.9	39.4	53.2	7.4	60.6	100.0
40대	(305)	2.6	42.3	44.9	49.2	5.9	55.1	100.0
50대이상	(280)	7.5	38.3	45.8	47.8	6.4	54.2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1.5	28.5	40.0	49.5	10.5	60.0	100.0
고졸	(461)	3.5	37.9	41.4	50.0	8.7	58.6	100.0
대재이상	(634)	3.9	39.8	43.7	51.7	4.6	56.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6.2	34.3	40.6	43.9	15.6	59.4	100.0
자영업	(259)	6.2	42.7	48.8	45.0	6.2	51.2	100.0
블루칼라	(233)	6.0	33.9	39.9	54.1	6.0	60.1	100.0
화이트칼라	(239)	2.9	36.0	38.9	55.2	5.8	61.1	100.0
전업주부	(247)	1.6	38.4	40.1	51.4	8.5	59.9	100.0
학생/무직/기타	(190)	5.3	39.8	45.1	49.6	5.3	54.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6.9	37.3	44.2	46.4	9.4	55.8	100.0
200~299만원	(315)	2.9	39.5	42.3	50.1	7.6	57.7	100.0
300~399만원	(332)	4.8	34.9	39.8	54.5	5.7	60.2	100.0
400만원이상	(347)	3.7	40.4	44.1	50.7	5.2	55.9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33.3	66.7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6.3	41.0	47.3	47.3	5.4	52.7	100.0
중부권	(118)	4.2	43.2	47.5	48.3	4.2	52.5	100.0
호남권	(119)	5.0	40.3	45.4	44.5	10.1	54.6	100.0
영남권	(324)	1.2	30.9	32.1	60.1	7.7	67.9	100.0
강원	(36)	2.8	25.0	27.8	55.6	16.7	72.2	100.0
제주	(13)	.0	53.8	53.8	46.2	.0	46.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5.0	45.3	50.4	45.6	4.0	49.6	100.0
중도	(542)	2.6	35.6	38.1	55.8	6.1	61.9	100.0
보수적	(261)	7.3	32.3	39.6	48.5	11.9	60.4	100.0
▣ 종교별								
불교	(279)	4.3	40.4	44.7	47.8	7.5	55.3	100.0
기독교	(282)	6.0	42.2	48.2	43.6	8.2	51.8	100.0
천주교	(87)	4.6	41.5	46.1	50.5	3.4	53.9	100.0
기타	(6)	33.3	66.7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3.4	33.8	37.2	56.7	6.0	62.8	100.0
모름 / 무응답	(16)	.0	37.5	37.5	56.3	6.3	62.5	100.0

표32-1.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동네 이웃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동네 이웃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1.5	13.7	15.2	35.5	37.5	11.7	49.3	100.0
▣ 성별									
남자	(604)	1.7	13.3	14.9	34.3	38.2	12.6	50.8	100.0
여자	(596)	1.3	14.2	15.6	36.7	36.8	10.9	47.7	100.0
▣ 연령별									
19~29세	(303)	2.3	13.9	16.2	36.3	36.6	10.9	47.5	100.0
30대	(312)	.6	12.8	13.5	38.5	38.8	9.3	48.1	100.0
40대	(305)	.3	13.1	13.4	35.7	38.4	12.5	50.8	100.0
50대이상	(280)	2.9	15.3	18.2	30.9	36.2	14.6	50.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3.8	17.1	20.9	34.3	29.5	15.3	44.8	100.0
고졸	(461)	1.5	15.0	16.5	34.0	36.9	12.6	49.5	100.0
대재이상	(634)	1.1	12.3	13.4	36.7	39.3	10.6	49.9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6.2	28.7	34.9	15.2	37.4	12.5	49.9	100.0
자영업	(259)	2.7	9.2	11.9	34.6	38.5	15.1	53.5	100.0
블루칼라	(233)	.9	9.4	10.3	40.8	37.3	11.6	48.9	100.0
화이트칼라	(239)	.8	20.1	20.9	33.4	36.5	9.2	45.7	100.0
전업주부	(247)	.8	14.1	14.9	38.5	35.6	10.9	46.6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6	14.2	15.8	32.2	40.4	11.6	52.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4.0	17.3	21.2	38.1	25.9	14.8	40.7	100.0
200~299만원	(315)	.6	15.5	16.2	35.5	39.1	9.2	48.3	100.0
300~399만원	(332)	1.5	11.4	12.9	34.6	40.7	11.7	52.5	100.0
400만원이상	(347)	.9	12.4	13.2	34.5	40.2	12.1	52.3	100.0
모름 / 무응답	(3)	.0	.0	.0	66.7	.0	33.3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4	9.0	10.3	33.2	41.0	15.4	56.4	100.0
중부권	(118)	2.5	12.7	15.3	34.3	39.4	11.0	50.4	100.0
호남권	(119)	4.2	11.8	16.0	39.5	36.1	8.4	44.5	100.0
영남권	(324)	.6	21.9	22.5	38.6	32.7	6.2	38.9	100.0
강원	(36)	.0	30.6	30.6	33.3	27.8	8.3	36.1	100.0
제주	(13)	.0	7.7	7.7	38.5	23.1	30.8	53.8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5	11.6	13.1	33.9	40.4	12.6	53.0	100.0
중도	(542)	1.1	13.7	14.8	38.6	36.3	10.3	46.6	100.0
보수적	(261)	2.3	17.2	19.5	31.4	35.7	13.4	49.1	100.0
▣ 종교별									
불교	(279)	1.1	16.5	17.6	40.3	33.1	9.0	42.1	100.0
기독교	(282)	1.4	12.8	14.2	34.4	39.0	12.4	51.4	100.0
천주교	(87)	1.1	11.5	12.6	39.2	36.7	11.5	48.2	100.0
기타	(6)	.0	.0	.0	.0	50.0	50.0	100.0	100.0
종교없음	(530)	1.7	13.4	15.1	32.6	39.8	12.4	52.3	100.0
모름 / 무응답	(16)	6.3	12.5	18.8	56.3	12.5	12.5	25.0	100.0

표32-2.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직장 동료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직장 동료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 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2.8	13.3	16.1	34.1	38.5	11.3	49.8	100.0
▣ 성별									
남자	(604)	3.5	11.6	15.1	33.3	39.5	12.1	51.6	100.0
여자	(596)	2.2	15.0	17.2	34.9	37.5	10.4	47.9	100.0
▣ 연령별									
19~29세	(303)	3.0	13.5	16.5	38.9	34.3	10.2	44.6	100.0
30대	(312)	2.2	13.1	15.4	35.3	39.1	10.3	49.4	100.0
40대	(305)	2.6	11.8	14.4	31.5	42.3	11.8	54.1	100.0
50대이상	(280)	3.5	14.9	18.4	30.3	38.4	12.9	51.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6.6	17.9	24.5	32.5	30.6	12.4	43.0	100.0
고졸	(461)	2.8	15.4	18.2	31.4	38.9	11.5	50.3	100.0
대재이상	(634)	2.2	11.0	13.2	36.2	39.6	10.9	50.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6.2	31.4	37.6	12.5	40.6	9.4	49.9	100.0
자영업	(259)	3.0	9.3	12.3	28.8	45.8	13.1	58.9	100.0
블루칼라	(233)	1.7	12.9	14.6	34.4	39.0	12.0	51.0	100.0
화이트칼라	(239)	2.9	15.0	18.0	34.3	37.3	10.5	47.8	100.0
전업주부	(247)	1.6	15.3	16.9	38.9	34.0	10.1	44.2	100.0
학생/무직/기타	(190)	4.7	11.6	16.4	38.0	35.1	10.6	45.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5.9	16.8	22.6	32.6	31.4	13.3	44.7	100.0
200~299만원	(315)	3.8	13.6	17.4	37.4	36.9	8.2	45.1	100.0
300~399만원	(332)	.9	13.8	14.7	29.5	43.4	12.4	55.8	100.0
400만원이상	(347)	1.7	10.7	12.4	35.9	39.9	11.8	51.7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0	33.3	66.7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0	9.3	10.3	34.1	42.4	13.2	55.6	100.0
중부권	(118)	1.7	13.6	15.3	26.7	44.5	13.6	58.1	100.0
호남권	(119)	5.0	12.6	17.6	36.1	37.8	8.4	46.2	100.0
영남권	(324)	6.1	19.4	25.5	36.5	31.1	6.9	38.0	100.0
강원	(36)	.0	27.8	27.8	30.6	30.6	11.1	41.7	100.0
제주	(13)	.0	7.7	7.7	30.8	23.1	38.5	61.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2.5	10.8	13.4	34.4	39.7	12.6	52.3	100.0
중도	(542)	1.8	14.2	16.1	35.1	39.1	9.8	48.9	100.0
보수적	(261)	5.3	15.2	20.6	31.5	35.7	12.3	48.0	100.0
▣ 종교별									
불교	(279)	3.2	13.6	16.8	37.9	34.9	10.5	45.4	100.0
기독교	(282)	1.8	12.4	14.2	34.8	39.0	12.1	51.1	100.0
천주교	(87)	1.1	14.9	16.1	36.9	36.7	10.3	47.0	100.0
기타	(6)	.0	.0	.0	.0	50.0	50.0	100.0	100.0
종교없음	(530)	3.4	13.4	16.8	31.3	41.0	10.9	51.9	100.0
모름 / 무응답	(16)	6.3	18.8	25.0	43.8	18.8	12.5	31.3	100.0

표32-3.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사업 동업자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사업 동업자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8.3	29.8	38.1	34.0	22.0	5.9	27.9	100.0
▣ 성별									
남자	(604)	7.9	27.3	35.2	32.4	25.1	7.3	32.4	100.0
여자	(596)	8.7	32.3	41.0	35.7	18.8	4.5	23.3	100.0
▣ 연령별									
19~29세	(303)	7.9	29.0	37.0	35.0	22.1	5.9	28.1	100.0
30대	(312)	7.4	28.5	35.9	38.8	18.6	6.7	25.3	100.0
40대	(305)	7.2	30.5	37.7	32.1	25.6	4.6	30.2	100.0
50대이상	(280)	11.0	31.1	42.1	29.8	21.7	6.4	28.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3.1	33.8	47.0	31.1	16.2	5.7	22.0	100.0
고졸	(461)	9.5	31.7	41.2	30.8	20.9	7.2	28.0	100.0
대재이상	(634)	6.6	27.7	34.3	36.9	23.7	5.0	28.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6.2	47.0	53.2	18.7	21.8	6.2	28.1	100.0
자영업	(259)	9.6	20.7	30.3	34.9	27.2	7.7	34.9	100.0
블루칼라	(233)	5.1	34.0	39.1	33.0	21.4	6.4	27.9	100.0
화이트칼라	(239)	9.2	29.7	38.8	36.8	19.4	5.0	24.4	100.0
전업주부	(247)	9.7	33.2	42.8	34.5	18.2	4.5	22.7	100.0
학생/무직/기타	(190)	7.9	29.8	37.7	32.7	23.7	5.8	29.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9.7	32.4	42.2	33.6	15.8	8.4	24.2	100.0
200~299만원	(315)	10.5	32.4	42.8	32.8	20.6	3.8	24.4	100.0
300~399만원	(332)	7.5	28.6	36.1	32.8	25.4	5.7	31.1	100.0
400만원이상	(347)	6.0	27.0	33.0	36.6	23.8	6.6	30.4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33.3	66.7	33.3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7.5	24.9	32.4	37.1	24.1	6.4	30.5	100.0
중부권	(118)	3.4	32.2	35.6	32.6	25.8	5.9	31.8	100.0
호남권	(119)	12.6	26.1	38.7	37.8	16.8	6.7	23.5	100.0
영남권	(324)	10.7	38.3	49.0	29.3	18.0	3.7	21.7	100.0
강원	(36)	2.8	36.1	38.9	25.0	25.0	11.1	36.1	100.0
제주	(13)	7.7	30.8	38.5	15.4	30.8	15.4	46.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7.3	25.3	32.6	37.0	22.3	8.1	30.4	100.0
중도	(542)	8.3	29.5	37.8	34.0	22.9	5.3	28.2	100.0
보수적	(261)	9.9	37.2	47.0	29.5	19.6	3.8	23.5	100.0
▣ 종교별									
불교	(279)	7.5	33.0	40.5	33.0	20.4	6.1	26.5	100.0
기독교	(282)	6.7	29.1	35.8	33.3	25.2	5.7	30.9	100.0
천주교	(87)	10.3	26.6	36.9	36.7	21.8	4.6	26.4	100.0
기타	(6)	.0	16.7	16.7	.0	50.0	33.3	83.3	100.0
종교없음	(530)	9.2	29.4	38.7	34.4	21.1	5.8	26.9	100.0
모름 / 무응답	(16)	12.5	18.8	31.3	50.0	12.5	6.3	18.8	100.0

표32-4. 탈북자(새터민)와의 관계 유형별 태도 - ㉣ 결혼상대자

문)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 결혼상대자

	사례수	① 매우 꺼림	② 다소 꺼림	①+②	③ 반반/그저 그렇다	④ 별로 꺼리지 않음	⑤ 전혀 꺼리지 않음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18.2	30.4	48.6	28.7	17.2	5.5	22.7	100.0
▣ 성별									
남자	(604)	15.1	25.8	40.9	29.9	21.6	7.6	29.2	100.0
여자	(596)	21.4	35.0	56.4	27.5	12.8	3.4	16.1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9.1	35.6	54.8	24.4	16.2	4.6	20.8	100.0
30대	(312)	19.2	25.6	44.9	32.7	17.0	5.4	22.4	100.0
40대	(305)	16.1	28.9	44.9	31.1	18.4	5.6	23.9	100.0
50대이상	(280)	18.5	31.6	50.1	26.2	17.3	6.4	23.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20.8	32.4	53.2	23.4	16.7	6.7	23.4	100.0
고졸	(461)	19.7	30.5	50.3	27.9	16.4	5.4	21.8	100.0
대재이상	(634)	16.7	29.9	46.6	30.1	17.9	5.4	23.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3.1	40.1	53.2	15.6	21.8	9.4	31.2	100.0
자영업	(259)	15.0	20.6	35.6	33.9	22.4	8.1	30.5	100.0
블루칼라	(233)	14.2	32.7	46.8	28.3	17.6	7.3	24.9	100.0
화이트칼라	(239)	18.4	30.1	48.5	30.1	16.9	4.6	21.5	100.0
전업주부	(247)	25.4	31.6	57.0	28.8	12.2	2.0	14.2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9.0	38.0	57.0	22.4	15.8	4.7	20.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9.7	29.7	49.3	23.5	18.8	8.4	27.2	100.0
200~299만원	(315)	22.5	31.4	53.9	27.5	15.1	3.5	18.6	100.0
300~399만원	(332)	18.1	28.0	46.0	31.9	16.6	5.4	22.0	100.0
400만원이상	(347)	13.8	32.2	46.0	29.7	18.6	5.8	24.3	100.0
모름 / 무응답	(3)	.0	33.3	33.3	33.3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3.9	30.0	43.9	31.2	18.8	6.1	24.9	100.0
중부권	(118)	11.0	25.8	36.9	27.5	28.0	7.6	35.6	100.0
호남권	(119)	21.0	21.8	42.9	27.7	22.7	6.7	29.4	100.0
영남권	(324)	27.4	35.8	63.2	25.3	9.4	2.2	11.5	100.0
강원	(36)	22.2	36.1	58.3	25.0	5.6	11.1	16.7	100.0
제주	(13)	15.4	15.4	30.8	30.8	23.1	15.4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3.9	31.1	45.0	28.7	19.3	7.1	26.3	100.0
중도	(542)	19.0	30.3	49.3	30.5	15.4	4.8	20.2	100.0
보수적	(261)	23.3	29.5	52.8	24.9	17.7	4.6	22.3	100.0
▣ 종교별									
불교	(279)	18.6	34.2	52.8	28.2	12.2	6.8	19.0	100.0
기독교	(282)	15.6	30.5	46.1	29.1	19.1	5.7	24.8	100.0
천주교	(87)	14.9	26.6	41.5	37.8	18.3	2.3	20.6	100.0
기타	(6)	16.7	.0	16.7	.0	66.7	16.7	83.3	100.0
종교없음	(530)	19.8	29.6	49.4	27.7	17.8	5.1	22.9	100.0
모름 / 무응답	(16)	25.0	18.8	43.8	25.0	25.0	6.3	31.3	100.0

표33. 탈북자(새터민) 수용에 관한 견해

문)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전체	(1200)	43.6	47.9	7.8	.7	100.0
▣ 성별						
남자	(604)	45.6	46.2	7.4	.8	100.0
여자	(596)	41.6	49.7	8.2	.5	100.0
▣ 연령별						
19~29세	(303)	43.2	48.5	8.3	.0	100.0
30대	(312)	41.0	51.0	8.0	.0	100.0
40대	(305)	45.6	46.6	6.6	1.3	100.0
50대이상	(280)	44.8	45.5	8.3	1.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44.4	42.8	12.8	.0	100.0
고졸	(461)	41.5	49.2	8.0	1.3	100.0
대재이상	(634)	45.0	47.9	6.8	.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43.7	40.7	15.6	.0	100.0
자영업	(259)	52.8	39.5	7.3	.4	100.0
블루칼라	(233)	44.7	49.7	5.1	.4	100.0
화이트칼라	(239)	37.3	54.7	7.1	.8	100.0
전업주부	(247)	37.3	52.2	9.7	.8	100.0
학생/무직/기타	(190)	45.9	44.3	8.7	1.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43.0	47.4	9.1	.5	100.0
200~299만원	(315)	46.2	43.1	10.1	.6	100.0
300~399만원	(332)	41.9	51.2	6.0	.9	100.0
400만원이상	(347)	43.3	49.5	6.6	.6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66.7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44.7	49.0	5.3	1.0	100.0
중부권	(118)	50.8	41.9	6.4	.8	100.0
호남권	(119)	45.4	49.6	5.0	.0	100.0
영남권	(324)	36.8	49.9	12.9	.3	100.0
강원	(36)	50.0	30.6	19.4	.0	100.0
제주	(13)	61.5	38.5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46.5	45.7	7.1	.8	100.0
중도	(542)	42.7	49.2	7.3	.7	100.0
보수적	(261)	41.1	48.6	9.9	.4	100.0
▣ 종교별						
불교	(279)	42.7	48.2	8.4	.7	100.0
기독교	(282)	47.9	45.7	5.3	1.1	100.0
천주교	(87)	52.8	39.2	8.0	.0	100.0
기타	(6)	66.7	33.3	.0	.0	100.0
종교없음	(530)	40.1	50.5	8.8	.6	100.0
모름 / 무응답	(16)	43.8	50.0	6.3	.0	100.0

표34-1.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7.7	51.6	59.3	36.0	4.7	40.7	100.0
▣ 성별								
남자	(604)	9.0	52.8	61.8	33.4	4.8	38.2	100.0
여자	(596)	6.4	50.4	56.8	38.7	4.5	43.2	100.0
▣ 연령별								
19~29세	(303)	7.9	50.5	58.4	37.6	4.0	41.6	100.0
30대	(312)	9.3	49.0	58.3	37.5	4.2	41.7	100.0
40대	(305)	8.2	55.4	63.6	30.8	5.6	36.4	100.0
50대이상	(280)	5.1	51.7	56.7	38.3	5.0	43.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2.9	45.3	48.1	48.0	3.8	51.9	100.0
고졸	(461)	5.0	53.1	58.2	35.6	6.3	41.8	100.0
대재이상	(634)	10.4	51.6	62.0	34.4	3.6	38.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0	43.2	43.2	53.7	3.1	56.8	100.0
자영업	(259)	7.7	53.3	61.0	34.0	5.0	39.0	100.0
블루칼라	(233)	7.4	56.6	64.0	31.7	4.3	36.0	100.0
화이트칼라	(239)	8.8	53.1	61.9	32.7	5.4	38.1	100.0
전업주부	(247)	5.3	48.6	53.9	40.4	5.7	46.1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1.1	46.7	57.8	39.6	2.6	42.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8.4	47.7	56.1	37.0	6.9	43.9	100.0
200~299만원	(315)	8.6	49.0	57.6	37.6	4.8	42.4	100.0
300~399만원	(332)	6.9	52.1	59.0	36.1	4.8	41.0	100.0
400만원이상	(347)	7.2	55.7	62.9	33.9	3.2	37.1	100.0
모름 / 무응답	(3)	.0	66.7	66.7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9.3	53.2	62.5	31.7	5.8	37.5	100.0
중부권	(118)	11.9	59.3	71.2	28.0	.8	28.8	100.0
호남권	(119)	8.4	58.8	67.2	31.9	.8	32.8	100.0
영남권	(324)	3.5	43.4	46.9	47.9	5.2	53.1	100.0
강원	(36)	5.6	47.2	52.8	38.9	8.3	47.2	100.0
제주	(13)	.0	61.5	61.5	38.5	.0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1.1	58.3	69.4	26.6	4.0	30.6	100.0
중도	(542)	5.9	49.3	55.2	40.5	4.2	44.8	100.0
보수적	(261)	6.1	46.3	52.5	41.0	6.5	47.5	100.0
▣ 종교별								
불교	(279)	7.9	44.5	52.4	42.6	5.0	47.6	100.0
기독교	(282)	6.4	58.5	64.9	28.7	6.4	35.1	100.0
천주교	(87)	9.2	58.5	67.7	30.0	2.3	32.3	100.0
기타	(6)	50.0	16.7	66.7	33.3	.0	33.3	100.0
종교없음	(530)	7.4	51.0	58.4	37.6	4.0	41.6	100.0
모름 / 무응답	(16)	12.5	50.0	62.5	31.3	6.3	37.5	100.0

표34-2.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9.8	45.9	55.7	38.5	5.8	44.3	100.0
▣ 성별								
남자	(604)	12.6	46.0	58.6	36.3	5.1	41.4	100.0
여자	(596)	6.9	45.9	52.8	40.7	6.5	47.2	100.0
▣ 연령별								
19~29세	(303)	9.6	46.2	55.8	38.9	5.3	44.2	100.0
30대	(312)	10.3	47.1	57.4	36.5	6.1	42.6	100.0
40대	(305)	11.8	46.6	58.4	35.4	6.2	41.6	100.0
50대이상	(280)	7.2	43.7	50.9	43.4	5.7	49.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6.7	38.6	45.3	48.0	6.7	54.7	100.0
고졸	(461)	7.4	43.1	50.4	42.6	6.9	49.6	100.0
대재이상	(634)	12.0	49.2	61.3	33.9	4.9	38.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1	56.3	59.4	40.6	.0	40.6	100.0
자영업	(259)	11.6	50.4	61.9	31.1	6.9	38.1	100.0
블루칼라	(233)	11.6	45.1	56.7	38.6	4.7	43.3	100.0
화이트칼라	(239)	10.1	46.4	56.6	38.4	5.0	43.4	100.0
전업주부	(247)	4.5	40.9	45.3	47.0	7.7	54.7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2.7	45.1	57.8	36.9	5.3	42.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2.4	45.8	58.1	34.0	7.9	41.9	100.0
200~299만원	(315)	9.2	39.8	48.9	45.7	5.4	51.1	100.0
300~399만원	(332)	6.7	42.7	49.4	43.7	6.9	50.6	100.0
400만원이상	(347)	11.8	54.6	66.4	29.6	4.0	33.6	100.0
모름 / 무응답	(3)	.0	66.7	66.7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0.8	51.9	62.7	30.5	6.8	37.3	100.0
중부권	(118)	14.4	47.5	61.9	36.4	1.7	38.1	100.0
호남권	(119)	12.6	54.6	67.2	29.4	3.4	32.8	100.0
영남권	(324)	5.3	31.6	36.9	56.3	6.8	63.1	100.0
강원	(36)	8.3	36.1	44.4	50.0	5.6	55.6	100.0
제주	(13)	7.7	69.2	76.9	23.1	.0	23.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3.4	50.0	63.4	33.9	2.8	36.6	100.0
중도	(542)	8.1	43.7	51.8	42.1	6.1	48.2	100.0
보수적	(261)	7.7	44.5	52.2	37.8	10.0	47.8	100.0
▣ 종교별								
불교	(279)	11.2	44.5	55.7	36.7	7.5	44.3	100.0
기독교	(282)	10.3	55.3	65.6	28.0	6.4	34.4	100.0
천주교	(87)	14.9	47.0	61.9	33.5	4.6	38.1	100.0
기타	(6)	50.0	.0	50.0	50.0	.0	50.0	100.0
종교없음	(530)	7.2	42.1	49.3	45.8	4.9	50.7	100.0
모름 / 무응답	(16)	18.8	43.8	62.5	31.3	6.3	37.5	100.0

표34-3.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1.9	22.6	24.5	57.3	18.2	75.5	100.0
▣ 성별								
남자	(604)	1.8	20.3	22.2	56.4	21.4	77.8	100.0
여자	(596)	2.0	24.8	26.8	58.3	14.9	73.2	100.0
▣ 연령별								
19~29세	(303)	2.0	22.8	24.8	57.8	17.5	75.2	100.0
30대	(312)	1.0	23.1	24.0	55.1	20.8	76.0	100.0
40대	(305)	1.0	21.3	22.3	59.3	18.4	77.7	100.0
50대이상	(280)	3.9	23.1	27.0	57.1	15.9	73.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4.8	21.9	26.7	59.9	13.4	73.3	100.0
고졸	(461)	1.1	23.7	24.8	55.7	19.5	75.2	100.0
대재이상	(634)	2.1	21.8	23.8	58.1	18.0	76.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1	31.8	34.9	46.3	18.7	65.1	100.0
자영업	(259)	1.5	17.9	19.4	57.7	22.8	80.6	100.0
블루칼라	(233)	2.1	23.2	25.3	57.5	17.2	74.7	100.0
화이트칼라	(239)	.8	24.7	25.6	56.8	17.6	74.4	100.0
전업주부	(247)	2.8	25.9	28.7	55.9	15.4	71.3	100.0
학생/무직/기타	(190)	2.1	19.5	21.6	60.9	17.4	78.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5.4	22.7	28.1	50.1	21.8	71.9	100.0
200~299만원	(315)	1.6	22.6	24.2	60.3	15.5	75.8	100.0
300~399만원	(332)	.9	21.4	22.3	61.1	16.6	77.7	100.0
400만원이상	(347)	1.2	23.8	24.9	54.9	20.2	75.1	100.0
모름 / 무응답	(3)	.0	.0	.0	100.0	.0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2.2	21.5	23.7	56.1	20.2	76.3	100.0
중부권	(118)	2.5	18.2	20.8	68.2	11.0	79.2	100.0
호남권	(119)	4.2	20.2	24.4	55.5	20.2	75.6	100.0
영남권	(324)	.3	26.6	26.9	56.9	16.2	73.1	100.0
강원	(36)	.0	30.6	30.6	58.3	11.1	69.4	100.0
제주	(13)	7.7	7.7	15.4	38.5	46.2	84.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8	25.8	27.6	51.3	21.2	72.4	100.0
중도	(542)	2.0	19.9	22.0	61.7	16.3	78.0	100.0
보수적	(261)	1.9	23.0	24.9	57.4	17.6	75.1	100.0
▣ 종교별								
불교	(279)	.7	21.4	22.2	58.0	19.8	77.8	100.0
기독교	(282)	.7	25.2	25.9	57.8	16.3	74.1	100.0
천주교	(87)	6.9	17.2	24.1	58.5	17.4	75.9	100.0
기타	(6)	.0	.0	.0	33.3	66.7	100.0	100.0
종교없음	(530)	2.5	23.2	25.6	56.6	17.7	74.4	100.0
모름 / 무응답	(16)	.0	12.5	12.5	62.5	25.0	87.5	100.0

표34-4. 한국 거주 탈북자(새터민) 관련 인식 –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문)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함	② 다소 동의함	①+②	③ 별로 동의하지 않음	④ 전혀 동의하지 않음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13.4	54.3	67.8	26.9	5.3	32.2	100.0
▣ 성별								
남자	(604)	15.2	51.6	66.9	27.1	6.0	33.1	100.0
여자	(596)	11.6	57.1	68.6	26.7	4.7	31.4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2.9	54.1	67.0	27.4	5.6	33.0	100.0
30대	(312)	12.8	49.0	61.9	32.7	5.4	38.1	100.0
40대	(305)	15.4	54.4	69.8	24.9	5.2	30.2	100.0
50대이상	(280)	12.4	60.4	72.9	22.1	5.1	27.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1.5	59.0	70.5	27.6	1.9	29.5	100.0
고졸	(461)	15.1	52.7	67.8	25.3	6.9	32.2	100.0
대재이상	(634)	12.5	54.8	67.3	28.0	4.8	32.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2.5	71.9	84.4	15.6	.0	15.6	100.0
자영업	(259)	16.5	50.8	67.3	24.5	8.2	32.7	100.0
블루칼라	(233)	15.0	55.8	70.8	21.9	7.3	29.2	100.0
화이트칼라	(239)	8.8	54.7	63.5	32.3	4.2	36.5	100.0
전업주부	(247)	12.2	55.5	67.6	28.3	4.1	32.4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4.8	52.5	67.3	29.6	3.2	32.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8.8	57.1	75.8	17.7	6.4	24.2	100.0
200~299만원	(315)	9.5	54.7	64.1	31.8	4.1	35.9	100.0
300~399만원	(332)	15.1	52.7	67.7	25.7	6.6	32.3	100.0
400만원이상	(347)	12.1	54.3	66.4	28.9	4.7	33.6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33.3	66.7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3.4	53.4	66.8	26.6	6.6	33.2	100.0
중부권	(118)	20.3	54.7	75.0	21.6	3.4	25.0	100.0
호남권	(119)	16.0	52.1	68.1	26.1	5.9	31.9	100.0
영남권	(324)	9.2	56.7	65.9	30.3	3.8	34.1	100.0
강원	(36)	11.1	58.3	69.4	25.0	5.6	30.6	100.0
제주	(13)	38.5	46.2	84.6	15.4	.0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4.6	55.3	69.9	25.6	4.5	30.1	100.0
중도	(542)	12.0	54.4	66.4	28.0	5.6	33.6	100.0
보수적	(261)	14.5	52.8	67.3	26.6	6.1	32.7	100.0
▣ 종교별								
불교	(279)	10.4	57.4	67.8	25.0	7.2	32.2	100.0
기독교	(282)	17.0	54.3	71.3	24.5	4.3	28.7	100.0
천주교	(87)	16.1	44.7	60.8	28.7	10.6	39.2	100.0
기타	(6)	33.3	16.7	50.0	50.0	.0	50.0	100.0
종교없음	(530)	12.2	55.7	67.9	27.7	4.3	32.1	100.0
모름 / 무응답	(16)	18.8	25.0	43.8	56.3	.0	56.3	100.0

표35. 주변국 중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

문)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사례수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러시아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체	(1200)	70.6	14.8	9.6	4.2	.7	.1	100.0
▣ 성별								
남자	(604)	70.5	15.6	8.3	4.5	1.2	.0	100.0
여자	(596)	70.7	14.1	10.9	3.9	.3	.2	100.0
▣ 연령별								
19~29세	(303)	63.0	17.2	13.9	5.0	1.0	.0	100.0
30대	(312)	64.7	17.9	12.5	3.8	1.0	.0	100.0
40대	(305)	73.1	12.8	8.9	3.9	1.0	.3	100.0
50대이상	(280)	82.6	11.0	2.5	3.9	.0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86.8	8.5	1.0	3.8	.0	.0	100.0
고졸	(461)	73.3	13.2	7.4	4.8	1.1	.2	100.0
대재이상	(634)	65.9	17.0	12.6	3.8	.6	.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78.2	12.5	3.1	6.2	.0	.0	100.0
자영업	(259)	70.3	14.7	9.6	4.2	1.2	.0	100.0
블루칼라	(233)	70.0	15.0	9.4	4.3	1.3	.0	100.0
화이트칼라	(239)	72.4	13.8	8.4	4.6	.4	.4	100.0
전업주부	(247)	75.3	13.7	8.1	2.8	.0	.0	100.0
학생/무직/기타	(190)	62.0	17.9	14.2	4.7	1.1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71.4	15.7	6.9	5.4	.5	.0	100.0
200~299만원	(315)	67.0	16.2	10.5	5.1	1.3	.0	100.0
300~399만원	(332)	70.5	13.6	10.5	3.9	1.2	.3	100.0
400만원이상	(347)	73.2	14.4	9.5	2.9	.0	.0	100.0
모름 / 무응답	(3)	100.0	.0	.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70.3	14.7	10.5	3.4	1.0	.0	100.0
중부권	(118)	66.9	22.9	5.9	3.4	.8	.0	100.0
호남권	(119)	55.5	27.7	7.6	8.4	.0	.8	100.0
영남권	(324)	78.1	8.3	9.6	3.4	.6	.0	100.0
강원	(36)	75.0	8.3	8.3	8.3	.0	.0	100.0
제주	(13)	53.8	7.7	23.1	15.4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65.0	18.1	9.6	6.3	.8	.3	100.0
중도	(542)	73.1	13.4	10.0	2.4	1.1	.0	100.0
보수적	(261)	73.9	12.7	8.8	4.6	.0	.0	100.0
▣ 종교별								
불교	(279)	74.6	15.4	6.1	3.2	.7	.0	100.0
기독교	(282)	75.5	12.4	7.4	3.9	.7	.0	100.0
천주교	(87)	71.3	16.1	9.2	3.4	.0	.0	100.0
기타	(6)	83.3	.0	16.7	.0	.0	.0	100.0
종교없음	(530)	66.6	15.1	12.4	4.7	.9	.2	100.0
모름 / 무응답	(16)	37.5	37.5	12.5	12.5	.0	.0	100.0

표36. 주변국 중 한반도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국가

문)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체	(1200)	55.5	24.5	10.3	8.2	1.2	.2	100.0
▣ 성별								
남자	(604)	53.7	26.6	9.9	8.9	.7	.2	100.0
여자	(596)	57.2	22.5	10.7	7.6	1.7	.3	100.0
▣ 연령별								
19~29세	(303)	50.5	23.1	13.2	11.9	1.0	.3	100.0
30대	(312)	51.9	25.6	12.2	9.3	1.0	.0	100.0
40대	(305)	57.4	27.9	7.2	6.9	.3	.3	100.0
50대이상	(280)	62.8	21.2	8.5	4.6	2.6	.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61.2	22.3	9.6	2.9	4.0	.0	100.0
고졸	(461)	61.4	24.3	8.0	5.4	.9	.0	100.0
대재이상	(634)	50.2	25.1	12.1	11.2	.9	.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68.2	15.6	9.4	.0	6.9	.0	100.0
자영업	(259)	53.8	25.9	9.9	10.0	.4	.0	100.0
블루칼라	(233)	54.5	27.4	8.6	8.6	.9	.0	100.0
화이트칼라	(239)	48.2	29.2	11.7	8.8	1.3	.8	100.0
전업주부	(247)	64.4	19.4	10.1	4.1	1.6	.4	100.0
학생/무직/기타	(190)	54.4	21.4	11.6	11.6	1.1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56.2	24.9	9.4	7.4	2.1	.0	100.0
200~299만원	(315)	61.6	20.3	10.1	7.3	.6	.0	100.0
300~399만원	(332)	53.0	27.1	10.2	9.0	.3	.3	100.0
400만원이상	(347)	51.7	25.9	11.1	8.6	2.0	.6	100.0
모름 / 무응답	(3)	66.7	.0	.0	33.3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53.6	26.3	9.2	9.7	1.0	.3	100.0
중부권	(118)	50.0	25.0	14.0	11.0	.0	.0	100.0
호남권	(119)	46.2	26.1	16.0	10.9	.8	.0	100.0
영남권	(324)	64.4	20.9	9.0	3.4	1.9	.3	100.0
강원	(36)	58.3	16.7	11.1	11.1	2.8	.0	100.0
제주	(13)	46.2	38.5	7.7	7.7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50.3	23.9	12.7	12.1	.8	.3	100.0
중도	(542)	58.7	21.8	10.9	7.4	1.0	.2	100.0
보수적	(261)	56.7	31.0	5.4	4.2	2.3	.4	100.0
▣ 종교별								
불교	(279)	61.5	23.9	8.4	4.7	1.5	.0	100.0
기독교	(282)	55.3	23.8	14.5	6.0	.0	.4	100.0
천주교	(87)	51.6	29.8	8.3	9.2	.0	1.1	100.0
기타	(6)	16.7	33.3	.0	50.0	.0	.0	100.0
종교없음	(530)	54.6	23.7	9.4	10.2	1.9	.2	100.0
모름 / 무응답	(16)	18.8	43.8	12.5	25.0	.0	.0	100.0

표37. 북·미 월드컵 대결 시 응원하고 싶은 팀

문)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사례수	북한팀	미국팀	양팀 모두 응원하겠다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열심히 하는 팀 응원	모름/무응답	계
		%	%	%	%	%	%	%
■ 전체	(1200)	70.1	8.6	9.9	10.9	.1	.3	100.0
▣ 성별								
남자	(604)	74.1	6.4	9.9	8.9	.2	.5	100.0
여자	(596)	66.2	10.9	9.9	12.9	.0	.2	100.0
▣ 연령별								
19~29세	(303)	63.0	7.9	12.2	16.2	.0	.7	100.0
30대	(312)	73.1	6.1	10.3	9.9	.3	.3	100.0
40대	(305)	77.0	6.6	7.9	8.2	.0	.3	100.0
50대이상	(280)	67.0	14.4	9.2	9.3	.0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56.7	21.4	13.2	8.6	.0	.0	100.0
고졸	(461)	66.4	10.4	11.3	11.9	.0	.0	100.0
대재이상	(634)	75.1	5.2	8.4	10.6	.2	.6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74.9	12.7	3.1	9.4	.0	.0	100.0
자영업	(259)	72.8	9.4	10.0	7.3	.4	.0	100.0
블루칼라	(233)	72.6	6.9	10.7	9.9	.0	.0	100.0
화이트칼라	(239)	72.8	6.3	10.9	8.4	.0	1.7	100.0
전업주부	(247)	66.0	10.9	10.1	13.0	.0	.0	100.0
학생/무직/기타	(190)	64.6	9.0	8.4	17.9	.0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57.5	16.3	12.8	13.3	.0	.0	100.0
200~299만원	(315)	68.1	10.3	10.1	10.8	.3	.3	100.0
300~399만원	(332)	73.5	6.3	8.7	10.8	.0	.6	100.0
400만원이상	(347)	75.8	4.9	9.2	9.8	.0	.3	100.0
모름 / 무응답	(3)	100.0	.0	.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71.7	8.3	9.8	10.0	.0	.2	100.0
중부권	(118)	75.0	8.1	11.0	5.1	.0	.8	100.0
호남권	(119)	77.3	8.4	7.6	5.9	.0	.8	100.0
영남권	(324)	64.3	9.5	11.1	14.5	.3	.3	100.0
강원	(36)	58.3	11.1	5.6	25.0	.0	.0	100.0
제주	(13)	69.2	.0	7.7	23.1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73.8	5.3	10.3	9.8	.0	.8	100.0
중도	(542)	67.3	10.1	10.9	11.4	.2	.2	100.0
보수적	(261)	70.6	10.6	7.3	11.5	.0	.0	100.0
▣ 종교별								
불교	(279)	69.2	10.0	7.8	12.9	.0	.0	100.0
기독교	(282)	69.1	8.9	9.9	11.7	.0	.4	100.0
천주교	(87)	77.1	8.0	9.2	4.6	.0	1.1	100.0
기타	(6)	83.3	.0	16.7	.0	.0	.0	100.0
종교없음	(530)	70.1	7.8	10.8	10.8	.2	.4	100.0
모름 / 무응답	(16)	62.5	12.5	18.8	6.3	.0	.0	100.0

표38-1.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미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국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계
		%	%	%	%	%
■ 전체	(1200)	76.4	14.6	8.2	.8	100.0
▣ 성별						
남자	(604)	76.5	14.4	8.3	.8	100.0
여자	(596)	76.3	14.8	8.1	.8	100.0
▣ 연령별						
19~29세	(303)	75.9	13.9	10.2	.0	100.0
30대	(312)	69.9	19.6	9.3	1.3	100.0
40대	(305)	78.0	14.8	5.9	1.3	100.0
50대이상	(280)	82.5	9.6	7.1	.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79.0	12.4	6.7	1.9	100.0
고졸	(461)	80.7	13.0	6.1	.2	100.0
대재이상	(634)	72.9	16.1	9.9	1.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75.0	12.5	12.5	.0	100.0
자영업	(259)	77.2	13.9	7.7	1.2	100.0
블루칼라	(233)	74.7	14.2	10.3	.9	100.0
화이트칼라	(239)	74.5	15.5	8.8	1.3	100.0
전업주부	(247)	78.1	17.0	4.1	.8	100.0
학생/무직/기타	(190)	77.8	12.1	10.0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77.8	14.8	6.4	1.0	100.0
200~299만원	(315)	73.4	17.4	7.9	1.3	100.0
300~399만원	(332)	76.5	12.0	10.5	.9	100.0
400만원이상	(347)	78.1	14.4	7.2	.3	100.0
모름 / 무응답	(3)	100.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75.8	13.9	9.5	.8	100.0
중부권	(118)	76.3	16.1	6.8	.8	100.0
호남권	(119)	69.7	16.0	14.3	.0	100.0
영남권	(324)	81.5	13.6	4.3	.6	100.0
강원	(36)	63.9	25.0	5.6	5.6	100.0
제주	(13)	76.9	15.4	7.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75.6	13.1	10.3	1.0	100.0
중도	(542)	75.3	17.7	6.6	.4	100.0
보수적	(261)	80.0	10.4	8.1	1.5	100.0
▣ 종교별						
불교	(279)	77.4	15.4	5.7	1.4	100.0
기독교	(282)	79.1	12.8	6.7	1.4	100.0
천주교	(87)	74.8	11.5	11.5	2.3	100.0
기타	(6)	66.7	.0	33.3	.0	100.0
종교없음	(530)	75.5	14.9	9.6	.0	100.0
모름 / 무응답	(16)	56.3	43.8	.0	.0	100.0

표38-2.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중국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국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계
		%	%	%	%	%
■ 전체	(1200)	19.7	45.1	31.8	3.4	100.0
▣ 성별						
남자	(604)	19.8	45.3	30.9	4.0	100.0
여자	(596)	19.6	44.9	32.7	2.9	100.0
▣ 연령별						
19~29세	(303)	22.1	43.6	30.4	4.0	100.0
30대	(312)	20.2	44.2	32.1	3.5	100.0
40대	(305)	21.3	44.6	30.2	3.9	100.0
50대이상	(280)	14.7	48.3	34.8	2.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2.8	49.1	35.2	2.9	100.0
고졸	(461)	17.3	47.2	30.5	5.0	100.0
대재이상	(634)	22.6	42.9	32.2	2.4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9.4	56.8	30.7	3.1	100.0
자영업	(259)	24.5	41.3	30.4	3.9	100.0
블루칼라	(233)	15.0	49.0	31.7	4.3	100.0
화이트칼라	(239)	24.2	43.6	28.0	4.2	100.0
전업주부	(247)	16.2	47.8	34.5	1.6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9.5	42.0	35.4	3.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8.7	52.1	26.2	3.0	100.0
200~299만원	(315)	18.5	47.9	28.8	4.8	100.0
300~399만원	(332)	21.1	42.2	33.1	3.6	100.0
400만원이상	(347)	19.9	41.6	36.2	2.3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0	66.7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20.0	43.1	33.2	3.7	100.0
중부권	(118)	20.8	50.8	26.7	1.7	100.0
호남권	(119)	26.9	34.5	38.7	.0	100.0
영남권	(324)	14.1	51.3	30.0	4.6	100.0
강원	(36)	27.8	41.7	27.8	2.8	100.0
제주	(13)	46.2	38.5	7.7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21.9	46.0	28.6	3.5	100.0
중도	(542)	21.1	43.7	31.7	3.5	100.0
보수적	(261)	13.4	46.8	36.8	3.1	100.0
▣ 종교별						
불교	(279)	17.6	49.3	31.0	2.2	100.0
기독교	(282)	23.8	40.8	32.3	3.2	100.0
천주교	(87)	17.2	33.3	42.7	6.9	100.0
기타	(6)	33.3	.0	66.7	.0	100.0
종교없음	(530)	18.5	47.7	30.4	3.4	100.0
모름 / 무응답	(16)	31.3	43.8	12.5	12.5	100.0

표38-3.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일본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본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계
		%	%	%	%	%
■ 전체	(1200)	14.4	50.9	28.0	6.7	100.0
▣ 성별						
남자	(604)	16.5	50.1	27.6	5.8	100.0
여자	(596)	12.2	51.8	28.3	7.7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5.2	52.5	26.4	5.9	100.0
30대	(312)	13.1	53.8	26.6	6.4	100.0
40대	(305)	14.8	52.8	26.6	5.9	100.0
50대이상	(280)	14.4	43.9	32.7	8.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0.9	38.8	41.8	8.6	100.0
고졸	(461)	13.8	51.0	27.1	8.0	100.0
대재이상	(634)	15.3	52.9	26.3	5.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6.2	38.1	40.1	15.6	100.0
자영업	(259)	18.7	46.0	28.4	6.9	100.0
블루칼라	(233)	12.4	51.9	30.5	5.1	100.0
화이트칼라	(239)	15.5	54.8	22.2	7.5	100.0
전업주부	(247)	11.3	53.5	27.9	7.3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4.8	50.4	29.6	5.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4.3	51.2	26.1	8.4	100.0
200~299만원	(315)	10.9	53.9	30.2	5.1	100.0
300~399만원	(332)	18.1	45.8	27.7	8.4	100.0
400만원이상	(347)	13.9	53.1	27.2	5.8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33.3	33.3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5.1	51.9	26.8	6.3	100.0
중부권	(118)	14.0	52.5	30.9	2.5	100.0
호남권	(119)	15.1	38.7	36.1	10.1	100.0
영남권	(324)	12.0	53.7	26.3	8.0	100.0
강원	(36)	19.4	38.9	36.1	5.6	100.0
제주	(13)	23.1	69.2	.0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5.1	49.5	28.1	7.3	100.0
중도	(542)	16.5	51.7	26.6	5.2	100.0
보수적	(261)	8.8	51.4	30.6	9.2	100.0
▣ 종교별						
불교	(279)	12.6	47.8	32.4	7.2	100.0
기독교	(282)	14.9	51.1	27.7	6.4	100.0
천주교	(87)	16.3	45.9	28.7	9.2	100.0
기타	(6)	16.7	33.3	50.0	.0	100.0
종교없음	(530)	14.6	53.7	25.3	6.4	100.0
모름 / 무응답	(16)	18.8	43.8	31.3	6.3	100.0

표38-4. 한국과 주요 주변국의 관계 인식 - ㉣ 러시아

문)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러시아

	사례수	협력대상	경쟁대상	경계대상	적대대상	계
		%	%	%	%	%
■ 전체	(1200)	21.7	40.6	33.5	4.2	100.0
▣ 성별						
남자	(604)	22.5	41.8	31.4	4.3	100.0
여자	(596)	20.9	39.4	35.5	4.2	100.0
▣ 연령별						
19~29세	(303)	24.1	38.3	33.0	4.6	100.0
30대	(312)	22.1	43.9	30.1	3.8	100.0
40대	(305)	21.6	44.6	30.5	3.3	100.0
50대이상	(280)	18.7	35.1	40.9	5.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9.5	35.4	41.3	3.8	100.0
고졸	(461)	19.7	40.7	34.2	5.4	100.0
대재이상	(634)	23.5	41.4	31.6	3.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6.2	50.5	40.1	3.1	100.0
자영업	(259)	23.4	40.0	30.5	6.2	100.0
블루칼라	(233)	19.3	43.3	34.0	3.4	100.0
화이트칼라	(239)	23.8	45.7	26.7	3.8	100.0
전업주부	(247)	19.8	40.5	36.4	3.2	100.0
학생/무직/기타	(190)	24.8	30.1	40.4	4.7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26.6	38.6	28.9	5.9	100.0
200~299만원	(315)	16.9	46.6	32.7	3.8	100.0
300~399만원	(332)	21.7	39.5	35.5	3.3	100.0
400만원이상	(347)	22.8	37.7	34.9	4.6	100.0
모름 / 무응답	(3)	66.7	.0	33.3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23.1	34.7	36.9	5.3	100.0
중부권	(118)	25.0	39.0	35.2	.8	100.0
호남권	(119)	26.1	35.3	35.3	3.4	100.0
영남권	(324)	15.1	54.7	26.5	3.7	100.0
강원	(36)	22.2	33.3	36.1	8.3	100.0
제주	(13)	53.8	38.5	7.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23.7	41.3	30.7	4.3	100.0
중도	(542)	23.0	39.7	34.2	3.1	100.0
보수적	(261)	16.1	41.4	36.0	6.5	100.0
▣ 종교별						
불교	(279)	21.5	44.3	31.3	2.9	100.0
기독교	(282)	24.8	33.3	37.9	3.9	100.0
천주교	(87)	18.6	33.3	39.0	9.2	100.0
기타	(6)	50.0	.0	50.0	.0	100.0
종교없음	(530)	20.0	44.3	31.4	4.3	100.0
모름 / 무응답	(16)	31.3	37.5	25.0	6.3	100.0

표39-1.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미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미국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 전체	(1200)	74.7	.7	22.9	1.7	100.0
▣ 성별						
남자	(604)	76.2	.7	21.3	1.8	100.0
여자	(596)	73.2	.7	24.6	1.5	100.0
▣ 연령별						
19~29세	(303)	71.6	1.0	24.8	2.6	100.0
30대	(312)	70.8	1.0	26.9	1.3	100.0
40대	(305)	76.7	.3	21.3	1.6	100.0
50대이상	(280)	80.2	.4	18.3	1.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78.2	.0	20.9	1.0	100.0
고졸	(461)	78.3	1.1	18.2	2.4	100.0
대재이상	(634)	71.5	.5	26.7	1.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81.3	.0	18.7	.0	100.0
자영업	(259)	71.6	.8	25.3	2.3	100.0
블루칼라	(233)	81.1	1.7	15.9	1.3	100.0
화이트칼라	(239)	75.8	.4	23.0	.8	100.0
전업주부	(247)	75.3	.0	23.5	1.2	100.0
학생/무직/기타	(190)	67.8	.5	28.5	3.2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75.8	.5	23.2	.5	100.0
200~299만원	(315)	74.0	1.0	21.9	3.2	100.0
300~399만원	(332)	74.7	.6	23.5	1.2	100.0
400만원이상	(347)	75.1	.6	22.9	1.4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0	66.7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72.4	.3	25.4	1.9	100.0
중부권	(118)	83.5	.0	16.5	.0	100.0
호남권	(119)	54.6	1.7	42.0	1.7	100.0
영남권	(324)	82.8	1.2	14.2	1.9	100.0
강원	(36)	80.6	.0	16.7	2.8	100.0
제주	(13)	69.2	.0	30.8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72.7	1.0	24.8	1.5	100.0
중도	(542)	73.3	.6	24.5	1.7	100.0
보수적	(261)	80.8	.4	16.9	1.9	100.0
▣ 종교별						
불교	(279)	80.9	.0	17.7	1.4	100.0
기독교	(282)	78.7	.4	19.5	1.4	100.0
천주교	(87)	66.7	2.3	27.5	3.4	100.0
기타	(6)	66.7	.0	33.3	.0	100.0
종교없음	(530)	71.9	.9	25.5	1.7	100.0
모름 / 무응답	(16)	37.5	.0	62.5	.0	100.0

표39-2.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중국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중국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 전체	(1200)	3.2	55.6	37.3	3.8	100.0
▣ 성별						
남자	(604)	2.6	55.2	38.0	4.1	100.0
여자	(596)	3.9	55.9	36.7	3.5	100.0
▣ 연령별						
19~29세	(303)	4.3	54.8	36.3	4.6	100.0
30대	(312)	4.5	46.8	45.2	3.5	100.0
40대	(305)	2.0	59.0	34.8	4.3	100.0
50대이상	(280)	2.1	62.5	32.5	2.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0	59.2	37.0	2.9	100.0
고졸	(461)	2.6	61.8	31.1	4.5	100.0
대재이상	(634)	4.1	50.5	41.9	3.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1	75.5	21.4	.0	100.0
자영업	(259)	4.2	52.5	37.9	5.3	100.0
블루칼라	(233)	3.0	61.4	33.0	2.6	100.0
화이트칼라	(239)	2.9	55.2	38.9	2.9	100.0
전업주부	(247)	1.6	53.9	41.3	3.2	100.0
학생/무직/기타	(190)	4.7	52.0	37.5	5.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3.5	53.6	39.0	4.0	100.0
200~299만원	(315)	4.8	55.0	36.8	3.4	100.0
300~399만원	(332)	3.6	56.0	36.5	3.9	100.0
400만원이상	(347)	1.4	57.3	37.8	3.5	100.0
모름 / 무응답	(3)	.0	.0	33.3	66.7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2.9	54.6	38.6	3.9	100.0
중부권	(118)	2.5	61.9	31.4	4.2	100.0
호남권	(119)	2.5	47.1	44.5	5.9	100.0
영남권	(324)	4.0	60.2	33.4	2.4	100.0
강원	(36)	8.3	50.0	41.7	.0	100.0
제주	(13)	.0	23.1	53.8	23.1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3.8	57.4	35.8	3.0	100.0
중도	(542)	3.3	53.3	39.0	4.4	100.0
보수적	(261)	2.3	57.5	36.4	3.8	100.0
▣ 종교별						
불교	(279)	3.6	63.1	31.2	2.2	100.0
기독교	(282)	4.3	57.1	34.4	4.3	100.0
천주교	(87)	3.4	48.2	47.2	1.1	100.0
기타	(6)	.0	66.7	33.3	.0	100.0
종교없음	(530)	2.6	52.5	39.8	5.1	100.0
모름 / 무응답	(16)	.0	37.5	62.5	.0	100.0

표39-3.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일본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일본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 전체	(1200)	17.1	2.2	71.6	9.0	100.0
▣ 성별						
남자	(604)	19.4	1.7	69.3	9.7	100.0
여자	(596)	14.7	2.9	74.1	8.4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6.8	2.0	69.6	11.6	100.0
30대	(312)	17.0	2.9	74.4	5.8	100.0
40대	(305)	16.4	2.3	71.1	10.2	100.0
50대이상	(280)	18.1	1.8	71.3	8.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6.3	1.0	75.1	7.6	100.0
고졸	(461)	16.6	3.0	70.3	10.1	100.0
대재이상	(634)	17.5	1.9	72.1	8.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22.5	.0	68.2	9.4	100.0
자영업	(259)	19.6	2.7	67.1	10.6	100.0
블루칼라	(233)	18.9	3.0	68.7	9.4	100.0
화이트칼라	(239)	13.8	2.5	76.2	7.5	100.0
전업주부	(247)	15.3	2.4	74.9	7.3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6.9	.5	72.0	10.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6.8	2.0	67.8	13.3	100.0
200~299만원	(315)	18.9	3.8	70.0	7.3	100.0
300~399만원	(332)	17.5	.9	72.9	8.7	100.0
400만원이상	(347)	15.3	2.3	74.5	7.9	100.0
모름 / 무응답	(3)	.0	.0	33.3	66.7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8.0	1.9	72.4	7.8	100.0
중부권	(118)	16.9	2.5	73.3	7.2	100.0
호남권	(119)	16.8	2.5	68.1	12.6	100.0
영남권	(324)	13.8	3.1	72.3	10.8	100.0
강원	(36)	30.6	.0	63.9	5.6	100.0
제주	(13)	23.1	.0	61.5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6.4	3.3	70.4	9.9	100.0
중도	(542)	18.6	2.2	71.2	7.9	100.0
보수적	(261)	14.9	.8	74.4	10.0	100.0
▣ 종교별						
불교	(279)	16.6	2.5	73.9	7.0	100.0
기독교	(282)	17.4	1.1	70.6	11.0	100.0
천주교	(87)	19.5	2.3	69.0	9.2	100.0
기타	(6)	16.7	16.7	50.0	16.7	100.0
종교없음	(530)	16.9	2.6	71.6	8.9	100.0
모름 / 무응답	(16)	12.5	.0	75.0	12.5	100.0

표39-4. 한반도 전쟁 시 주변4국의 태도 예상 - ㉣ 러시아

문)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러시아

	사례수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계
		%	%	%	%	%
■ 전체	(1200)	5.7	19.2	59.5	15.5	100.0
▣ 성별						
남자	(604)	4.8	20.2	59.8	15.2	100.0
여자	(596)	6.7	18.2	59.3	15.8	100.0
▣ 연령별						
19~29세	(303)	6.6	17.8	57.1	18.5	100.0
30대	(312)	8.3	14.4	61.5	15.7	100.0
40대	(305)	3.6	21.6	60.0	14.8	100.0
50대이상	(280)	4.2	23.4	59.5	12.9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4.8	22.5	56.5	16.2	100.0
고졸	(461)	6.3	21.5	57.2	15.1	100.0
대재이상	(634)	5.5	17.0	61.8	15.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6.2	34.9	43.2	15.6	100.0
자영업	(259)	7.3	17.7	60.4	14.7	100.0
블루칼라	(233)	9.0	19.8	58.7	12.4	100.0
화이트칼라	(239)	3.3	18.8	61.2	16.7	100.0
전업주부	(247)	4.1	19.0	63.2	13.8	100.0
학생/무직/기타	(190)	4.7	18.7	55.4	21.1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5.9	22.5	54.7	16.8	100.0
200~299만원	(315)	7.2	24.4	53.7	14.6	100.0
300~399만원	(332)	4.8	17.5	62.1	15.7	100.0
400만원이상	(347)	5.2	14.4	65.4	15.0	100.0
모름 / 무응답	(3)	.0	.0	33.3	66.7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5.6	15.6	63.7	15.1	100.0
중부권	(118)	7.6	23.3	56.4	12.7	100.0
호남권	(119)	5.9	21.8	58.8	13.4	100.0
영남권	(324)	4.9	22.6	54.9	17.6	100.0
강원	(36)	8.3	27.8	52.8	11.1	100.0
제주	(13)	7.7	15.4	38.5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6.3	20.4	58.2	15.1	100.0
중도	(542)	6.1	17.1	61.5	15.3	100.0
보수적	(261)	4.2	21.8	57.5	16.5	100.0
▣ 종교별						
불교	(279)	7.2	19.6	57.4	15.8	100.0
기독교	(282)	5.0	14.5	62.8	17.7	100.0
천주교	(87)	6.9	17.2	65.6	10.3	100.0
기타	(6)	33.3	.0	50.0	16.7	100.0
종교없음	(530)	4.9	22.1	57.8	15.3	100.0
모름 / 무응답	(16)	6.3	18.8	68.8	6.3	100.0

표40-1.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미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국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9.5	32.9	42.4	47.2	10.4	57.6	100.0
▣ 성별								
남자	(604)	10.3	32.5	42.7	46.2	11.0	57.3	100.0
여자	(596)	8.7	33.4	42.1	48.2	9.7	57.9	100.0
▣ 연령별								
19~29세	(303)	7.6	32.0	39.6	50.2	10.2	60.4	100.0
30대	(312)	8.0	34.9	42.9	45.2	11.9	57.1	100.0
40대	(305)	10.5	30.5	41.0	49.2	9.8	59.0	100.0
50대이상	(280)	12.1	34.4	46.4	44.1	9.5	53.6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9.4	36.8	46.2	48.0	5.7	53.8	100.0
고졸	(461)	9.1	35.3	44.4	44.2	11.4	55.6	100.0
대재이상	(634)	9.8	30.5	40.3	49.3	10.4	59.7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0	25.0	25.0	62.6	12.5	75.0	100.0
자영업	(259)	10.0	32.3	42.3	45.5	12.2	57.7	100.0
블루칼라	(233)	12.0	33.4	45.5	45.5	9.0	54.5	100.0
화이트칼라	(239)	10.9	31.7	42.6	47.8	9.6	57.4	100.0
전업주부	(247)	9.7	35.7	45.3	46.6	8.1	54.7	100.0
학생/무직/기타	(190)	5.3	32.5	37.7	49.1	13.2	62.3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7.8	38.3	46.2	40.0	13.8	53.8	100.0
200~299만원	(315)	6.0	28.5	34.6	56.6	8.9	65.4	100.0
300~399만원	(332)	7.2	30.7	37.9	53.3	8.7	62.1	100.0
400만원이상	(347)	15.8	36.2	52.0	36.9	11.1	48.0	100.0
모름 / 무응답	(3)	.0	.0	.0	66.7	33.3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3.2	30.5	43.7	44.9	11.4	56.3	100.0
중부권	(118)	5.9	41.5	47.5	45.3	7.2	52.5	100.0
호남권	(119)	5.0	31.1	36.1	47.9	16.0	63.9	100.0
영남권	(324)	6.4	34.6	41.1	53.1	5.9	58.9	100.0
강원	(36)	2.8	36.1	38.9	41.7	19.4	61.1	100.0
제주	(13)	7.7	30.8	38.5	30.8	30.8	61.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2.3	28.6	40.9	43.8	15.2	59.1	100.0
중도	(542)	8.3	36.3	44.5	48.5	7.0	55.5	100.0
보수적	(261)	7.7	32.6	40.3	49.7	10.0	59.7	100.0
▣ 종교별								
불교	(279)	10.4	37.0	47.3	43.9	8.8	52.7	100.0
기독교	(282)	13.1	32.6	45.7	43.3	11.0	54.3	100.0
천주교	(87)	5.7	38.1	43.8	44.7	11.5	56.2	100.0
기타	(6)	33.3	.0	33.3	16.7	50.0	66.7	100.0
종교없음	(530)	7.7	30.7	38.5	51.7	9.8	61.5	100.0
모름 / 무응답	(16)	.0	25.0	25.0	50.0	25.0	75.0	100.0

표40-2.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중국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국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1.3	13.6	14.9	68.0	17.1	85.1	100.0
▣ 성별								
남자	(604)	1.0	13.6	14.6	66.9	18.6	85.4	100.0
여자	(596)	1.7	13.6	15.3	69.2	15.6	84.7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3	13.9	15.2	68.3	16.5	84.8	100.0
30대	(312)	1.6	14.4	16.0	64.7	19.2	84.0	100.0
40대	(305)	1.0	14.8	15.7	67.9	16.4	84.3	100.0
50대이상	(280)	1.4	11.1	12.5	71.4	16.1	87.5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0	12.4	12.4	68.9	18.7	87.6	100.0
고졸	(461)	1.3	13.4	14.7	67.8	17.5	85.3	100.0
대재이상	(634)	1.6	13.9	15.5	68.0	16.6	84.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0	9.4	9.4	65.5	25.1	90.6	100.0
자영업	(259)	1.5	12.0	13.5	68.9	17.6	86.5	100.0
블루칼라	(233)	2.6	16.3	18.9	63.1	18.0	81.1	100.0
화이트칼라	(239)	1.7	14.2	15.9	68.3	15.9	84.1	100.0
전업주부	(247)	.4	12.6	13.0	73.7	13.4	87.0	100.0
학생/무직/기타	(190)	.5	13.7	14.2	65.4	20.3	85.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2.0	12.9	14.8	65.5	19.6	85.2	100.0
200~299만원	(315)	1.0	12.7	13.6	69.9	16.5	86.4	100.0
300~399만원	(332)	.9	11.1	12.0	70.5	17.4	88.0	100.0
400만원이상	(347)	1.7	17.3	19.0	65.0	16.0	81.0	100.0
모름 / 무응답	(3)	.0	.0	.0	100.0	.0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2.0	14.6	16.6	66.9	16.4	83.4	100.0
중부권	(118)	.8	14.4	15.3	71.2	13.6	84.7	100.0
호남권	(119)	1.7	13.4	15.1	68.9	16.0	84.9	100.0
영남권	(324)	.0	11.7	11.7	70.0	18.2	88.3	100.0
강원	(36)	2.8	13.9	16.7	58.3	25.0	83.3	100.0
제주	(13)	.0	7.7	7.7	53.8	38.5	92.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5	16.9	18.4	59.6	22.0	81.6	100.0
중도	(542)	1.3	12.7	14.0	72.6	13.4	86.0	100.0
보수적	(261)	1.2	10.4	11.5	71.3	17.2	88.5	100.0
▣ 종교별								
불교	(279)	1.4	15.4	16.9	66.6	16.5	83.1	100.0
기독교	(282)	1.4	19.1	20.6	64.9	14.5	79.4	100.0
천주교	(87)	5.7	6.9	12.6	72.5	14.9	87.4	100.0
기타	(6)	.0	16.7	16.7	33.3	50.0	83.3	100.0
종교없음	(530)	.6	10.9	11.5	70.2	18.3	88.5	100.0
모름 / 무응답	(16)	.0	6.3	6.3	62.5	31.3	93.8	100.0

표40-3.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일본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본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1.5	17.3	18.8	64.1	17.2	81.2	100.0
▣ 성별								
남자	(604)	1.8	16.1	17.9	63.4	18.7	82.1	100.0
여자	(596)	1.2	18.5	19.6	64.8	15.6	80.4	100.0
▣ 연령별								
19~29세	(303)	2.0	15.8	17.8	65.0	17.2	82.2	100.0
30대	(312)	.6	19.6	20.2	59.6	20.2	79.8	100.0
40대	(305)	1.6	16.4	18.0	67.2	14.8	82.0	100.0
50대이상	(280)	1.8	17.2	19.0	64.6	16.4	81.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0	17.2	17.2	65.1	17.7	82.8	100.0
고졸	(461)	1.7	16.0	17.8	64.8	17.5	82.2	100.0
대재이상	(634)	1.6	18.2	19.7	63.4	16.9	80.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0	9.4	9.4	75.0	15.6	90.6	100.0
자영업	(259)	1.9	15.1	17.1	63.1	19.9	82.9	100.0
블루칼라	(233)	1.7	19.3	21.0	64.4	14.6	79.0	100.0
화이트칼라	(239)	2.5	18.8	21.3	62.0	16.7	78.7	100.0
전업주부	(247)	.4	17.8	18.2	66.4	15.4	81.8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1	16.4	17.4	62.8	19.8	82.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5	17.3	18.8	60.7	20.5	81.2	100.0
200~299만원	(315)	1.0	15.2	16.2	68.6	15.2	83.8	100.0
300~399만원	(332)	1.8	13.9	15.7	68.7	15.7	84.3	100.0
400만원이상	(347)	1.7	22.5	24.3	57.2	18.6	75.7	100.0
모름 / 무응답	(3)	.0	.0	.0	100.0	.0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2.0	20.3	22.4	60.2	17.5	77.6	100.0
중부권	(118)	1.7	21.2	22.9	60.2	16.9	77.1	100.0
호남권	(119)	1.7	17.6	19.3	63.9	16.8	80.7	100.0
영남권	(324)	.3	11.5	11.8	72.8	15.4	88.2	100.0
강원	(36)	2.8	8.3	11.1	61.1	27.8	88.9	100.0
제주	(13)	.0	7.7	7.7	69.2	23.1	92.3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8	19.6	21.4	56.8	21.8	78.6	100.0
중도	(542)	1.3	17.6	18.8	68.9	12.3	81.2	100.0
보수적	(261)	1.5	13.0	14.6	65.1	20.3	85.4	100.0
▣ 종교별								
불교	(279)	2.5	13.6	16.1	64.8	19.0	83.9	100.0
기독교	(282)	1.1	22.7	23.8	61.0	15.2	76.2	100.0
천주교	(87)	1.1	24.3	25.5	57.3	17.2	74.5	100.0
기타	(6)	.0	16.7	16.7	33.3	50.0	83.3	100.0
종교없음	(530)	1.3	15.5	16.8	67.0	16.2	83.2	100.0
모름 / 무응답	(16)	.0	6.3	6.3	56.3	37.5	93.8	100.0

표40-4. 주변국가별 남북한 통일 희망 정도 - ㉣ 러시아

문)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 러시아

	사례수	① 매우 원한다	② 원하는 편이다	①+②	③ 원하지 않는 편이다	④ 전혀 원하지 않는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1.3	17.3	18.6	68.9	12.5	81.4	100.0
▣ 성별								
남자	(604)	1.5	15.8	17.3	69.6	13.1	82.7	100.0
여자	(596)	1.2	18.8	20.0	68.1	11.9	80.0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3	13.9	15.2	71.9	12.9	84.8	100.0
30대	(312)	1.0	23.1	24.0	63.1	12.8	76.0	100.0
40대	(305)	1.3	15.7	17.0	72.1	10.8	83.0	100.0
50대이상	(280)	1.8	16.1	17.9	68.5	13.6	82.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0	19.1	20.1	64.1	15.8	79.9	100.0
고졸	(461)	1.3	16.5	17.8	69.8	12.5	82.2	100.0
대재이상	(634)	1.4	17.5	19.0	69.1	12.0	81.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0	9.4	9.4	68.6	22.0	90.6	100.0
자영업	(259)	1.9	15.5	17.4	69.6	12.9	82.6	100.0
블루칼라	(233)	1.3	20.6	21.9	64.8	13.3	78.1	100.0
화이트칼라	(239)	1.7	19.6	21.3	67.8	10.9	78.7	100.0
전업주부	(247)	.4	19.1	19.5	71.2	9.3	80.5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6	11.6	13.2	71.2	15.6	86.8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5	16.8	18.3	66.0	15.7	81.7	100.0
200~299만원	(315)	1.3	15.5	16.8	70.8	12.4	83.2	100.0
300~399만원	(332)	1.5	15.1	16.6	72.6	10.8	83.4	100.0
400만원이상	(347)	1.2	21.4	22.5	64.9	12.5	77.5	100.0
모름 / 무응답	(3)	.0	.0	.0	100.0	.0	100.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2.0	16.9	19.0	67.6	13.4	81.0	100.0
중부권	(118)	.8	21.2	22.0	68.6	9.3	78.0	100.0
호남권	(119)	1.7	19.3	21.0	65.5	13.4	79.0	100.0
영남권	(324)	.3	16.1	16.4	72.8	10.8	83.6	100.0
강원	(36)	.0	13.9	13.9	63.9	22.2	86.1	100.0
제주	(13)	.0	15.4	15.4	76.9	7.7	84.6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2.0	17.6	19.6	63.1	17.3	80.4	100.0
중도	(542)	.7	18.3	19.0	70.9	10.1	81.0	100.0
보수적	(261)	1.5	14.6	16.1	73.6	10.3	83.9	100.0
▣ 종교별								
불교	(279)	1.8	19.0	20.8	65.9	13.3	79.2	100.0
기독교	(282)	1.4	19.5	20.9	67.7	11.3	79.1	100.0
천주교	(87)	.0	16.3	16.3	68.8	14.9	83.7	100.0
기타	(6)	16.7	.0	16.7	33.3	50.0	83.3	100.0
종교없음	(530)	1.1	16.0	17.2	71.3	11.5	82.8	100.0
모름 / 무응답	(16)	.0	.0	.0	75.0	25.0	100.0	100.0

표41. 남북한 통일에 주변국 협조 필요 정도

문) ○○님은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약간 필요하다	①+②	③ 별로 필요 하지 않다	④ 전혀 필요 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44.3	48.4	92.7	6.0	1.3	7.3	100.0
▣ 성별								
남자	(604)	47.4	45.2	92.6	5.9	1.5	7.4	100.0
여자	(596)	41.2	51.6	92.8	6.0	1.2	7.2	100.0
▣ 연령별								
19~29세	(303)	36.3	54.8	91.1	7.6	1.3	8.9	100.0
30대	(312)	43.9	51.6	95.5	2.9	1.6	4.5	100.0
40대	(305)	53.4	39.3	92.8	6.2	1.0	7.2	100.0
50대이상	(280)	43.5	47.7	91.2	7.4	1.4	8.8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37.8	54.5	92.4	5.7	1.9	7.6	100.0
고졸	(461)	43.6	48.5	92.1	6.4	1.5	7.9	100.0
대재이상	(634)	45.9	47.3	93.2	5.7	1.1	6.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25.1	53.0	78.2	18.7	3.1	21.8	100.0
자영업	(259)	52.8	39.7	92.5	6.4	1.2	7.5	100.0
블루칼라	(233)	48.5	45.0	93.6	3.9	2.6	6.4	100.0
화이트칼라	(239)	43.9	50.5	94.5	4.3	1.3	5.5	100.0
전업주부	(247)	37.7	55.4	93.1	6.1	.8	6.9	100.0
학생/무직/기타	(190)	39.8	51.7	91.6	7.9	.5	8.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47.3	45.8	93.1	4.4	2.5	6.9	100.0
200~299만원	(315)	43.4	47.0	90.4	8.6	1.0	9.6	100.0
300~399만원	(332)	46.4	48.2	94.6	5.1	.3	5.4	100.0
400만원이상	(347)	41.2	51.5	92.7	5.3	2.0	7.3	100.0
모름 / 무응답	(3)	66.7	33.3	100.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45.3	48.6	93.9	4.6	1.5	6.1	100.0
중부권	(118)	49.6	41.5	91.1	8.1	.8	8.9	100.0
호남권	(119)	42.9	47.1	89.9	8.4	1.7	10.1	100.0
영남권	(324)	40.5	52.3	92.8	6.9	.3	7.2	100.0
강원	(36)	47.2	38.9	86.1	5.6	8.3	13.9	100.0
제주	(13)	53.8	38.5	92.3	7.7	.0	7.7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46.1	48.5	94.6	3.9	1.5	5.4	100.0
중도	(542)	43.0	49.9	92.8	6.5	.7	7.2	100.0
보수적	(261)	44.5	45.1	89.6	8.1	2.3	10.4	100.0
▣ 종교별								
불교	(279)	46.2	47.1	93.3	5.3	1.4	6.7	100.0
기독교	(282)	42.9	50.4	93.3	5.0	1.8	6.7	100.0
천주교	(87)	45.9	51.8	97.7	2.3	.0	2.3	100.0
기타	(6)	83.3	16.7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43.0	48.3	91.3	7.4	1.3	8.7	100.0
모름 / 무응답	(16)	56.3	31.3	87.5	12.5	.0	12.5	100.0

표42-1.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미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미국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①+②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 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51.5	42.8	94.3	4.7	1.0	5.7	100.0
▣ 성별								
남자	(604)	56.2	37.3	93.5	5.2	1.3	6.5	100.0
여자	(596)	46.7	48.4	95.1	4.2	.7	4.9	100.0
▣ 연령별								
19~29세	(303)	47.9	44.9	92.7	6.3	1.0	7.3	100.0
30대	(312)	51.6	42.6	94.2	4.5	1.3	5.8	100.0
40대	(305)	54.4	41.0	95.4	4.3	.3	4.6	100.0
50대이상	(280)	52.2	42.7	94.9	3.6	1.4	5.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42.3	51.1	93.3	5.7	1.0	6.7	100.0
고졸	(461)	53.1	41.9	95.0	3.7	1.3	5.0	100.0
대재이상	(634)	51.9	42.1	94.0	5.2	.8	6.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3.9	50.5	84.4	15.6	.0	15.6	100.0
자영업	(259)	55.5	39.9	95.4	2.7	1.9	4.6	100.0
블루칼라	(233)	55.4	39.9	95.3	3.9	.9	4.7	100.0
화이트칼라	(239)	51.4	42.7	94.1	4.7	1.3	5.9	100.0
전업주부	(247)	47.8	47.4	95.1	4.9	.0	4.9	100.0
학생/무직/기타	(190)	49.3	43.3	92.6	6.3	1.1	7.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56.5	38.5	95.1	4.0	1.0	4.9	100.0
200~299만원	(315)	47.2	44.1	91.4	7.4	1.3	8.6	100.0
300~399만원	(332)	51.8	44.9	96.7	3.0	.3	3.3	100.0
400만원이상	(347)	52.7	41.5	94.2	4.3	1.4	5.8	100.0
모름 / 무응답	(3)	.0	100.0	100.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52.5	42.4	94.9	3.6	1.5	5.1	100.0
중부권	(118)	53.0	41.1	94.1	5.1	.8	5.9	100.0
호남권	(119)	44.5	47.9	92.4	6.7	.8	7.6	100.0
영남권	(324)	51.8	42.0	93.8	5.9	.3	6.2	100.0
강원	(36)	44.4	50.0	94.4	5.6	.0	5.6	100.0
제주	(13)	69.2	30.8	100.0	.0	.0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52.6	43.6	96.2	2.8	1.0	3.8	100.0
중도	(542)	50.0	44.4	94.5	4.8	.7	5.5	100.0
보수적	(261)	52.9	38.2	91.1	7.4	1.5	8.9	100.0
▣ 종교별								
불교	(279)	56.1	38.1	94.2	4.7	1.1	5.8	100.0
기독교	(282)	52.8	41.8	94.7	4.6	.7	5.3	100.0
천주교	(87)	56.2	39.2	95.4	4.6	.0	4.6	100.0
기타	(6)	50.0	33.3	83.3	16.7	.0	16.7	100.0
종교없음	(530)	47.9	46.2	94.2	4.7	1.1	5.8	100.0
모름 / 무응답	(16)	43.8	50.0	93.8	.0	6.3	6.3	100.0

표42-2.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중국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중국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①+②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 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36.4	52.6	89.0	9.5	1.5	11.0	100.0
▣ 성별								
남자	(604)	40.3	48.3	88.6	9.4	2.1	11.4	100.0
여자	(596)	32.5	56.9	89.4	9.6	1.0	10.6	100.0
▣ 연령별								
19~29세	(303)	31.0	53.1	84.2	13.5	2.3	15.8	100.0
30대	(312)	38.5	51.3	89.7	8.3	1.9	10.3	100.0
40대	(305)	42.6	50.8	93.4	6.2	.3	6.6	100.0
50대이상	(280)	33.3	55.3	88.6	9.8	1.6	11.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25.7	61.0	86.6	12.4	1.0	13.4	100.0
고졸	(461)	37.5	50.6	88.2	10.2	1.6	11.8	100.0
대재이상	(634)	37.4	52.6	90.0	8.4	1.6	10.0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8.7	62.6	81.3	18.7	.0	18.7	100.0
자영업	(259)	39.7	48.3	88.0	10.6	1.4	12.0	100.0
블루칼라	(233)	38.3	53.2	91.4	6.9	1.7	8.6	100.0
화이트칼라	(239)	40.2	51.9	92.1	5.4	2.5	7.9	100.0
전업주부	(247)	33.6	56.7	90.3	9.7	.0	9.7	100.0
학생/무직/기타	(190)	31.7	51.5	83.1	14.2	2.6	16.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38.0	50.1	88.1	10.9	1.0	11.9	100.0
200~299만원	(315)	38.4	50.2	88.6	9.5	1.9	11.4	100.0
300~399만원	(332)	35.9	52.7	88.6	10.2	1.2	11.4	100.0
400만원이상	(347)	34.3	55.9	90.2	7.9	1.9	9.8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66.7	100.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32.9	56.3	89.2	9.0	1.9	10.8	100.0
중부권	(118)	39.8	48.3	88.1	8.9	3.0	11.9	100.0
호남권	(119)	34.5	48.7	83.2	16.0	.8	16.8	100.0
영남권	(324)	40.5	50.8	91.4	7.7	.9	8.6	100.0
강원	(36)	47.2	41.7	88.9	11.1	.0	11.1	100.0
제주	(13)	53.8	30.8	84.6	15.4	.0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40.3	49.9	90.2	8.4	1.4	9.8	100.0
중도	(542)	35.3	53.9	89.1	9.2	1.7	10.9	100.0
보수적	(261)	33.0	54.0	87.0	11.5	1.5	13.0	100.0
▣ 종교별								
불교	(279)	38.4	51.2	89.6	8.4	2.0	10.4	100.0
기독교	(282)	38.7	49.3	87.9	11.3	.7	12.1	100.0
천주교	(87)	41.3	48.4	89.7	9.2	1.1	10.3	100.0
기타	(6)	50.0	50.0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33.2	55.6	88.9	9.4	1.7	11.1	100.0
모름 / 무응답	(16)	37.5	56.3	93.8	.0	6.3	6.3	100.0

표42-3.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일본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일본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①+②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 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19.2	57.4	76.6	19.7	3.7	23.4	100.0
▣ 성별								
남자	(604)	21.2	55.3	76.5	17.7	5.8	23.5	100.0
여자	(596)	17.1	59.6	76.7	21.8	1.5	23.3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4.2	60.4	74.6	22.1	3.3	25.4	100.0
30대	(312)	19.2	55.4	74.7	21.5	3.8	25.3	100.0
40대	(305)	24.9	54.4	79.3	17.4	3.3	20.7	100.0
50대이상	(280)	18.2	59.7	77.9	17.9	4.3	22.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3.2	58.6	71.8	22.5	5.7	28.2	100.0
고졸	(461)	20.2	55.8	75.9	20.2	3.9	24.1	100.0
대재이상	(634)	19.4	58.4	77.8	19.0	3.2	22.2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2.5	59.4	71.9	25.0	3.1	28.1	100.0
자영업	(259)	21.6	55.6	77.2	17.0	5.8	22.8	100.0
블루칼라	(233)	22.7	55.4	78.1	17.6	4.3	21.9	100.0
화이트칼라	(239)	22.1	57.0	79.1	18.0	2.9	20.9	100.0
전업주부	(247)	17.4	57.5	74.9	23.9	1.2	25.1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1.1	62.5	73.6	22.2	4.2	26.4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22.2	55.6	77.8	17.3	4.9	22.2	100.0
200~299만원	(315)	17.8	58.0	75.8	21.4	2.9	24.2	100.0
300~399만원	(332)	20.2	54.8	75.0	21.7	3.3	25.0	100.0
400만원이상	(347)	17.9	60.7	78.5	17.7	3.7	21.5	100.0
모름 / 무응답	(3)	.0	33.3	33.3	33.3	33.3	66.7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9.0	56.3	75.3	20.5	4.2	24.7	100.0
중부권	(118)	23.7	56.8	80.5	16.9	2.5	19.5	100.0
호남권	(119)	23.5	43.7	67.2	26.9	5.9	32.8	100.0
영남권	(324)	13.8	66.4	80.2	17.9	1.9	19.8	100.0
강원	(36)	38.9	41.7	80.6	11.1	8.3	19.4	100.0
제주	(13)	23.1	61.5	84.6	15.4	.0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21.4	57.8	79.2	16.0	4.8	20.8	100.0
중도	(542)	18.6	57.7	76.3	20.6	3.1	23.7	100.0
보수적	(261)	16.9	56.3	73.1	23.8	3.1	26.9	100.0
▣ 종교별								
불교	(279)	19.3	57.9	77.2	18.5	4.3	22.8	100.0
기독교	(282)	21.3	52.8	74.1	22.7	3.2	25.9	100.0
천주교	(87)	25.2	63.3	88.5	6.9	4.6	11.5	100.0
기타	(6)	50.0	50.0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16.6	58.8	75.4	21.8	2.8	24.6	100.0
모름 / 무응답	(16)	18.8	56.3	75.0	.0	25.0	25.0	100.0

표42-4. 국가별 남북한 통일 협조 필요 정도 - ㉣ 러시아

문)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 러시아

	사례수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한 편이다	①+②	③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④ 전혀 필요 하지 않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18.8	55.3	74.1	22.8	3.0	25.9	100.0
▣ 성별								
남자	(604)	22.1	52.2	74.3	22.0	3.7	25.7	100.0
여자	(596)	15.6	58.4	74.0	23.7	2.3	26.0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3.9	58.1	71.9	25.4	2.6	28.1	100.0
30대	(312)	19.6	52.9	72.4	24.4	3.2	27.6	100.0
40대	(305)	24.6	54.8	79.3	17.7	3.0	20.7	100.0
50대이상	(280)	17.2	55.5	72.7	23.9	3.4	27.3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3.2	53.8	67.0	28.2	4.8	33.0	100.0
고졸	(461)	19.9	54.4	74.3	21.9	3.8	25.7	100.0
대재이상	(634)	19.0	56.2	75.2	22.6	2.2	24.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12.5	53.2	65.7	25.0	9.4	34.3	100.0
자영업	(259)	21.6	53.5	75.1	20.5	4.4	24.9	100.0
블루칼라	(233)	21.9	54.1	76.0	22.3	1.7	24.0	100.0
화이트칼라	(239)	21.8	55.2	77.0	20.1	2.9	23.0	100.0
전업주부	(247)	17.0	55.5	72.4	25.5	2.0	27.6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1.1	59.4	70.4	26.4	3.2	29.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20.7	54.6	75.3	21.8	3.0	24.7	100.0
200~299만원	(315)	17.1	58.0	75.1	22.3	2.5	24.9	100.0
300~399만원	(332)	19.6	55.1	74.7	22.3	3.0	25.3	100.0
400만원이상	(347)	18.7	53.3	72.1	24.6	3.3	27.9	100.0
모름 / 무응답	(3)	.0	66.7	66.7	.0	33.3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9.2	52.5	71.7	25.4	2.9	28.3	100.0
중부권	(118)	23.7	54.7	78.4	17.8	3.8	21.6	100.0
호남권	(119)	21.0	50.4	71.4	22.7	5.9	28.6	100.0
영남권	(324)	14.2	62.9	77.2	20.7	2.2	22.8	100.0
강원	(36)	33.3	44.4	77.8	19.4	2.8	22.2	100.0
제주	(13)	15.4	69.2	84.6	15.4	.0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21.2	55.2	76.3	20.0	3.7	23.7	100.0
중도	(542)	17.9	57.3	75.2	22.2	2.6	24.8	100.0
보수적	(261)	17.3	51.3	68.5	28.4	3.1	31.5	100.0
▣ 종교별								
불교	(279)	18.0	56.9	74.9	21.0	4.1	25.1	100.0
기독교	(282)	20.9	52.5	73.4	23.0	3.5	26.6	100.0
천주교	(87)	25.2	53.0	78.2	20.6	1.1	21.8	100.0
기타	(6)	50.0	50.0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16.8	56.3	73.1	24.6	2.3	26.9	100.0
모름 / 무응답	(16)	18.8	56.3	75.0	12.5	12.5	25.0	100.0

표43.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중요한 것

문) ○○님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남북관계 개선	한미공조	똑같이 중요하다	모름/무응답	계
		%	%	%	%	%
■ 전체	(1200)	37.9	19.1	42.6	.4	100.0
▣ 성별						
남자	(604)	38.4	19.4	41.9	.3	100.0
여자	(596)	37.4	18.8	43.2	.5	100.0
▣ 연령별						
19~29세	(303)	32.0	20.8	46.9	.3	100.0
30대	(312)	43.3	15.1	41.0	.6	100.0
40대	(305)	43.6	18.4	38.0	.0	100.0
50대이상	(280)	32.0	22.6	44.6	.7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32.0	24.2	43.8	.0	100.0
고졸	(461)	34.1	19.7	45.8	.4	100.0
대재이상	(634)	41.6	17.9	40.1	.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4.3	22.0	43.7	.0	100.0
자영업	(259)	41.5	15.0	43.5	.0	100.0
블루칼라	(233)	40.3	18.0	41.7	.0	100.0
화이트칼라	(239)	42.3	18.0	38.8	.8	100.0
전업주부	(247)	33.6	23.0	42.6	.8	100.0
학생/무직/기타	(190)	30.6	21.9	47.0	.5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32.6	24.4	42.9	.0	100.0
200~299만원	(315)	38.2	17.7	43.8	.3	100.0
300~399만원	(332)	41.3	16.5	41.3	.9	100.0
400만원이상	(347)	37.4	19.9	42.3	.3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0	66.7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38.6	14.9	45.6	.8	100.0
중부권	(118)	38.6	26.7	34.7	.0	100.0
호남권	(119)	44.5	11.8	43.7	.0	100.0
영남권	(324)	34.3	28.1	37.6	.0	100.0
강원	(36)	38.9	8.3	52.8	.0	100.0
제주	(13)	23.1	15.4	61.5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41.1	16.9	41.8	.3	100.0
중도	(542)	35.5	16.5	47.4	.6	100.0
보수적	(261)	38.0	28.0	33.7	.4	100.0
▣ 종교별						
불교	(279)	38.8	23.5	37.6	.0	100.0
기독교	(282)	37.9	17.0	44.7	.4	100.0
천주교	(87)	39.0	11.7	47.0	2.3	100.0
기타	(6)	100.0	.0	.0	.0	100.0
종교없음	(530)	36.5	19.7	43.4	.4	100.0
모름 / 무응답	(16)	37.5	6.3	56.3	.0	100.0

표44. 한반도 전쟁 가능성

문)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례수	① 많이 있다	② 약간 있다	①+②	③ 별로 없다	④ 전혀 없다	③+④	계
		%	%	%	%	%	%	%
■ 전체	(1200)	5.7	45.1	50.8	41.6	7.7	49.2	100.0
▣ 성별								
남자	(604)	6.1	44.5	50.6	40.9	8.5	49.4	100.0
여자	(596)	5.2	45.7	50.9	42.2	6.9	49.1	100.0
▣ 연령별								
19~29세	(303)	7.6	51.2	58.7	35.0	6.3	41.3	100.0
30대	(312)	6.7	46.2	52.9	40.1	7.1	47.1	100.0
40대	(305)	4.6	43.3	47.9	44.6	7.5	52.1	100.0
50대이상	(280)	3.6	39.3	42.9	47.0	10.1	57.1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8.6	36.0	44.6	49.8	5.6	55.4	100.0
고졸	(461)	2.8	45.5	48.3	43.4	8.3	51.7	100.0
대재이상	(634)	7.3	46.3	53.5	38.9	7.6	46.5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3.1	24.5	27.6	63.0	9.4	72.4	100.0
자영업	(259)	6.2	43.2	49.3	40.9	9.7	50.7	100.0
블루칼라	(233)	5.6	40.3	45.9	45.0	9.1	54.1	100.0
화이트칼라	(239)	5.0	51.8	56.8	37.3	5.8	43.2	100.0
전업주부	(247)	2.4	44.9	47.4	46.2	6.4	52.6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0.6	48.8	59.4	33.8	6.9	40.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7.9	45.2	53.1	38.6	8.3	46.9	100.0
200~299만원	(315)	6.7	46.1	52.7	40.9	6.4	47.3	100.0
300~399만원	(332)	5.1	48.4	53.6	40.4	6.0	46.4	100.0
400만원이상	(347)	3.7	40.8	44.5	45.4	10.1	55.5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66.7	100.0	.0	.0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5.9	44.6	50.5	41.0	8.5	49.5	100.0
중부권	(118)	4.2	49.6	53.8	39.4	6.8	46.2	100.0
호남권	(119)	7.6	48.7	56.3	32.8	10.9	43.7	100.0
영남권	(324)	4.9	40.6	45.5	49.7	4.7	54.5	100.0
강원	(36)	5.6	66.7	72.2	13.9	13.9	27.8	100.0
제주	(13)	7.7	46.2	53.8	38.5	7.7	46.2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7.1	47.2	54.3	39.2	6.5	45.7	100.0
중도	(542)	4.8	44.4	49.2	42.1	8.7	50.8	100.0
보수적	(261)	5.4	43.3	48.7	44.1	7.2	51.3	100.0
▣ 종교별								
불교	(279)	5.0	46.5	51.6	44.5	3.9	48.4	100.0
기독교	(282)	6.7	46.8	53.5	39.4	7.1	46.5	100.0
천주교	(87)	4.6	51.6	56.2	33.3	10.6	43.8	100.0
기타	(6)	.0	33.3	33.3	66.7	.0	66.7	100.0
종교없음	(530)	5.8	42.1	48.0	42.4	9.6	52.0	100.0
모름 / 무응답	(16)	.0	56.3	56.3	37.5	6.3	43.8	100.0

표45. 천안함 사건의 침몰원인에 대한 정부 조사 결과 신뢰도

문) ○○님은 천안함 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전적으로 신뢰한다	② 신뢰하는 편이다	①+②	③ 반반	④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6.4	26.1	32.5	31.7	25.0	10.7	35.8	100.0
▣ 성별									
남자	(604)	8.6	25.3	34.0	29.5	23.6	12.9	36.5	100.0
여자	(596)	4.2	26.8	31.0	34.0	26.4	8.6	35.0	100.0
▣ 연령별									
19~29세	(303)	3.6	19.1	22.8	32.7	30.4	14.2	44.6	100.0
30대	(312)	2.2	24.0	26.3	30.1	28.5	15.1	43.6	100.0
40대	(305)	5.9	26.9	32.8	34.1	24.3	8.9	33.1	100.0
50대이상	(280)	14.7	34.9	49.6	30.0	16.1	4.3	20.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10.5	36.4	46.9	29.5	19.8	3.8	23.6	100.0
고졸	(461)	6.9	28.0	35.0	33.4	23.2	8.5	31.6	100.0
대재이상	(634)	5.4	22.9	28.3	30.9	27.2	13.6	40.8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6.2	34.9	41.2	25.0	30.7	3.1	33.9	100.0
자영업	(259)	10.4	25.5	35.9	31.2	20.9	12.0	32.9	100.0
블루칼라	(233)	5.1	23.2	28.3	33.1	27.9	10.7	38.6	100.0
화이트칼라	(239)	4.7	26.4	31.1	29.7	25.9	13.4	39.3	100.0
전업주부	(247)	5.3	32.8	38.0	32.8	23.1	6.1	29.2	100.0
학생/무직/기타	(190)	6.3	19.8	26.1	33.2	27.4	13.2	40.6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9.4	26.0	35.4	31.1	23.2	10.4	33.5	100.0
200~299만원	(315)	5.5	27.4	32.8	32.0	27.2	7.9	35.1	100.0
300~399만원	(332)	4.2	24.2	28.4	32.5	27.1	12.0	39.1	100.0
400만원이상	(347)	7.5	27.0	34.5	31.1	22.0	12.4	34.4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0	33.3	33.3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8.0	23.4	31.4	32.5	24.7	11.4	36.1	100.0
중부권	(118)	7.6	24.2	31.8	33.1	25.8	9.3	35.2	100.0
호남권	(119)	2.5	14.3	16.8	31.9	36.1	15.1	51.3	100.0
영남권	(324)	5.0	38.7	43.7	28.4	19.3	8.6	28.0	100.0
강원	(36)	2.8	8.3	11.1	38.9	38.9	11.1	50.0	100.0
제주	(13)	7.7	7.7	15.4	46.2	30.8	7.7	38.5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5.5	23.8	29.3	28.2	26.1	16.4	42.4	100.0
중도	(542)	3.5	25.9	29.4	35.8	26.9	7.9	34.8	100.0
보수적	(261)	13.9	29.9	43.8	28.7	19.5	8.1	27.5	100.0
▣ 종교별									
불교	(279)	5.8	34.2	40.0	28.0	24.1	7.9	32.0	100.0
기독교	(282)	9.9	24.5	34.4	35.5	22.0	8.2	30.1	100.0
천주교	(87)	6.9	19.7	26.6	27.5	32.1	13.8	45.9	100.0
기타	(6)	16.7	.0	16.7	16.7	33.3	33.3	66.7	100.0
종교없음	(530)	4.7	24.4	29.1	32.1	26.2	12.6	38.8	100.0
모름 / 무응답	(16)	6.3	12.5	18.8	50.0	12.5	18.8	31.3	100.0

표46. 천안함 사건 해결 방안 적절성 평가

문) ○○님은 천안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사례수	국제공조를 통한 경제적 제재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관계의 개선	현재상태의 유지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응징	모름/무응답	계
		%	%	%	%	%	%
■ 전체	(1200)	44.3	33.1	11.8	10.5	.2	100.0
▣ 성별							
남자	(604)	43.1	34.5	11.6	10.4	.3	100.0
여자	(596)	45.5	31.7	12.1	10.5	.2	100.0
▣ 연령별							
19~29세	(303)	44.9	32.0	12.2	10.9	.0	100.0
30대	(312)	40.7	38.5	9.9	10.6	.3	100.0
40대	(305)	43.0	34.4	11.8	10.2	.7	100.0
50대이상	(280)	49.2	26.9	13.6	10.3	.0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44.8	23.9	19.0	12.3	.0	100.0
고졸	(461)	45.6	29.5	12.1	12.5	.2	100.0
대재이상	(634)	43.3	37.2	10.4	8.7	.3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28.7	46.8	18.3	6.2	.0	100.0
자영업	(259)	40.8	36.7	9.6	12.5	.4	100.0
블루칼라	(233)	46.7	32.2	11.6	9.0	.4	100.0
화이트칼라	(239)	42.2	36.0	11.8	9.6	.4	100.0
전업주부	(247)	51.8	23.9	14.6	9.7	.0	100.0
학생/무직/기타	(190)	41.7	35.4	10.6	12.4	.0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39.5	34.6	14.8	11.1	.0	100.0
200~299만원	(315)	45.2	30.8	11.8	12.2	.0	100.0
300~399만원	(332)	43.7	33.5	12.3	10.2	.3	100.0
400만원이상	(347)	47.0	34.0	9.8	8.6	.6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33.3	.0	33.3	.0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44.2	34.9	10.7	9.8	.3	100.0
중부권	(118)	33.1	42.4	5.9	17.8	.8	100.0
호남권	(119)	28.6	54.6	7.6	9.2	.0	100.0
영남권	(324)	55.2	15.9	19.2	9.8	.0	100.0
강원	(36)	33.3	55.6	2.8	8.3	.0	100.0
제주	(13)	53.8	38.5	.0	7.7	.0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40.8	39.0	9.8	10.3	.0	100.0
중도	(542)	45.5	32.9	11.2	10.0	.4	100.0
보수적	(261)	47.1	24.6	16.1	11.8	.4	100.0
▣ 종교별							
불교	(279)	45.9	25.2	18.3	9.9	.7	100.0
기독교	(282)	44.3	34.8	10.6	10.3	.0	100.0
천주교	(87)	39.2	39.0	4.6	17.2	.0	100.0
기타	(6)	33.3	66.7	.0	.0	.0	100.0
종교없음	(530)	45.0	34.4	10.4	10.0	.2	100.0
모름 / 무응답	(16)	25.0	56.3	12.5	6.3	.0	100.0

표47. "천안함 사건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원인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동의 정도

문) ○○님은 "천안함 사건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원인이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사례수	① 매우 동의한다	② 다소 동의한다	①+②	③ 반반이다	④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④+⑤	계
		%	%	%	%	%	%	%	%
■ 전체	(1200)	12.0	42.6	54.6	28.0	14.5	2.8	17.3	100.0
▣ 성별									
남자	(604)	12.9	41.4	54.4	25.1	16.9	3.7	20.6	100.0
여자	(596)	11.1	43.8	54.9	31.0	12.1	2.0	14.1	100.0
▣ 연령별									
19~29세	(303)	11.2	43.2	54.5	30.7	13.5	1.3	14.9	100.0
30대	(312)	16.0	40.1	56.1	29.8	10.9	3.2	14.1	100.0
40대	(305)	12.5	44.6	57.0	26.2	13.8	3.0	16.7	100.0
50대이상	(280)	7.9	42.6	50.6	25.1	20.4	4.0	24.4	100.0
▣ 교육수준별									
중졸이하	(105)	7.6	41.5	49.1	34.1	12.9	3.8	16.7	100.0
고졸	(461)	9.1	43.3	52.4	28.4	16.6	2.6	19.2	100.0
대재이상	(634)	14.9	42.3	57.2	26.7	13.2	2.9	16.1	100.0
▣ 직업별									
농/수/축산업	(32)	.0	56.3	56.3	15.6	21.8	6.2	28.1	100.0
자영업	(259)	14.7	40.2	54.8	28.7	12.2	4.3	16.5	100.0
블루칼라	(233)	10.3	44.7	55.0	28.7	12.9	3.4	16.3	100.0
화이트칼라	(239)	14.7	41.0	55.7	28.8	13.8	1.7	15.5	100.0
전업주부	(247)	9.7	42.5	52.2	31.6	13.4	2.8	16.2	100.0
학생/무직/기타	(190)	12.1	43.3	55.4	22.7	20.8	1.1	21.9	100.0
▣ 가구소득수준									
200만원미만	(202)	10.4	43.0	53.4	30.5	11.6	4.4	16.1	100.0
200~299만원	(315)	10.1	41.0	51.2	30.4	16.5	1.9	18.4	100.0
300~399만원	(332)	12.1	46.3	58.4	24.4	15.1	2.1	17.2	100.0
400만원이상	(347)	14.4	40.3	54.7	28.1	13.7	3.5	17.2	100.0
모름 / 무응답	(3)	33.3	33.3	66.7	.0	33.3	.0	33.3	100.0
▣ 지역별									
수도권	(590)	13.7	40.7	54.4	28.0	14.2	3.4	17.6	100.0
중부권	(118)	10.2	50.4	60.6	20.8	14.4	4.2	18.6	100.0
호남권	(119)	20.2	48.7	68.9	21.8	7.6	1.7	9.2	100.0
영남권	(324)	4.4	42.9	47.2	32.3	18.5	1.9	20.4	100.0
강원	(36)	30.6	22.2	52.8	38.9	8.3	.0	8.3	100.0
제주	(13)	15.4	53.8	69.2	15.4	7.7	7.7	15.4	100.0
▣ 정치적성향									
진보적	(397)	17.9	48.9	66.8	20.5	10.2	2.5	12.7	100.0
중도	(542)	9.8	41.4	51.2	32.2	14.5	2.1	16.5	100.0
보수적	(261)	7.7	35.6	43.3	30.6	21.1	5.0	26.1	100.0
▣ 종교별									
불교	(279)	11.6	36.7	48.2	28.8	19.0	3.9	23.0	100.0
기독교	(282)	9.9	44.3	54.3	29.8	12.4	3.5	16.0	100.0
천주교	(87)	21.8	41.3	63.1	21.8	13.8	1.4	15.1	100.0
기타	(6)	50.0	.0	50.0	33.3	16.7	.0	16.7	100.0
종교없음	(530)	11.5	45.7	57.2	27.0	13.6	2.3	15.8	100.0
모름 / 무응답	(16)	6.3	37.5	43.8	50.0	6.3	.0	6.3	100.0

A

208 SAJIK-DONG CHONGRO-KU SEOUL, KOREA, 110-054 TEL(02)3702-2100 / FAX(02)3702-2121/E-mail info @gallup.co.kr / internetwww.gallup.co.kr
affiliated with GALLUP INTERNATIONAL
한국갤럽 GALLUP KOREA

Gallup 201016069

2010 통일의식조사

A1-5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는 면접원 ○○○입니다.

이번에 저희 연구소에서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통일의식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질문에는 맞고 틀리는 답이 없으며, ○○님의 응답은 이런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몇 %라는 식으로 통계를 내는 데에만 사용되며, 그 외의 목적에는 절대로 사용되는 일이 없으니 느끼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구 주관 기관: IPUS 통일평화연구소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서울대학교
소장: 박 명 규 교수
전화: 880-4052

2010년 7월
한 국 갤 럽 조 사 연 구 소
소 장 박 무 익
담당연구원 홍 승 효
실사연구원 정 혜 정
주 소 서울시 종로구 사직동 208
전 화 02-3702-2663

▣ 지 역 : A6-7 1. 서 울 2. 부 산 3. 대 구 4. 인 천 5. 광 주 6. 대 전 7. 울 산 8. 경 기 9. 강 원 10. 충 북 11. 충 남 12. 전 북 13. 전 남 14. 경 북 15. 경 남 16. 제 주

▣ 지역크기 : 8 1. 대도시 2. 중·소도시 3. 읍/면

▣ 성 별 : 9 1. 남자 2. 여자

SQ1) 실례지만 ○○님의 **나이(연세)는 올해 만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생일을 고려하지 않고, 우리나라 나이에서 한 살을 뺀 만 나이로 응답해 주십시오.

10-11 만 _______ 세 → 만 19세 이상만 조사 진행하십시오

지금부터 '남북통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1)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2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반반 / 그저 그렇다
4. 별로 필요하지 않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2) **(보기카드 1 제시)**
남북한 통일에 대한 ○○님의 생각은 다음 중 어느 것에 가장 가깝습니까?

13
1.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통일되는 것이 좋다
2. 통일을 서두르기보다 여건이 성숙되기를 기다려야 한다
3. 현재대로가 좋다
4.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

문 3) **(보기카드 2 제시)**
○○님은 **남북한 통일이 언제쯤 가능**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14
1. 5년 이내
2. 10년 이내
3. 20년 이내
4. 30년 이내
5. 30년 이상
6. 불가능하다

문 4) ○○님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통일을 이루는데**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우선,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은요?

조사원 |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도움이 된다	다소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5	㉮ 쌀·비료·의약품 지원 등 인도적 대북지원	1	2	3	4
16	㉯ 학술인·예술인·체육인·종교인 교류 등 남북한 사회문화 교류	1	2	3	4
17	㉰ 금강산개성관광·개성공단사업 등 남북한 경제협력	1	2	3	4
18	㉱ 정기적인 남북간 회담	1	2	3	4

문 5) ○○님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다음 사항들이 얼마나 **시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는요?

조사원 |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시급하다	다소 시급하다	별로 시급하지 않다	전혀 시급하지 않다
19	㉮ 남북정상회담의 정례화	1	2	3	4
20	㉯ 북한의 개방과 개혁	1	2	3	4
21	㉰ 군사적 긴장 해소	1	2	3	4
22	㉱ 남한에서의 미군 철수	1	2	3	4
23	㉲ 이산가족 및 국군포로 문제 해결	1	2	3	4
24	㉳ 북한의 인권 개선	1	2	3	4

문 6) **(보기카드 3 제시)**
○○님은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5-26
1. 같은 민족이니까
2.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해
3. 남북간에 전쟁위협을 없애기 위해
4. 북한주민도 잘 살 수 있도록
5.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6. 기타 (적을 것 : ____________________)

다음은 '통일 전후의 변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7) ○○님은 통일이 **남한에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27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8) ○○님은 통일이 **자신에게 얼마나 이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28
1. 매우 이익이 될 것이다
2. 다소 이익이 될 것이다
3. 별로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4. 전혀 이익이 되지 않을 것이다

문 9) ○○님은 **통일이 되면** 다음과 같은 사회문제들이 **통일 전에 비해 얼마나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악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조사원 |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크게 개선	약간 개선	차이 없음	약간 악화	크게 악화
29	㉮ 빈부격차	1	2	3	4	5
30	㉯ 부동산투기	1	2	3	4	5
31	㉰ 실업문제	1	2	3	4	5
32	㉱ 범죄문제	1	2	3	4	5
33	㉲ 지역갈등	1	2	3	4	5
34	㉳ 이념갈등	1	2	3	4	5

문 10) ○○님은 통일이 남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35
1. 통일이 되어야 남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 남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11) ○○님은 통일이 북한의 민주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36
1. 통일이 되어야 북한에 완전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
2. 북한의 민주주의가 완전히 이루어져야 통일이 가능하다
3. 통일과 민주주의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문 12) ○○님은 통일 한국이 어떤 체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37 1. 남한의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
2. 남한과 북한의 체제를 절충한다.
3. 통일이후에도 남북한 두 체제를 각기 유지한다.
4. 통일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어떤 체제이든 상관없다

이번에는 '북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쭙겠습니다

문 13) **(보기카드 4 제시)**
○○님은 북한이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38 1.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지원 대상**이다
2. 우리와 힘을 합쳐 **협력해야 할 대상**이다
3. 우리와 선의의 **경쟁을 하는 대상**이다
4. 우리가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5.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는 **적대 대상**이다

문 14) ○○님은 통일을 함께 논의할 상대로 **북한 정권이 대화와 타협이 가능한 상대**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가능하다', '어느 정도 가능하다', '별로 가능하지 않다', '전혀 가능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39 1. 매우 가능하다
2. 어느 정도 가능하다
3. 별로 가능하지 않는다
4. 전혀 가능하지 않는다

문 15) ○○님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다소 원한다', '별로 원하지 않는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40 1. 매우 원한다
2. 다소 원한다
3. 별로 원하지 않는다
4. 전혀 원하지 않는다

문 16) ○○님은 **최근** 몇 년간 **북한이 얼마나 변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변하고 있다', '약간 변하고 있다',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41 1. 많이 변하고 있다
2. 약간 변하고 있다
3. 별로 변하지 않고 있다
4. 거의 변하지 않고 있다

문 17) ○○님은 앞으로 **북한의 무력도발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42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문 18) ○○님은 북한과 관련된 다음 사항에 대해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혹은 모르고 계십니까?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본 적이 있다', '전혀 모른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선군정치'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받으십시오.

		매우 잘 안다	조금 안다	들어 본 적 있다	전혀 모른다
43	㉮ 선군정치	1	2	3	4
44	㉯ 주체사상	1	2	3	4
45	㉰ 천리마운동	1	2	3	4
46	㉱ 고난의 행군	1	2	3	4
47	㉲ 장마당	1	2	3	4
48	㉳ 아리랑 축전	1	2	3	4

문 19) ○○님은 **북한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있다', '없다'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있다	없다
49	㉮ 북한이나 금강산, 개성 등을 방문해 본 적	1	2
50	㉯ 탈북자(새터민)과 만나 본 적	1	2
51	㉰ 북한 방송이나 영화, 소설 등을 접해본 적	1	2
52	㉱ 대북 관련 활동이나 단체에 참여해 본 적	1	2

문 20) ○○님은 현재 다음 측면에서 **남북한 간의 차이**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많이 있다	다소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53	㉮ 선거방식	1	2	3	4
54	㉯ 생활수준	1	2	3	4
55	㉰ 역사인식	1	2	3	4
56	㉱ 언어사용	1	2	3	4
57	㉲ 생활풍습(관혼상제 등)	1	2	3	4
58	㉳ 가치관	1	2	3	4

문 21) ○○님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얼마나 **위협**을 느끼십니까? 혹은 느끼지 않으십니까? '매우 위협을 느낀다', '다소 위협을 느낀다',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59 1. 매우 위협을 느낀다
2. 다소 위협을 느낀다
3. 별로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4. 전혀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문 22) ○○님은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60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잘 모름

지금부터는 '대북 지원 및 정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문 23) ○○님은 현재의 **대북 지원을 얼마나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폭 늘려야 한다', '조금 늘려야 한다',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조금 줄여야 한다', '대폭 줄여야 한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61 1. 대폭 늘려야 한다
2. 조금 늘려야 한다
3. 현재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 문 24)로 가십시오
4. 조금 줄여야 한다
5. 대폭 줄여야 한다

문 23-1)**(보기카드 5 제시)**
현재 대북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신다면, 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수응답)**

62-63 1. 지원된 물품이 북한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2. 대북지원이 북한 정권을 유지시켜 주기 때문에
3. 대북지원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기 때문에
4. 대북지원 때문에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5. 기타 (적을 것 : ________________)

문 24) ○○님은 **대북 지원이 북한 주민의 생활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64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5) ○○님은 **남북경제협력**이 북한의 개혁・개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도움이 된다', '약간 도움이 된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65 1. 매우 도움이 된다
2. 약간 도움이 된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문 26) ○○님은 **현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혹은 불만족 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66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 27) ○○님은 현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67 1. 매우 잘 반영하고 있다
2. 대체로 잘 반영하고 있다
3. 별로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4. 전혀 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문28) ○○님은 **"남북한 간 체결한 합의 사항은 정부의 교체와 무관하게 계승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습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68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4.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

5. 잘 모름

문 29) ○○님은 다음의 의견에 얼마나 찬성 또는 반대하십니까?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는요?

조사원 |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찬성	다소 찬성	반반/그저 그렇다	다소 반대	매우 반대
69	㉮ 약간의 희생이 따르더라도 개성공단은 유지되어야 한다	1	2	3	4	5
70	㉯ 금강산 관광은 재개되어야 한다	1	2	3	4	5
71	㉰ 북핵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대북지원을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72	㉱ 대북삐라 살포는 하지 말아야 한다	1	2	3	4	5
73	㉲ 정부는 북한 인권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야 한다	1	2	3	4	5
74	㉳ 정부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조치에 동참해야 한다	1	2	3	4	5

문 30) ○○님은 최근 **남북관계가 악화**되는 것에 대해 **각국의 책임**은 어디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북한'의 책임은요?

조사원 |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아주 크다	조금 크다	중간	별로 크지 않다	거의 없다
75	㉮ 북한의 책임	1	2	3	4	5
76	㉯ 한국의 책임	1	2	3	4	5
77	㉰ 미국의 책임	1	2	3	4	5
78	㉱ 중국의 책임	1	2	3	4	5
79	㉲ 일본의 책임	1	2	3	4	5

다음은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문 31)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가 얼마나 친근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80
1. 매우 친근하게 느껴진다
2. 다소 친근하게 느껴진다
3. 별로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4. 전혀 친근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문 32) **(보기카드 6 제시)**
○○님은 **탈북자(새터민)들과** 다음과 같은 **관계**를 맺는데 대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먼저, '동네 이웃'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꺼림	다소 꺼림	반반/그저 그렇다	별로 꺼리지 않음	전혀 꺼리지 않음
81	㉮ 동네 이웃	1	2	3	4	5
82	㉯ 직장 동료	1	2	3	4	5
83	㉰ 사업 동업자	1	2	3	4	5
84	㉱ 결혼상대자	1	2	3	4	5

문 33) ○○님은 **한국에 들어오기 원하는 탈북자(새터민)**을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B6
1. 원하는 사람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한다
2. 원하는 사람 중에서 선택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더 이상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문 34) ○○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탈북자(새터민)**에 대한 다음의 의견들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동의	다소 동의	별로 동의하지 않음	전혀 동의하지 않음
7	㉮ 탈북자(새터민)들은 남북한 간 이질화 해소에 도움이 된다	1	2	3	4
8	㉯ 정부는 탈북자(새터민)들을 더 많이 지원해야 한다	1	2	3	4
9	㉰ 탈북자(새터민)들 때문에 취업이 어려워 진다	1	2	3	4
10	㉱ 탈북자(새터민)들도 조직에서 똑같이 경쟁해야 한다	1	2	3	4

이번에는 '한국을 둘러싼 주변국과의 관계'애 대한 질문입니다

문 35) **(보기카드 7 제시)**
○○님은 다음 국가들 중 **어느 나라를 가장 가깝게** 느끼십니까? **(단수응답)**

11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문 36) **(보기카드 7 제시)**
그러면, 다음 국가들 중에서 어느 나라가 **한반도의 평화에 가장 위협적인 나라**라고 생각하십니까?

12
1. 미국
2. 일본
3. 북한
4. 중국
5. 러시아

문 37) ○○님은 만약 월드컵에서 북한 팀과 미국 팀이 대결한다면 어느 편을 응원하시겠습니까?

13-14
1. 북한 팀
2. 미국 팀
3. 양 팀 모두 응원하겠다
4. 어느 팀도 응원하지 않겠다
5. 기타 (적을 것 : ______________________)

문 38) **(보기카드 8 제시)**
○○님은 다음의 국가가 우리에게 어떤 대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협력 대상	경쟁 대상	경계 대상	적대 대상
15	㉮ 미국	1	2	3	4
16	㉯ 중국	1	2	3	4
17	㉰ 일본	1	2	3	4
18	㉱ 러시아	1	2	3	4

문 39) **(보기카드 9 제시)**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주변 4국은 어떻게 대처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한국을 도울 것이다	북한을 도울 것이다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	중립을 지킬 것이다
19	㉮ 미국	1	2	3	4
20	㉯ 중국	1	2	3	4
21	㉰ 일본	1	2	3	4
22	㉱ 러시아	1	2	3	4

문 40) ○○님은 다음 국가들이 남북한의 통일을 원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원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미국'은요?

조사원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원한다	원하는 편이다	원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원하지 않는다
23	㉮ 미국	1	2	3	4
24	㉯ 중국	1	2	3	4
25	㉰ 일본	1	2	3	4
26	㉱ 러시아	1	2	3	4

문 41) ○○님은 남북한이 통일하는데 **한반도 주변국들의 협조가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약간 필요하다', '별로 필요하지 않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27 1. 매우 필요하다
2. 약간 필요하다
3. 별로 필요하지 않다
4.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42) ○○님은 **남북한 통일을 위해 다음 국가들의 도움**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필요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조사원 |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필요 하다	필요한 편이다	필요 하지 편이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28	㉮ 미국	1	2	3	4
29	㉯ 중국	1	2	3	4
30	㉰ 일본	1	2	3	4
31	㉱ 러시아	1	2	3	4

문 43) ○○님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미공조'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32 1. 남북관계 개선
2. 한미공조
3. 똑같이 중요하다

지금부터는 '해방 이후 한국 사회의 변화'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문 44) ○○님은 다음 사건들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이 얼마나 긍정적이라고 혹은 부정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4·19'는요?

조사원 |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잘 모름
33	㉮ 4·19	1	2	3	4	5
34	㉯ 5·16	1	2	3	4	5
35	㉰ 10월 유신	1	2	3	4	5
36	㉱ 광주민주화운동	1	2	3	4	5
37	㉲ 6월 항쟁(1987년)	1	2	3	4	5
38	㉳ 남북정상회담	1	2	3	4	5

문 45) ○○님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을 얼마나 긍정적 또는 부정적으로 평가하십니까? '매우 긍정적', '대체로 긍정적', '대체로 부정적', '매우 부정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39 1. 매우 긍정적
2. 대체로 긍정적
3. 대체로 부정적
4. 매우 부정적

5. 잘 모름

문 46) ○○님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심각하다', '약간 심각하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빈부격차'는요?

조사원 |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매우 심각 하다	약간 심각 하다	별로 심각 하지 않다	전혀 심각 하지 않다
40	㉮ 환경파괴	1	2	3	4
41	㉯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	1	2	3	4
42	㉰ 빈부격차	1	2	3	4
43	㉱ 실업문제	1	2	3	4
44	㉲ 지역 간 불균형	1	2	3	4
45	㉳ 종교갈등	1	2	3	4
46	㉴ 이념갈등	1	2	3	4

지금부터는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 현실에 대한 내용입니다

문 47) ○○님은 **현재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해 얼마나 만족 또는 불만족하십니까? '매우 만족', '다소 만족', '다소 불만족', '매우 불만족'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47 1. 매우 만족
2. 다소 만족
3. 다소 불만족
4. 매우 불만족

문 48) ○○님은 자신이 **한국인인 것을 어느 정도 자랑스럽게** 생각하십니까? 혹은 자랑스럽지 않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자랑스럽다', '다소 자랑스럽다',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48 1. 매우 자랑스럽다
2. 다소 자랑스럽다
3. 별로 자랑스럽지 않다
4. 전혀 자랑스럽지 않다

문 49) ○○님은 다음의 행위가 얼마나 허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반드시 허용되어야 한다', '대체로 허용되어야 한다', '가급적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절대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정부에 항의하는 공개 집회'는요?

조사원 | 아래 ㉮부터 ㉰까지 각각 질문하고 응답 받으십시오.

		반드시 허용 되어야 한다	대체로 허용 되어야 한다	가급적 허용 되지 않아야 한다	절대로 허용 되지 않아야 한다
49	㉮ 정부정책에 항의하는 공개집회	1	2	3	4
50	㉯ 전국 노동자 연대파업	1	2	3	4
51	㉰ 익명으로 인터넷에서 남을 비판하는 행위	1	2	3	4

문 50) (보기카드 10 제시)
그럼, 현재 **남한 사회**는 어느 정도 민주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1점은 '매우 비민주적', 10점은 '매우 민주적'입니다. 1점부터 10점까지의 점수로 평가해 주십시오.

52-53

매우 비민주적				중간					매우 민주적
1	2	3	4	5	6	7	8	9	10

문 51) ○○님은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있다', '약간 있다', '별로 없다', '전혀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54
1. 많이 있다
2. 약간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 다음은 천안함 사건에 관련하여 여쭙겠습니다.

문 52) ○○님은 **천안함 사건의 침몰 원인**에 대한 정부의 조사 결과를 신뢰하십니까? 혹은 신뢰하지 않으십니까? '전적으로 신뢰한다', '신뢰하는 편이다', '반반',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55
1. 전적으로 신뢰한다.
2. 신뢰하는 편이다
3. 반반
4. 신뢰하지 않는 편이다
5.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문 53) ○○님은 **천안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 중 무엇이 가장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조사원	반드시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56
1. 군사적 대응을 포함한 강력한 대북 응징
2. 국제 공조를 통한 경제적 제재
3. 현재 상태의 유지
4. 대화와 교류를 통한 남북 관계의 개선

문 54) ○○님은 **"천안함 사건은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도 원인이 있다"** 는 주장에 동의하십니까? 혹은 동의하지 않으십니까? '매우 동의한다', '다소 동의한다', '반반이다',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57
1. 매우 동의한다
2. 다소 동의한다
3. 반반이다
4. 별로 동의하지 않는다
5.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문 55) ○○님은 개인적으로 **정치**에 얼마나 **관심**이 있습니까? 혹은 없습니까? '매우 관심이 있다', '다소 관심이 있다', '별로 관심이 없다', '전혀 관심이 없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58
1. 매우 관심이 있다
2. 다소 관심이 있다
3. 별로 관심이 없다
4. 전혀 관심이 없다

문 56) ○○님은 자신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진보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보수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진보적', '약간 진보적', '중도', '약간 보수적', '매우 보수적'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59
1. 매우 진보적
2. 약간 진보적
3. 중도
4. 약간 보수적
5. 매우 보수적

문 57) ○○님은 지난 **2007년 대선에서 어느 후보에 투표**하셨습니까? '이명박', '정동영', '이회창', '문국현', '권영길', '투표 안 했다', '투표권 없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60
1. 이명박
2. 정동영
3. 이회창
4. 문국현
5. 권영길
6. 기타 후보
7. 투표권 없었음
8. 투표 불참

문 58) ○○님은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 이후 지금까지
61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잘못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보통이다',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매우 잘못하고 있다' 중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1. 매우 잘하고 있다.
2. 대체로 잘하고 있다
3.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4.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자료 분류용 질문

**지금까지 질문에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류를 위해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이 항목들은 통계적인 자료 분류 목적 이외에는
결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D 1) ○○님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62-63
1. 농업/수산업/축산업 (가족종사자 포함)
2. 자영업 (종업원 9명 이하의 소규모 업소주인 및 가족 종사자, 약국, 개인택시운전사)
3. 판매/서비스직 (상점점원, 세일즈맨, 보험설계사 등)
4. 기능/숙련공 (중장비/트럭운전사, 전자/가전제품 A/S기술자, 숙련공 등)
5. 일반작업직 (토목관계의 현장작업, 청소, 수위, 육체노동 등)
6. 사무/기술직 (일반회사 사무직, 기술직, 유치원/초/중/고등학교 교사, 회사에 소속된 웹디자이너,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7. 경영/관리직 (5급 이상의 고급공무원, 교장, 기업체부장 이상의 직위 등)
8. 전문/자유직 (대학교수, 변호사, 예술가, 종교가, 언론인, 고소득 프리랜서, 의사, 디자이너/프로그래머 등)
9. 가정주부
10. 학생 (고등학생/대학생/대학원생)
11. 군인/경찰
12. 무직
13. 기타 (적을 것 : ____________________)

D 2) ○○님은 **결혼**하셨습니까?

조사원	보기를 읽어주십시오.

64 1. 미혼 2. 기혼 3. 이혼/별거 4. 사별

D 3) 실례지만, ○○님은 **학교**를 어디까지 마치셨습니까?

조사원	중퇴는 졸업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5
1. 초등학교 졸업 이하
2. 중학교 졸업
3. 고등학교 졸업
4. 대학재학/대학졸업
5. 대학원재학 이상

D 4) ○○님에게는 종교가 있습니까?
(있다면) 무엇입니까?

66-67
1. 불교
2. 기독교 (개신교)
3. 천주교 (가톨릭)
4. 기타 (적을 것 : ______________)

98. 종교 없음
99. 모름/무응답

D 5) 현재 **함께 살고 계시는 가족 모두의 한달 평균 총수입**은 얼마 정도입니까? 저축, 임대소득, 이자 등을 모두 포함하여 **세금을 공제하기 전의** 가구 월평균 총수입을 말씀해 주십시오.

68-69

1. 월 49만원 이하	7. 월 300 ~ 349만원
2. 월 50 ~ 99만원	8. 월 350 ~ 399만원
3. 월 100 ~ 149만원	9. 월 400 ~ 499만원
4. 월 150 ~ 199만원	10. 월 500 ~ 599만원
5. 월 200 ~ 249만원	11. 월 600 ~ 699만원
6. 월 250 ~ 299만원	12. 월 700만원 이상

D 6) **한국의 일반적인 가정과 비교**했을 때, ○○님 **댁의 소득 수준**은 중간보다 얼마나 높다고 또는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70
1. 중간보다 훨씬 높다
2. 중간보다 약간 높다
3. 중간과 비슷하다
4. 중간보다 약간 낮다
5. 중간보다 훨씬 낮다

D 7) **(보기카드 11 제시)**
○○님은 자신이 한국 사회에서 어느 계층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71

1. 상의 상	4. 중의 하
2. 상의 하	5. 하의 상
3. 중의 상	6. 하의 하

D 8) ○○님의 **현 생활수준은 부모님께서 ○○님의 현재 나이였을 때와 비교**해서 얼마나 좋아졌다고 또는 나빠졌다고 생각하십니까?

72
1. 훨씬 좋아졌다
2. 약간 좋아졌다
3. 차이가 거의 없다
4. 약간 나빠졌다
5. 훨씬 나빠졌다

6. 잘 모르겠다

D 9) ○○님께서 **만 15세까지** 가장 오래 사셨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단수응답)**

73-74

1. 서울	10. 충청북도
2. 부산	11. 충청남도
3. 대구	12. 전라북도
4. 인천	13. 전라남도
5. 광주	14. 경상북도
6. 대전	15. 경상남도
7. 울산	16. 제주도
8. 경기도	17. 북한
9. 강원도	18. 외국

면 접 후 기 록

응답자 이름			
응답자 주소			
응답자연락처	1. 일반전화 (75-77) - (78-81) - (82-85) 2. 휴대폰 (지역번호 86-88) - (국 89-92) - (번호 93-96)		
조 사 일 시	____월 (97) ____일 (98-99) ____시 ____분부터 ____시 ____분까지 (분간) (반드시 적어 주세요) 100-101		
협 조 정 도	1. 상 2. 중 3. 하 102		
응답 신뢰도	1. 상 2. 중 3. 하 103		
조사원 이름		지역	조사원 ID 104-105

Supervisor	검 증 원
106-108	

2010 통일의식조사

Institute for Peace and Unificatio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IPUS 통일평화연구소 서울대학교

93330

ISBN 978-89-959656-5-8